

발간등록번호	11-1383000-000146-10
연구보고	2012-45

2012년 한국의 성평등보고서

2012



연구보고 2012-45

2012년 한국의 성평등보고서

2012. 12

연구기관 :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연구책임자 : 김태홍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

공동연구자 : 전기택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연구위원)

주재선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연구위원)

여성가족부

본 보고서는 한국여성정책연구원이 여성가족부의 연구용역 의뢰를 받아 수행한 연구결과입니다. 보고서의 내용은 연구진의 의견이며, 여성가족부의 공식적인 입장이 아님을 밝혀드립니다.

□ 국가성평등지수 산정 배경과 목적

- 성평등과 관련된 선행연구에 의하면 성평등은 직·간접적으로 경제성장 및 국가경쟁력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세계은행에 의하면 경제성장률은 성평등과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정(+)의 상관관계(상관계수 0.35)를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남아시아와 동아시아간의 경제성장률 격차 2.5%p 중에서 0.95%p, 사하라남부 아프리카와 동아시아간의 격차 3.3%p의 0.56%p는 교육수준의 남녀 불평등에 기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 아시아 국가들이 여성인력을 미국 수준 즉, 여성 경제활동참가율 70% 이상으로 활용하면 연간 GDP가 인도의 경우 4.2%, 말레이시아 2.9%, 인도네시아 1.4% 정도 제고되는 것으로 추계됐다(UNDP 2010). 즉, 성평등과 관련된 여러 연구결과에 의하면 성평등은 단순한 인권 혹은 사회정의(social justice)를 제고시킬 뿐만 아니라, 국가경쟁력, 경제성장 및 빈곤 감소 그리고 젠더와 관련된 또 다른 발전을 촉진시키는 수단으로 나타났다(World Bank 2012).
 - 이에 따라 각국은 성평등을 달성하기 위한 각종 정책을 추진하여 왔다. 특히 UN은 1995년 세계여성행동강령에서 각국에 성평등정책 추진을 위한 여성정책전담 국가기구를 설치하도록 하였다. 이에 따라 2012년 현재 대부분의 국가가 여성정책전담 국가기구를 운영하고 있고, 각종 성평등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 성평등지수란 성평등의 목적, 방향 그리고 기준 등을 나타내는 표지로서, 성평등수준 향상에 대한 효과적인 모니터링, 특정 국가의 성평등과 관련한 장점과 약점, 관련 정책 및 제도의 평가 등을 가능하게 한다(European Commission: 2003). 성평등지수가 이와 같은 기능을 할 수 있기 위해서는 실제 성과를 평가할 수 있는 지표를 통해서 가능하다.
 - 우리나라도 2009년 국가 성평등수준의 다각적인 파악과 개선 정도에 대한 모니터링을 통해서 국가 성평등전략을 지원할 수 있는 국가 성평등지수를 여성가족부가 개발하였다. 이와 같은 성평등지수는 우리나라 성평등 상황과 성평등 개선 정도, 그리고 개괄적으로 성불평등이 심각한 부문과 그 원인을

파악하는데 활용할 수 있다.

- 뿐만 아니라 성평등지수는 성평등에 대한 국민의 인식과 관심을 제고시킴과 동시에, 성평등지수와 국가경쟁력, 복지(well-being) 등과 같은 다양한 사회경제적인 지수(socio-economic indicators)간의 관계를 파악하는데 활용할 수 있다.

□ 성평등과 국가경쟁력

- 성평등은 다양한 차원에서 국가경쟁력에 영향을 미친다. 성평등이 국가경쟁력에 미치는 영향을 크게 직접적 영향과 간접적 영향을 나누어 살펴볼 수 있다. 우선 직접적인 영향은 교육에서의 성불평등의 영향, 노동시장에서의 성불평등의 영향, 경제자원 접근에서의 성불평등, 신체적 완전성 등에서의 성불평등을 나타낸다. 그리고 이들 성불평등의 차원은 경제 발전에 직접적, 간접적 영향을 미친다.
- 세계경제포럼은 국가경쟁력을 “지속적 경제성장과 장기적인 번영을 가능하게 하는 정책·제도 및 제반요소”로 정의한다. 이것은 국가경쟁력을 한 국가의 경제활동을 활성화시키는 구조적 요인들과 관련된 개념으로 간주하여, 생산성과 경쟁력을 추동하는 데 있어 중요한 요소를 종합적으로 총괄하는 시각에 기초한 것이다.
- 국제경영개발원(IMD)에서 발표하는 세계경쟁력 지수를 보면 우리나라의 점수는 2008년까지 68점(100점 만점)에 미치지 못했으나, 2009년 68.408점, 2010년 76.249점, 2011년 78.499점으로 지속적으로 상승하였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의 세계경쟁력 지수 순위도 같은 기간에 소폭 상승하여, 2006년 61개 국가 중 38위, 2007년 55개 국가 중 29위였던 세계경쟁력 지수 순위는 2010년 58개 국가 중 23위까지 상승하였다.
- 세계경제포럼이 2006년부터 발표하고 있는 성격차지수의 우리나라 점수와 순위 변화를 보면, 2006년 0.6157에서 2007년 0.6409로 증가하였다가 2008년과 2009년 0.6154, 0.6146으로 감소하였다. 그러나 2010년 0.6342로 상승하였던 성격차지수 점수는 2011년 0.6281로 다시 감소하였다. 동일한 기간의 우리나라 순위를 보면 2006년 115개 국가 중 92위, 2007년 128개 국가 중 97위로 순위가 상승하였으나 2008년과 2009년 각각 130개 국가 중 108위, 134개

국가 중 115위로 순위가 하락하였다. 그리고 2010년 134개 국가 중 104위, 2011년 135개 국가 중 107위로 소폭의 상승과 하락이 있었다.

- 2011년 성평등수준과 국가경쟁력 관계를 보면, 세계경제포럼의 성격차지수 산정 국가의 세계경쟁력 지수의 경우 성격차지수의 점수가 높아질수록 세계경쟁력 지수의 값도 증가하는 패턴이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패턴은 성격차지수 산정 국가의 글로벌경쟁력 지수 점수를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 즉, 성평등지수와 국가경쟁력 지수 간에는 강한 양(+)의 상관관계를 나타내었다. 즉, 성평등수준이 높은 국가일수록 글로벌 경쟁력지수도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 우리나라 성평등지수의 영역과 지표

- 우리나라 성평등지수는 남녀격차를 측정기준으로 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격차(gap)란 빈부, 임금, 기술 수준 등이 서로 차이가 나는 정도를 의미하며, 일반적으로 차이(difference) 혹은 비(ratio)로서 측정할 수 있다.
 - 세계경제포럼의 성격차지수(GGI), Social Watch의 성형평등지수(GEI)는 지표의 격차로 성평등수준을 산정한다.
 - 우리나라 국가성평등지수와 같이 남녀격차를 기준으로 성평등수준을 측정하는 지수는 국가 전체와 각 부문의 성평등 수준과 변화의 원인을 쉽게 파악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 UNDP가 2010년까지 성평등수준을 산정, 발표한 남녀평등지수(GDI), 여성권한척도(GEM) 그리고 2011년부터 발표하는 성불평등지수(GII)는 지표의 격차와 수준을 함께 고려하여 성평등수준을 산정한다.
 - 이에 따라 특정 분야의 남녀 성취수준과 격차가 모두 성평등지수에 산정되므로 다른 조건이 동일하면 사회 전체 구성원에게 자원의 접근 기회가 많은 선진국이 후진국보다 성평등 수준이 높게 나타난다.
 - 그러나 지표의 격차와 수준을 측정하여 성평등수준을 산정할 경우, 성평등 수준 개선이 지표수준 변화에 기인한 것인지 아니면 남녀격차의 개선에 기인한 것인지를 쉽게 파악할 수 없는 단점이 있다.
- 우리나라 국가성평등지수는 성평등수준을 정량적으로 측정하는데 사용하는 대표지표와 함께 각 부문의 성평등 정도를 모니터링하고 정책을 관리하기 위해서 설정한 관리지표로 구성되어 있다.

- 국가성평등지수의 산정과 관리 목적은 성평등 달성뿐만 아니라 여성지위 및 권한 향상에도 있다. 이에 따라 각 부문의 대표지표는 남녀격차를 산정할 수 있는 지표들로 구성하였고, 관리지표는 남녀격차를 산정할 수 없으나 여성지위 및 권한을 나타내는 지표, 예컨대 제왕절개 분만을 등 여성특화 지표들도 포함시켰다.
- 성평등지수는 전문가 및 관련 부처의 자문회의 등을 통해서 최종적으로 8개 부문 즉, 가족, 복지, 보건, 경제활동, 의사결정, 교육·직업훈련, 문화·정보, 안전부문에 구성하였다. 성평등지수가 이와 같이 8개 부문으로 구성됨에 따라 우리 사회 전반에 걸친 성평등수준을 포괄할 수 있으며, 또한 범정부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성평등정책의 내용과 추진 성과를 반영할 수 있다.
 - 대표지표는 우리나라 성평등수준과 추이, 부문별 성평등수준과 그 변동 요인을 한 눈에 파악할 수 있는 지표임과 동시에, 국가성평등지수를 산정하는데 사용되는 지표를 말한다. 연구결과와 행정부처의 협의·조정을 통해서 최종적으로 선정된 대표지표는 아래의 ‘국가성평등지수의 8개 부문 대표지표’에서 언급된 것과 같이 8개 부문 21개 지표이다.
 - 그리고 여성가족부와 관련 행정부처가 성평등수준과 추이, 그리고 그 원인을 파악하여 정책에 활용하기 위해서 행정적으로 관리하는 관리지표는 가족부문 4개, 복지 4개, 보건 5개, 경제활동 5개, 의사결정 8개, 교육·직업훈련 9개, 문화·정보 5개, 그리고 안전부문 3개로 총 43개로 구성되어 있다.

□ 우리나라 성평등수준과 추이

- 국가성평등지수의 값은 ‘0.0’(불평등)에서 시작하여 평등수준이 높아지면 이 지수의 값도 높아지기 시작하여 ‘100.0’(평등)까지의 범주를 갖도록 하였다. 이러한 국가성평등지수를 측정한 결과, 2011년 우리나라 국가성평등지수 값은 63.5로 전년 63.2보다 약간 상승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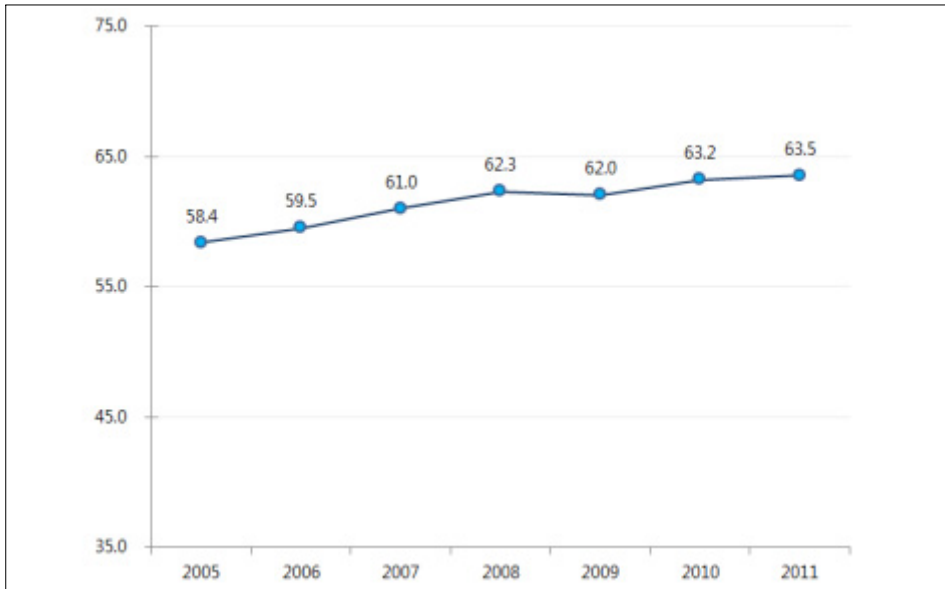
〈국가성평등지수의 8개 부문 대표지표〉

부문 (지표 수)	연번 ²⁾	부문별 대표지표	책임관리기관/협조기관
① 가족 (2개)	1-1	가사노동시간의 성비	여성가족부
	1-2	셋째 아 이상 출생성비	여성가족부
② 복지 (3개)	2-1	비 빈곤 가구주의 성비	보건복지부
	2-2	공적연금 가입자의 성비	보건복지부·교육과학기술부·행정안전부
	2-3	장애인 고용률의 성비	보건복지부·고용노동부
③ 보건 (3개)	3-1	건강관련 삶의 질(EQ-5D)의 성별 격차	보건복지부
	3-2	건강보험 요양급여 수급자의 성비	보건복지부
	3-3	건강검진 수검률 성비	보건복지부
④ 경제활동 (3개)	4-1	경제활동참가율 성비	고용노동부
	4-2	성별 임금격차(성비) ¹⁾	고용노동부
	4-3	상용근로자의 성비	고용노동부
⑤ 의사결정 (3개)	5-1	국회의원의 성비	국회사무처·중앙선거관리위원회
	5-2	5급 이상 공무원의 성비	행정안전부
	5-3	관리자(기업의 과장급 이상)의 성비	고용노동부
⑥ 교육·직업훈련 (3개)	6-1	남녀 평균교육연수 격차(성비) ¹⁾	교육과학기술부
	6-2	고등교육기관 취학률 성비	교육과학기술부
	6-3	재직자직업훈련 참여 근로자의 성비	고용노동부
⑦ 문화·정보 (2개)	7-1	여가시간의 성비	문화체육관광부
	7-2	문화컨텐츠산업 종사자의 성비	문화체육관광부
⑧ 안전 (2개)	8-1	범죄위험에 대한 사회안전 인식 성비 ³⁾	법무부·경찰청
	8-2	강력범죄(홍악법) 피해자의 성비	법무부·경찰청

* 1) 격차(Gap)는 차이(differences)를 나타냄. 이에 따라 실제 계산은 남녀 상대비(relative ratio)인 성비(sex ratio)로 계산함.

- 연도별로 국가성평등지수 값의 변화를 보면, 성평등수준은 2005년부터 2008년까지는 지속적으로 개선되었으나 글로벌 금융위기가 있었던 2009년 일시적으로 소폭 악화된 이후, 2010년과 2011년에 다시 개선되는 추이를 보였다.

(단위: 완전성평등=1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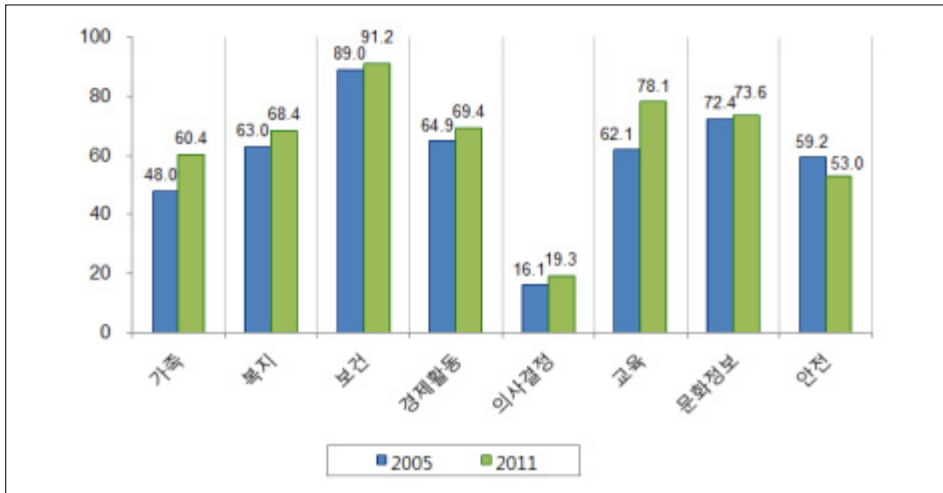


주: 부문별 가중치가 부여된(weighting) 지수 값임.

〈성평등지수의 수준과 추이〉

- 우리나라 성평등수준을 부문별로 보면, 2011년 성평등수준이 가장 높은 부문은 보건부문이었다. 그 다음은 교육·직업훈련부문, 문화·정보부문, 경제활동부문, 복지부문, 가족부문 순이었다. 성평등수준이 가장 낮은 부문은 의사결정부문이었고, 그 다음은 안전부문이었다.
 - 부문별 성평등수준을 2005년과 2011년을 비교하면 평등수준이 가장 많이 개선된 부문은 교육·직업훈련부문이었다. 그 다음은 가족, 복지, 경제활동, 의사결정, 보건 부문, 문화정보 부문 순으로 많이 개선되었다. 그러나 안전부문의 성평등수준은 2005년에 비해서 오히려 상당히 악화되었다.
- 부문별 성평등수준의 변화 추이를 보면, 먼저 2005년 가족부문의 성평등지수는 48.0로 의사결정부문 다음으로 지수 값이 낮았다. 그러나 2005년 이후 급속하게 성불평등 현상이 개선되기 시작하여 2011년 가족부문 성평등지수 값은 60.4였다.
 - 복지부문의 성평등지수는 2005년 이후 점진적으로 증가하는 추이를 보였다. 즉, 우리나라의 복지부문의 성평등수준은 소폭이지만 지속적으로 개선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단위: 성평등=100.0)



〈부문별 우리나라 성평등수준〉

- 교육·직업훈련부문의 성평등지수는 2005년 이후 꾸준히 증가하는 추이를 보였다. 즉, 성평등수준이 지속적으로 개선되어, 2011년 다른 부문의 성평등 수준과 비교하면 상대적으로 성평등 수준이 높은 부문에 속했다.
- 경제활동부문의 성평등지수는 2008년까지 증가하다가 금융위기 이후인 2009년에 성평등수준이 다소 악화되었으나, 경기회복과 함께 2010~2011년 크게 상승하였다.
- 성평등 수준이 가장 높은 보건부문의 성평등지수는 2005년 이후 지속적인 성장을 보였으며, 2008년 일시적 하락이후 지금까지 미미하게 개선되는 추세를 보인다.
- 의사결정부문은 성불평등이 가장 심한 영역이다. 그러나 2005년 이후 성불평등이 점진적인 개선을 보였다. 그러나 2008년 이후 성불평등 정도가 지속적으로 악화 되어서 2011년에는 19.3으로 하락하였다.
- 문화·정보부문 성평등지수는 2006년에 비해 2007~2008년 급격히 개선되었으나 2009년부터 다시 성평등 수준이 악화되어 2011년까지 계속 악화되는 추이를 보였다.
- 안전부문의 성평등지수는 2005년 이후 등락을 반복했다. 2008년에 지표 값이 상당히 상승하였으나 이후 지속적인 하락세를 나타냈다.

□ 부문별 성평등지표 추이와 특징

- 부문별로 보면 가족부문의 성평등수준이 지속적으로 개선을 보이고 있는데, 이것은 가사노동 시간의 성비와 셋째 아 이상 출생성비가 모두 성평등한 방향으로 개선된데 기인했다.
 - 남녀가사노동시간의 격차가 축소되었다.
 - 셋째 아 출생성비는 이미 2005년에 자연출생성비인 105에 도달했다. 셋째 아 이상 출생성비는 2005년에 128.5이었다. 이후 지속적으로 개선되어 2011년에는 109.5이었다.
- 복지부문도 2005년 이후 지속적으로 성평등수준이 개선되었다.
 - 국민연금, 사학연금 그리고 공무원연금 가입자의 성비가 지속적으로 개선되었다.
 - 공무원연금 가입자의 경우 남성이 1.7천명 감소하였다(2009년 이후로 남성 가입자 지속적으로 감소).

※ 국민연금 가입자 : 2010~2011년 여성 534천명, 남성 323천명이 증가
※ 공무원연금 가입자 : 2010~2011년 여성 7.2천명 증가, 남성 1.7천명이 감소
※ 사학연금 가입자 : 2010~2011년 여성 5천명, 남성 0.4천명이 증가
※ 성비격차 완화 : 국민연금에서 베이비부머 및 경력단절 여성 임의가입자 증가에 기인

- 남녀가구주 가구 빈곤의 성평등현황을 보면 2007년까지 악화, 2008년 일시적으로 개선되었으나 이후 다시 2010년까지 성평등수준이 악화되었다. 2011년에는 다시 남녀 가구주 가구의 성평등 수준이 소폭 개선되었다.

※ 2005년 여성가구주 빈곤율은 19.1%, 남성가구주 빈곤율은 6.7%
※ 2009년 여성가구주 빈곤율은 21.3%, 남성가구주 빈곤율은 7.5%
※ 2010년 여성가구주 빈곤율은 20.1%, 남성가구주 빈곤율은 6.5%
- 빈곤계층이 아닌 가구주 가구의 증가율: 여성 6.6%, 남성 1.8%

- 여성장애인 고용률 증가율은 남성 증가율보다 높으나, 전체적으로 장애인 고용률은 2008년 이후 감소하고 있다.

※ 여성장애인 고용률은 2005년 20.2%, 2008년 23.7%, 그리고 2011년 22.7%
※ 남성장애인 고용률은 2005년 43.5%, 2008년 47.6%, 그리고 2011년 44.8%

- 보건부문 성평등수준은 다른 부문에 비해서 높으나, 2005년 이후 지속적인 개선을 보이다 2008년 일시적 하락이후 점차 개선되는 추이를 나타냈다.
 - 건강관련 삶의 질 지표(EQ-5D)의 성평등수준은 2005~2007년 하락, 2008년 이후 2010년까지 증가하였다.

※ 여성 EQ-5D 지표 값: 2005년 0.926, 2008년 0.918, 2010년 0.931 남성보다 증가폭이 큼
 ※ 남성 EQ-5D 지표 값: 2005년 0.953, 2008년 0.955, 2010년 0.966

- 여성 병원 입원요양진료건수는 남성보다 많고, 진료건수 증가율도 더 높아서 성평등수준이 악화되었다.

※ 여성 건강보험 진료급여 수급자수: 2005년 3,159천 건, 2009년 5,100천 건, 2011년 6,113천 건
 ※ 남성 건강보험 진료급여 수급자수: 2005년 2,763천 건, 2009년 4,222천 건, 2011년 4,949천 건

- 여성 건강검진 수검률은 남성보다 낮으나, 그러나 2011년 수검률 증가율은 여성이 5.7%로 남성 3.7%보다 높아서 성평등수준이 개선되었다.

※ 여성 건강검진 수검률 : 2005년 46.3%, 2009년 61.4%, 2011년 64.9%
 ※ 남성 건강검진 수검률 : 2005년 54.4%, 2009년 64.9%, 2011년 67.3%

- 경제활동부문의 성평등 수준은 2008년까지 증가하다가, 금융위기 이후인 2009년에 다소 악화되었으나 2010년 이후 크게 개선되었다.
 - 경제활동참가율 성평등지표 값은 2005년에서 2008년까지 증가하다가, 2009년에 감소하였다. 이후 2010년 61.1, 2011년 67.9로 개선되었다.

※ 여성 경제활동참가율 : 2005년 50.1%, 2008년 50.0%, 2010년 49.4%, 2011년 49.7%
 ※ 남성 경제활동참가율 : 2005년 74.6%, 2008년 73.5%, 2010년 73.0%, 2011년 73.1%
 ※ 2005~2011년 : 2010년, 2011년에는 여성 경제활동참가율 증가폭이 남성보다 더 큼

- 남녀임금수준은 2008년 이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여성임금증가율이 남성보다 더 높아서 성평등수준이 개선되었다. 특히 2011년에 크게 개선되었다.

※ 여성 월평균급여총액 : 2006년 1,497천원, 2010년 1,772천원, 2011년 1,862천원
 ※ 남성 월평균급여총액 : 2006년 2,249천원, 2010년 2,648천원, 2011년 2,750천원
 ※ 남녀 임금격차 : 2006년 66.5%, 2010년 66.9%, 2011년 67.7%로 지속적으로 개선

- 고용안정을 나타내는 근로자 중 상용근로자비율은 남녀 모두 지속적으로 증가하였다. 그러나 남성 상용직비율의 증가율이 여성보다 2009년에는 더 높았으나, 그 이후 여성의 증가율이 더 높아져 고용안정성의 성평등은 개선되었다.

※ 여성 상용근로자 : 2005년 2,439천명, 2008년까지 2,954천명, 2011년 3,739천명
 ※ 남성 상용근로자 : 2005년 5,479천명, 2008년까지 6,053천명, 2011년 6,922천명
 ※ 상용근로자 중 여성비율 : 2008년 32.8% 2009년 32.5%, 2010년 33.9%, 2011년 35.1%

- 의사결정부분의 성평등수준은 2005년 이후 지속적으로 개선되었으나, 2009년 19.8을 기점으로 2010년 19.7, 2011년 19.3으로 악화되었다.

- 국회의원의 성비는 최근에 소폭이지만 지속적으로 개선되었다.

※ 17대 국회: 전체 국회의원 당선자 299명 중에서 여성이 39명(13.0%)
 ※ 18대 국회: 299명 중에서 여성이 41명(13.7%)
 ※ 19대 국회: 300명 중에서 여성이 47명(15.7%)

- 5급 이상 여성공무원 증가율이 남성보다 높아서, 정부부문 의사결정직의 성평등 수준은 점진적으로 개선되는 추이를 보였다.(여성비율 2005년 6.3%, 2011년 9.9%).

※ 5급 이상 공무원 : 여성 2005년 2,186명, 2008년 2,724명, 2011년 3,720명
 남성 2005년 32,396명, 2008년 35,624명, 2011년 33,983명

- 민간부문 의사결정직의 성평등수준은 지속적으로 개선되다가 2008년 이후 관리자 중 여성비율이 지속적으로 감소하여, 성평등수준이 다소 하락하였다.

※ 여성관리자 : 2009년 12월말 기준 29천명, 2010년 35천명, 2011년말 33천명
 ※ 남성관리자 : 2009년 " 201천명, 2010년 236천명, 2011년말 254천명

- 교육·직업훈련부문 성평등수준은 2005년 이후 지속적으로 개선되었다.
 - 여성의 평균교육연수 증가율이 남성보다 약간 더 높아 2005년 이후 개선되었다.

※ 여성 평균교육연수 : 2000년 9.8년, 2005년 10.5년, 2010년 10.9년
 ※ 남성 평균교육연수 : 2000년 11.5년, 2005년 12.0년, 2010년 12.4년

- 고등교육기관 조취학률은 2011년 남성이 118.2%로 여성 89.6%보다 훨씬 높다. 그러나 2011년 남녀 조취학률의 증가율을 보면 여성이 전년대비 3.8% 증가한데 비해서, 남성은 2.4% 증가하여 성평등수준은 개선되었다.

※ 여성 고등교육기관 취학률 : 2005년 72.8%, 2008년 82.3%, 2011년 89.6%
 ※ 남성 고등교육기관 취학률 : 2005년 114.8%, 2008년 117.7%, 2011년 118.2%

- 재직자직업훈련 참가한 남성근로자는 2011년 2,172천 건이었는데 비해서 여성은 1,141천 건으로 훨씬 적었다. 그리고 재직자직업훈련 참가자는 전년에 이어서 2011년도에도 감소하였으나, 여성감소율은 -19.1%인데 비해 남성은 -22.9%로 훨씬 많이 감소하여 성평등 수준이 개선되었다.

※ 재직자훈련을 이수한 여성근로자 : 2006년 699천 건, 2009년 1,449천 건 2011년 1,142천 건
 ※ 재직자훈련을 이수한 남성근로자 : 2006년 2,177천 건, 2009년 3,481천 건, 2011년 2,172천 건

- 문화부문 성평등수준은 2005년 이후 2006년에 평등수준이 하락한 이후, 2007년에 개선되었으나 그 이후 2011년까지 다시 등락을 반복하였다.
 - 남녀 여가시간이 모두 감소하나, 여성 여가시간 감소율이 남성보다 더 커서, 여가시간 성불평등은 증가하였다.
 - 문화생산자인 문화콘텐츠산업 종사자의 성비는 기간별로 등락을 보였다. 그러나 2010년 남성 304천명 여성 221천명이었고, 전년대비 증가율은 남성이 2.6%인데 비해서 여성은 2.2%로 남성보다 낮아서 성평등수준은 악화되었다.

※ 남성 2004년 취업자 :	1일 평균 4시간 25분, 비취업자 8시간 42분
2009년 취업자 :	4시간 11분, 비취업자 8시간 23분
※ 여성 2004년 취업자 :	3시간 41분, 비취업자 6시간 17분
2009년 취업자 :	3시간 23분, 비취업자 6시간 3분

- 안전부문의 성평등지수의 경우 강력범죄 피해자 성비는 크게 악화되었으나, 범죄위험에 대한 안전인식 성비 지표 관련 성평등수준이 정체상태를 보였다.
 - 강력범죄 피해자 지표의 성평등수준은 2008년 약간 개선되었으나, 2010년까지 계속 악화되었다.
 - 범죄위험에 대한 안전인식의 경우 안전하다고 인식하는 여성비율은 2010년 32.2%, 남성 41.5%로 정체상태를 보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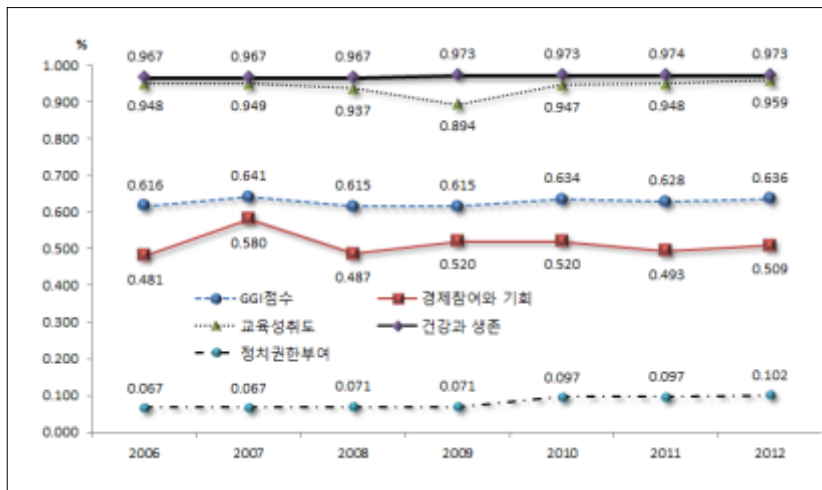
※ 여성피해자 :	2005년 14,847명, 2008년 17,479명, 2010년 20,930명
※ 남성피해자 :	2005년 3,736명, 2008년 4,712명, 2010년 4,403명

□ 국제 성평등지수와 한국의 성평등 위치

- 1995년 GDI와 GEM이 발표된 이래 다양한 국제성평등지수가 발표된다. 하지만 2012년 현재 매년 발표되고 있는 대표적인 성평등지수는 WEF의 GGI와 UNDP의 GII로 요약될 수 있으며 GGI에서 한국의 성평등 수준은 매우 낮다. 2012년 한국의 GGI 순위는 135개국 중 108위로 첫 발표 이래 최하위 수준을 유지한 반면, GII는 2010년 첫 발표에서 20위를 기록했고 2011년 11위로 상승하고, 순위에서 한국의 수준을 상위권에 포함시키고 있다.
- GGI는 2006년 WEF에서 처음 발표한 이후 매년 발표하는 지수로서 경제, 정치, 교육, 건강에 대한 성 격차를 통해 성평등 정도를 파악하며, 지표의 수준 혹은 달성 정도 보다는 남녀격차를 측정하는데 초점을 두고 있다. 이에 GGI는 여성의 권한 수준 향상보다 성별 격차 해소에 더 무게를 두고 있다. 그리고 GII는 GDI와 GEM의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2010년 UNDP에서 새로 개발·공포된 지수이며 여성과 남성의 성취 불평등으로 나타나는 인간개발의 손실을 측정하고 있다.
- GGI로 본 한국의 성평등 수준은 매우 낮다. 2006년 GGI가 첫 발표 시 한국은 115개국 중 92위로 나타난다. 2011년 107위, 2012년 108위로 하락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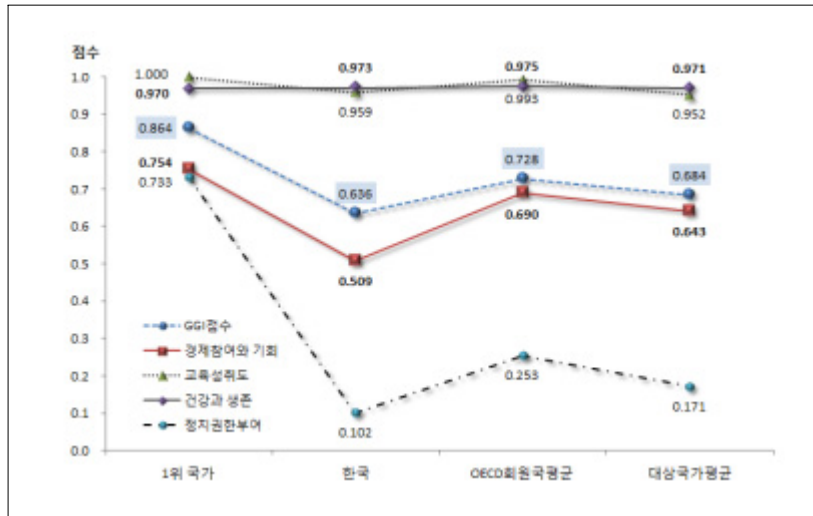
이로 인해 한국의 GGI 수준은 2006년 이래 OECD 34개 회원국에서 터키 다음으로 낮은 성평등 국가로 나타난다.

- 한국의 GGI 점수가 낮은 원인을 찾기 위해 4개의 하위영역을 살펴보았다.
 - 4개의 하위 영역 중 건강과 생존 영역과 교육성취도 영역은 다른 영역에 비해 높게 나타났다.



〈한국 GGI의 하위지수 점수 변화〉

- 교육성취도 영역은 2006년 0.948에서 2007년 0.949로 소폭 상승하지만, 2008년에 이어 2009년에는 0.894로 크게 하락하게 된다. 다행히 이후 다시 상승하여 2012년 0.959로 나타났다.
- 경제참여와 기회, 정치역량강화 점수는 다른 하위 영역들에 비해 낮은 점수를 보이고 있다. 경제참여와 기회 경우, 2006년 0.481에서 2007년 0.580으로 증가하였다. 이후 2008년은 0.487로 감소하다 2009년에 0.520로 다시 상승, 그리고 2012년에 0.509로 다시 하락하였다.
- 정치권한부여 영역의 경우 4개의 영역 중 가장 점수가 낮고 순위 또한 최하위권에 속하는 영역이다.
- 2012년 한국의 GGI 점수는 1위 국가와 비교하여 0.228p 낮고, OECD 회원국 평균과 비교하여 0.125p 낮다. 심지어 대상국평균과 비교하여 0.048p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 GGI의 하위지수 점수의 수준 비교(2012년)〉

- GII의 한국 순위는 2010년 첫 발표 시 138개 국가 중 20위, 2011년은 145개 국가 중 11위를 차지한다. 기존 성평등지수 순위에 비해 GII에서 한국의 순위가 높은 주요 이유는 다음과 같다.
 - 첫째로 생식건강영역에서 청소년출산율이 매우 낮기 때문이다. 청소년출산율은 해당 연령(15~19세) 여성 천명 당 출산하는 자녀수로, 한국은 2.3명이다. 이는 GII 대상국가 중 최하위로, OECD 회원국 평균(약 17.2명)과 비교해도 매우 낮은 값이다.
 - 두 번째로 한국의 GII 순위가 높은 이유는 높은 교육수준에 있었다. 중등이상 교육 받은 비율에서 여성과 남성이 각각 79.4%와 91.7%로 OECD회원국 평균(각각 74.8%, 79.3%)에 비해 남녀모두 높았다.

□ **성평등지수 관련 정책과제**

- 국가성평등지수 변화에 의하면, 성평등 수준은 지속적으로 개선되어 온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성평등 수준을 국제 비교한 결과에 의하면, 우리나라의 성평등 수준의 국제 순위는 큰 변화를 보이지 않고 있다.

- 이와 같은 현상은 성평등 지표와 관련된 수준은 전반적으로 향상되어 왔으나 남녀격차를 개선하는 속도가 느린데 기인한다. 또한 의사결정직, 안전부
문 등 일부 영역에 심한 남녀불평등이 존재하는데 기인한다.
 - 따라서 향후 성평등정책의 방향은 우선적으로 의사결정직, 안전부문 등의
성불평등을 개선하기 위한 지속적이고 구조적인 정책의 수립, 추진이 필요
하다.
- 국가 성평등지수와 영역별 지표 값의 수준과 변화 추이는 우리나라 성평등수
준을 나타냄과 동시에, 우리 사회의 관행과 의식 그리고 성평등정책의 효과를
나타낸다. 이와 같은 측면에서 국가 성평등지수의 산정결과를 평가하고, 해당
지수와 연계된 정책을 바탕으로 성평등 정책에 관한 방안은 다음과 같다.
- 가족부문은 가사노동시간의 남녀격차는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셋째 아 이상
출생성비가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다. 가족영역 지표 추이에 의하면 전반
적으로 가족영역에서 성평등 수준은 개선되고 있으나, 경제활동 등과 연계
된 지표에서는 성평등수준이 개선되지 않거나 정체상태를 보였다. 따라서
일 가정 양립을 위한 기반구축을 통해서 남성의 가사 및 육아참여를 제고시
키기는 것이 필요하다. 이 외에도 돌봄의 사회적 분담 강화, 공무원의 출산,
양육지원, 육아휴직 및 대체인력활용제도를 활성화시키는 것이 필요하다.
이외에도 노인 등 가족간호휴가제 도입과 남성의 가족간호휴가 참여를 촉
진시킬 수 있는 문화와 제도를 도입하는 것이 필요하다.
 - 복지부문의 경우 여성가구주 가구의 빈곤율은 2008년 이후 지속적으로 증
가하였으나, 2011년도에는 약간 하락하였다. 그리고 노후소득을 보장해주는
사회 안전망인 공적 연금과 함께 고용보험의 여성 가입자 수 증가가 남성보
다 높다. 그리고 상대적으로 빈곤선 이하에 있는 여성가구주 가구가 계속
증가하다가 2011년 약간 감소하였으나 여전히 상당히 많고, 여성 장애인 고
용율도 남성보다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이와 같이 복지영역의 지수를 보면
빈곤계층의 성불평등을 지속적으로 개선하는 것이 필요하고, 사회보험영역
의 여성 가입률 제고, 여성 장애인 등 취약계층의 여성의 경제적 자립을 지
원하는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것이 필요하다.
- 여성의 실질적인 노후소득보장 및 탈 빈곤을 위한 자립지원 강화를 위한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와 함께 여성의 국민연금사
각지대 해소, 여성 농어업인의 국민연금가입 추진 등을 통해서 노후소득을
보장하는 것이 필요하다.

- 보건부문을 보면 여성은 남성보다 고령인구 구성비가 높아서 건강관련 삶의 질이 남성보다 낮으나, 지속적으로 개선되어 왔다. 그러나 2011년에는 다소 성평등수준이 악화되었다. 또한 여성은 의료기관 요양급여지급건수가 남성보다 많고 내원일수, 진료일수도 많았는데, 이들 계층은 주로 여성노인과 출산기 여성이었다. 5대 암 발생률을 보면 성별로 발생률이 높은 암 유형은 다르지만 계속 증가하는 추이를 보였다. 건강검진 수검률은 여성이 남성보다 낮으나, 남녀 모두 증가추이를 보였다. 이에 따라 여성의 건강권 증진과 관련해서 여성건강관련 인프라 구축, 여성 생애단계별 건강관리 강화, 모성 및 생식건강 보장을 위한 지원, 일하는 여성 건강지원 등의 정책이 필요하다. 이 외에도 여성 건강검진 수검률 제고, 여성 정신건강과 관련된 정책과제를 개발하는 것이 필요하다.
- 경제활동부문의 성평등지표들은 장기적으로 증가하는 추이를 보이나, 단기적으로는 경기변동에 의해서 영향을 받고 있다. 주요 성평등지표 값을 보면 최근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과 상용근로자비율 증가율이 상대적으로 높았다. 그리고 남녀임금격차는 개선되었다. 남녀 경제활동참가율 격차와 임금격차는 다른 OECD 회원국에 비해서 상당히 큼에도 불구하고, 상당히 느리게 개선되고 있다. 또한 여성의 30~34세 경제활동참가율이 개선되고 있기는 하나, 다른 국가들에 비해서 상당히 낮다. 따라서 일터에서의 임금차별 해소를 위해서 기업의 자율적 임금차별 시정 지원, 임금체계 개선 등의 정책추진이 필요하다. 이 외에도 생애주기별 여성 고용활성화 지원을 위해서 청년여성, 초기경력단절여성, 여성 연소노인 등의 취업지원 정책을 추진하는 것이 필요하다.
- 교육·직업훈련부문을 보면 여성의 평균교육연수와 고등교육 취학률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등 정규교육과정에서의 남녀불평등은 지속적으로 개선되고 있다. 그리고 재직자직업훈련의 남녀근로자 성평등수준도 점진적으로 향상되어 왔으나, 최근 남녀 모두 재직자 직업훈련참가자가 줄어들고 있다. 이에 따라 대상별 특성에 맞는 역량강화 지원정책으로 빈곤층 여성의 고용 및 복지 연계지원, 농어촌 여성 및 다문화 여성의 역량을 강화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 외에도 비전통적 직종에 여성 진출을 확대하기 위해서 남성집중 직종 교육훈련과정에 여성비율 확대, 여성과학기술인 역량 강화, 그리고 여성 재직근로자 직업능력개발 강화가 필요하다.
- 의사결정적 부문은 성평등 수준이 가장 낮은 부문이다. 개별 지표를 보면

정치영역의 여성대표성과 관련된 국회의원 여성비율은 과거에 비해서 개선되었으나, 2011년 15.1%로 아직도 다른 나라에 비하면 낮다. 행정 분야 대표성과 관련이 있는 5급 이상 공무원 여성비율의 경우 최근 5급 공무원에서는 여성비율이 급격히 증가하고 있으나, 직급이 높을수록 여성비율이 급감한다. 민간기업분야 대표성을 나타내는 과장급 이상 여성관리자비율은 2008년까지 증가하다가 그 이후 정체상태를 보이고 있다. 우리나라 의사결정직의 성평등수준은 점진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나 상당한 기간이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여성의 정치적 대표성 확대 기반마련, 공공부문 여성대표성 제고 및 참여 확대를 위한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리고 여성공무원 공직진출 확대 및 육성, 적극적 고용개선조치 실효성 확보, 승진, 교육기회 등 차별해소 정책을 추진하는 것이 필요하다.

- 문화·정보부문의 경우 남녀 문화산업 종사자 지표는 경기변동에 의해서 다소 영향을 받았다. 2011년에는 경기회복과 함께 남녀종사자가 모두 증가하였으나 여성증가율이 남성보다 낮아서, 성평등지표 값이 다소 하락하였다. 남녀 여가시간은 점진적으로 하락하였다. 따라서 성차별 없는 미디어, 문화 예술 환경 조성, 농어업인 문화 활동 지원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 이와 함께 유급 및 무급노동에 관계없이 일정 시간동안 여가 활동을 할 수 있는 정책을 개발하는 것이 필요하다. 뿐만 아니라 여성 농어민 이외에 미혼모, 여성 장애인, 여성실업자 및 재직근로자, 결혼이민자 등 다양한 여성집단의 문화 및 여가활동을 지원하고, 남녀 정보격차를 줄일 수 있는 정책이 필요하다.
- 안전부문의 성평등지표를 보면 범죄피해에 대한 두려움을 느끼는 인구비율을 보면 여성이 남성보다 훨씬 빠르게 감소하고 있다. 그러나 강력범죄 여성 피해자가 급격히 증가하고 2005년 이후 여성피해자 증가율이 남성보다 훨씬 높은 기간이 많음에 따라, 강력 범죄로부터 안전도에 대한 지표 값은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다. 이에 따라 여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보호·지원 내실화, 성폭력·가정폭력 가해자 처벌 및 수사재판의 실효성 제고, 성매매 방지를 위한 실행력 및 대응력을 강화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와 함께 안전 부문 성평등제고를 위해서 관련 부처와 연계해서 실효성이 높은 정책을 개발, 추진하는 것이 필요하다.
- 성평등지수를 이용하여 국가의 성평등수준을 다각적으로 파악하고 개선 정도를 모니터링 함과 동시에 국가 성평등전략을 지원하는 방향으로 지수를 활용

하기 위해서는, 아래와 같은 방향으로 지수를 관리할 필요가 있다.

- 먼저, 국가성평등지수를 관리하고 지표를 통한 여성정책 체계화를 위한 법·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 여성발전기본법 개정안에 성평등지수 및 지표 작성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와 함께 여성정책 총괄·조정 기능 강화를 통해 성평등지수를 활용하여 주요 여성정책을 상시적으로 점검하는 것이 필요하다.
- 또한, 국가성평등지수의 대표지표와 관리지표의 경우 각 지표별 성평등 도달 정도를 정례적으로 점검하여 불평등이 개선된 지표와 그렇지 않은 지표로 분류하고, 불평등이 심화된 지표에 대해서는 집중 관리할 필요가 있다.
- 성평등지수의 체계적 관리를 위해 성평등지표를 DB로 구축하여, 국가성평등지수의 변화를 시계열적으로 점검하고, 각 지표의 변화원인을 분석하여 정책적 대응방안을 수립해야 할 것이다.
- 1995년 지방자치제도가 부활하면서 지역별로 다양한 성평등정책이 수립·시행되고 있다. 2011년에 지역단위의 특성과 지역 간 비교가 가능한 지역성평등지수가 개발되었다. 이와 같은 지역성평등지수를 활용하여 지역별 성평등 수준과 영역별 성평등관련 정책을 점검함과 동시에 전국적인 성평등지도 (gender equality map)를 작성하는 것이 필요하다.

목 차

I. 서론	1
1. 연구목적 및 필요성	3
2. 연구내용 및 방법	6
3. 국내외 연구동향	8
가. 주요 성평등지수 관련 연구	8
나. 여성정책에 성평등지수 활용 동향	11
다. 국내외 성평등보고서의 주요 내용	17
II. 성평등과 국가경쟁력	21
1. 성평등과 국가경쟁력의 관계	23
2. 국가경쟁력 지수 현황	25
가. 세계경쟁력지수(World Competitiveness Index)	25
나. 글로벌경쟁력지수(Global Competitiveness Index)	29
3. 성평등지수와 국가경쟁력지수의 관계	34
가. 성평등지수와 국가경쟁력지수의 변화	34
나. 성평등지수와 국가경쟁력지수의 관계	43
III. 국가성평등지수의 지표체계와 산정방법	45
1. 국가성평등지수의 지표체계	47
가. 성평등과 국가성평등지수	47
나. 국가성평등지수 부문과 지표	49
2. 국가성평등지수의 산정방법	55
IV. 우리나라 국가성평등 수준과 추이	67
1. 우리나라 성평등 수준과 특징	69

2. 부문별 성평등수준 변화 추이와 특징	73
가. 가족부문	73
나. 복지부문	77
다. 보건부문	80
라. 경제활동부문	82
마. 의사결정부문	88
바. 교육·직업훈련부문	94
사. 문화·정보부문	96
아. 안전부문	98
V. 국제성평등지수와 한국의 성평등 위치	103
1. 국제성평등지수의 비교 분석	105
가. UNDP의 GII	106
나. WEF의 GGI	112
다. SW의 GEI	117
라. OECD의 SIGI	122
마. EIU의 WEOI	127
바. 국제성평등지수의 비교와 평가	132
2. 국제사회에서 한국의 성평등 위치	136
가. GGI와 GII의 특징 비교	137
나. GGI와 GII로 본 한국의 성평등 위치	141
3. 국제성평등지수의 한국 순위 제고방안	151
가. 한국의 성평등 목표와 GGI 모의실험	151
나. 한국의 성평등 목표와 GII 모의실험	156
VI. 국가 성평등수준 평가와 제고 전략	159
1. 우리나라 성평등수준의 특징	161
2. 성평등지수와 성평등정책 연계방안	165
3. 성평등지수 활용 및 관리방안	176

■ 참고문헌	179
■ 부 록	183
<부록 1> 부문별 성평등지표의 통계표	185
<부록 2> 국가성평등지표의 통계적 정의와 자료원	209
■ Abstract	215

표 목 차

<표 I-1> 국제 및 국내 성평등지수 비교표	14
<표 II-1> 국제경영개발원 국가경쟁력 평가지표의 분야별 구성	27
<표 II-2> 국제경영개발원 국가경쟁력 지표 중 여성관련 평가지표	28
<표 II-3> 국제경영개발원 국가경쟁력지수의 연도별 평가대상 국가 수	28
<표 II-4> 세계경제포럼 글로벌경쟁력 지수의 요인별 지표구성	31
<표 II-5> 세계경제포럼 글로벌경쟁력지수의 연도별 평가대상 국가 수	32
<표 II-6> 글로벌경쟁력 지수의 분야별 가중치	33
<표 II-7> 글로벌경쟁력 지수의 국가발전단계 및 부문별 하위지수 가중치	33
<표 III-1> 국가성평등지수의 8개 부문 대표지표	52
<표 III-2> 국가성평등지수의 부문별 관리지표(1)	53
<표 III-3> 국가성평등지수의 부문별 관리지표(2)	54
<표 III-4> 부문별 성평등지표 산정에 적용되는 가중치	61
<표 III-5> 국가성평등지수 지표별 지수 산정 산식	64
<표 V-1> GII의 영역과 지표	108
<표 V-2> GII의 지표별 자료원	109
<표 V-3> GII의 특성 요약	112
<표 V-4> GGI의 지표구성과 자료원	114
<표 V-5> GGI 지수 산출을 위한 가중치	116
<표 V-6> GGI의 특성 요약	117
<표 V-7> GEI의 지표구성과 자료원	119
<표 V-8> GEI 산출을 위한 가중치	120
<표 V-9> GEI의 특성 요약	121
<표 V-10> “사회제도와 성 지수” 지표 구성 및 자료원	124
<표 V-11> SIGI 산출을 위한 가중치	126
<표 V-12> SIGI의 특성 요약	127
<표 V-13> WEOI의 영역과 지표	129

<표 V-14> WEOI의 지표 수량화 방법	131
<표 V-15> WEOI의 특성 요약	132
<표 V-16> GGI와 GII의 구성지표 비교	138
<표 V-17> GGI와 GII의 측정방법 비교	140
<표 V-18> 한국 GGI의 순위변화	141
<표 V-19> 한국 GGI의 영역 및 지표별 점수와 순위 변화	144
<표 V-20> 지난 6년간 GGI 하위영역의 점수 변화	148
<표 V-21> GII 순위와 점수	150
<표 V-22> 제4차 여성정책기본계획(안)의 지표별 2017년 달성 목표치	151
<표 V-23> 목표1과 목표2에 대한 모의실험 계획	152
<표 V-24> 한국의 GGI 영역 및 지표 점수와 순위 변화 추정(목표1)	153
<표 V-25> 한국의 GGI 영역 및 지표 점수와 순위 변화 추정(목표2)	154
<표 V-26> GII 영역 및 지표별 점수와 순위 변화 추정	157
<표 VI-1> 성평등지수와 여성정책 연계표-가족, 복지부문	167
<표 VI-2> 성평등지수와 여성정책 연계표-보건, 경제활동부문	169
<표 VI-3> 성평등지수와 여성정책 연계표-경제활동, 의사결정직 부문	171
<표 VI-4> 성평등지수와 여성정책 연계표-교육·직업훈련, 문화부문	173
<표 VI-5> 성평등지수와 여성정책 연계표-안전부문	175

그림 목 차

[그림 I-1]	국제경쟁력 지수와 성평등지수 상관관계	4
[그림 I-2]	연도별 우리나라와 주요국의 국제 성평등수준 순위	5
[그림 I-3]	본 연구의 주요 연구내용	7
[그림 II-1]	국제경영개발원의 국가경쟁력 순위 계산 절차	29
[그림 II-2]	한국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 변화	35
[그림 II-3]	한국 여성의 고용률 변화	35
[그림 II-4]	한국 여성 고위직 비율 변화	37
[그림 II-5]	2008년 OECD 회원국의 여성 고위직 비율	37
[그림 II-6]	한국 여성의 기대수명 변화	38
[그림 II-7]	한국 성격차지수 변화: 점수	39
[그림 II-8]	한국 성격차지수 변화: 순위	40
[그림 II-9]	한국 세계경쟁력지수 변화: 점수	41
[그림 II-10]	한국 세계경쟁력지수 변화: 순위	41
[그림 II-11]	한국 글로벌경쟁력지수 변화: 점수	42
[그림 II-12]	한국 글로벌경쟁력지수 변화: 순위	42
[그림 II-13]	성격차지수와 세계경쟁력지수의 관계	43
[그림 II-14]	성격차지수와 글로벌경쟁력지수의 관계	44
[그림 III-1]	우리나라 출산순위별 출생성비 변화 추이	57
[그림 III-2]	인구 10만 명당 강력범죄(흉악) 여성피해자 수 추이와 전망	59
[그림 IV-1]	국가성평등지수의 평등수준 추이	69
[그림 IV-2]	부문별 우리나라 성평등수준	70
[그림 IV-3]	부문별 성평등수준 변화 추이(1)	71
[그림 IV-4]	부문별 성평등수준 변화 추이(2)	72
[그림 IV-5]	출산순위별 출생성비 및 셋째 아 이상 구성비	74
[그림 IV-6]	주요국의 남녀 무급노동시간 현황	76
[그림 IV-7]	가족부문 성평등지표 값 변화 추이	77

[그림 IV-8]	복지부문 성평등지표 값 변화 추이	79
[그림 IV-9]	보건부문 성평등지표 값 변화 추이	82
[그림 IV-10]	주요국의 남녀 경제활동참가율과 남녀차이	84
[그림 IV-11]	주요국의 남녀 임금격차 (2008년)	85
[그림 IV-12]	주요국의 남녀 임시근로자 구성비 (2011년)	87
[그림 IV-13]	경제활동부문 성평등지표 값 변화 추이	88
[그림 IV-14]	주요국의 국회의원 여성비율 변동 추이	90
[그림 IV-15]	의사결정직 공무원의 여성비율 국제비교	91
[그림 IV-16]	관리책임을 가진 관리자 중 여성비율	93
[그림 IV-17]	의사결정부문 성평등지표 값 변화 추이	94
[그림 IV-18]	교육·직업훈련부문 성평등지표 값 변화 추이	96
[그림 IV-19]	문화·정보부문 성평등지표 값 변화 추이	98
[그림 IV-20]	한국과 일본의 흉악범 여성피해자 비교	100
[그림 IV-21]	안전부문 성평등지표 값 변화 추이	101
[그림 V-1]	한국 GGI의 하위지수 점수 변화	142
[그림 V-2]	한국 GGI의 하위지수의 순위 변화	146
[그림 V-3]	한국 GGI의 하위지수 점수의 수준 비교(2012년)	147
[그림 V-4]	GII의 국가별 점수 비교	150

부 표 목 차

<부표 1-1> 성별, 취업여부별 평균 가사시간	185
<부표 1-2> 셋째 아 이상 출생성비	185
<부표 1-3> 성별 육아휴직자	185
<부표 1-4> 경제활동상태별 남녀 노인부양 평균시간	186
<부표 1-5> 유배우 가구의 남녀 가구주비율	186
<부표 2-1> 성별 빈곤 가구주	187
<부표 2-2> 성별 공적연금 가입자	187
<부표 2-3> 성별 장애인 취업자	188
<부표 2-4> 성별 장애인 교육수준	188
<부표 2-5> 성별 장애인 등록자 수	189
<부표 2-6> 성별 고용보험 가입자	189
<부표 3-1> 성별 건강관련 삶의 질(EQ-5D)	189
<부표 3-2> 성별 요양급여(청구)지급건수	190
<부표 3-3> 성별 건강검진 수검률	190
<부표 3-4> 성별 생활 스트레스 인지율	190
<부표 3-5> 성별 5대 암 환자 수	191
<부표 3-6> 성별 만성질환 유병률(2009)	191
<부표 3-7> 성별 활동제한일수	191
<부표 3-8> 성별 자살생각률	192
<부표 4-1> 성별 경제활동참가율	192
<부표 4-2> 성별 임금격차(성비)	192
<부표 4-3> 성별 상용근로자	193
<부표 4-4> 전문·관리직 여성비율	193
<부표 4-5> 성별 30~34세 경제활동참가율	193
<부표 4-6> 성별 대졸자 실업률	194
<부표 5-1> 성별 국회의원 당선자	194

<부표 5-2>	성별 5급 이상 공무원	194
<부표 5-3>	성별 기업의 과장급 이상 관리자 수	195
<부표 5-4>	성별 입법·고위관리직	195
<부표 5-5>	(중앙정부) 위원회 여성위원 비율	196
<부표 5-6>	성별 초·중·고등학교 교장 비율	196
<부표 5-7>	성별 대학 교수	197
<부표 5-8>	성별 공무원 수	197
<부표 6-1>	성별 평균교육연수	198
<부표 6-2>	성별 고등교육기관 취학률	198
<부표 6-3>	성별 재직자직업훈련 참여 근로자	199
<부표 6-4>	성별 고등교육기관 진학률	199
<부표 6-5>	대학 전공별 여교수 비율	200
<부표 6-6>	성별 전공계열별 대졸 취업률	201
<부표 6-7>	남녀 학생 1인당 사교육비	201
<부표 6-8>	교육전문직 여성비율	202
<부표 6-9>	성별 평생학습 참여비율	202
<부표 6-10>	기술사, 기능장 여성비율	203
<부표 6-11>	여성가구주 직업훈련 참가자 수	203
<부표 7-1>	성 및 취업상태별 여가시간	204
<부표 7-2>	성별 문화콘텐츠 산업종사자	204
<부표 7-3>	성별 문화예술행사 관람률	205
<부표 7-4>	성별 생활체육 참여율(2010)	205
<부표 7-5>	성별 컴퓨터 및 인터넷 이용 시간(1개월)	206
<부표 8-1>	성별 범죄피해에 대한 두려움	207
<부표 8-2>	성별 강력범죄(흉악범) 피해자	207
<부표 8-3>	인구 10만명당 성폭력(강간) 발생건수	208
<부표 8-4>	가정폭력 발생건수와 기소건수	208

1. 연구목적 및 필요성	3
2. 연구내용 및 방법	6
3. 국내외 연구동향	8

1. 연구목적 및 필요성

성평등에 대한 각종 선행연구를 보면 성평등은 직·간접적으로 경제성장 및 국가경쟁력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세계은행(2012)에 의하면 경제성장률은 성평등과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정(+)의 상관관계(상관계수 0.35)를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성평등한 후진국일수록 빈곤수준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남아시아와 동아시아간의 경제성장률 격차 2.5%p 중에서 0.95%p, 사하라남부 아프리카와 동아시아간의 격차 3.3%p의 0.56%p는 교육수준의 남녀불평등에 기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S. Klasen, 200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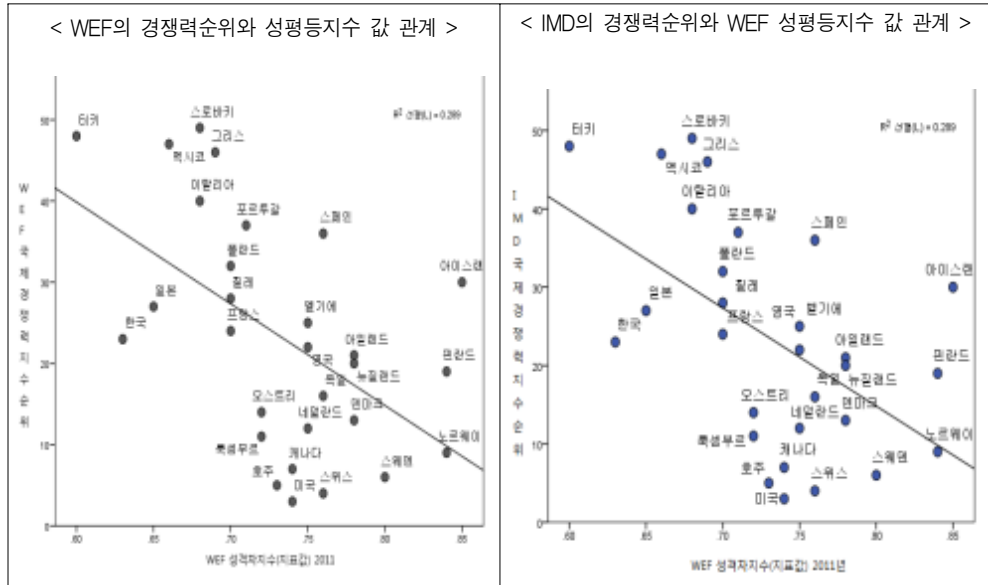
그리고 아시아 국가들이 여성인력을 미국 수준 즉, 여성 경제활동참가율 70% 이상으로 활용하면 연간 GDP가 인도의 경우 4.2%, 말레이시아 2.9%, 인도네시아 1.4% 정도 제고되는 것으로 추계됐다(UNDP 2010). 즉, 성평등과 관련된 여러 연구결과에 의하면 성평등은 단순한 인권 혹은 사회정의(social justice)를 제고시킬 뿐만 아니라, [그림 I-1]과 같이 국가경쟁력, 경제성장 및 빈곤 감소 그리고 젠더와 관련된 또 다른 발전을 촉진시키는 수단으로 나타났다(World Bank 2012).

이에 따라 각국은 성평등을 달성하기 위한 각종 정책을 추진하여 왔다. 특히 UN은 1995년 세계여성행동강령에서 각국에 성평등정책 추진을 위한 여성정책전담 국가기구를 설치하도록 하였다. 이에 따라 2012년 현재 대부분의 국가가 여성정책전담 국가기구를 운영하고 있고, 각종 성평등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우리 사회는 1988년에 정무장관(제2)실 설치 및 여성장관을 임명 등을 통해서 지속적으로 성평등정책을 추진하여 왔다. 그러나 국제기구나 단체가 발표하는 각종 성평등 수준에 의하면, [그림 I-2]와 같이 우리나라의 OECD 회원국 중에서 성평등수준이 상당히 낮은 국가에 속한다.

또한 우리나라 성평등수준을 영역별로 보면 경제참여와 기회영역의 성평등수준이 가장 낮고, 동 부문의 국제적 순위는 계속해서 하락하는 추이를 보인다. 이와 같은 현상은 우리나라 경제영역의 성평등수준이 점진적으로 개선되는 추이를 감안하면, 우리나라가 다른 나라에 비해서 개선속도가 느림을 나타낸다.

4 2012년 한국의 성평등보고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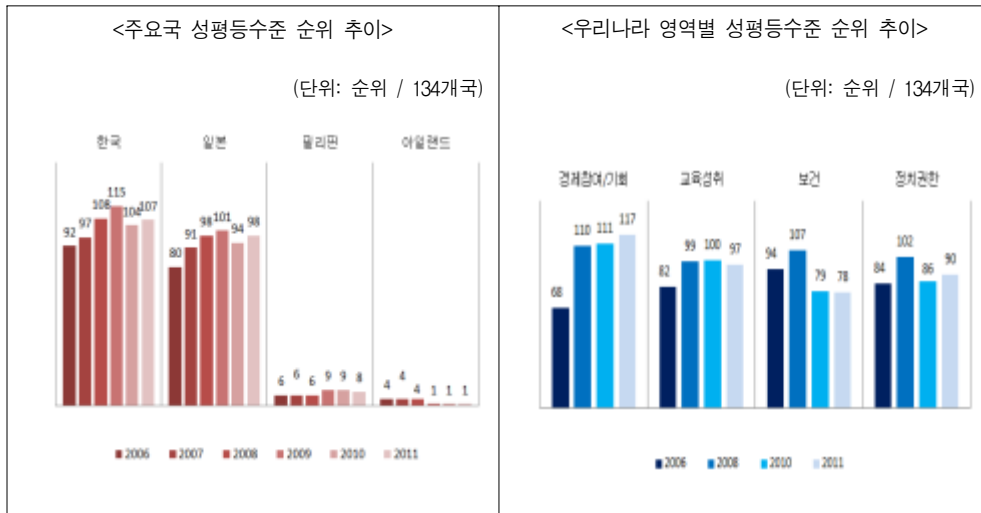


주 : WEF 경쟁력 순위가 가장 높으면 '1위'이고 하위 순위일수록 값이 큼. 성격차지수는 완전 평등이면 '1.0'임.

자료: WEF(2011), 『The Global Competitiveness Report 2011-2012』, IMD(2011), 『World Competitiveness Yearbook (WCY)』, WEF(2011), 『2011 Global Gender Report』 자료를 이용, 분석함.

[그림 I -1] 국제경쟁력 지수와 성평등지수 상관관계

따라서 우리 사회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성장과 함께 여성발전을 위해서 성불평등을 구조적으로 개선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먼저 우리나라 전체 그리고 사회 각 부문별 성평등수준을 측정하여 성평등 실태와 원인 및 개선 정도를 파악함으로써, 성평등정책의 방향과 과제 점검 및 국민들의 성평등에 대한 관심 제고가 필요하다.



자료: WEF(해당 연도), 『Global Gender Report』 자료를 이용, 분석함.

[그림 1-2] 연도별 우리나라와 주요국의 국제 성평등수준 순위

성평등지수란 성평등의 목적, 방향 그리고 기준 등을 나타내는 표지로서, 성평등수준 향상에 대한 효과적인 모니터링, 특정 국가의 성평등과 관련한 장점과 약점, 관련 정책 및 제도의 평가 등을 가능하게 한다(European Commission: 2003). 성평등지수가 이와 같은 기능을 할 수 있기 위해서는 실제 성과를 평가할 수 있는 지표를 통해서 가능하다.

우리나라도 2009년 국가 성평등수준의 다각적인 파악과 개선 정도에 대한 모니터링을 통해서 국가 성평등전략을 지원할 수 있는 국가 성평등지수를 여성가족부가 개발하였다. 이와 같은 성평등지수는 우리나라 성평등 상황과 성평등 개선 정도, 그리고 개괄적인 성불평등이 심각한 부문과 그 원인을 파악하는데 활용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성평등지수는 성평등에 대한 국민의 인식과 관심을 제고시킴과 동시에, 성평등지수와 국가경쟁력, 복지(well-being) 등과 같은 다양한 사회경제적인 지표(socio-economic indicators)간의 관계를 파악하는데 활용할 수 있다.

이에 따라 금년 연구에도 여성가족부가 2009년에 개발한 한국형 국가 성평등지수를 활용하여 매년 성평등수준과 추이를 산정하여 분석하는 것이 필요하다. 특히 금년에는 부문별 성불평등 원인분석과 함께 불평등 해소를 위한 정책과제

를 적극적으로 발굴, 제안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와 함께 금년은 ‘국가 성평등보고서’ 생산 3년차에 접어들기 때문에, 성평등수준 국가비교에서 우리나라 순위를 제고시킴과 동시에 성불평등 개선을 통한 국가경쟁력 제고를 위한 정책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 영역별 혹은 개별 성평등지표별로 우리나라와 주요 국가의 지표 개선 속도와 성평등 수준 차이 및 그 원인을 분석하여 국가 성평등수준 제고를 위한 전략을 개발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 외에도 금년에는 여성정책과 관련 5년 주기에 기본계획들이 수립됨에 따라, 국가 성평등지수의 개별 지표와 새로운 정책간의 연계표를 다시 구축하고, 개별 지표 개선에 필요한 우선 정책 등을 제안하는 것이 필요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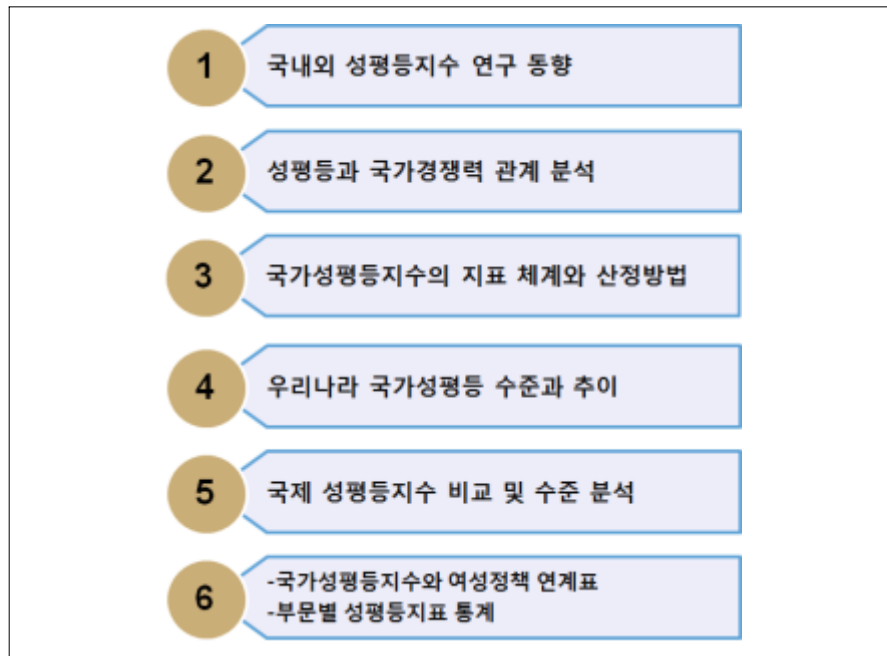
2. 연구내용 및 방법

본 연구의 1장에서는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 그리고 성평등 수준이 국가 및 사회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이론 및 통계분석에 대한 선행연구를 개괄적으로 정리할 것이다. 그리고 2장에서는 성평등과 국가경쟁력 간의 관계에 관한 각종 통계 및 연구결과를 정리하였다. 즉, 2010년의 「성평등과 지속가능한 성장」, 2011년 「정치 및 경제 영역 여성대표성과 할당제」에 이어서 금년에는 「성평등과 국가경쟁력」에 대한 심층 연구결과를 정리하였다.

최근 기획재정부가 우리 특성에 맞는 경쟁력 모델과 객관적 지표(259개)를 기준으로 OECD 34개국 국가경쟁력을 비교한 결과에 의하면, 경제부문은 양호하나 성평등 등이 포함된 사회통합은 취약한 것으로 평가된다. 양성평등 및 소득분배 등 형평성 지표가 하위권이며, 낮은 여성 및 청년층 인력활용, 취약한 서비스 산업경쟁력 등이 성장잠재력 추가 확충의 저해요인이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국가경쟁력에 영향을 주는 지표인 ‘경제성장 및 규모 부문’의 여성고용률, 여성 경제활동참가율, ‘사회통합부문’의 고위직 여성비율, 성격차지수(GGI), 여성임금 비율, 여성의 기대수명의 현황과 추이를 분석하고, 이들 지표 제고를 위한 전략을 모색할 것이다.

3장에서 우리나라 국가성평등지수의 하위영역, 지표 값 등의 내용과 구축방법, 국가성평등지수 산정방법, 그리고 개별지표의 표준화 등 지표 값 산정방법에 대

해서 정리할 것이다. 그리고 우리나라의 불평등 수준과 추이가 현재 및 향후 우리 국가 및 사회에 미치는 영향을 추론하였다. 본 장에서는 최근 성평등 지표 중에서 조사 및 통계 생산방법에 변경에 있었던 부문에 대한 분석을 하였다.



[그림 I-3] 본 연구의 주요 연구내용

4장에서는 우리나라의 성평등 수준을 측정하고 추이를 분석할 것이다. 본 장에서는 성평등 수준이 국가 및 사회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이론 및 통계분석에 대한 선행연구를 개괄적 정리할 것이다. 이를 통해서 우리나라의 불평등 수준과 추이가 현재 및 향후 우리 국가 및 사회에 미치는 영향을 추론할 것이다. 또한 우리나라 국가 성평등지수와 부문별 지표를 활용하여, 2012년 국가 성평등수준과 부문별 성평등수준을 측정할 것이다. 이와 함께 최근 5년간 국가전체 및 부문별 성평등수준을 측정하고, 그 원인에 대한 분석을 할 것이다.

5장에서는 국제사회에서 우리나라의 성평등 위치를 분석하였다. 즉, 우리나라의 성평등수준이 국제사회에서 어느 정도에 위치하고 있는 지를 분석할 것이다. 그리고 성평등지표별로 우리나라와 주요국의 성평등수준 비교를 통해서 우리나라

라의 위치가 어떻게 변화되었는지를 분석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 국제비교가 가능한 성평등지수인 UNDP의 GII(Gender Inequality Index), 세계경제포럼(WEF)의 GGI, Social Watch의 GEI, Economic Intelligent Unit(EIU)의 여성경제기회지수(WEOI)의 과거 및 현재 지수 값을 이용하여 비교 분석할 것이다. 또한 대표적인 국제 성평등지수인 WEF의 GGI, EIU의 WEOI 지수에서 나타난 우리나라 성평등관련 지표분석을 통해서, 우리나라 성평등수준이 다른 나라에 비해서 낮은 원인 분석과 함께 성평등수준 제고를 위한 전략과 정책방안을 제시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6장에서는 국가 성평등수준 평가와 함께 성평등수준을 제고시키기 위한 전략을 제안하였다. 즉, 국가 성평등수준과 평가, 성평등수준에 대한 국제비교, 국가경쟁력과 성평등지수 간의 관계 분석 등을 기초로 2012년 국가 성평등수준 제고를 위한 국가 전체 및 영역별 성평등수준 전략과 함께 성평등수준 제고를 통한 국가경쟁력 제고 방안을 제시하였다. 그리고 부록에서는 먼저 ‘성평등지수와 여성정책연계표’, ‘부문별 성평등지표 통계표’를 정리하였다. 즉, 국가 성평등지수와 여성가족부를 포함한 각 행정부처의 여성정책 간의 연계표를 작성, 정리하였다. 동 연계표에는 여성가족부가 2012년에 수립하는 『2013~2017 제4차 여성정책기본계획』, 고용노동부의 『2013~2017 제5차 남녀고용평등기본계획』과 같은 중앙정부 여성관련 정책 등을 포함시켰다. 그리고 성평등지표 통계표는 국가성평등지수, 영역별 지표를 구성하는 대표지표 및 관리지표에 대한 통계, 통계의 출처 등에 대한 각종 표를 정리하였다.

3. 국내외 연구동향

가. 주요 성평등지수 관련 연구

성평등수준을 수량적으로 측정하는 지수는 <표 I-1>에서 보듯이 유엔개발기구(UNDP)의 GDI, GEM, 그리고 2010년부터 GDI, GEM을 대신하여 사용하고 있는 GII, 세계경제포럼(WEF)의 GGI, Social Watch의 GEI, 우리나라 국가 성평등지수를 포함하여 영국, 뉴질랜드 등의 성평등지표, 그리고 노르웨이 지역 성평등지수, 스웨덴 EqualX 등 다양한 지수들이 있다(김태홍 외 2011).

성평등지수는 지수설계(Index Design)에 따라서 크게 두 가지 즉, 국가 혹은

지역의 성평등 추이 비교(historical comparison)와 국가 및 지역 비교(cross-country, region comparison)를 위한 지수로 나눈다. 이와 같은 분류에 의하면 일반적인 국제기구와 단체가 개발한 지수는 국가별 성평등 수준 비교와 함께 개별 국가의 성평등 추이를 비교할 수 있는 기능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성평등지수로 특정 국가의 성평등 수준 추이를 파악하는데 한계가 있다. 왜냐하면 국제비교 대상 국가 중에서 상당수의 국가 특히 후진국의 경우 성평등수준을 파악하는데 필요한 통계를 생산하지 않음에 따라, 지표 수가 제한되어 특정 국가 성평등수준 추이를 파악하는데 한계가 있다. 이에 따라 국가 성평등수준 혹은 지역 성평등수준의 추이와 정책효과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성평등수준을 파악할 수 있는 다양한 지표로 구성된 '우리나라의 국가 성평등지수' 혹은 '서울시의 서울시 성인지지표' 등이 적절하다.

또한 성평등지수는 지수를 구성하는 지표유형(Type of Indicator)에 따라서 남녀격차(Gender Equality)를 측정하는 지수와 남녀성취(Gender Attainment), 혹은 양자를 혼합하여 측정하는 지수로 구분된다(F. Grieg, R. Hausmann, L. D. Tyson, S. Zahidi 2006). UNDP가 2009년까지 성평등수준을 측정하기 위한 GDI, GEM은 대표적인 남녀격차와 성취를 모두 측정하는 지표이다. 그러나 UNDP가 2010년에 수정한 성평등지수인 GII와 다른 국제기구나 단체 즉, WEF, Social Watch가 개발한 성평등지수 GGI, GEI, 그리고 개별 국가들이 지역 성평등수준 비교를 위해서 개발한 지역 성평등지수들은 대부분이 남녀격차를 측정하는 지수이다. 일반적으로 남녀격차(gender gap)로 성평등수준을 측정하면 성불평등 수준의 변화를 간략하고 명확하게 파악할 수 있는 장점이 있고, 어떤 부문에서 개선 혹은 악화가 이루어졌는지 쉽게 파악할 수 있다.

개별 성평등지표 및 지수 개발 및 연구 현황을 보면 <표 I-1>과 같이 먼저 대표적인 성평등지수로는 UNDP의 남녀평등지수(Gender Development Index, GDI)와 여성권한척도(Gender Empowerment Measure, GEM)가 있다. 동 지수는 유엔개발기구가 개발한 것으로 남녀평등지수는 3가지 지표(기대수명, 교육정도, 양질의 삶을 영위하는데 필요한 자원의 접근정도)로 남녀평등정도, 여성권한척도는 4가지 지표(의회여성비율, 입법고위관리직 여성비율, 전문기술직 여성비율, 남녀 소득비율)로 경제 및 정치 분야에서의 여성지위를 측정한다(Hippu Salk Kristle Nathan 2008).

UNDP는 2010년에 20주년을 맞이하여, 인간개발과 관련된 주요한 지표에 대해 개혁을 한다. 즉, UNDP는 불평등을 조정한 인간개발지수와 성불평등지수를 발표했다. 불평등 조정 인간개발지수는 보건, 교육, 소득의 불평등으로 인한 인간개발의 손실을 파악하기 위한 지수이다. 그리고 UNDP는 기존의 GDI와 GEM이 가지고 있는 한계와 비판을 수용하여 성불평등지수(Gender Inequality Index; GII)를 개발했다. 동 지수는 138개 국가를 대상으로 하며, 재생산과 관련된 보건, 권한, 그리고 노동시장 참가의 성불평등 정도를 측정한다(UNDP 2010).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성평등을 가져오는 제도적인 측면에 초점을 맞춘 성평등지표인 GID(Gender, Institutions and Development Database) 지표를 개발했다. 동 지수는 성평등을 측정하기 위해 성평등관련 제도, 자원에 대한 접근, 경제발전, 여성의 경제적 역할 부문에 세부 지표를 개발한 것이다. 주로 평등과 관련된 제도에 초점을 둔 지표로 국가별로 평등정도를 측정하여 발표했다(OECD 2009).

유럽연합(EU)도 GEI(Gender Equality Index)라는 성평등지수를 개발하였는데, GEI는 5개 분야(유급노동, 경제적 배분, 의사결정직 배분, 지식의 배분, 시간 배분)의 10개 지표를 구성하여, 회원국을 대상으로 지수를 산정, 발표했다. 세계경제포럼(WEF)이 개발·활용하고 있는 GGI(Gender Gap Index)는 4개 분야(경제활동참여와 기회, 교육수준, 정치적 권력, 보건과 생존)의 14개 지표로 구성되어 있고, 2006년 이후 매년 각국의 순위를 발표하였다(J. Plantenga, H. Figueiredo, C. Remery, M. Smith 2003).

Social Watch의 GEI(Gender Equity Index)는 3개 분야(교육, 경제활동, 정치·경제적 영역에서의 의사결정직 대표성)로 구성되어 있고 2007년부터 각국의 순위를 발표했다. 이들 국제기구나 기관들이 개발, 활용하고 있는 지수와 지표들은 성평등한 수준을 비교하고, 시기별로 국가별 성평등수준이 어떻게 변화되었는지를 살펴보는 데 목적이 있다. 따라서 특정한 성평등전략이나 정책의 수립, 평가에 기초가 되는 지수 및 지표의 역할을 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Social Watch 2008).

또한 국가단위에서 개발, 활용하고 있는 성평등지표로는, 영국(UK) 평등위원회의 GEI(Gender Equality Index)가 있다. 이 지수는 5개 분야(소득, 가족, 행정 및 정책 서비스, 치안 및 안전, 권력), 22개 대표지표로 구성된다. 그리고 영국정

부는 각 지수별로 평등수준이 개선되고 있는지, 정체 혹은 악화되고 있는지를 파악하고 각 부분별로 성평등한 수준에 도달하는데 소요되는 기간을 추정하여 발표함으로써, 국가정책의 효과와 전략수립의 참고자료로 활용한다.

스웨덴(Sweden)의 IGE(Index of Gender Equality)는 13개의 지표에 대한 남녀통계치의 상대적인 차이로 구성되어 있고, 지역별로 지수를 산정한다. 주로 지역별 성평등 수준을 서로 비교하여, 지역별로 균형 되게 성평등 정책이 수립, 추진될 수 있도록 하는 기초자료로 활용한다(Statistics Sweden 2008).

캐나다의 여성지위부(Status of Women Canada)는 성평등은 남녀가 유급노동 시장에 동등하게 접근할 수 있고, 돌봄노동이 가치 평가되고 지원되며 그리고 동등하게 배분되어지는 것을 요건으로 한다고 밝혔다(W. Clark 2000). 캐나다의 경제적 성평등지수는 남성에 대한 여성의 상대적인 위치를 측정하기 위한 것이다. 경제적 성평등지수는 소득, 노동, 교육 영역에서 캐나다 남녀의 경험이 어느 정도 균형을 보이는 가를 측정한다. 지수에 포함된 ① 소득지수는 여성의 소득은 남성보다 가변적이기 때문에 선택했다. 자녀와 배우자 지원, 배우자 연금, 아동에 대한 정부이전지출, 모성급여, 그리고 사회부조는 여성소득의 중요한 원천이다. 소득지수는 다시 세후 소득지수(after-tax income index)와 총수입지수(total earnings index)와 같은 하위지수로 구성된다. ② 노동지표(work indicators)는 총노동부담(workload) 지수, 유급노동지수(paid work index), 무급노동지수로 구성된다. ③ 교육지수는 수여된 대학학위, 직무관련 훈련, 교육에 대한 직종별 수입지수로 구성된다.

아일랜드 법무부는 국가여성전략(National Women's Strategy)을 수립하고 부문별 전략을 달성하기 위한 조치(3개 부문의 194개 조치, 1개 전략실행부문의 18개 조치)를 마련했다. 이러한 부문별 조치가 마치 평등지표와 같은 형태로 구성되어 있으나, 기본적으로 측정 가능한 형태로 되어 있어서 정책 평가 기능을 한다(Department of Justice, Equality and Law Reform 2007).

나. 여성정책에 성평등지수 활용 동향

우리나라는 2000년 이후 성평등지수와 지표를 산정한 '국가 성평등보고서'를 매년 생산하고 있다. 동 국가 성평등지수를 통해서 우리나라 성평등수준의 현황과 추이, 그리고 평등수준 변화의 원인을 파악하고 있다. 또한 우리 사회의 성평

등수준 및 추이에 대한 홍보를 통해서 국민의 성평등상황에 대한 이해를 제고시킴과 동시에, 관련 정책 모니터링 등을 하고 있다. 우리나라 이외에 다른 국가들도 국제 및 해당 국가 성평등지수를 다양하게 활용하고 있는데, 그 현황은 아래와 같다.

캐나다(Canada)의 경우 캐나다 여성지위청은 이미 오래전에 성평등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소득, 노동, 고용에서의 남녀평등을 측정하기 위해서 경제적 성평등지수(Economic Gender Equality Indicators)를 1997년에 처음 개발하였고, 2000년에 보완하였다. 캐나다 여성지위청은 동 지수를 통해서 여성의 경제상황에 대한 이해를 제고시키고, 정책개발 그리고 성평등목표에 대한 관심을 높이는데 활용했다. 캐나다는 성별영향분석평가(Gender-based analysis)를 담당하고 있는 행정부처에서 동 지표를 활용할 의도로 계획하였고, 활용하였다(Status of Women Canada, 1997, 2000).

성평등지수(GGI 2011년)에 의하면 네덜란드(Netherlands)의 성평등수준은 교육 99%, 보건 97% 수준이다. 그러나 스칸디나비아국가 중에서는 하위수준이다. 또한 의사결정직 직업 즉, 입법·고위공무원·관리자, 장관급 여성비율이 상대적으로 낮아서, 각각 70위, 40위 등이다. 이에 따라 국가경쟁력의 가장 주요한 결정요인인 인적자원활용 특히 미활용 여성인력활용에 역점을 둔 정책을 추진하였다(Henk Volberda 2011).

필리핀(Philippine)의 경우 OECD가 발표해온 성평등지수인 SICI에 의하면 필리핀은 여성을 차별하는 관습법이 만연한 것 등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필리핀 정부는 ILO의 권고에 따라 참여적 젠더감사(PGA, Participatory Gender Audit)를 통한 성 주류화 정책을 추진했다. 필리핀 정부가 성평등정책 전략으로서 성 주류화 정책을 추진함으로써, 성평등수준 제고와 함께 여성권한이 크게 제고된 것으로 평가된다. 2011년 GGI를 보면 필리핀의 성평등수준은 8위로 아시아 국가 중에서 가장 높다. 교육성취와 보건의 1위이고, 경제활동참가와 기회, 정치권한 영역이 15위 내외이다(NEDA(필리핀 경제개발기획처) 2010, Mainstreaming Gender through Gender Audit).

아랍 에미리트(UAE)는 세계경제포럼(WEF)이 발표한 성평등 순위와 지표별 성평등 순위를 참조하여, 성평등 촉진을 통한 국가경쟁력 제고방안을 마련했다. 세부 지표값과 순위를 검토한 이후 ① 여성고용과 관련된 노동정책 즉, 모성보호

휴가, 국가지원 보육서비스 제고를 통한 여성 노동참여와 유지를 강화하면서 사용자에게 여성인력 채용 동기를 제공하는 정책을 수립, 추진하고, ② 젠더문제와 관련된 정확한 현황 파악을 정책 수립을 위해서 젠더관련 자료의 입수가능성과 품질 제고 정책을 추진 등을 제안했다(Dubai School of Government(2008), Policy Brief No. 5).

터키(Turkey)의 성평등지수(GGI)는 세계 134개국 중 126위(2010년)이다. 정치영역의 여성권한은 제고되었으나, 학교급별 여성진학률이 상당히 낮다. 여성이 학교에 가지 않는 주된 이유는 여성에 대한 차별 즉, 가족이 여성을 가정에 머물도록 하는 관습에 기인한다. 따라서 정부 및 비정부기구는 여성진학률 제고 정책을 촉구하고 있으나, 정책은 여전히 빈곤해소에만 역점을 두고 있다(Hülya Gülbahar 2010).

자메이카(Jamaica)의 경우 UNDP의 남녀평등지수는 0.762(2009년)로 인간개발지수보다 낮다. 자메이카는 성평등수준이 세계 47위인데, 교육영역(83위), 정치영역(92위)의 성불평등이 심하다. 자메이카 정부는 성평등지수 등을 통한 여성현황을 기초로 국가 성평등정책을 수립, 시행했다(The Bureau of Women's Affairs 2010).

이상과 같이 해외 및 국내의 성평등지표와 지수를 개발하기 위한 상당수의 선행연구가 있고, 성평등지수를 이용하여 성평등 수준을 산정·발표를 하고 있다. 그러나 이들 연구들은 성평등의 국제비교, 지역별 비교 등에 활용되거나, 특정한 국가나 지역의 기간별 성평등수준과 개선 정도를 파악하는데 활용되고 있다.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우리나라도 2009년 한국성평등지수를 여성가족부가 개발하였다. 그리고 2010년부터 개발된 한국성평등지수의 각 지표와 관련된 행정기관과의 협의를 통해서 여성가족부는 대표지표를 선정하고, 이를 기초로 한국성평등지수를 산정·평가한 「국가성평등보고서」를 발간하였다. 이와 같은 국가성평등보고서가 국가의 성평등전략을 수립, 모니터링 하는 지수로 활용되기 위해서 한국성평등지수를 매년 산정, 평가하여 성평등정책에 반영하는 것이 필요하다.

〈표 I-1〉 국제 및 국내 성평등지수 비교표

생산 국가	지수 및 지표명	지표구성	목적 및 특징	측정 기준과 방법	성격
UNDP	GII (Gender inequality Index)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여성에 대한 3개의 영역에 5개의 지표로 구성됨. - 생식보건영역은 모(성) 사망률과 청소년 출산율 지표로 구성 - 권한영역은 25세 이상 인구 중에서 중등교육 이상의 교육을 받은 인구비율, 외회 대표성으로 구성됨. - 노동시장영역은 경제활동참가로 구성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성불평등을 인간개발의 중요한 장애로 보고, 생식 보건, 권한, 노동시장참여 영역에 대한 남녀불평등을 측정하고 모니터링을 목적으로 함. - 성불평등 수준만으로 지수 값을 산정하기 때문에 국가의 발전정도에 따라 성평등 수준이 영향을 받지 않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영역간의 남녀불평등이 서로 높은 상관관계를 가질수록 지수 값은 커지도록 설계됨. 	국가단위 비교
UNDP	GDI	<ul style="list-style-type: none"> - 3개 영역(건강한 삶, 교육수준, 소득수준)에 4개 지표로 구성됨 - 평균수명, 성인 문자 해독율, 총 취학률, 추정 소득 등 4개의 지표로 구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건강, 교육, 경제 분야 성취에서의 성별 불평등 정도 - HDI와 GDI 지수차이를 통하여 인간개발에서의 성불평등의 차이를 고려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간개발의 성취수준과 남녀 불평등을 함께 고려하여 측정함. - 성취수준은 특정 지표의 남녀 평균, 불평등수준은 남녀불평등 정도에 대한 혐오정도를 기초로 측정함. - 지수산정은 영역의 단순평균 	국가단위 비교
UNDP	GEM	<ul style="list-style-type: none"> - 3개 영역(정치참여, 경제참여, 경제적 자원에 4개 지표로 구성됨 - 개별지표는 여성 의원비율, 고위·행정관리직 여성비율, 전문기술직 여성비율, 여성소득 비율 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치 및 경제 분야에서 여성의 의사결정 참여 기회에 대한 불평등 정도 - 여성개발보다 여성참여의 기회를 측정 - 거의 모든 지표들은 선진국 중심의 도시 엘리트 중심으로 선정되어, 후진국에게 적합하지 않다는 비판이 있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여성권한 성취수준과 기회 정도를 측정함. - 성취수준은 EDE를 산출하는 과정을 통해 표준화 함. - 지수산정은 영역의 단순평균 	국가단위 비교
WEF	GGI	<ul style="list-style-type: none"> - 4개 영역에 14개의 지표로 구성됨 - 경제 참여와 기회영역이 5개, 교육 성취영역이 4개, 정치 권한부여 영역이 2개, 건강과 생존 영역이 3개의 지표로 구성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회·경제적 자원과 기회의 접근에 대한 성별 격차 - 성평등관련 지표와 보조지표를 함께 제공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평등수준을 성별격차로 측정 - 지표 가중치로 1%포인트 변화에 대한 표준편차 변화값을 사용 - 지수산정은 영역의 단순평균 	국가단위 비교
Social Watch	GEI	<ul style="list-style-type: none"> - 3개 영역에 10개의 지표 - 영역별로 보면, 경제활동격차가 2개, 권한부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여성의 지위와 현황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목적으로 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평등수준을 성별격차로 측정 - 지표에 대한 가중치 없음 	국가단위 비교

생산 국가	지수 및 지표명	지표구성	목적 및 특징	측정 기준과 방법	성격
EU	WEIO	<ul style="list-style-type: none"> 여성경제기회지수는 5개 영역 26개 지표 구성 노동정책(5개 지표) 및 집행(4), 금융(4), 교육훈련(4), 여성 법적 사회적 지위(5), 일반(4개) 	<ul style="list-style-type: none"> 경제, 정치, 교육 분야의 기회와 권한에 대한 성별 격차 여성의 불평등과 함께 경제활동에서 일반적 사업 환경을 포함하고 있음. 불평등과 관련 없는 영역과 지표가 포함, 경제활동영역으로만 한정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지수산정은 영역의 단순평균 평등수준을 성별격차로 측정 지표마다 점 수부여 방식 다름, 점수화 하는 방법이 주관적 요소가 있음 	국가단위 비교
OECD	SIGI(Social Institution and Gender Index)	<ul style="list-style-type: none"> 5개 차원에 12개의 지표로 구성 차원별로 보면, 가족법규에 4개, 신체안전에 2개, 아들선호에 1개, 시민 자유권에 2개 그리고 소유권에 3개의 지표로 구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SIGI(사회제도와 성 평등 지수는 성 불평등을 초래 하는 전통 사회적 규범, 문화적 관습 등 투입 지표에 초점을 두고 선정된 지수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각 제도의 유무와 발생비율 정도를 가지고 지수를 계산함. 종합지수 값은 계산하지 않으며, 개별지표별 점수만 계산하고 있음. 지표와 영역 가중치 없음. 	국가단위 비교
영국(UK) 평등 위원회	GEI (Gender Equality Index)	<ul style="list-style-type: none"> 5개 분야(소득, 가족, 행정 및 정책 서비스, 치안 및 안전, 권력), 22개 대표지표로 구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지수별로 평등수준이 개선되고 있는 지, 개선이 정체상태인지 등을 파악하고 각 부분별로 성평등한 수준에 도달하는데 소요되는 기간을 추정하여 발표함으로써, 국가정책의 효과와 진략수립의 참고자료로 활용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성별 성취수준 	국가단위 비교
덴마크	덴마크 성평등정책 연차보고서	<ul style="list-style-type: none"> 덴마크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15개의 성평등정책 전략목표별로 총 367개 지표로 구성됨. 	<ul style="list-style-type: none"> 국가 성평등정책의 전략목표와 성평등지표와 연계하여 정책성과를 파악 연차보고서 	<ul style="list-style-type: none"> 성별 성취의 객관적 수준 	국가단위
뉴질랜드	뉴질랜드 여성 지위 변화 지표	<ul style="list-style-type: none"> 뉴질랜드 여성 정책의 세 가지 목표인 여성 복지, 여성의 경제적 지속가능성, 일-생활 균형과 연계한 14개의 지표들로 구성 여성복지는 건강 기대수명 등 7개 지표로 구성, 경제적 지속가능성은 고등교육참여 등 5개 지표, 일-생활 균형은 2개의 지표로 구성됨. 	<ul style="list-style-type: none"> 뉴질랜드 여성정책 추진계획의 목표와 밀접한 지표를 선정하여 정책 인민자에게 정책적 노력이 필요한 분야를 파악할 목적으로 발간된 성별통계보고서. 	<ul style="list-style-type: none"> 성별 성취수준 정도 	국가단위
영국 여성평등국	영국 여성지위관련	<ul style="list-style-type: none"> 총 9개 부문의 254개 지표로 구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영국 여성 지위 개선과 관련하여 여성의 지위 변화를 점검할 수 있는 척도가 되는 부문별 주요 지표의 구성을 목적 	<ul style="list-style-type: none"> 성별 성취수준 정도 	국가단위

생산 국가	지수 및 지표명	지표구성	목적 및 특징	측정 기준과 방법	성격
	주요지표		- 여성평등국의 정책 우선순위에 따라 각 부문별 지표 선정		
여성 가족부	국가성평등지수	- 총 9개 부문의 254개 지표로 구성 - 각 부문(인구, 가족, 교육, 경제활동과 소득, 정치 및 사회참여부문, 건강, 복지, 문화, 폭력과 범죄)은 여성지위지표, 양성평등지표, 지역평등지표의 3 종류의 지표로 구분	- 국가균형발전에 성 평등 관점을 재정립하기 위한 기본 작업으로 지역 간의 양성평등상태를 파악하기 위해 개발. - 국가균형발전모델의 성 주류화 전략 개발 : 양성평등지표의 개발 과정의 일환으로 작성됨.	- 성별 성취수준 정도 - 영역별 지표로 제시	국가단위
대통령 직속여성특별위원회	남녀고용평등지표	- 계획 및 의사결정, 모집 및 채용, 배치 및 승진, 교육 및 능력개발, 정년 및 해고, 임금과 부리 후생, 모성보호, 취업지원, 기업문화와 환경에서의 평등으로 구성	- 노동시장에서의 남녀차별 제도를 점검하여 차별 없이 다양한 인적자원을 활용함으로써 기업의 경쟁력 제고와 함께 삶의 질 및 생산적 부지를 실현하기 위해 개발	- 결과지표로 구성	국가단위
문화관광부	양성평등문화지표	- 총 4개 부문의 40개 지표로 구성	- 기존 문화지표를 상인지적 관점으로 재정립하여 문화정책에서 젠더간 불평등을 최소화하기 위해 개발됨.	- 투입지표와 결과지표를 구분해서 투입대비 결과를 측정할 수 있도록 구성	국가단위
한국노총	노동조합성평등지표	- 노동조합내 의사결정과정에서 여성의 참여 정도를 나타내는 여성대표도, 노동조합 조직 구조적 측면에서의 여성직근도, 노동조합 조직운영측면에서의 여성직근도, 노동조합 조직문화에서의 여성친화도로 구성	- 노동조합내의 성불평등의 수준을 계량적으로 보여주는 역할을 하고, 이러한 객관적인 현황을 기준으로 성평등을 위한 노동조합의 정책 방향 및 전략을 수립하기 위해서 개발	- 여성 성취의 객관적, 주관적 수준	국가단위
서울시	서울시성인지표	- 4개의 영역에 197개 지표로 구성 - 영역별로 지표구성을 보면 여성의 경제세력화가 8개, 소수자 여성사회통합이 3개, 여성의 사회문화권 확대가 4개, 여성의 대표성제도가 4개의 지표로 구성됨.	- 개발 목적은 서울시 여성의 성평등 수준을 점검하고 성평등 수준 향상을 위한 구체적인 목표치를 제시, 여성정책 수행을 통해서 여성지위 수준 향상과 국제 도시 간 비교를 통해 선진도시 수준으로 서울시 여성의 수준을 업그레이드 시키는 것에 있음.	- 지표의 성별격차로 측정하면 전문기초사를 통해 지표별 가중치 부여 - 지수는 기중지표의 단순평균으로 산정함.	서울시

자료: 김태홍 외(2011).

다. 국내외 성평등보고서의 주요 내용

1) UNDP의 인간개발보고서(2011)

- 보고서 제목: 『지속 가능성과 평등: 모두를 위한 더 나은 미래(Sustainability and Equality - Better Future for All)』
- 보고서 목차:
 - ① 왜 지속가능성과 평등인가?
 - ② 인간개발, 평등, 그리고 환경 지표들의 패턴과 경향
 - ③ 영향 추적-관계들의 이해
 - ④ 긍정적인 동반 상승-환경, 평등, 그리고 인간개발을 위한 전략
 - ⑤ 정책 과제들에 대한 대응
 - ⑥ 통계자료
 - 인간개발지수와 그 구성요소
 - 인간개발지수의 경향, 1980-2011
 - 불평등 조정 인간개발지수
 - 성불평등지수(Gender Inequality Index)와 관련 지표들
 - 다차원적 빈곤지수(Multidimensional Poverty Index)
 - 환경적 지속가능성
 - 환경적 위협에 대한 인간발달 영향들
 - 안녕감과 환경에 관한 인식
 - 교육과 건강
 - 인구와 경제

2) WEF의 성격차보고서(2012)

- 보고서 제목: 『2012 Global Gender Gap』
- 보고서 목차:
 - ① 세계 성격차 측정
 - 2012년 성평등격차
 - 부록 A: 성 격차에 대응 추이
 - 부록 B: 지역과 소득 집단별 분류
 - 부록 C: 지표에 따른 최솟값과 최댓값
 - 부록 D: 지표에 따른 순위들
 - 부록 E: 성평등을 위한 정책 틀

- ② 국가별 개요(Country Profiles)
 - 국가 목록
 - 사용자 가이드: 국가별 목록의 사용
 - 국가별 개요

3) Social Watch의 성평등보고서(2012)

- 보고서 제목: 『Social Watch Report 2012-The right to a future』
- 보고서 목차:
 - ① 주제별 보고서(Thematic Reports)
 - 미래에 대한 권리-*Roberto Bissio*
 - 인권은 경제회복의 핵심-*Civil Society Statement*
 - Rio+20과 그 이후: 정의가 없으면 미래도 없다
-*Civil Society Reflection Group on Global Development*
 - Rio+20: 실행이 핵심이다-*Chee Yoke Ling*
 - 지속가능발전과 아랍국가의 새로운 역할
-*Arab NGO Network for Development*
 - 패러다임 전환: 유일한 탈출구-*Alejandro Chanona*
 - 나이지리아: 지속가능한 빈곤감축을 위한 열쇠
-*Social Development Network*
 - 발전의 지속가능성 평가방법-*Social Watch Italy*
 - 현재 제도, 우리 존재를 위협하고 있다-*EUROSTEP*
 - 녹색과 평등-*Kate McInturff*
 - 지원의 효과성과 조세 정의-*Barbara Adams*
 - 분노한 집단은 유럽미래에 대한 올바른 질의를 요구-*Mirjam van Reisen*
 - 주택, 토지 그리고 지속가능한 발전
-*Miloon Kothari and Shivani Chaudhry*
 - ② 개선정도(Measuring Progress)
 - 기초역량지수, 성평등지수, 사회경제권리실행지수(Social and Economic Rights Fulfillment Index (SERF))
 - ③ 국가별 보고서(National Reports)

4) 북아일랜드의 성평등지수(GEI)

- 보고서 제목: 북아일랜드의 성평등지수(Gender Equality Indicators for Northern Ireland: A Discussion Document)
- 보고서 목차:
 - ① 서론
 - ② 성인지 연구
 - ③ 북아일랜드의 성인지 이슈 관련 가용 데이터
 - 태도, 교육과 훈련, 고용, 근로소득, 소득, 육아, 간병의 다른 형태
 - 건강, 이동, 폭력과 범죄, 의사결정
 - ④ 북아일랜드, 영국, 아일랜드의 일반적 성불평등 형태
 - ⑤ 국제적 맥락과 예
 - 주류와 성평등 지표
 - 성평등 지표의 예
 - 성평등 지표 관련 주요 정책 분야
 - 지표의 의미와 사용
 - ⑥ 북아일랜드 성평등 지표 개발을 위한 방안들

5) 서울시 성인지지표(GSI) 평가 및 지수(2010년)

- 보고서 목차:
 - ① 서론
 - ② 서울시 성인지지표 측정 및 지수 산출 결과
 - 서울시 성인지 지표 측정 결과
 - 서울시 성인지 지수 산출 결과
 - 종합 평가
 - ③ 국제비교
 - 여성의 경제세력화
 - 여성의 사회문화권 확대
 - 여성의 대표성 제고
 - ④ 서울시 여성친화도시지표 개발
 - 서울시 여성친화도시지표 개요
 - 영역별 대표지표 및 관리지표
 - 사회 조사
 - ⑤ 결론

II

성평등과 국가경쟁력

1. 성평등과 국가경쟁력의 관계	23
2. 국가경쟁력 지수 현황	25
3. 성평등지수와 국가경쟁력지수의 관계	34

1. 성평등과 국가경쟁력의 관계

성평등은 다양한 차원에서 국가경쟁력에 영향을 미친다. 성평등이 국가경쟁력에 미치는 영향을 크게 직접적 영향과 간접적 영향으로 나누어 살펴볼 수 있다. 우선 직접적인 영향은 교육에서의 성불평등의 영향, 노동시장에서의 성불평등의 영향, 경제자원 접근에서의 성불평등, 신체적 완전성 등에서의 성불평등을 나타낸다. 그리고 이들 성 불평등의 차원은 경제 발전에 직접적, 간접적 영향을 미친다. 경제발전론에 따르면 경제 성장은 인적 자본을 포함한 자본 축적, 축적된 자본의 산출, 자본 활용의 효율성, 생산의 제도적 환경 등에 의해 영향을 받는다. 이러한 요인들과 함께 성 불평등도 경제 성장에 영향을 미친다. 실제로 성 불평등은 물적, 인적인 경제 자원의 축적, 이들 자원의 회수, 기술 발전과 효율성에 영향을 미친다. 따라서 성 불평등은 경제 발전에 직접적, 간접적인 영향을 미친다.

우선, 교육에서의 성 불평등이 경제 발전에 미치는 직접적인 효과는 다음과 같다. 즉, 교육에서의 성 불평등은 인적 자본의 평균적인 질을 저하시켜, 결과적으로 노동자의 생산성과 경제 성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Klasen, 1999). 달라와 가티(1999)는 이러한 부정적 효과를 선별 왜곡 효과(selection distortion effect)로 설명한다. 즉, 남성과 여성의 타고난 능력이 유사한 상황에서 교육에서의 성 불평등은 여성의 교육 접근 기회가 남성에 비해 적음을 의미한다. 그에 따라 성차별이 없는 상황에서 받을 수 있는 교육 보다 적은 교육을 받는 여성의 인적 자본 축적 수준과 인적 자본의 질이 저하된다. 또한 인적 자본 축적은 인적 자본의 양과 질을 개선하는 효과를 갖는다. 따라서 인적 자본 축적 수준이 높아질수록 인적 자본 축적률도 높아진다. 이와 마찬가지로 교육에서의 성 불평등이 인적 자본의 양을 감소시킴에 따라 인적 자본의 질과 축적률 역시 감소하게 된다(Lucas, 1988). 마지막으로 다음 세대 교육에 있어서 어머니의 교육의 정적인 외생성을 갖는다. 즉, 교육에서의 성 불평등은 자녀 교육과 자녀의 인적 자본 축적에 대한 어머니의 유인을 약화시킨다(M. Murthi, A. Guio and J. Drèze, 1995). 이러한 상황에서 교육에서의 성 불평등은 인적 자본의 약화와 함께 노동자의 생산성을 약화시킴으로써 직접적으로 성장을 감소시키게 된다.

두 번째로 노동시장에서의 성 불평등이 성장에 미치는 직접적인 효과는 다음과 같다. 고용과 소득에서의 성 불평등은 교육에서의 성 불평등과 유사한 왜곡을

초래한다. 실제로 남성보다 생산성이 높은 여성이 노동시장에서 배제된다. 그에 따라 성차별로 인해 기업이 자신들의 종업원으로 선택할 수 있는 우수 인력(talent)의 풀이 감소하고, 그에 따라 우수 인력의 배치가 최적화되지 못한다. 그에 따라 고용에서의 성 불평등은 경제 성장을 저해한다. 더욱이 소득에서의 성 불평등은 가족 영역에서 여성의 협상력을 약화시킨다. 그러나 여성은 남성과 다르게 행위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즉, 여성의 소득 증대와 함께 여성의 협상력이 증가하면, 가구 투자가 좀 더 생산적인 방식으로 이루어지는데, 특히 자녀 양육에서의 투자가 그러하다. 여성 소득이 증가함에 따라 여성의 협상력이 증가하고, 그에 따라 자녀의 건강과 교육에 대한 투자가 증가하게 된다. 이것은 다음 세대의 인적 자본을 증가시키고, 경제 발전을 촉진하게 된다(Thomas, 1997).

세 번째, 경제 자원 접근에서의 성 불평등이 경제 발전에 미치는 직접적인 효과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일반적으로 남성과 여성은 서로 다른 생산 활동에 참여하는 것으로 인식된다. 이러한 상황에서 경제 자원 접근에서의 성 불평등은 여성의 생산 활동에는 과소투자, 남성의 생산 활동에는 과대투자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에 따라 경제 자원 접근에서의 성 불평등은 경제 자원의 비효율적인 배분으로 이어진다. 이러한 경제 자원의 비효율적 배분은 결과적으로 한 국가의 총량 수준에서의 경제적 산출을 감소시키고, 기술적인 진보를 위축시키게 된다(Udry 1996; Von Braun and Webb 1989; Jones 1986).

네 번째, 신체적 완전성과 의료 접근에서의 성 불평등이 경제 발전에 미치는 직접적인 효과는 다음과 같다. 즉, 신체적 완전성과 의료 접근에서의 성 불평등은 여성의 생산성과 부존생산요소(factor endowment)를 감소시킨다. 실제로 생산성과 인적 자본 축적으로 교육과 의료 투자에 좌우된다.

한편, 성 불평등이 경제 발전에 미치는 간접적인 영향을 간단하게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교육에서의 성차별은 특정 국가에 대한 투자 감소를 초래하여, 결과적으로 경제 발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된다. 즉, 인적 자본에 대한 투자율이 높은 국가는 양질의 더 많은 인적 자본을 축적할 수 있으나 교육에서의 성차별로 인해 인적 자본을 선별적으로 축적한 국가는 그렇지 않은 국가에 비해 양질의 인적 자본 축적에 한계가 나타나고, 이들 국가에 대한 투자를 감소시키고 결과적으로 경제 성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된다.

다음으로 노동시장에서의 성 불평등이 경제 성장에 미치는 간접적인 영향으로

는 노동시장의 평등한 접근을 통해 생산적 노동력이 증가하면 투자율과 생산이 증가하는 효과가 나타난다. 반면 여성 취업에 대한 인위적인 장벽은 노동 비용 상승과 국제 경쟁력 약화를 초래함으로써 경제 성장에 부정적인 효과를 미치게 된다. 또한 여성 고용의 증가에 따라 부패가 감소하여, 각종 제도의 건전성을 제고함으로써 간접적으로 경제 성장을 촉진하게 된다. 더욱이 여성 정치대표성 확대를 통한 정치 영역의 성 불평등이 감소하게 되면 각종 제도 운영 과정에서의 부패가 감소하여, 제도의 건전성이 제고되고 결과적으로 경제 성장에 기여하는 간접적인 효과를 미치게 된다.

이와 같이 성평등이 경제성장과 국가경쟁력에 미치는 직, 간접적인 효과에 대한 인식에 확대됨에 따라 국가경쟁력 관련 지표와 지수에는 성평등을 측정할 수 있는 세부지표가 포함되어 있다. 예컨대 기획재정부가 발표하고 있는 국가경쟁력 보고서의 경제 분야의 여성 경제활동참가율, 여성고용률, 사회통합 분야의 고위직 여성 비율 성격차지수, 여성임금비율, 여성기대수명 등의 성평등지표가 포함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이 절에서는 기획재정부가 발간하는 국가경쟁력 보고서의 성평등 지표를 중심으로 성평등지표의 변화 및 실태를 점검함으로써, 성평등 수준 제고를 통한 국가경쟁력 제고 방안을 검토하고자 한다.

2. 국가경쟁력 지수 현황

가. 세계경쟁력지수(World Competitiveness Index)

국제경영개발원(International Institute of Management Development)은 1990년 1월 스위스 제네바에 있는 IMI(International Management Institute)와 로잔에 있는 IMEDE(Institut pour l'Étude des Méthodes de Direction de l'Entreprise)가 합병해 탄생한 기관이다. 국제경영개발원은 1989년 이후 매년 세계경쟁력센터(World Competitiveness Center)를 통해 각국의 경쟁력을 평가하여 발표한다. 그리고 국제경영개발원 세계경쟁력연감(The World Competitiveness Yearbook, 이하 WCY)을 통해 발표된 국제경영개발원의 세계경쟁력지수(The World Competitiveness Index)는 각 국의 해외 자본 유치 및 기업의 해외 투자 시 중요한 참고로 활용되는 영향력 있는 지수로 알려져 있다.

1) 국가경쟁력 정의

국제경영개발원은 국가경쟁력을 ‘국가 내에서 활동하는 기업들이 국내 및 글로벌 경쟁력을 유지할 수 있도록 환경을 제공하는 국가의 능력’으로 정의한다. 즉 기업이 자국 및 다른 나라의 기업들과 세계시장에서 경쟁할 때 우위를 유지할 수 있게 제공되는 사회여건, 즉 효율적인 사회구조, 제도 및 정책을 지원할 수 있는 국가의 총체적인 능력을 국가경쟁력으로 보았다. 따라서 국제경영개발원의 국가경쟁력은 사회제반 환경 중 경제적인 것이든 비경제적인 것이든 기업의 경쟁력과 관련된 모든 요인들을 국가경쟁력의 개념에 포함시키고 있다.

국제경영개발원에서 발표하는 국가경쟁력지수는 세계경쟁력지수(World Competitiveness Scoreboard, 이하 WCS)이다. WCS는 국제경영개발원의 전신인 IMEDE에서 WEF와 공동으로 1989년 처음 발표되었으나, 1995년 두 기관이 결별하면서 국제경영개발원에서 독자적인 국가경쟁력 평가지표를 개발하여 발표하고 있다.

2) 국가경쟁력 평가지수

가) 평가지표

국제경영개발원은 각국의 종합적인 경쟁력 평가를 위해 경제성과 분야, 정부 행정효율 분야, 기업경영효율 분야, 발전인프라 분야로 구분하고 각 분야를 다시 5대 분야로 나누어 총 20개 분야를 분석하고 있다.

총 평가항목은 2011년 기준 331개이며, 이 가운데 실제 평가에 반영된 지표수는 248개로 정량지표 132개, 설문지표 116개로 구성된다. 그리고 평가에 활용되는 각종 지표는 세계 각국의 57개 국제경영개발원 파트너기관을 통해 수집하고 있고 전체 평가항목의 약 2/3를 차지한다. 그리고 경영자의견조사를 통해 조사되는 연성자료 또한 국제경영개발원파트너 기관의 협조로 수집되고 있고 전체 평가항목의 1/3을 차지한다.

평가지표체계는 국가 환경을 네 개의 주요 분야, 즉 경제성과 분야, 정부 효율성 분야, 기업 효율성 분야, 인프라 구축 분야로 나눈다. 그리고 각 분야들은 다시 5개의 하위 분야로 나누어 총 20개 분야를 가지고 평가한다. 각 분야별 경쟁력 구성 요소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표 II-1〉 국제경영개발원 국가경쟁력 평가지표의 분야별 구성

경제성과분야	정부효율성 분야	기업효율성 분야	인프라 분야
국내경제	공공재정	생산성·효율성	기본인프라
국제무역	재정정책	노동시장	기술인프라
국제투자	제도적 여건	금융	과학인프라
고용	기업관련법	경영활동	보건·환경
물가	사회적 여건	태도·가치	교육

자료: IMD(2011), *World Competitiveness Yearbook 2011*.

나) 여성관련 평가지표

국제경영개발원의 국가경쟁력 평가항목 수에 비해 여성관련 항목은 매우 적다. 국제경영개발원의 국가경쟁력 평가에 활용된 여성관련 항목은 총 5개 항목으로 전체 평가항목의 1.5%에 불과하다.¹⁾ 331개 항목 중 5개 항목만이 여성과 직접관련이 있는 지표로 나타난다. 분야별로 보면, 정부효율성의 사회적 여건 분야에서 기회균등, 여성의원, 여성의 지위, 성불평등 지수 등 총 4개의 항목을 활용하고, 기업효율성의 노동시장 분야에서는 여성 노동인구를 평가지표로 사용한다.

여성관련 항목 중 기회 균등은 설문조사를 통해 조사되는 것으로 기회균등 관련 법규가 경제발전을 촉진시키는지를 경영자에게 질문하여 수집한다. 이외의 지표는 모두 경성자료로, 여성의원은 총 의석수 중 여성비율 값을 사용하며, 여성지위는 전체 입법고위관리직 중 여성비율, 그리고 성 불평등 지수는 UNDP의 성 불평등 지수를 사용한다. 마지막 여성노동인구는 총 노동인구 대비 여성비율을 평가 지표로 활용한다.

1) 여성관련 지표는 실제 평가에 사용되는 지표의 2.0%이다.

〈표 II-2〉 국제경영개발원 국가경쟁력 지표 중 여성관련 평가지표

분야 및 평가지표		평가내용
정부효율성 -사회적여건	기회 균등	기회균등 관련 법규가 경제 발전을 촉진시키는지
	여성 의원	%, 총 의석 수 대비
	여성의 지위	%, 총 입법자, 고위 공무원 및 관리자 대비
	성 불평등	성 불평등 지수(GII, UNDP)
기업효율성 -노동시장	여성 노동인구	%, 총 노동인구 대비

자료: IMD(2011), *World Competitiveness Yearbook 2011*.

다) 평가대상 국가

평가대상 국가는 매년 조금씩 변화하고 있다. 2011년 평가대상 국가 수는 59개국으로 전년대비 1개국이 증가하였다. 국제경영개발원 경쟁력지수 평가대상 국가는 1997년 45개국에서 2006년 61개국까지 증가했지만, 이후 2008년 55개국으로 감소했다. 하지만 2009년부터 매년 1개 국가씩 평가대상 국가가 증가하고 있다.

〈표 II-3〉 국제경영개발원 국가경쟁력지수의 연도별 평가대상 국가 수

연도	1997	1998	1999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국가수	45	46	47	49	59	60	61	55	55	57	58	59

자료: IMD(각 연도), *World Competitiveness Yearbook*.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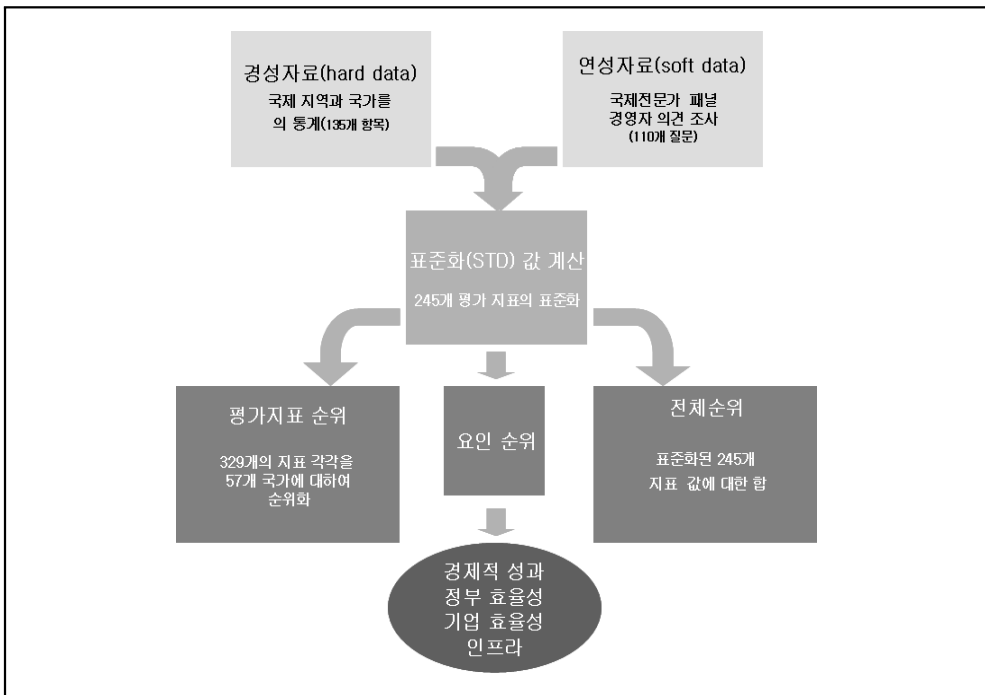
3) 경쟁력지수 산정 방법

세계경쟁력연감은 기업이 경쟁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유지하는 국가의 능력을 분석하고 순위를 매긴다. 이는 부의 창조가 사기업이든 공기업이든 우선적으로 기업에서 일어날 수 있음을 가정하는 것이다

WCY의 방법론은 지표체계에서 언급했듯 4개의 주요 분야와 하위분야로 나누어 총 20개 분야의 지표를 가지고 평가한다. 20개의 하위 분야는 329개의 세부항목을 포함하고 있으며, 하위분야별로 동일한 수의 항목으로 측정되는 것은 아니다. 국가별 순위는 세부항목으로 산출하고, 20개 부문별로 해당세부 항목들을 모

두 표준화하여 합산함으로써 국가별 순위를 산출한다. 각각의 하위분야들은 그것이 포함하고 있는 항목의 개수와는 상관없이 전체 결과 값에서 동일한 가중치, 즉 5%씩(20x5=100)을 부여하여 4대 분야별 순위 및 종합국가순위를 계산한다.

또한 국제경영개발원은 경성자료와 연성자료(설문자료)간에 다른 가중치를 부여하고 있다. 경성자료의 가중치는 1로 부여하는 반면, 설문자료의 가중치는 0.5로 일괄 부여하여 경쟁력 순위에 적용하고 있다.



[그림 II-1] 국제경영개발원의 국가경쟁력 순위 계산 절차

나. 글로벌경쟁력지수(Global Competitiveness Index)

세계경제포럼은 거시경제, 공공제도, 기술 등의 다양한 항목에 대한 각종 통계와 기업인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를 통해 국가별 경쟁력 순위를 매년 발표하고 있다. 특히 2006년부터는 기존의 성장경쟁력 지수(Growth Competitiveness Index)를 글로벌경쟁력지수(Global Competitiveness Index)로 개편하여 국가경쟁력을 평가하고 있다.

1) 국가경쟁력 정의

세계경제포럼은 국가경쟁력을 “지속적 경제성장과 장기적인 번영을 가능하게 하는 정책·제도 및 제반요소”로 정의한다. 이것은 국가경쟁력을 한 국가의 경제 활동을 활성화시키는 구조적 요인들과 관련된 개념으로 간주하여, 생산성과 경쟁력을 추동하는 데 있어 중요한 요소를 종합적으로 총괄하는 시각에 기초한 것이다. 그리고 글로벌 경쟁력 지수로 표시된 국가경쟁력은 생산성과 경쟁력을 구성하는 축으로서 기본요인, 효율성 증진, 혁신 및 성숙도 등 3개 분야를 설정한다.

그리고 세계경제포럼의 세계경쟁력지수 평가는 국가의 발전단계에 따라 경쟁력 지수의 가중치를 다르게 적용하는데 이것은 마이클 포터의 국가 발전단계 정의를 적용하여 요소 주도 경제, 효율성 주도 경제, 혁신 주도 경제의 3단계로 구분하기 때문이다. 각 단계별 특징은 다음과 같다.

① 요소 주도 경제(Factor-driven stage)

- 국가: 비숙련 노동력, 천연자원 등 주어진 요소에 기반하여 경쟁
- 기업: 가격경쟁, 저임금과 낮은 생산성을 활용하여 단순 제품을 판매
- 경쟁력 요인: 일차적으로 제 기능을 하는 공공 및 민간 제도(pillar1), 적절한 인프라(pillar2), 안정적인 거시경제 구조(pillar3) 및 건강하고 교육 받은 노동력(pillar4)

② 효율성 주도 경제(Efficiency-driven stage)

- 경제개발이 진행되면서 임금이 인상됨에 따라 효율적인 제품 생산 및 생산과정의 개발, 제품 품질 향상의 필요성이 대두되면 이에 따라 국가들은 효율성 주도 경제로 이동함
- 경쟁력 요인: 고등교육 및 훈련(pillar5), 효율적인 재화시장(pillar6), 제 기능을 하는 노동시장(pillar7), 성숙한 금융시장(pillar8), 대규모의 국내 혹은 해외시장(pillar9), 그리고 기존 기술의 이점을 활용하는 능력(pillar10)

③ 혁신 주도 경제(Innovation-driven stage)

- 혁신 주도 경제에 속하는 국가는 자국의 기업이 새롭고 독창적인 제품들과 경쟁함으로써, 고임금과 삶의 수준을 유지할 수 있음
- 경쟁력 요인: 기업성숙도(pillar11), 혁신(pillar12)

2) 국가경쟁력 평가지수

가) 평가지표

세계경제포럼은 위에서 검토한 국가경쟁력 개념에 기반하여 글로벌경쟁력 지수를 3개 부문 12개 분야로 나누어 평가하고 있다. 우선 기본요인 부문의 경우에는 제도, 인프라, 거시경제 안정성, 보건 및 초등교육 등 4개 분야의 총 46개 지표로 평가지표가 구성된다. 다음으로 효율성 증진 부문은 고등교육 및 훈련, 상품시장 효율성, 노동시장 효율성, 금융시장 성숙도, 기술 수용성, 시장 규모 등 6개 분야 총 49개 지표로 구성되어 있다. 마지막으로 기술혁신 및 성숙도 부문의 경우에는 기업 성숙도와 혁신 분야의 총 16개 지표로 평가지표가 구성되어 있다.

이들 111개의 지표 가운데 32개는 이미 발표된 통계 수치가 이용되고, 나머지 79개 지표의 구체적인 수치는 매년 글로벌경쟁력지수 산정 대상 국가의 기업관리자(business executives)를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를 통해 얻어진다.

〈표 II-4〉 세계경제포럼 글로벌경쟁력 지수의 요인별 지표구성

부문	분야	지표수
기본요인	제도	21
	인프라	9
	거시경제 안정성	6
	보건 및 초등교육	10
	소계	46
효율성 증진	고등교육 및 훈련	8
	상품시장 효율성	16
	노동시장 효율성	9
	금융시장 성숙도	8
	기술 수용성	6
	시장 규모	2
	소계	49
기술혁신 및 성숙도	기업 성숙도	9
	혁신	7
	소계	16
총지표		111

자료: WEF(2011), *The Global Competitiveness Report 2011 - 2012*.

나) 여성관련 평가지표

세계경제포럼 글로벌경쟁력지수의 여성 관련 지표는 국제경영개발원에 비해 서도 매우 적다. 즉, 2011년 전체 평가지표 여성 관련 지표는 노동시장 효율성 분야의 “남성 경제활동참가율 대비 여성 경제활동참가율” 하나이다. 그리고 남성과 여성 경제활동참가율 관련 통계는 국제노동기구의 주요 노동시장 지표(Key Indicators of the Labor Markets)를 활용한다.

다) 평가대상 국가

세계경제포럼 글로벌경쟁력지수의 평가대상 국가는 2006년 이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즉, 2006년 125개 국가였던 평가대상 국가는 2007년 131개 국가, 2009년 139개 국가로 증가하였다. 2011년에는 2010년에 비해 3개 국가가 증가한 142개 국가를 대상으로 글로벌경쟁력지수를 산정, 발표하였다.

〈표 II -5〉 세계경제포럼 글로벌경쟁력지수의 연도별 평가대상 국가 수

연도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국가수	125	131	134	139	139	142

자료: WEF(2011), *The Global Competitiveness Report*. 각년도

3) 경쟁력지수 산정 방법

세계경제포럼의 글로벌경쟁력지수 역시 평가 대상 국가 기업관리자 조사 결과와 이미 발표된 통계 자료를 종합하여 산출된다. 특히 글로벌경쟁력지수를 산출하는 과정에서 적용되는 크게 두 가지 차원에서 가중치가 적용된다. 우선, 각 분야별로 가중치가 적용되는데, 해당 분야를 구성하는 분야에 동일한 비율로 부여된다. 두 번째로는 평가대상 국가의 발전단계별로 각 부문별 하위지수의 가중치를 적용한다. 이것은 이미 검토한 각 국가가 속한 발전단계의 특성을 지수 산정에 반영하기 위한 것이다. 구체적으로 1인당 GDP를 기준으로 평가대상 국가는 6개 국가군으로 세분화되어, 각 부문별 하위지수 산정시 서로 다른 가중치를 부여한다. 한국의 경우에는 1인당 GDP가 17,000불 이상인 혁신 단계의 국가군에

속하는데, 기본요인보다는 효율성 증진과 기술혁신 및 성숙도 부문의 가중치가 좀 더 많이 부여된다.

〈표 Ⅱ-6〉 글로벌경쟁력 지수의 분야별 가중치

(단위: %)

부문	분야	가중치(%)
기본요인	제도	25
	인프라	25
	거시경제 안정성	25
	보건 및 초등교육	25
효율성 증진	고등교육 및 훈련	17
	상품시장 효율성	17
	노동시장 효율성	17
	금융시장 성숙도	17
	기술 수용성	17
	시장 규모	17
기술혁신 및 성숙도	기업 성숙도	50
	혁신	50

〈표 Ⅱ-7〉 글로벌경쟁력 지수의 국가발전단계 및 부문별 하위지수 가중치

(단위: %)

	요소 주도단계	요소-효율성 이행 단계	효율성 주도 단계	효율성-혁신 이행 단계	혁신 단계
1인당 GDP(\$)	<2,000	2,000-2,999	3,000-8,999	9,000-17,000	>17,000
기본요인	60	40-60	40	20-40	20
효율성 증진	35	35-50	50	50	50
기술혁신 및 성숙도	5	5-10	10	10-30	30

3. 성평등지수와 국가경쟁력지수의 관계

가. 성평등지수와 국가경쟁력지수의 변화

1)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과 고용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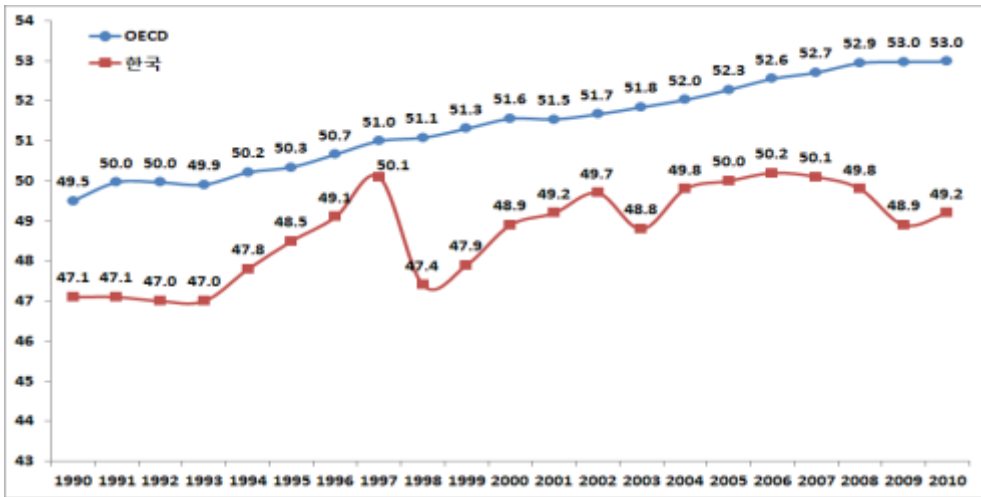
우리나라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은 OECD 등 다른 국가와 비교하여 낮은 상황임을 알 수 있다. [그림 II-2]에서와 같이 1990년 47.1%였던 우리나라 여성이 경제활동참가율은 1997년 50.1%까지 증가하였으나, 1998년 47.4%로 감소하였다. 이후 여성경제활동참가율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리고 세계은행의 자료에 의하면 2010년 현재 한국의 여성경제활동참가율은 49.2%, OECD 회원국의 여성경제활동참가율 평균은 53.0%이다. 또한 같은 기간 시리아 아랍 공화국의 여성경제활동참가율은 12.9%로 2010년 여성경제활동참가율이 보고된 유엔 회원국 가운데 가장 낮게 나타났다. 반면 탄자니아의 여성경제활동참가율은 88.3%로 같은 기간 다른 국가들에 비해 가장 높게 나타났다.

우리나라 여성 경제활동참가율의 특징은 크게 두 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 첫째, 다른 국가들에 비해 여성 경제활동참가율이 낮다. 터키, 이탈리아 등과 같이 우리나라는 여성경제활동참가율이 낮은 국가군에 속한다. 이러한 상황은 우리나라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이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증가할 필요가 있음을 의미한다.

두 번째, 우리나라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은 경제위기에 취약하다. [그림 II-2]에서와 같이 1998년과 2003년 경제위기를 전후로 하여 여성경제활동참가율이 급격하게 감소하였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경제위기 전후 여성경제활동참가율의 급격한 감소를 방지하기 위한 대책이 수립될 필요가 있다.

우리나라 15-64세 여성고용률 역시 여성경제활동참가율과 유사한 상황임을 알 수 있다. 예컨대 1990년 49.0%였던 우리나라 여성고용률은 1997년 51.6%로 증가하였으나 1998년 47.3%로 감소하였다. 2003년과 2010년 일시적인 감소 현상이 있었으나 우리나라 여성고용률은 2000년 이후 50% 이상을 유지하고 있다. 그러나 여전히 OECD 회원국 평균이 미치지 못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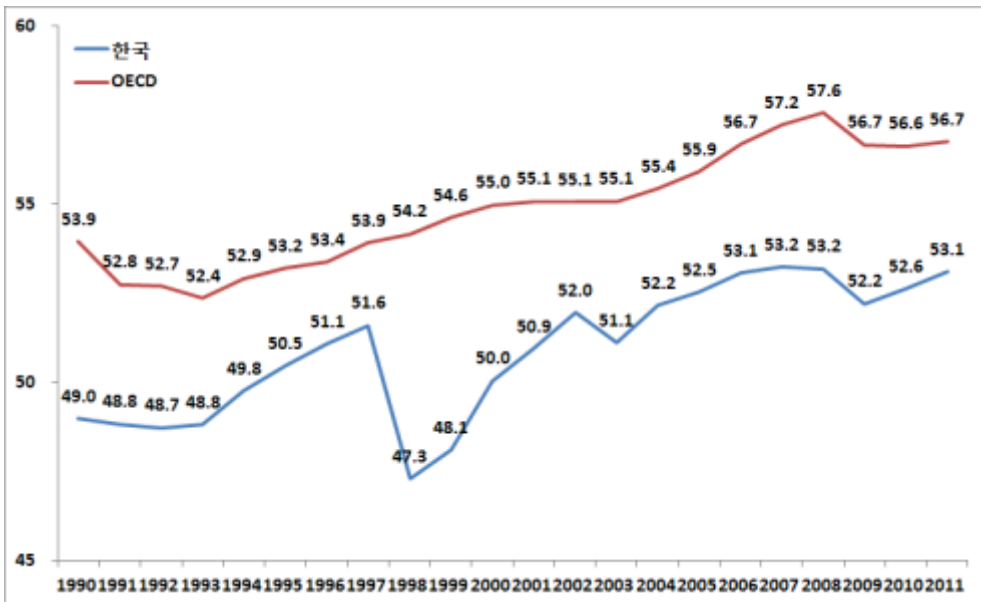
(단위: %)



자료: World Bank. World Bank Data(<http://data.worldbank.org/>)

[그림 II-2] 한국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 변화

(단위: %)



자료: OECD. OECD.Statistics(<http://stats.oecd.org/>)

[그림 II-3] 한국 여성의 고용률 변화

2) 여성 고위직 비율

우리나라의 의회의원, 고위임직원 및 관리자 등 전체 고위직에서 여성이 차지하는 비율은 1993년 6.1%에서 1995년 4.4%로 감소하였으나 이후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2008년 9.6%로 나타났다.²⁾ 2008년 여성 고위직 비율이 가장 높은 국가는 필리핀 54.8%, 여성 고위직 비율이 가장 낮은 국가는 파키스탄 3.0%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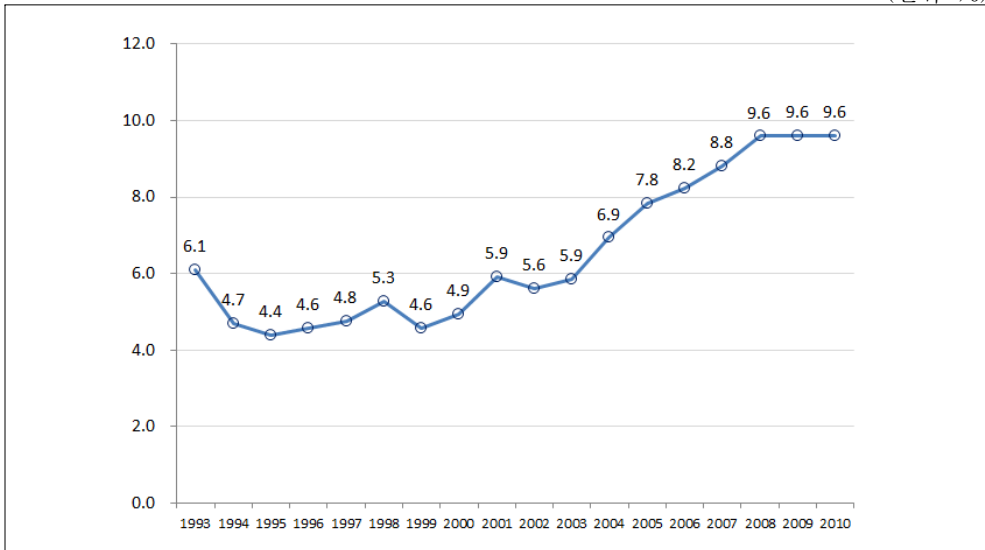
우리나라 여성 고위직 비율은 지속적인 증가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10%에 미치지 못하고 있으며, 다른 OECD 국가와 비교해도 특히 낮음을 알 수 있다³⁾. 예컨대 2008년 OECD 회원국 가운데 여성 고위직 비율이 가장 높은 국가는 미국 42.7%이다. 이어서 뉴질랜드의 여성 고위직 비율이 40.0%로 높게 나타났다. 그리고 2008년 OECD 회원국 여성 고위직 비율의 평균은 30.3%로 나타났다. 반면 여성 고위직 비율이 가장 낮은 국가는 한국 9.6%이며, 일본(10.0%), 터키(10.0%) 등도 낮게 나타났다.

위와 같이 우리나라의 여성 고위직 비율이 낮은 상황의 개선을 위해 공공 및 민간 부문의 여성 고위직 확대를 위한 정책적 노력을 지속적으로 기울일 필요가 있음을 의미한다. 예컨대 유럽연합 등은 기업성과 제고 및 기업의 다양성 확보를 위해 기업 이사회 등 민간 부문의 여성 임원을 확대하기 위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따라서 민간 및 공공부문 고위 관리직 등 고위직 관련 지표가 국제 성평등지표에서 공통적으로 적용되고 있는 상황에서 고위직 여성 확대를 위한 대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할 것이다.

2) 한국표준직업분류의 변경에 따라 2008년 이후 우리나라 고위직 여성 비율은 공표되지 않음.

3) 일본의 여성 고위직 비율은 2006년도 자료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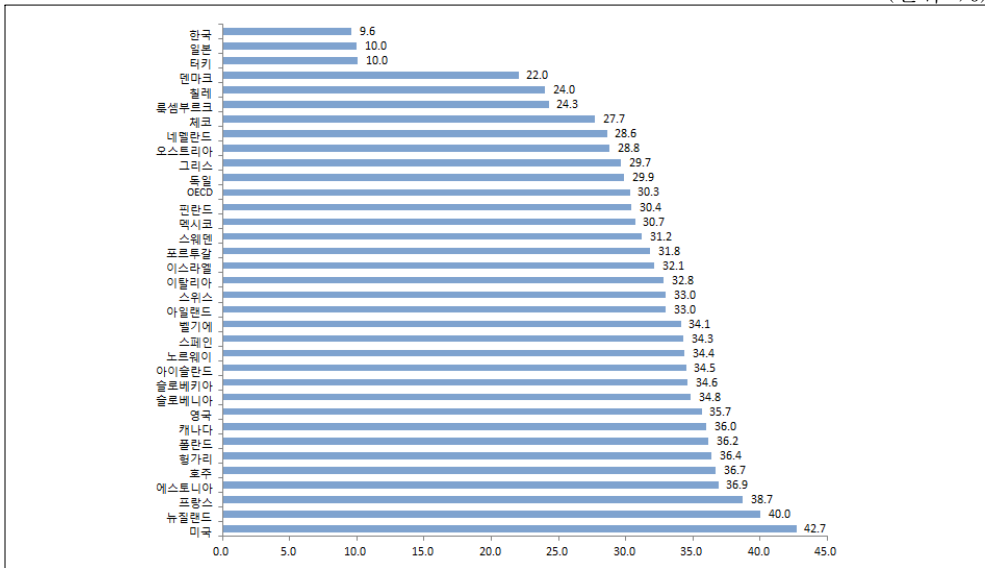
(단위: %)



자료: World Bank. World Bank Data(<http://data.worldbank.org/>)

[그림 II-4] 한국 여성 고위직 비율 변화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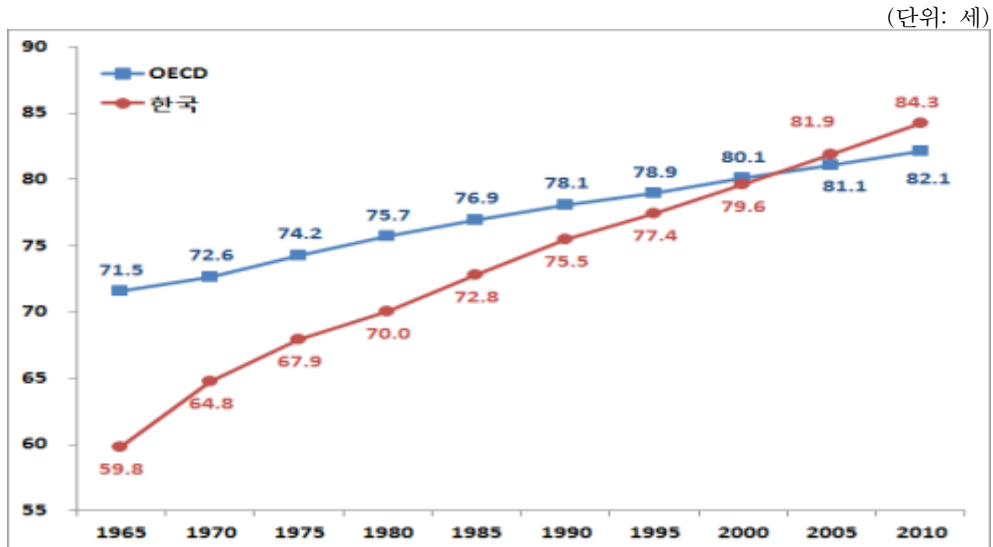
자료: World Bank. World Bank Data(<http://data.worldbank.org/>)

[그림 II-5] 2008년 OECD 회원국의 여성 고위직 비율

3) 여성의 기대수명

우리나라 여성의 기대수명은 1965년 이후 지속적으로 연장되었으며, 2005년부터 우리나라 여성의 기대수명이 OECD 회원국 여성의 평균 기대수명보다 높게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1965년 59.8세였던 한국 여성의 기대수명은 1980년 70.0세, 1990년 75.5세, 2005년 81.9세로 지속적으로 연장되었다. 그리고 2010년 현재 한국 여성의 기대수명은 84.3세로 OECD 회원국 여성의 평균 기대수명 82.1세보다 2.2세 긴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2010년 현재 여성의 기대수명이 가장 짧은 국가는 레스토 46.6세, 여성의 기대수명이 가장 긴 국가는 일본 86.4세로 나타났다. 이외에도 이탈리아(84.4세), 스위스(84.5세), 스페인(84.7세), 프랑스(84.8세) 등은 상대적으로 우리나라에 비해 여성의 기대수명이 긴 국가들이다.

여성의 기대수명은 다른 성평등지표에 비해 상대적으로 우위에 있는 지표임을 알 수 있다. 따라서 남녀의 기대수명이라는 양적인 개선과 함께 건강한 노후를 보장하는 건강수명의 연장을 중요한 정책적 목표를 설정하고 추진할 필요가 있다. 또한 노후의 소득보장 등 여성 노인의 경제적 안정과 관련된 성평등지표를 개선함으로써 고령사회에서의 양성평등 실현을 위한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자료: World Bank. World Bank Data(<http://data.worldbank.org/>)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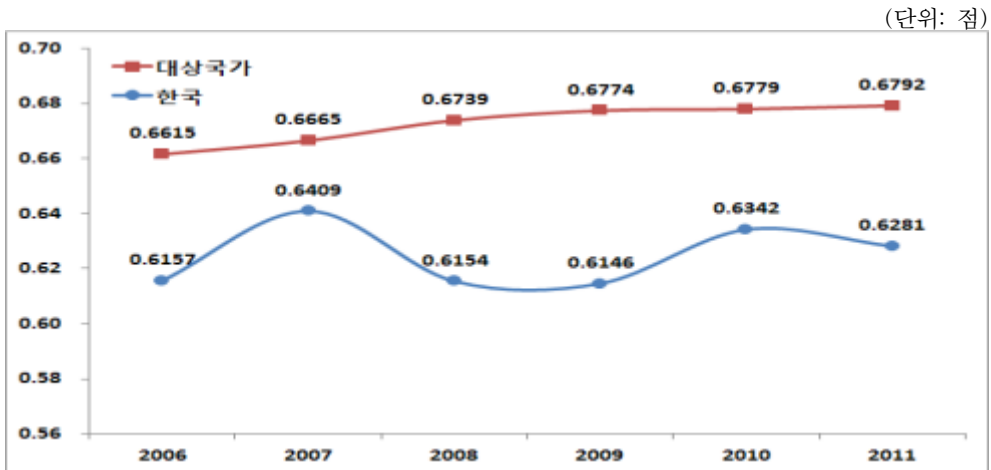
[그림 II-6] 한국 여성의 기대수명 변화

4) 성격차지수

세계경제포럼이 2006년부터 발표하고 있는 성격차지수의 한국 점수 및 순위 변화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한국 성격차지수의 점수는 2006년 0.6157에서 2007년 0.6409로 증가하였다가 2008년과 2009년 0.6154, 0.6146으로 감소하였다. 이후 2010년 0.6342로 상승하였던 한국의 성격차지수 점수는 2011년 0.6281로 다시 감소하였다.

같은 기간 한국 성격차지수의 순위도 상승과 하강이 있었다. 2006년 115개 국가 중 92위, 2007년 128개 국가 중 97위로 순위가 상승하였으나 2008년과 2009년 각각 130개 국가 중 108위, 134개 국가 중 115위로 순위가 하락하였다. 그리고 2010년 134개 국가 중 104위, 2011년 135개 국가 중 107위로 소폭의 상승과 하락이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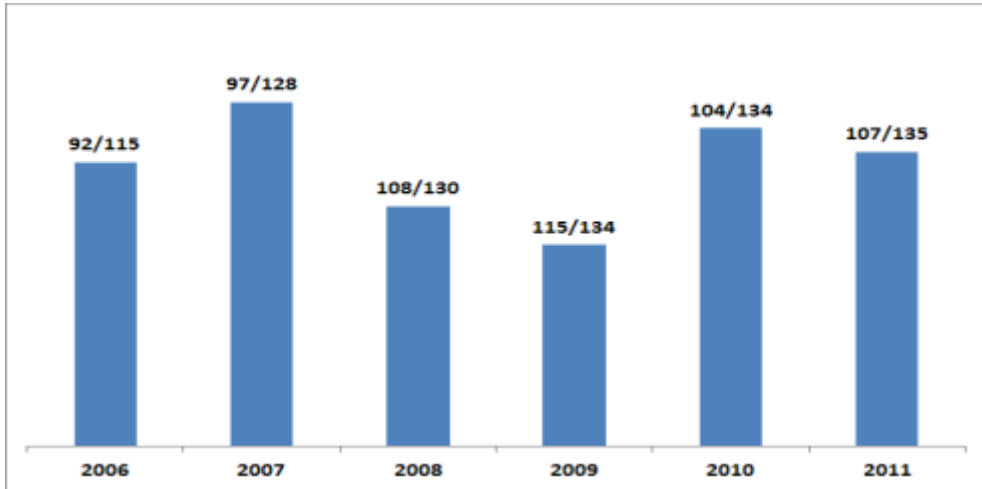
위와 같은 한국 성격차지수의 점수 및 순위의 변동은 국제 성평등지표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의 필요성을 제기하는 것이다. 즉, 매년 발표되는 성격차지수 산정 대상국가의 평균 점수는 2006년 이후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한국의 경우에는 성격차지수 점수 및 순위의 상승과 하강이 나타나고 있으므로 향후 성격차지수의 점수 및 순위를 지속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체계적이고, 정책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자료: WEF(각 연도), The Global Gender Gap Report.

[그림 II-7] 한국 성격차지수 변화: 점수

(단위: 국가순위/평가대상국가수)



자료: WEF(각 연도), The Global Gender Gap Report.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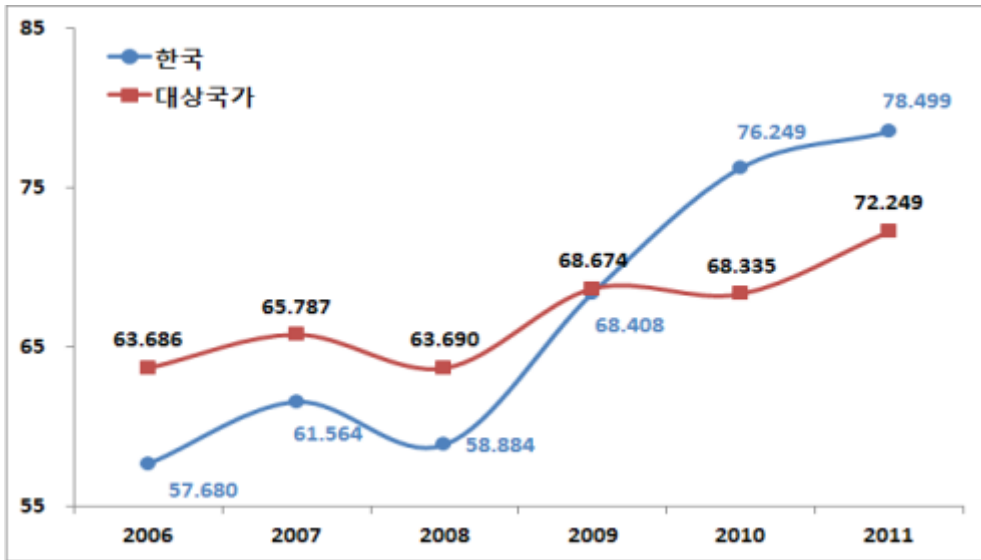
[그림 II-8] 한국 성격차지수 변화: 순위

5) 국가경쟁력 지수

한국의 국가경쟁력 지수 변화를 최근 6년을 중심으로 살펴보면 이미 검토한 성격차지수와 달리 상대적으로 중위권 이상에 속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예컨대 국제경영개발원(IMD)에서 발표하는 세계경쟁력 지수의 경우에는 2009년부터 한국의 점수가 조사대상 국가의 평균에 비해 높게 나타나고 있다. 즉, 2008년까지 68점(100점 만점)에 미치지 못했던 한국의 세계경쟁력 지수의 점수는 2009년 68.408점, 2010년 76.249점, 2011년 78.499점으로 지속적으로 상승하였다. 그에 따라 한국의 세계경쟁력 지수 순위도 같은 기간 소폭 상승이 있었음을 알 수 있다. 예컨대 2006년 61개 국가 중 38위, 2007년 55개 국가 중 29위였던 한국의 세계경쟁력 지수 순위는 2010년 58개 국가 중 23위까지 상승하였다.

한편 세계경제포럼(WEF)이 발표하는 글로벌경쟁력지수의 한국 점수와 순위를 살펴보면, 성격차지수와 달리 상위권에 속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예컨대 한국 글로벌경쟁력 지수의 점수는 2006년 5.13점(7점 만점)이었고, 2007년 5.40점으로 상승하였다. 이후 한국의 글로벌경쟁력 지수의 점수는 2010년 4.93점까지 감소하였으나 2011년 5.02점으로 상승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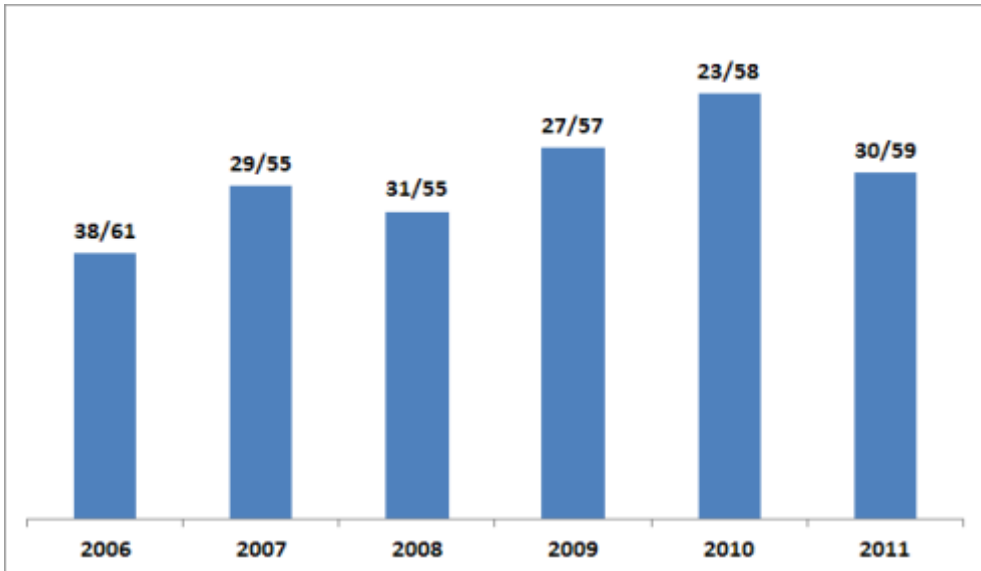
(단위: 점)



자료: IMD(각 연도), *World Competitiveness Yearbook*.

[그림 Ⅱ-9] 한국 세계경쟁력지수 변화: 점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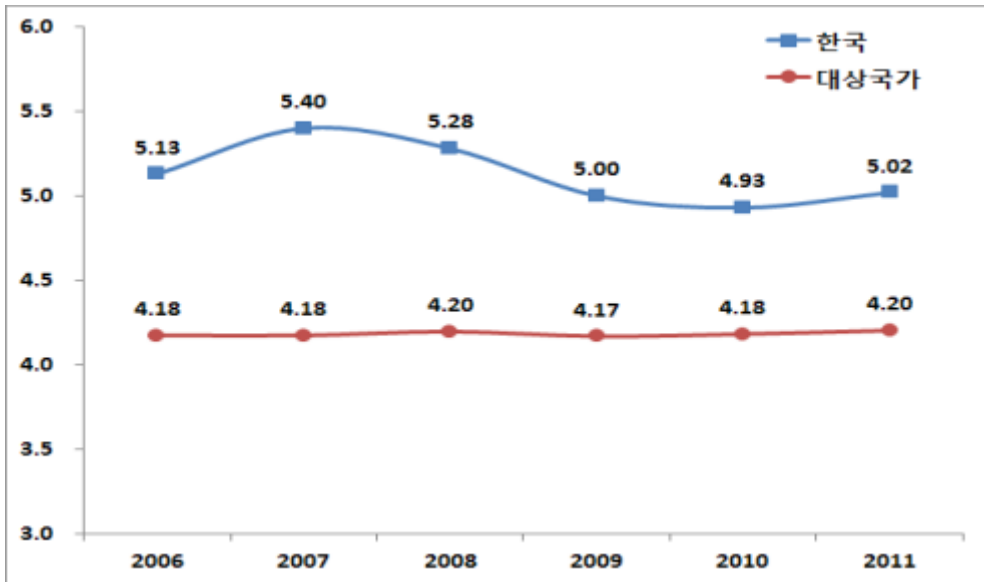
(단위: 국가순위/대상국가수)



자료: IMD(각 연도), *World Competitiveness Yearbook*.

[그림 Ⅱ-10] 한국 세계경쟁력지수 변화: 순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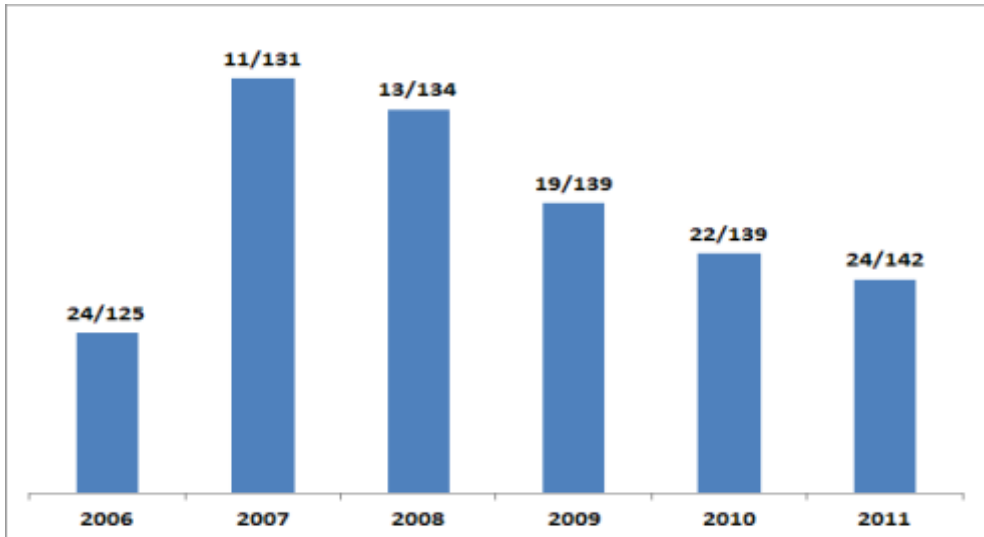
(단위: 점)



자료: WEF(각 연도), *The Global Competitiveness Report*.

[그림 II-11] 한국 글로벌경쟁력지수 변화: 점수

(단위: 국가순위/대상국가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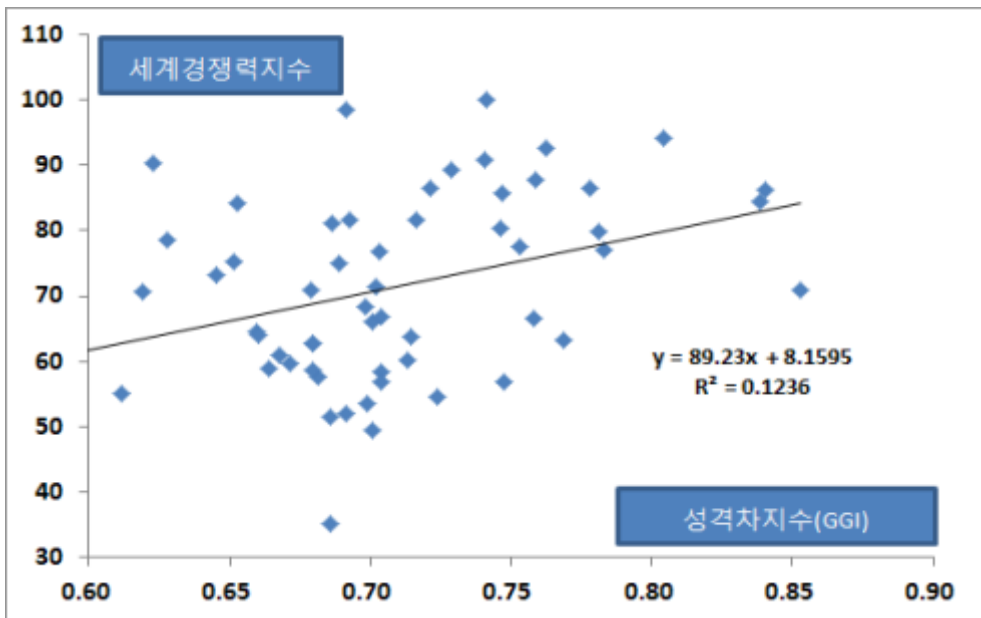
자료: WEF(각 연도), *The Global Competitiveness Report*.

[그림 II-12] 한국 글로벌경쟁력지수 변화: 순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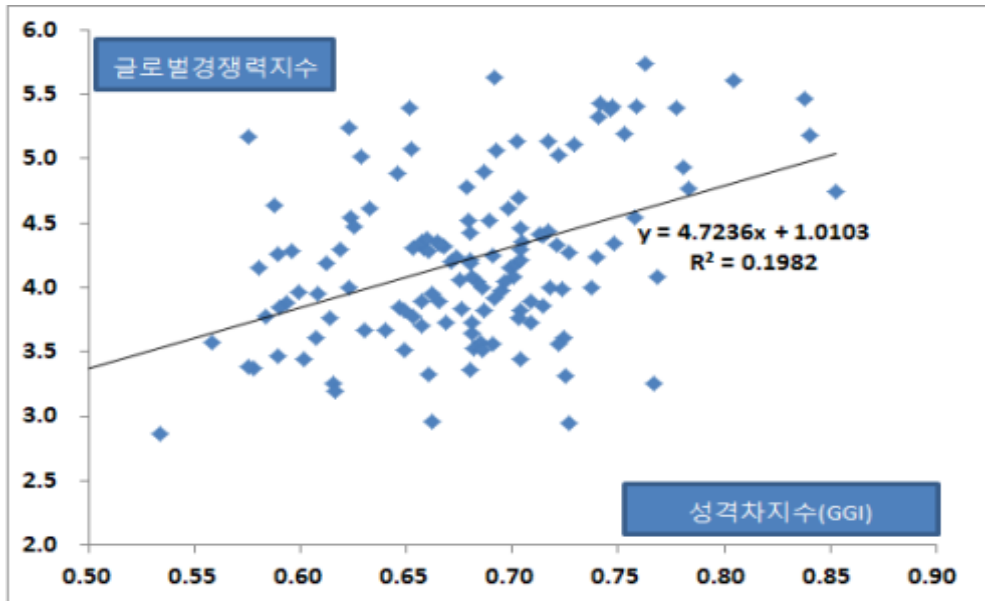
나. 성평등지수와 국가경쟁력지수의 관계

위에서 살펴본 2011년 성격차지수와 국가경쟁력 지수의 관계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우선, 세계경제포럼의 성격차지수 산정 국가의 세계경쟁력 지수를 살펴보면, 성격차지수의 점수가 높아질수록 세계경쟁력 지수의 값도 증가하는 패턴이 나타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패턴은 성격차지수 산정 국가의 글로벌 경쟁력 지수 점수를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 즉, 성격차지수와 글로벌 경쟁력 지수를 동시에 산정한 국가를 대상으로 이들 두 점수의 관계를 살펴본 결과, 성격차지수의 점수가 높을수록 글로벌 경쟁력 지수의 점수도 높게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결과를 위에서 이미 검토한 성평등과 국가경쟁력의 관계에 대한 논의를 성평등지수와 국가경쟁력 지수의 관계를 통해 경험적으로 확인할 수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따라서 성평등지수의 정책적이고, 체계적인 관리를 통해 우리 사회의 성평등 수준과 여성 지위를 개선하는 동시에 우리나라의 국가경쟁력이 개선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림 II-13] 성격차지수와 세계경쟁력지수의 관계



[그림 II -14] 성격차지수와 글로벌경쟁력지수의 관계

III

국가성평등지수의 지표체계와 산정방법

- | | |
|------------------|----|
| 1. 국가성평등지수의 지표체계 | 47 |
| 2. 국가성평등지수의 산정방법 | 55 |

1. 국가성평등지수의 지표체계

가. 성평등과 국가성평등지수

1) 성평등과 지수

성평등(Gender equality)이란 여러 가지 정량적, 정성적 차원이 관련되어 있는 복잡한 개념이다⁴⁾. UN OSAGI와 UNDP 등에 의하면 남녀간의 평등, 즉 성평등은 여성과 남성, 여자아이와 남자아이가 동등한 권리, 의무, 기회를 갖는 것을 의미한다. 그리고 성평등은 남녀 양 집단의 다양성(Diversity)을 인식하여, 그들 각각의 관심, 요구 및 우선순위를 고려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성평등은 여성 문제가 아니라, 남녀 모두에 관심을 갖고 완전히 참여시켜야 한다.⁵⁾

그리고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와 세계은행(World Bank)은, 성평등을 남녀가 인권 실현과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그리고 정치적 발전에 대한 기여와 수혜에 있어서 동등한 조건을 갖는 것으로 정의한다.⁶⁾ 유럽연합(EU)은 성평등을 다양한 차원과 의미를 가진 복잡한 용어로 본다. 유럽연합은 성평등을 직접적으로 정의하지 않고, 성평등이 기본적인 권리이며 유럽연합의 공통된 가치인 동시에 유럽연합의 성장, 고용 그리고 사회통합 목표 달성을 위한 필요조건이라고 밝혔다. 그리고 유럽연합이 성평등을 달성하기 위해 최우선적으로 조치를 취해야 하는 6개 분야로, 남녀의 동등한 경제적 독립, 개인적인 삶과 직업생활의 조화, 의사결정직의 평등한 대표성, 성에 기초한 제반 유형의 폭력 근절, 성 고정관념의

4) 성평등을 gender equality, gender equity로 혼용해서 사용하기도 함. 그러나 UN에 의하면, 성형평(gender equity)은 문화적 규범이나 가치에 따른 남녀간의 자원과 혜택의 공정한 배분(fair distribution)을 말함. 그러나 형평은 객관적인 방법으로 측정하기가 더 어려움. 왜냐하면 형평은 국가에 따라 지역 특수적인 정의(definitions)에 기초하고 있기 때문임. 예컨대 여성이 남성보다 상속을 적게 받는 상황이 특정한 지역적 관점에서는 ‘공정(fair)’하기 때문에 평등한 것으로 설명될 수 있음. 이에 따라 유엔(UN) 내부에서는 남녀평등(gender equality)을 남녀형평(gender equity)보다 선호함.

5) UN OSAGI(2010), *Important Concepts Underlying Gender Mainstreaming*. <http://www.un.org/womenwatch/osagi/conceptsanddefinitions.htm>. OSAGI는 Office of the Special Adviser on Gender Issues and Advancement of Women의 약어임.

6) J. Jütting and D. Drechsle(2007), *Gender and Development : Introducing the Gender, Institutions and Development Data Base*, OECD. World Bank(2001), *Engendering development: through gender equality in rights, resources, and voice*, pp. 2~3.

근절, 발전정책에서의 성평등 촉진을 설정하였다.⁷⁾ 우리나라의 여성가족부는 성평등을 ‘양성이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삶의 모든 영역에서 동등한 참여를 보장받고 동등한 지위에서 동등한 권리와 이익을 향유하는 것’이라고 보고 있다. 즉, 제반 삶의 영역에서 남녀 동등한 ‘참여’와 동등한 ‘권리’ 및 ‘이익’을 향유하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다.⁸⁾

우리나라 국가성평등지수에서는 국내 성평등정책을 수립·모니터링·환류 함과 동시에 국민의 성평등 인식 제고라는 지수 개발목적에 감안하여 성평등을 정의하였다. 이에 따라 국가성평등지수에서의 성평등은 여성가족부와 UN의 성평등 정의에 기초하여, ‘양성이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삶의 모든 영역에서 동등한 참여를 보장받고 동등한 지위에서 동등한 권리와 이익을 향유하는 것’을 의미한다. 즉, 제반 삶의 영역에서 남녀 동등한 ‘참여’와 동등한 ‘권리’ 및 ‘이익’을 향유하는 상태를 성평등이라고 했다.

2) 국가성평등지수의 특징

우리나라 국가성평등지수의 지표는 성평등 정의와 지수생산 목적에 따라, 투입(Input or means)지표가 아닌 성과(Outcome)지표로 구축되었다. 현재 성평등 수준의 국가별 비교를 위해서 측정, 발표되고 있는 지표들을 보면, 세계경제포럼의 성격차지수(GGI), Social Watch의 성형평지수(GEI), UNDP의 남녀평등지수(GDI), 여성권한척도(GEM)는 성과지표, 그리고 경제협력개발기구의 사회제도와 젠더지수(SIGI)는 투입지표로 구성되어 있다. 투입지표로 구성된 SIGI의 경우, 지수로 불평등의 원인을 파악하기 쉬워, 정책 원인 및 실행을 용이하게 한다는 장점이 있다. 그러나 투입지표로 구성된 지수 값이 높더라도, 실제 성평등수준이 높지 않을 수 있다는 단점이 있다.

또한 국가성평등지수는 남녀격차를 측정기준으로 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격차(Gap)란 빈부, 임금, 기술 수준 따위가 서로 차이가 나는 정도를 의미하며, 일반적으로 가치(Difference) 혹은 비(Ratio)로서 측정할 수 있다. 주요 성평등지수 중, 세계경제포럼의 성격차지수(GGI), Social Watch의 성형평지수(GEI)는 지표

7) EU(2006), *A Roadmap for equality between women and men 2006~2010*.

8) 여성가족부 웹사이트, 여성 정책가이드.

의 격차로 성평등수준을 산정한다. 이에 비해 UNDP의 남녀평등지수(GDI), 여성 권한척도(GEM)는 지표의 격차와 수준(Level)을 함께 고려하여 성평등수준을 산정한다. 이에 따라 특정 분야의 남녀 성취수준과 격차가 모두 성평등지수에 반영됨으로써, 다른 조건이 동일하면 사회 전체 구성원에게 자원의 접근 기회가 많은 선진국이 후진국보다 성평등수준이 높게 나타난다. 그러나 지표의 격차와 수준을 측정하여 성평등수준을 산정할 경우, 성평등수준 개선이 지표수준 변화에 기인한 것인지 아니면 남녀격차의 개선에 기인한 것인지를 쉽게 파악할 수 없다는 단점이 있다. 이에 비해 우리나라 국가성평등지수와 같이 남녀격차를 기준으로 성평등수준을 측정하는 지수는, 국가 전체와 각 부문의 성평등 수준과 변화를 쉽게 파악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그리고 우리나라 국가성평등지수의 구성을 보면 성평등수준을 정량적으로 측정하는데 사용하는 대표지표와 함께 각 부문의 성평등 정도를 모니터링하고 정책을 관리하기 위해서 설정한 관리지표로 구성되어 있다. 일반적으로 지수산정의 목적이 성평등 달성과 여성 지위와 권한 향상 중, 어느 곳에 있느냐에 따라 지표구성도 달라진다. 국가성평등지수의 산정과 관리 목적은 성평등 달성뿐만 아니라 여성지위 및 권한 향상에도 있다. 이에 따라 각 부문의 대표지표는 남녀 격차를 산정할 수 있는 지표들로 구성하였다. 이에 비해 관리지표는 남녀격차를 산정할 수 없으나, 여성지위 및 권한을 나타내는 지표, 예컨대 제왕절개 분만을 등 여성특화 지표들을 포함시켰다.

나. 국가성평등지수 부문과 지표

국가성평등지수는 8개 부문(Dimension)으로 구성되어 있다. 국가성평등지수와 관련된 선행연구에 의하면, 한국여성개발원(2006) 연구에서는 성평등지표를 9개 부문 즉, 인구, 가족, 교육, 경제활동과 소득, 정치 및 사회참여, 건강, 복지, 문화, 폭력과 범죄로 구성되어 있다. 그리고 통계청의 ‘한국의 사회지표’는 13개 부문 즉, 인구, 가구와 가족, 소득과 소비, 노동, 교육, 보건, 주거와 교통, 정보와 통신, 환경, 복지, 문화와 여가, 안전, 정부와 사회참여로 구성되어 있다.

국가성평등지수의 영역은 전문가 및 관련 부처의 자문회의 등을 통해서 최종적으로 8개 부문 즉, 가족, 복지, 보건, 경제활동, 의사결정, 교육·직업훈련, 문화·정보, 안전부문을 선정하였다. 성평등지수가 이와 같이 8개 부문으로 구성됨에

따라 우리 사회 전반에 걸친 성평등수준을 포괄할 수 있으며, 또한 범정부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성평등정책의 내용과 추진 성과를 반영할 수 있다.

국가성평등지수를 구성하는 지표 선정과정은, 먼저 8개 부문별로 각 부문 전문가가 작성한 226개 성평등지표풀(pool) 가운데, 전문가 자문회의를 통해서 1차 149개를 조사대상 지표로 선정하였다. 그리고 8개 부문별 성평등분야 전문가집단인 교수, 연구자, 행정공무원 200명을 대상으로 149개 지표에 대해서 중요도(0~10점)와 우선순위(1~5순위), 해당 부문별로 개발이 필요한 신규 지표 등에 대해서 조사하였다. 조사결과를 기초로 중요도와 우선순위가 높은 순으로 지표를 선정하였다. 그리고 이러한 지표 중에서 국가성평등지수를 산정하기 위한 대표지표를 선정하였다.

대표지표는 우리나라 성평등수준과 추이, 부문별 성평등수준과 그 변동 요인을 한 눈에 파악할 수 있는 지표임과 동시에, 국가성평등지수를 산정하는데 사용되는 지표를 말한다. 따라서 대표지표(Representative indicator)는 대표성 있는 표본조사(Nationally representative sample survey)에 의해서 정기적으로 통계가 생산되고 남녀성비(Female-to-male ratio)를 산정할 수 있어야 하며, 그리고 국제비교가 가능한 지표이어야 한다. 이에 따라 선정된 지표 중에서 가장 중요도와 우선순위가 높으면서, 대표지표가 갖추어야 하는 요건을 전문가와 함께 선정하였다.⁹⁾ 그리고 대표지표를 제외한 나머지 지표들을 각 행정부처가 담당하고 있는 부문의 성평등수준을 모니터링하고 향상시키기 위해서 정책적으로 관리해야 하는 지표라는 의미에서 관리지표(Administrative indicator)라고 했다. 이와 같은 관리지표에는 여성특화지표(Female-specific indicator)와 같이 남녀 성비를 산정할 수 없으나 여성지위 향상에 필요한 지표도 담고 있다. 그리고 성평등을 파악할 수 있는 지표이나 현재 통계가 생산되고 있지 않거나 혹은 생산되고 있더라도 생산주기가 길거나 통계적 대표성이 없는 표본으로 조사되고 있는 지표 등도 관련 행정기관에서 생산되도록 관리할 수 있게 관리지표에 포함시켰다.

성평등지수를 구성하는 지표는 지수 산정을 통해서 우리나라의 성평등수준과 추이, 그리고 각 부문별 성평등수준과 그 변동 요인을 파악함과 동시에, 해당 지표와 관련된 각 행정부처의 정책을 점검하고 평가하는데 목적이 있다. 이에 따라

9) 전문가 조사결과를 기초 대표지표를 선정한 자세한 내용에 대해서는 김태홍 외(2009), pp. 159~196 참조.

국가성평등지수 연구에 의해서 선정된 대표지표와 관리지표에 대하여 여성가족부 주관으로 관련 행정부처와의 업무협의 및 지표조정을 하였다.

먼저 2009년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연구결과에 의해서 선정되었던 8개 부문 21개 대표지표에 대한 협의결과, 연구초안에 포함되었던 보건부문의 대표지표인 ‘성별 건강수명’ 지표의 경우 생산주기가 상당히 불규칙하며 지표 값이 완전평등 수준인 ‘1’에 도달했을 뿐만 아니라, 동 지표의 책임관리 행정부처의 요청에 따라 지표를 변경하였다. 대체된 지표는 건강관련 5개 지표 즉, 운동능력(Mobility), 자기관리(Self-care), 일상 활동(Usual activity), 통증/불편감(Pain/Disability), 그리고 불안과 우울(Anxiety and Depression)에 대한 주관적인 평가를 포괄하는 지표이면서, 국제비교가 가능하며 매년 생산되는 ‘건강관련 삶의 질(EQ-5D)’ 지표이다. 보건영역의 또 다른 지표인 ‘주관적 건강상태 평가 성별 격차’는 3년 주기로 생산되고, 동 지표의 책임관리 행정부처가 대표지표로 부적절한 것으로 지적함에 따라 상호 협의 아래 삭제하였다.

그리고 안전부문의 대표지표인 ‘인구 10만 명당 범죄피해자 성별 격차’를 ‘강력 범죄(살인, 강도, 방화, 강간) 피해자의 성비’로 대체하였다. 이와 같이 대체한 이유는 범죄 중에서 재산범죄, 위조범죄, 공무원범죄 등의 경우 성별 재산소유나 경제활동참가 차이가 성별 범죄피해자의 차이에 상당한 영향을 주기 때문이다.¹⁰⁾ 이에 따라 연구결과와 행정부처의 협의·조정을 통해서 최종적으로 선정된 대표지표는 <표 III-1>의 8개 부문, 21개 지표이다.

여성가족부와 관련 행정부처의 관리지표에 대한 협의는 주로, 지표명 및 지표내용 변경, 지표 추가, 생산주기 조정, 책임운영기관의 변경 등에 대해서 이루어졌다. 2011년 행정부처와의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서 최종적으로 선정된 관리지표는 <표 III-2>에서와 같이, 가족부문 4개, 복지 4개, 보건 5개, 경제활동 5개, 의사결정 8개, 교육·직업훈련 9개, 문화·정보 5개, 그리고 안전부문 3개로 총 43개 이다.

10) 2009년 통계에 의하면 재산범죄 피해자의 경우 남성 310천명, 여성 146천명임. 대검찰청(2009), 범죄분석.

〈표 Ⅲ-1〉 국가성평등지수의 8개 부문 대표지표

부문 (지표 수)	연번 ²⁾	부문별 대표지표	책임관리기관/협조기관
① 가족 (2개)	1-1	가사노동시간의 성비	여성가족부
	1-2	셋째 아 이상 출생성비	여성가족부
② 복지 (3개)	2-1	비 빈곤 가구주의 성비	보건복지부
	2-2	공적연금 가입자의 성비	보건복지부·교육과학기술부·행정안전부
	2-3	장애인 고용률의 성비	보건복지부·고용노동부
③ 보건 (3개)	3-1	건강관련 삶의 질(EQ-5D)의 성별 격차	보건복지부
	3-2	건강보험 요양급여 수급자의 성비	보건복지부
	3-3	건강검진 수검률 성비	보건복지부
④ 경제활동 (3개)	4-1	경제활동참가율 성비	고용노동부
	4-2	성별 임금격차(성비) ¹⁾	고용노동부
	4-3	상용근로자의 성비	고용노동부
⑤ 의사결정 (3개)	5-1	국회의원의 성비	국회사무처·중앙선거관리위원회
	5-2	5급 이상 공무원의 성비	행정안전부
	5-3	관리재기업의 과장급 이상의 성비	고용노동부
⑥ 교육·직업훈련 (3개)	6-1	남녀 평균교육연수 격차(성비) ¹⁾	교육과학기술부
	6-2	고등교육기관 취학률 성비	교육과학기술부
	6-3	재직자직업훈련 참여 근로자의 성비	고용노동부
⑦ 문화·정보 (2개)	7-1	여가시간의 성비	문화체육관광부
	7-2	문화콘텐츠업 종사자의 성비	문화체육관광부
⑧ 안전 (2개)	8-1	범죄위험에 대한 사회 안전 인식 성비 ³⁾	법무부·경찰청
	8-2	강력범죄(홍악범) 피해자의 성비	법무부·경찰청

주: ¹⁾ 격차(Gap)는 차이(Difference)를 나타냄. 이에 따라 실제 계산은 남녀 상대비(Relative ratio)인 성비(Sex ratio)로 계산함.

²⁾ 연번은 여성가족부가 주관이 되어 행정부처에서 관리해야 하는 지표에 부여한 숫자

³⁾ 2010년 통계청 조사항목이 변경됨에 따라, '성별 범죄피해에 대한 두려움'에서 '범죄위험에 대한 사회안전 인식'으로 지표를 변경함.

〈표 Ⅲ-2〉 국가성평등지수의 부문별 관리지표(1)

부 문	연번	지표명	책임관리기관/협조기관
① 가족 (4개)	1-1	성별 육아휴직자 수	고용노동부
	1-2	경제활동상태별 남녀 노인부양 평균시간	여성가족부
	1-3	가구유형별 남녀가구주비율	여성가족부
	1-4	성별 생계책임 의식	여성가족부
② 복지 (4개)	2-5	성별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비율	보건복지부
	2-6	성별 장애인 교육수준	교육과학기술부
	2-7	성별 장애인 등록자 수	보건복지부
	2-8	성별 고용보험 가입자	고용노동부
③ 보건 (5개)	3-9	성별 스트레스 인지율	보건복지부
	3-10	성별 5대 암 환자 발생률	보건복지부
	3-11	성별 만성질환 유병률	보건복지부
	3-12	성별 활동제한일수	보건복지부
	3-13	성별 자살생각률	보건복지부
④ 경제활동 (5개)	4-14	전문직 여성비율	교육과학기술부·행정안전부· 고용노동부·여성가족부
	4-15	성별 30-34세 경제활동참가율	고용노동부
	4-16	성별 대졸자 실업률	고용노동부
	4-17	성별 평균 근속연수	고용노동부
	4-18	가구주 성별 소득격차	보건복지부
⑤ 의사결정 (8개)	5-19	관리직 여성비율	고용노동부·여성가족부
	5-20	(중앙정부) 위원회 여성위원 비율	여성가족부, 행정안전부
	5-21	성별 초·중·고등학교 교장 비율	교육과학기술부
	5-22	성별 대학교수 비율	교육과학기술부
	5-23	성별 공무원 수	행정안전부
	5-24	여성 장·차관 비율	행정안전부
	5-25	사법 및 경찰 고위직 여성비율	검찰청, 경찰청
	5-26	공공기관 여성임원비율	여성가족부, 기획재정부

〈표 Ⅲ-3〉 국가성평등지수의 부문별 관리지표(2)

부 문	연번	지표명	책임관리기관/협조기관
[6] 교육·직업 훈련(9)	6-27	성별 고등교육기관 진학률	교육과학기술부
	6-28	대학 전공별 여교수 비율	교육과학기술부
	6-29	성별 전공계열별 대졸 취업률	교육과학기술부
	6-30	남녀 학생 1인당 교육비	교육과학기술부
	6-31	교육전문직의 여성비율	교육과학기술부
	6-32	성별 학업성취도 차이	교육과학기술부
	6-33	성별 평생학습 참여자	교육과학기술부
	6-34	성별 기술사, 기능장 수	고용노동부
	6-35	노동부 지원 실업자 훈련참여자 중 여성비율	고용노동부
[7] 문화·정보 (5개)	7-36	성별 문화예술행사관람률	문화체육관광부
	7-37	성별 생활체육 참여율	문화체육관광부
	7-38	성별 컴퓨터 및 인터넷 이용시간(평소 1주일)	문화체육관광부
	7-39	성별 문화시설 이용률	문화체육관광부
	7-40	성별 문화기반시설기관장	문화체육관광부
[8] 안전 (3개)	8-41	인구 10만 명당 성폭력 발생 건수	법무부·경찰청
	8-42	가정폭력 발생 시 여성의 피해율	법무부·경찰청
	8-43	성매매 범죄자 기소율	법무부·경찰청

2. 국가성평등지수의 산정방법

국가성평등지수는 아래의 5단계를 거쳐서 구축 및 산정하였다. 먼저 1단계에 서는 모든 지표 값을 성비(Female-to-male ratio)로 전환한다. 즉, 국가성평등지 수를 구성하는 대표지표의 값을 남녀비율로 전환시킨다. 예를 들어, 의사결정부 문의 경우 국회의원 299명 중에서 남성의원 258명, 여성의원 41명이면, 지표 값 을 성비 즉, 「 $41/258=0.159$ 」로 전환시킨다. 대부분의 지표 값은 성비로 전환하나, (셋째 아) 출생성비, 강력범죄(흉악범) 성비는 표준화를 통해서 지표 값을 비율 로 전환시켰다. 이와 같이 전환된 지수는 수준 그 자체보다는 여성과 남성의 성 취수준의 차이를 나타낸다.

성평등지표 중에서 가사노동시간과 여가시간은 하루가 24시간으로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다른 활동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하루 24시간을 구성하는 생활시간 을 크게 구분하면 먼저 잠자고, 식사하고, 씻는 등의 시간은 생존을 위해서 필요 한 필수적인 시간(Necessary Time)이 있다.¹¹⁾ 일반적으로 이러한 필수적인 시 간은 성별에 관계없이 일정 시간이 소요된다. 그리고 고용계약 등과 같이 계약에 따라 의무적으로 사용해야 하는 유급노동이나 가사노동, 학습 등과 같은 의무생 활시간 혹은 계약생활시간(Contracted Time)이 있다. 의무생활시간은 대부분의 국가에서 발견되는 남녀 취업률 차이 등으로 인해서 성별로 차이가 있다. 이외에 도 미디어사용, 교제, 종교·문화·스포츠, 취미 및 그 외에 여가를 포괄하는 여가 생활시간이 있다.

일반적으로 가사노동시간은 가정 내의 남녀 불평등 의식이나 관행뿐만 아니 라, 남녀 성역할분업 등에 의한 노동시장의 유급경제활동시간 즉, 계약시간에 의 해서 영향을 받는다. 즉, 남녀를 불문하고 대체로 취업자는 통상 비취업자보다 가사노동시간이 짧다. 따라서 남성취업자와 여성취업자의 가사노동시간이 같고 남성미취업자와 여성미취업자의 가사노동시간이 같더라도, 남녀 취업률이 서로

11) Dagfinn As(1978)는, 필수적인 시간(Necessary Time), 계약시간(Contracted Time), 주택구입, 혼인 및 출산, 가사활동, 종교 및 자원봉사활동 등과 같은 활동을 하는데 소 요되는 시간인 참여활동시간(Committed Time), 그리고 앞의 3가지 유형의 시간을 공 제하고 남은 시간을 자유시간(Free Time)으로 생활시간을 구분함. Dagfinn As(1978), Studies of Time-Use: Problems and Prospects, Acta Sociologica 1978-Vol. 21-No. 2, pp. 125~141.

다르면 가사노동시간의 성별 격차가 발생하게 된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가사노동시간의 성비는 취업상태를 통제하고 산정하였다. 즉, 남녀취업률이 동일한 것으로 가정하여, 남녀 각각 취업자의 가사노동시간과 미취업자의 가사노동시간을 단순 평균하여 가사노동시간을 산정하였다.¹²⁾ 여가시간 또한 가사노동시간과 동일하게 노동시장의 유급경제활동시간 즉, 계약시간에 의해서 영향을 받는다. 이에 따라 여가노동시간의 성비도 취업상태를 통제하고 산정하였다.

또한 일부 성평등지표는 성비(Female-to-male ratio)의 역수로 전환시켰다. 예컨대 가사노동시간, 건강보험 진료급여 수급자 수 지표는 통계 값이 클수록 바람직하지 않는 상황을 나타낸다. 이에 따라 가사노동시간과 건강보험 진료급여 수급자 수 지표의 경우, 성비의 역수(Male-to-female ratio)로 전환시켰다.

2단계는 일부 지표는 표준화(Normalization)한다. 대표지표 중에서 (셋째 아) 출생성비는 자연출생성비(Sex ratio at birth)가 1.06이기 때문에, 출생아동의 출생성비의 완전 평등한 수준은 자연출생성비 수준의 역수인 0.944가 평등기준점(Equality benchmark)이 된다. 일반적으로 평균기준점이 '1'과 다를 경우에 표준화함수를 사용하여 지표 값을 산정하는데, 지표 값이 클수록 성평등한 수준을 나타내면 식 (1)을 사용하여 표준화한다. 이에 비해 이들 두 지표와 같이 지표 값이 작을수록 성평등한 수준이 되면 아래의 식 (2)와 같은 표준화함수를 사용하여 표준화시킨다.¹³⁾

$$I = [(x - \text{Min}(x)) / ((\text{Max}(x) - \text{Min}(x)))] \quad (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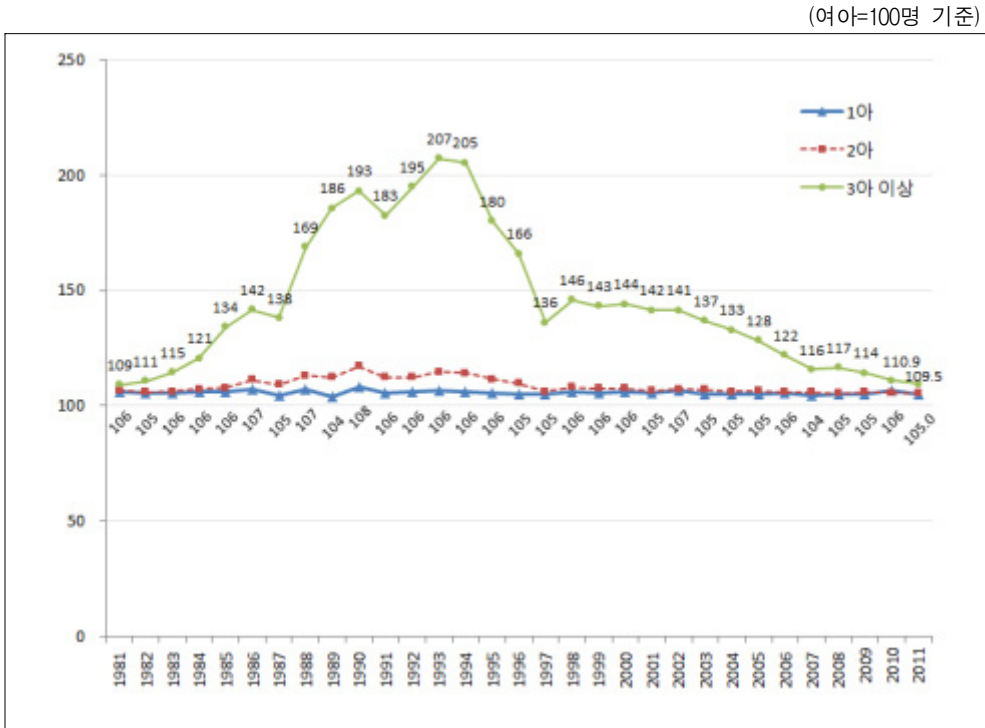
$$I = [(\text{Max}(x) - x) / ((\text{Max}(x) - \text{Min}(x)))] \quad (2)$$

국가성평등지수에서는 1980년 이후 셋째 아 출생성비가 가장 높았던 1993~1994년을 기준으로 최댓값을 2.0(1993년, 1994년은 각각 2.029, 2.027)으로 하고

12) 남녀취업률 차이는 국가성평등지수의 경제활동부문 성평등지표인 '경제활동참가율 성비'에 의해서 지수에 산정됨.

13) 지수의 표준화방법은, 서열화 $I = \text{Rank}(x)$, 정규화 $I = (x - x_m) / \sigma$, 최소-최대 $I = [x - \text{Min}(x)] / [\text{Max}(x) - \text{Min}(x)]$, 참고점(reference point)으로부터 거리, 범주별 점수화, 평균 이상과 이하의 점수화 등 크게 9가지가 있음. 표준화방법과 특징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OECD(2008), pp. 27~30.

([그림 Ⅲ-1] 참조), 최저점을 UN이 설정한 자연출생성비(Natural sex ratio)인 1.06으로 하였다. 그리고 출생성비 지표 값의 표준화를 통한 비율은 위의 식 (2)의 방식으로 산정하였다.



자료: 통계청, KOSIS를 이용하여 작성함.

[그림 Ⅲ-1] 우리나라 출산순위별 출생성비 변화 추이

안전부문 지표 중 하나인 강력범죄(흉악범) 피해자 성비의 지표 값은 다른 지표와는 달리 지표의 남녀 격차(Gap)로 산정하지 않고, 격차와 수준을 모두 감안하여 산정하였다. 강력범죄 피해자 성비 지표를 격차로 값을 산정하면 강력범죄 남녀피해자가 모두 급격히 감소(증가)하여도 남녀 범죄피해자 격차가 이전과 동일하면, 지표 값은 변화되지 않는다. 그러나 국가성평등지수에서는 남녀 격차가 변화되지 않더라도, 남녀 범죄피해자가 모두 감소(증가)되면 여성에 대한 안전이 증가(감소)함으로 지표 값도 증가(감소)하는 형태로 산정하였다.

이에 따라 강력범죄(흉악범) 피해자 지표는 아래 식(3)과 같이 동등분포 등가

지수(Equally distributed equivalent index) 형태로 산정방식을 설정하였다. 아래의 식에서 S_f , S_m 은 상대적으로 강력범죄에서 안전한 여성비율과 남성비율을 나타낸다. 강력 범죄로부터 안전한 인구비율과 불안정한 인구비율을 산정하기 위해서는 참고수준(Reference point)을 설정해야 한다. 강력범죄(흉악범)에서 안전한 기준점은 강력범죄 피해자가 전혀 없는 상태 즉, 피해자가 '0명'인 상태가 될 것이다. 강력 범죄로부터 가장 불안정한 참고수준은 주요 선진국과 우리나라 피해자 수를 비교 분석하여 설정하였다.

2009년 우리나라 강력범죄 피해자 수를 보면 전체인구 10만 명당 50명이고, 여성은 10만 명당 79명, 남성은 23명이다. 이러한 우리나라 강력범죄(흉악범) 피해자 수는 일본의 전체 8,314명 즉, 10만 명당 6.5명, 남성 6.3명, 여성 5.7명 그리고 미국의 10만 명당 19.3명, 남성 21.3명, 여성 17.3명보다 훨씬 높은 수준이다.¹⁴⁾ 즉, 우리나라의 강력범죄 피해자 수준을 주요국과 비교하면 상당히 심각한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나 현재 인구 10만 명당 피해자 수를 불안정한 참고수준으로 설정하면 지표 값이 곧 바로 '0'이 되기 때문에 지표로서의 역할을 할 수 없다. 그러나 너무 많은 피해자 수를 불안정한 참고수준으로 설정하면, 지표 값이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다.

이에 따라 과거 여성 피해자 수의 변화 추이를 감안하여 향후 10만 명당 여성 강력범죄 피해자 수를 전망하였다. 전망결과에 의하면 [그림 III-2]에서 보는 바와 같이 5년 후인 2015년에 10만 명당 피해자 수가 100명에 육박할 것으로 전망되었다. 즉, 현재와 같은 강력범죄와 관련된 정책 기조가 유지되면 2015년 우리나라 강력범죄 피해자 수는 인구 10만 명당 100명으로, 2009년 일본의 피해자 수준보다 15배나 많고, 2008년 미국의 5배나 많은 수준이 된다. 이에 따라 강력범죄 여성 피해자와 관련된 지표 값이 '0'이 되는 즉, 강력 범죄로부터 가장 불안정한 상황에 놓인 것으로 설정한 참고수준을 인구 10만 명당 100명으로 설정되었다.

강력범죄 피해자 수의 지표 값은 작을수록 평등한 수준을 나타내기 때문에 앞에서 언급한 아래 식 (4)와 같은 표준화함수를 사용하여 강력범죄 피해자를 나타내는 지표 값을 표준화시켰다. 여기서 $Max(x)$ 와 $Min(x)$ 은 각각 인구 10만명당

14) 일본은 警察廳(2010), 『平成21年の 犯罪』자료로서 전체 연령을 대상으로 한 통계이고, 미국은 Bureau of Justice Statistics(2011), Criminal Victimization in the United States, 2008, May 12, 2011의 자료임. 미국 통계는 12세 이상 인구를 대상으로 한 것이고, 강력범죄(흉악범)에서 방화범이 포함되지 않았기 때문에 약간 더 높을 수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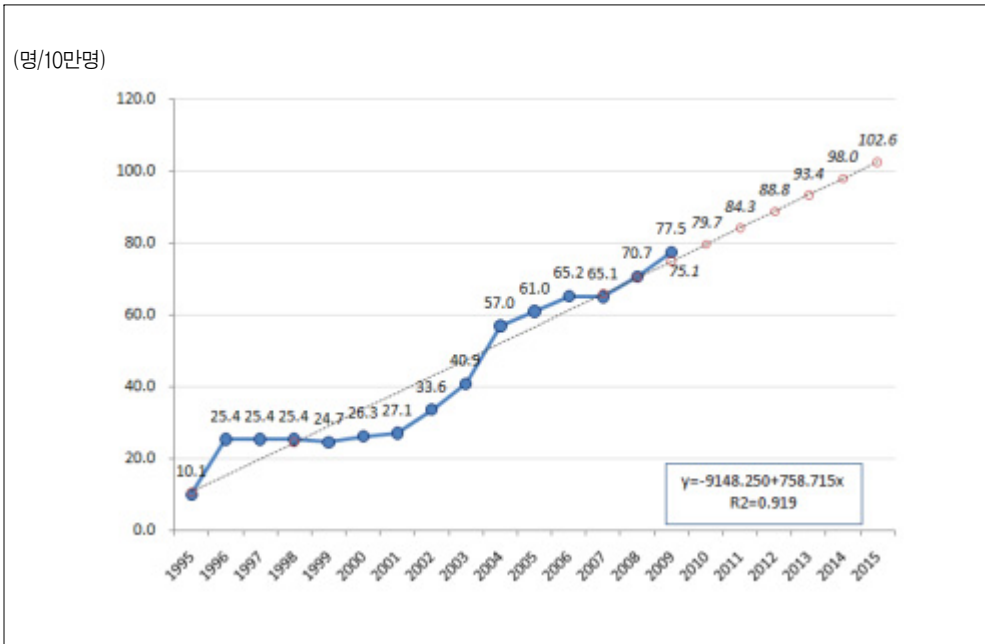
100명과 0명, x 는 인구 10만 명당 실제 피해자 수를 나타낸다. 식 (4)에서 S_m , S_f 는 각각 남녀의 강력범죄에서 안전한 인구비율을 나타내고, pm 과 pf 은 전체인구 중에서 남성과 여성비율, ε 는 불평등에 대한 혐오정도(Parameter of inequality aversion)를 나타낸다. 차별에 대한 페널티는 $\varepsilon=2$ 로 설정하였다.¹⁵⁾

$$X = [pf \cdot (S_f)^{1-\varepsilon} + pm \cdot (S_m)^{1-\varepsilon}]^{1-\varepsilon} \quad \varepsilon \geq 0 \ \& \ \varepsilon \neq 1$$

$$X = [pf \cdot (S_f)^{(-1)} + pm \cdot (S_m)^{(-1)}]^{(-1)} \quad (3)$$

$$S_f \text{ or } S_m = [(Max(x) - x) / (Max(x) - Min(x))] \quad (4)$$

(인구 10만명 당 강력범죄 피해자 수)



자료: 대검찰청(각 연도), 범죄통계 자료를 이용하여 추계함.

[그림 Ⅲ-2] 인구 10만 명당 강력범죄(흉악) 여성피해자 수 추이와 전망

15) ε 값이 크면 클수록 성불평등에 대해 혐오가 큼을 나타냄. 따라서 $\varepsilon=0$ 로 설정하면 불평등에 대한 혐오가 없다는 것을 의미함. 일반적으로 불평등지수 값을 산정할 때 $\varepsilon=2$ 로 설정함.

3단계는 비율로 전환된 값에 가중치(Weight)를 부여한다. 성평등은 남녀가 동등한 권리, 의무, 기회를 갖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특정한 성평등지표의 지수 값을 산정할 경우, 해당 성평등지표의 대상이 되는 남녀인구로서 조정한다. 예를 들어, 의사결정부문의 5급 이상 직급의 공무원 성비의 지표 값은, '5급 이상 여성 공무원/5급 이상 남성공무원'에 대해 가중치 즉, 남녀공무원 성비의 역수를 곱해서 조정한다. 그 결과 5급 이상 공무원 성비의 지표 값은, [(5급 이상 직급의 여성공무원/전체 여성공무원)/(5급 이상 직급의 남성공무원/전체 남성공무원)] 즉, 가중치인 (전체 남성공무원 수/전체 여성공무원 수) X (5급 이상 직급의 여성공무원/5급 이상 직급의 남성공무원)으로서 산정한다. 이와 같이 전체 성평등지표의 성비에 대해서 각 지표의 적용대상이 되는 남성인구에 대한 여성인구 성비의 역수를 가중치로 부여한다. 상용근로자의 경우에는 15세 이상 남성임금근로자에 대한 여성임금근로자 비율의 역수를 가중치로 부여한다. 다만, 건강보험 진료급여 수급자수의 가중치는 지표의 적용대상이 되는 인구성비를 그대로 사용한다 (<표 III-4> 참조). 이상과 같은 성평등지수를 구성하는 각 부문의 성평등지표의 1~3단계를 통한 지표 값 계산 방식은 <표 III-4>와 같다.

4단계는 부문별 지수의 점수를 산정한다. 부문별 각 성평등지표의 지수는 단순 평균하여 산정한다. 부문별 성평등지수를 산정하는 과정에서, 세계경제포럼(WEF)의 GGI는 각 하위영역 지수에 속하는 지표의 가중평균해서 점수를 산정하기도 한다. 즉, GGI 지수의 경우 지표 값의 표준편차의 역수를 가중치로 부여하여 산정하는데, 이것은 표준편차가 큰 측정치에 보다 많이 가중치를 부여하기 위한 것이다. 이에 따라 표준편차가 작은 성평등지표에 높은 가중치를 줌으로써, 이러한 지표의 남녀격차가 큰 국가는 상대적으로 페널티를 받도록 설계하였다.¹⁶⁾ 그러나 국가성평등지수를 포함하여 다른 모든 지수들은 부문별 지수 값을 단순 평균하여 산정한다.

16) GGI의 교육부문의 지표 중에서 초등학교, 중등학교, 고등교육기관의 취학률을 보면, 2009년 지수의 경우 상대적으로 표준편차가 적은 초등학교 취학률(표준편차: 0.060)의 가중치가 0.459로 가장 크고, 그 다음은 중등학교(표준편차: 0.120) 0.230, 고등교육기관(표준편차: 0.228) 0.121 순이었음. WEF(2009), p.5.

〈표 Ⅲ-4〉 부문별 성평등지표 산정에 적용되는 가중치

부문별 성평등지표	가중치	부문별 성평등지표	가중치
가 족		의사결정	
가사노동시간의 성비	-	국회의원의 성비	20세 이상 인구의 성비 역수
셋째 아 이상 출생성비	-	공무원 중 5급 이상 공무원의 성비	전체 공무원 수의 성비 역수
		관리자(기업의 과장급 이상)의 성비	AA대상 기업 근로자의 성비 역수
복 지		교육·직업훈련	
비빈곤 가구주 가구의 성비	가구주 가구의 성비 역수	성별 평균교육연수 격차(성비)	-
공적연금 가입자의 성비	20~59세 인구 성비 역수	고등교육기관 취학을 성비	-
장애인 고용율의 성비	-	재직자직업훈련 참여 근로자의 성비	임금근로자 성비 역수
보 건		문화·정보	
건강관련 삶의 질의 성별 격차	-	여가시간의 성비	20세 이상 인구의 성비 역수
건강보험 요양급여 수급자의 성비	전체인구의 성비	문화콘텐츠산업 종사자의 성비	15세 이상 인구의 성비 역수
건강검진 수검률 성비	-		
경제활동		안 전	
경제활동참가율 성비	-	범죄위험에 대한 사회안전 인식 성비	전체인구의 성비 역수
성별 임금 격차(성비)	-	강력범죄 피해자의 성비	전체인구의 성비
상용근로자의 성비	임금근로자 성비 역수		

주: 여기서 성비는 지표의 적용대상이 되는 「남성/여성」비율을 나타냄.

5단계는 국가성평등지수 값을 산정한다. 국가성평등지수는 서로 다른 8개 부문의 하위지표들로 구성된 종합지표(Composite Indicators)이다. 이에 따라 부문별 성평등지수 값을 이용하여 국가성평등지수 값을 산정할 경우, 각 부문에 지수 값에 대한 가중치를 부여하는 것이 중요하다. 국가성평등지수의 경우, 지수 산정을 위한 가중치(Weight)를 계층적 분석법(Analytic Hierarchy Process)으로 산정하였다.¹⁷⁾

먼저 가중치 산정을 위해서 성평등 관련 전문가인 교수, 연구자, 공무원 200명

17) 종합지수산정을 위한 가중치를 부여하는 방법은, 지수의 성격에 따라서 계층적 분석법(AHP)이외에 주성분분석 혹은 요인분석법, 여론분석법, 예산배분분석(Budget Allocation Process), 자료포괄분석(Data Envelopment Analysis)등이 있음. OECD(2008), pp. 89~98.

을 대상으로 8개 부분의 상대적 중요도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였다. 조사결과를 계층적 분석하여 산정된 가중치를 보면, 경제활동 및 소득 부문이 0.19, 교육 0.14, 복지와 의사결정이 각각 0.13, 안전 0.12, 가족 0.11, 보건 0.10, 그리고 문화·정보 부문의 가중치가 0.08이었다.¹⁸⁾ 이에 따라 국가성평등지수는 각 부문별 지수 값에 해당 부문의 가중치를 부여하여 산정하였다.

2012년 국가성평등지수 산정의 경우 기존의 지표 값 산정에 활용되었던 통계가 개편됨에 따라, 새로운 통계의 사용으로 인해서 일부 지표의 경우 2011년 국가성평등지수에 수록된 지난 5년 지표 값과 차이가 발생하였다. 이와 같은 지표로는 먼저 복지영역의 빈곤가구주 성비 산정 기초가 되는 빈곤통계의 경우, 통계청이 2011년에 연간화한 자료를 새롭게 산정, 발표하였다. 이 과정에서 통계청은 새로운 방식으로 산정된 통계로 기존 월간자료로 분석했던 빈곤통계를 대체, 보정함에 따라, 새로운 통계로 최근 5년간 즉, 2007~2011년 빈곤가구주 성비 지표 값을 새롭게 산정하였다.¹⁹⁾

복지부문의 장애인 고용율 성비 지표는 2011년 장애인실태조사가 이루어짐에 따라 동 조사결과를 기초로 2009~2010년 장애인고용율을 보정하였다. 장애인고용율 통계는 전국 200개 표본조사구의 약 45천 가구를 대상으로 조사하는 장애인고용실태조사를 통해서 생산되는데, 동 조사는 2005년, 2008년, 2011년 등 3년 단위로 조사된다. 이에 따라 과거 통계로 추계한 2009~2010년 장애인고용율을 보정하였다. 보정된 장애인고용율을 2010년 장애인 경제활동조사결과와 비교한 결과, 거의 유사하였다.²⁰⁾

보건부문은 19대 국회에서 보건 분야의 2개의 성평등지표 즉, 건강관련 삶의 질, 건강보험 요양급여 수급자로서 성평등 현황을 나타내는데 한계가 있다고 지적하였다.²¹⁾ 이에 따라 여성가족부와 성평등지수 연구진 그리고 외부 전문가의 회의를 통해서, 보건부문 관리지표인 건강보험 건강검진을 성비를 지표로 포함

18) 전문가 조사 결과, 부문별 가중치의 일관성 비율(CR)은 0.00으로 통계적으로 유의미함.

19) 통계청은 2010년 이전에는 분기자료를 평균하는 방식으로 가구별로 연간 자료를 집계한 후 각종 평균을 작성하는 방식을 취함. 한국보건사회연구원(2011), 『2011년 빈곤통계연보』, p. 5, p. 18.

20) 2011년 장애인경제활동 실태조사(만 15세 이상 등록장애인 8천명 대상 조사) 결과 고용율은 45.4%, 2011년 조사결과로 보정된 고용율은 45.6%이었음.

21) 2012년 7월 여성가족위원회 신경림의원(새누리당)의 여성가족부에 대한 질의에서 지적함.

시켰다. 건강보험 건강검진 수검률은 건강보험관리공단에서 매년 발간하는 「건강검진 통계연보」 자료에 수록된 통계를 활용한다.

교육·직업훈련부문의 고등교육기관 취학률 성비 지표의 경우도 고등교육기관 취학률(「고등교육기관 재학생 수/만 18~22세 인구」× 100)에서 인구통계가 개편되었다. 즉, 통계청은 금년에는 2010년 「인구센서스조사」 결과를 기초로 2006~ 2010년 인구통계를 새롭게 보정하였다. 이에 따라 기존 통계청의 2005년 「인구센서스조사」에 기초한 추계인구통계 대신에, 2010년 「인구센서스조사」 결과를 기초로 보정한 2006~2010년 인구통계를 활용하여 동 지표 값을 새롭게 산정하였다.²²⁾

22) 유엔교육과학문화기구(UNESCO)도 세계 각국의 고등교육기관 취학률(gross enrollment ratio)을 산정하여 발표하는데, 유네스코는 동 취학률 산정을 유엔이 추계한 장래인구를 사용함에, 우리나라 통계청 인구통계를 사용한 취학률과 차이가 있음.

〈표 Ⅲ -5〉 국가성평등지수 지표별 지수 산정 산식

부 문	지표 계산방법	계산 산식
가족		
가사노동	남녀취업구조를 통해 한 가사시간 성비 (역수) ³⁾	$X = 1 / [(T_{Ef} + T_{Nf}) / (T_{Em} + T_{Nm})]$
출생성비(남:아)	자연출생성비로 조정된 셋째 아 이상 출생성비 ⁴⁾	$X = [(Max - (NCHm / NCRf)) / [Max - Nsr]$
복지		
연금가입자	대상 남녀인구비율로 조정된 연금가입자 성비	$X = W_{mf} \times [F / M]$
비 빈곤가구주	대상 남녀가구주 가구비율로 조정된 비빈곤 가구주 가구 성비	$X = W_{mf} \times [F / M]$
장애인 고용률	장애인고용률 성비	$X = [F / M]$
보건		
건강관련 삶의 질	남녀인구의 건강관련 삶의 지수 성비	$X = [F / M]$
건강보험진료 수급자	대상 남녀인구비율로 조정된 요양급여 수급자 성비 (역수)	$X = W_{mf} \times [1 / (F / M)]$
건강검진 수검률	건강검진 수검률 성비	$X = [F / M]$
경제활동		
경제활동참가율	경제활동참가율 성비	$X = [F / M]$
임금격차	남녀근로자의 임금 성비	$X = [F / M]$
상용근로자	대상 남녀임근로자비율로 조정된 상용직 성비	$X = W_{mf} \times [F / M]$
의사결정		
국회의원수	대상 남녀인구비율로 조정된 국회의원의 성비	$X = W_{mf} \times [F / M]$
공무원(5급 이상)	대상 남녀인구비율로 조정된 5급 이상 공무원 성비	$X = W_{mf} \times [F / M]$
관리자(과장 이상)	대상 남녀임근로자비율로 조정된 관리자 성비	$X = W_{mf} \times [F / M]$

부 문	지표 계산방법	계산 산식
교육·직업훈련		
교육연수	평균교육연수의 성비	$X = [F / M]$
취학률	고등교육기관 취학률 성비	$X = [F / M]$
직업훈련참가자	대상 남녀임근로자비율로 조정된 직업훈련참가자 성비	$X = W_mf \times [F / M]$
문화·정보		
여가시간	남녀취업구조를 통제 한 여가시간 성비 ⁶⁾	$X = [(LT_Ef + LT_Nf) / (LT_Em + LT_Nm)]$
문화산업남성중사자	대상 남녀인구비율로 조정된 문화산업중사자 성비	$X = W_mf \times [F / M]$
안전		
사회안전 인식	대상 인구비율로 조정된 사회안전 인식점단 성비	$X = W_mf \times [(F / M)]$
범피해자	대상 남녀인구비율로 조정된 강력범죄 피해자 성비(역수) ⁷⁾	$X = [pf (Sf) / pm(S_m)]^{(-1)}$

주: 1) F, M은 각각 해당 지표 여성지표 값과 남성지표 값을 나타냄.

2) W_m/f : 가중치(Weight)로서 해당 지표의 적용대상 인구를 기준으로 (여성인구/남성인구)의 역수

3) T_Em, T_Nm, T_Ef, T_Nf : 각각 남성취업자, 미취업자, 여성취업자, 여성미취업자의 가사노동시간을 나타냄.

4) 출생성비의 최대값은 2.0(우리나라 1993~1994년 셋째 아 출생성비 2.029, 2.027 참고값)과 최저값은 자연출생성비(UN의 1.06)를 기준으로 산정함.

5) NCHm: 남아출생아 수, NCRf : 여아출생아 수, Nsr: UN이 설정한 자연출생아 성비

6) $LT_Em, LT_Nm, LT_Ef, LT_Nf$: 각각 남성취업자, 미취업자, 여성취업자, 여성미취업자의 여가시간을 나타냄.

7) pf, pm: 지표 대상 인구의 여성비율, 남성비율, Sf, Sm은 상대적으로 강력범죄에서 안전한 남녀비율을 나타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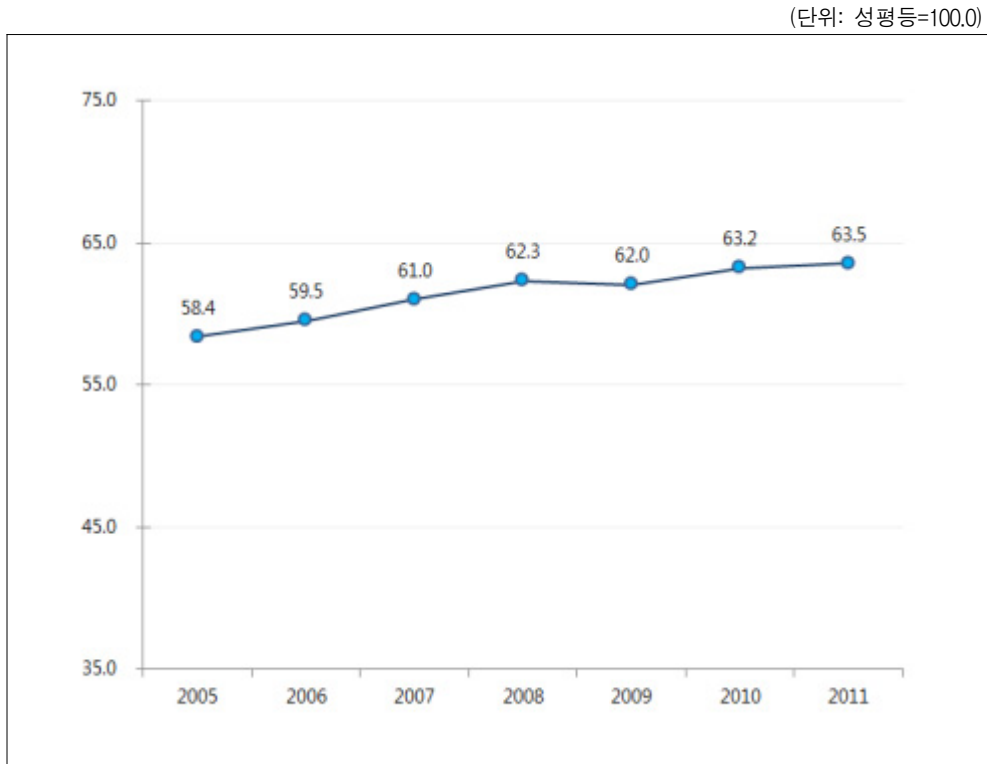
IV

우리나라 국가성평등 수준과 추이

- | | |
|------------------------|----|
| 1. 우리나라 성평등 수준과 특징 | 69 |
| 2. 부문별 성평등수준 변화 추이와 특징 | 73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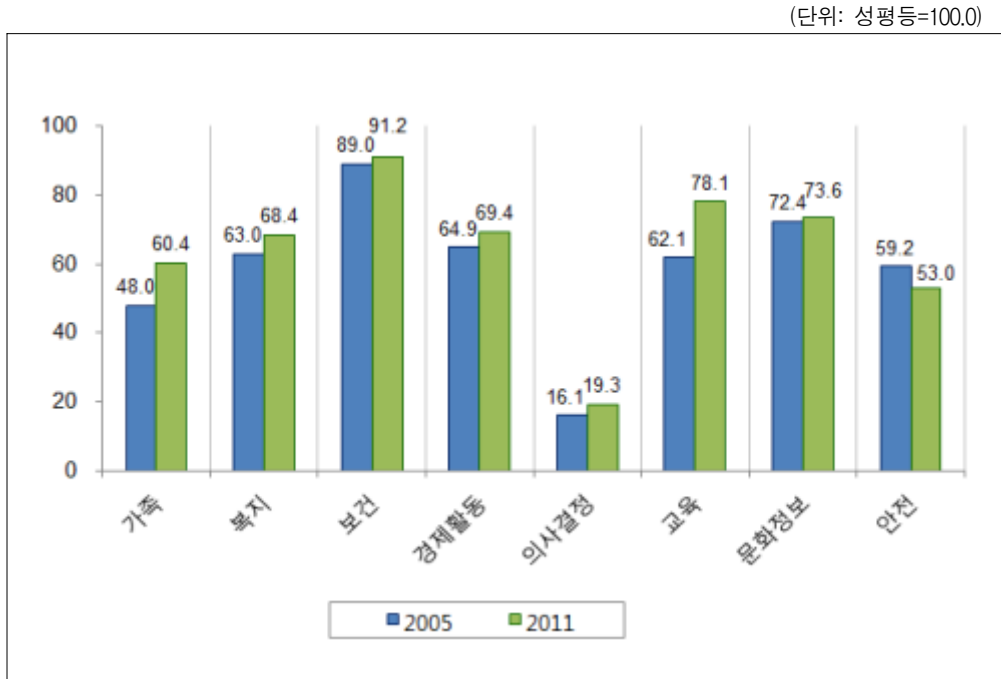
1. 우리나라 성평등 수준과 특징

국가성평등지수의 지표 값 범주는 완전불평등을 나타내는 '0.0'부터 완전평등을 나타내는 '100.0'으로 되어 있다. 따라서 지수 값이 높아질수록 성평등수준이 높아진다. 2011년 우리나라 국가성평등지수 값은 63.5로 지난해보다 약간 상승하였다. 연도별 국가성평등지수 값을 보면, 2005년 58.4에서 2008년 62.3으로 지속적으로 증가하였으나 2009년에는 일시적으로 62.0으로 0.3p 하락하였다. 그 후, 2010년 63.2로 증가하였고 2011년에는 63.5로 전년보다 0.3p 상승하였다. 이러한 국가성평등지수 추이에 의하면 우리나라의 성평등수준은 2005년부터 2008년까지 지속적으로 개선되었다가, 2009년 일시적으로 소폭 악화된 이후 2010년과 2011년에 다시 개선되는 추이를 보였다.



[그림 IV-1] 국가성평등지수의 평등수준 추이

우리나라 성평등수준을 부문별로 보면, 2011년 성평등수준이 가장 높은 부문은 보건부문(지표 값 91.2)이었다. 그 다음은 교육·직업훈련부문, 문화·정보부문, 경제활동부문, 복지부문, 가족부문 순이었다. 그리고 성평등수준이 가장 낮은 부문은 의사결정 부문이었고, 그 다음은 안전부문이었다([그림 IV-2]). 부문별 성평등수준을 2005년과 2011년을 비교하면 성평등수준이 가장 많이 개선된 부문은 교육·직업훈련부문이었다. 그 다음은 가족, 복지, 경제활동, 의사결정, 보건 부문, 의사결정 부문, 문화정보 부문 순으로 많이 개선되었다. 그러나 안전부문의 성평등수준은 2005년에 비해서 오히려 상당히 악화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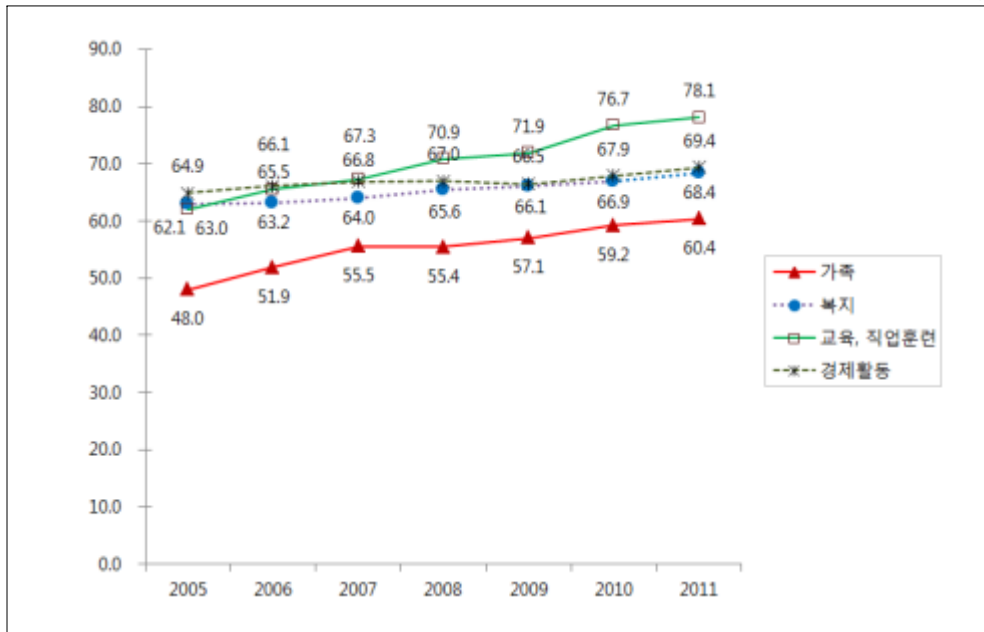
주: 부문별 가중치(weight)를 부여하지 않은 지표 값임.

[그림 IV-2] 부문별 우리나라 성평등수준

부문별 성평등수준의 변화 추이를 보면, 먼저 복지부문의 성평등지표 값은 2005년 이후 점진적으로 증가하는 추이를 보이고 있다. 즉, 우리나라의 복지영역의 성평등지표 값은 2005년 63.0에서 2008년 65.6, 그리고 2011년 성평등지표 값은 2010년 66.9에서 1.5p 증가한 68.4이었다. 가족부문은 2005년 성평등지표 값이 48.0이었으나, 2010년 59.2, 그리고 2011년 60.4로 급증하여, 지난 2005년 이후 8개 부문 중에서 성평등 수준이 두 번째로 가장 크게 향상된 부문으로 나타났다.

교육·직업훈련부문의 성평등지표 값은 2005년 이후 급격히 증가하는 추이를 보였다. 그 결과 성평등지표 값이 2005년 62.1에서 2010년 76.7, 2011년 78.1로 상승하여, 8개 부문 중에서 성평등수준이 가장 많이 개선된 영역이 되었다. 경제활동부문의 성평등지표 값은 2008년까지 증가하였으나, 금융위기 이후인 2009년에 성평등수준이 다소 악화되었다. 그러나 경기회복과 함께 2010년부터 성평등 수준이 개선되면서 경제활동부문 성평등지표 값도 2010년 67.9, 2011년 69.4로, 2년 연속 크게 상승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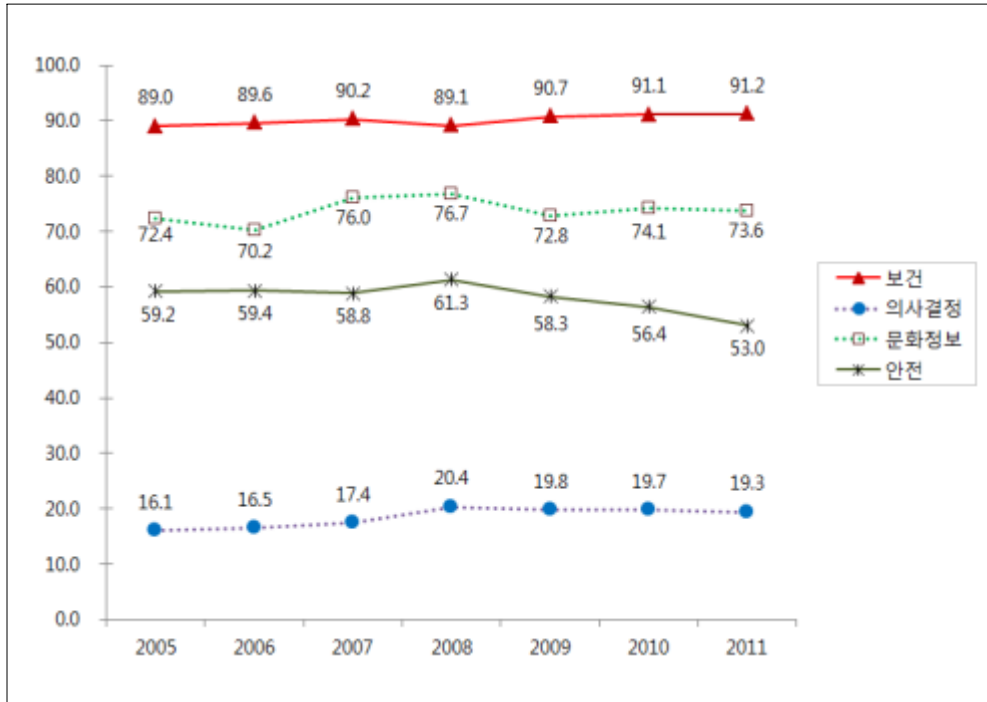
(단위: 완전 성평등=100.0)



[그림 IV-3] 부문별 성평등수준 변화 추이(1)

성평등수준이 가장 높은 보건부분의 성평등지수는 2005년 89.0에서 2007년 90.2로 성장하였으나 2008년에는 89.1로 감소하였다. 그러나 2009년, 2010년에는 각각 90.7, 91.1로 상승하였으며, 2011년에도 미미하게 지수 값이 상승하여 91.2였다. 문화·정보부분 성평등지표 값은 2005년 이후 다른 영역에 비해서 등락이 심했다. 2006년부터 상승 추이를 보였던 성평등수준은 2008년 76.7을 기점으로 이후 악화되어 2009년 지표 값이 72.8이었다. 2010년에는 지표 값이 74.1로 다시 상승하였으나, 2011년에는 73.6으로 소폭 하락하였다. 안전부분의 성평등지표 값도 2005년 이후 등락을 반복했다. 2008년에 지표 값이 상당히 상승하였으나, 이후 지속적으로 하락세를 나타냈다. 즉, 2008년 61.3이었던 지표 값이 2010년에는 56.4, 그리고 2011년에는 53.0으로 하락하였으며 2010년과의 차이는 가장 큰 폭인 3.4p로 나타났다.

(단위: 성평등=100.0)



[그림 IV-4] 부문별 성평등수준 변화 추이(2)

마지막으로 국가성평등지수를 구성하는 영역 중에서 성평등수준이 가장 낮은 의사결정부문을 보면, 2005~2008년까지 지표 값이 증가하였다. 그러나 2008년을 기점으로 지표 값이 하락하기 시작하여 2009년에는 19.8, 그리고 2010년에는 19.7로 하락하였다. 2011년에는 의사결정직 성평등수준이 19.3으로 다시 하락하였다.

2. 부문별 성평등수준 변화 추이와 특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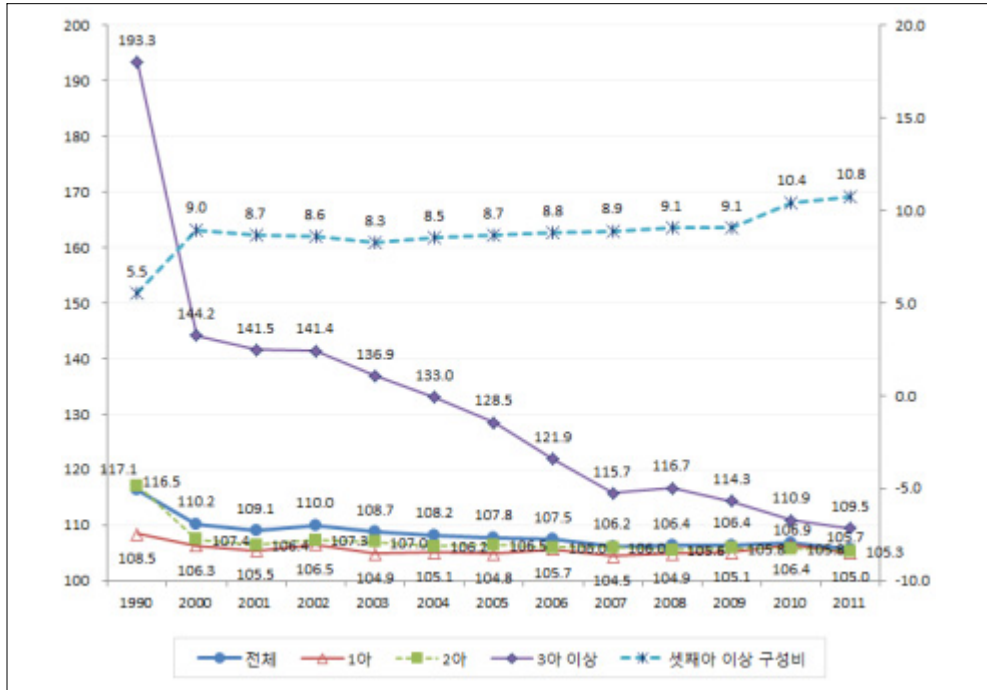
가. 가족부문

우리나라 성평등수준의 변화 추이를 부문별로 보면, 가족부문의 성평등수준은 다른 부문에 비해서 낮다. 그러나 셋째 아 출생성비와 가사노동 성비가 모두 성평등한 방향으로 변화됨에 따라, 가족부문의 성평등지수가 2006년 51.9에서 2011년 60.4로 증가하였다.

가족부문의 성평등지표 중에서 먼저 출생성비(여아 100명당 남아 수)를 보면, 2000년 남아 출생아 수가 332.6천명인데 비해 여아가 301.9천명으로 성비가 110.2였다. 이후 출생성비가 지속적으로 감소하여 2006년 107.5, 2009년 106.4로 하락하였다가 2010년 106.9로 소폭 증가하였으나, 2011년 105.7로 다시 하락하였다. 이와 같이 우리나라 출생성비가 지속적인 하락을 보였으나, 출생순위별 출생성비를 보면 첫째 아와 셋째 아 이상은 상당한 차이를 보인다.

우리나라는 출생아 수가 장기적으로 하락하는 추이를 보이는 가운데, 출산순위별 출생아 구성비를 보면 둘째 아와 셋째 아 이상의 구성비도 장기적으로 감소 추이를 보였다. 특히 셋째 아 이상의 구성비를 보면, 먼저 남아 출생 아 중에서 셋째 아 이상의 구성비는 1981년 25.8%를 차지하였으나, 1990년 9.1%로 하락한 이후 소폭 회복세를 보여 2000년 11.7%이었다. 2000년대에 동 구성비는 다시 점진적으로 하락하여 2007년 9.7%이었으나, 2010년 10.8%, 2011년 11.1% 소폭 증가하였다. 여아 중 셋째 아 이상의 구성비는 남아보다 다소 낮아서 1981년 25.3%이었고, 이후 지속적으로 하락하여 1990년에는 5.5%이었다. 여아도 1990년대 지속적인 회복세를 보여 2000년 9.0%이었다. 그리고 2003년 이후 구성비가 계속 증가하여 2010년, 2011년 각각 10.4%, 10.8%로 남아와 비슷한 수준이 되었다([그림 IV-5] 참조).

(단위: %, 여아 100당)



자료: 통계청(2012), KOSIS DB.

[그림 IV-5] 출산순위별 출생성비 및 셋째 아 이상 구성비

출산순위별 출생성비를 보면 첫째 아 출생성비는 이미 2000년에 자연출생성비인 106과 같은 수준에 도달하였다. 2000년 이후 첫째 아 출생성비는 104.5~106.5 수준에서 변동하였다. 특히 2007년에는 104.5를 나타내었으나, 이후 다시 증가하여 2010년에는 106.4를 기록하였다가 2011년에는 다시 105.0으로 하락하였다. 이에 비해 셋째 아 이상 출생성비는 2000년에 144.2로 상당히 높다. 그러나 이후 지속적으로 개선되어 2005년 128.5, 그리고 2007년 115.7로 하락하였다. 2008년에는 출생성비가 116.7로 다소 악화되었으나, 이 후 다시 하락하여 2010년 110.9, 2011년 109.5이었다.²³⁾ 이와 같이 셋째 아 이상의 출생성비가 지속적으로 개선되는

23) 지역별로 셋째 아 이상 출생성비를 보면 2011년 기준 대구시(125.4)가 가장 높았고, 그 다음은 경상남도(114.1), 부산광역시(112.5), 강원도(112.1), 경상북도(110.5), 서울특별시(110.0) 순이었다. 출생성비가 가장 낮은 시·도는 전라남도로 101.6이었고, 그 다음은 대전광역시 101.9, 전라북도 105.7, 울산광역시 105.8 순이었다. 통계청(2012), 『2011년 출생통계(확정)』, 2012. 8.

추이를 보이고 있으나, 아직도 자연출생성비보다 높아서 남아선호사상이 약간 남아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부표 1-2>). 이에 따라 출생성비의 지표 값이 2007년 일시적으로 하락한 것을 제외하면, 2006년 83.1, 2010년 94.8, 그리고 2011년에는 96.3으로 크게 개선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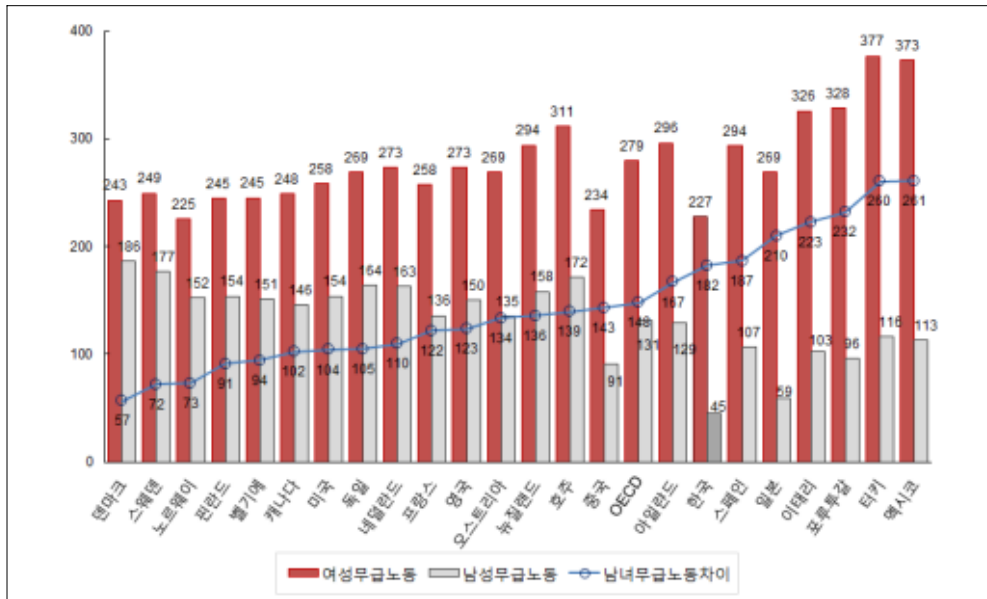
가족부문의 또 다른 성평등지표인 가사노동시간을 보면, 2004년 남성의 경우 취업자의 가사노동시간이 31분, 비취업자 55분이었다. 이에 비해 여성은 취업자의 가사노동시간이 2시간 36분, 비취업자 4시간 53분으로 취업여부에 관계없이 여성은 남성보다 훨씬 많은 가사노동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2009년 남성취업자의 가사노동시간은 36분, 비취업자 1시간 4분으로 소폭 증가하였다. 이에 비해 여성취업자는 2시간 34분, 비취업자 4시간 41분으로 소폭 감소하여, 남녀 가사노동시간의 격차가 다소 줄어들었으나, 여전히 성불평등이 심한 상태에 있다.

우리나라와 주요국의 남녀 가사노동을 비롯한 무급노동을 비교하면 [그림 IV-6]과 같았다. 먼저 남녀 무급노동시간을 비교하면 우리나라 남성의 1일 평균 무급노동시간은 45분으로 분석대상 국가 중에서 가장 짧았고, 우리나라 다음으로 일본 59분, 중국 91분, 포르투갈 96분, 이태리 103분 등으로 동북아시아와 남부유럽 국가들이었다. 이에 비해 덴마크 남성 무급노동시간은 186분, 스웨덴 177분, 호주 172분 등으로 상당히 길었다. 여성의 무급노동시간을 보면 노르웨이(225분) 다음으로 우리나라(227분), 중국(234분), 덴마크(243분), 핀란드(245분) 등이었다. 이와 같이 유럽 여성의 무급노동시간이 상대적으로 긴 원인 중의 하나는 짧은 유급노동시간과 시간제노동 확산에 기인한 것으로 나타났다.²⁴⁾

또한 남녀 무급노동의 차이를 보면 우리나라는 1일 평균 182분으로 분석대상 국가 중에서 아래에서 7번째로 큰 국가로 나타났다. 남녀 차이가 가장 큰 국가는 멕시코(261분)이었고, 그 다음은 터키, 포르투갈, 이태리, 일본, 스페인 순이었다. 이와 같이 우리나라는 무급노동에서 남녀 차이가 큰 국가집단에 속했다.

24) OECD(2011), 『Society at a Glance 2011』, p. 16.

(단위: 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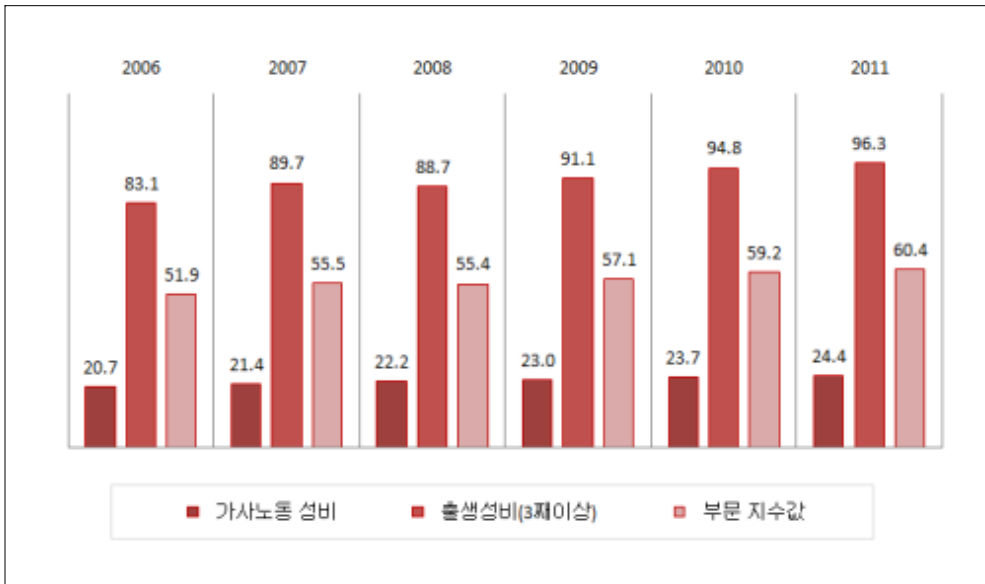
자료: OECD(2011), 『Society at a Glance 2011』 자료를 이용하여 작성함.

[그림 IV-6] 주요국의 남녀 무급노동시간 현황

2011년 취업자 및 비취업자의 남녀 가사노동시장의 추이에 의하면 남성의 가사노동시간 증가, 여성의 감소로 인해서 가사노동 성평등 지표 값은 2010년 23.7에서 2011년 24.4로 증가하였다. 그러나 앞의 국제비교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우리나라는 가사노동의 성평등수준이 상당히 낮은 국가에 속했다.

이와 같이 가족부문의 성평등지표인 셋째 아 출생성비와 가사노동 성비가 모두 성평등한 방향으로 변화됨에 따라 가족부문의 성평등지수 값은 2010년 59.2에 이어서 2011년 60.4로 소폭 증가하여, 성평등수준이 개선되었다. 특히, 가사노동 성비 증가비율은 미미하게 증가하고 있지만 이보다 출생성비(셋째 아 이상)의 증가폭이 커 가족부분 성평등지표 값의 추이가 증가추세를 나타나는 것으로 보인다.

(단위: 완전 성평등=100.0)



[그림 Ⅳ-7] 가족부문 성평등지표 값 변화 추이

나. 복지부문

복지부문은 2006년 성평등지표 값이 63.2였으나, 2010년 66.9로 상승하였고, 2011년에는 68.4를 나타내었다. 복지부문 개별 성평등지표 변화를 보면, 먼저 공적연금가입율의 성비가 2008년 59.2, 2010년 65.3에서 2011년 69.0으로 증가하여, 공적연금분야의 성불평등이 상당히 개선되었다.

성평등지표별로 보면 남성의 공적연금(국민연금, 사학연금, 공무원연금) 가입률이 2008년 59.8%에서 2010년 59.7% 그리고 2011년 61.4%로 증가하였다. 그리고 여성 가입율도 2008년 35.4%에서 2009년 37.0%, 2010년 39.1% 그리고 2011년 42.3%으로 지속적으로 증가하였다. 이와 같은 남녀 가입률 증가는 국민연금가입자가 크게 증가한데 기인한다. 국민연금가입자는 남녀 각각 2010년 2.0%, 7.6% 그리고 2011년 3.7%, 9.9% 증가하여, 여성가입자 증가율이 남성보다 훨씬 높았다.

이와 같은 여성 국민연금가입자의 증가는 전년과 마찬가지로 임의가입자의 증가세가 지속된데 기인한다.²⁵⁾ 즉, 전체 임의가입자는 2009년 36,368명에서 2010

25) 임의계속가입자는 제외함.

년 90,222명 그리고 2011년 171,134명으로 증가하였다. 성별로 보면 여성 임의가입자는 전년대비 2011년 67,958명(증가율 92.5%), 남성 12,954명(77.3%) 증가하였다. 이와 같이 임의가입을 하는 여성들은 주로 연금보험료 납부경험이 있으나 현재 소득활동을 하지 않고 연금을 받기 위한 최소가입기간(10년)이 부족한 전업주부, 그 동안 노후준비가 취약했던 40~50대 여성인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제도적으로는 100세 시대의 도래로 노후준비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이 높아진 상태에서, 베이비부머나 경력단절 고객들을 대상으로 맞춤형 노후설계 상담서비스를 강화한 것에 기인한 것으로 나타났다.²⁶⁾ 사업장가입자의 경우도 2011년에 전년대비 여성이 296천명(증가율 7.7%), 남성 266천명(4.1%) 증가하여, 여성증가율이 남성보다 더 높았다. 사학연금가입자의 경우 여성이 2011년 4.0%(증가인원 4,989명), 남성 0.3%(429명) 증가하여 여성가입자 증가율이 높았으나, 상대적으로 증가규모는 적었다.

이와 같은 남녀 공적연금가입자의 변화로 인해서, 동 지표의 값은 2006년 55.1에서 2008년 59.2, 2010년 65.3 그리고 2011년에는 69.0으로 지속적으로 증가하였다.

장애인 취업률 지표를 보면, 여성장애인 고용율은 2005년 20.2%, 2008년 23.7% 그리고 2011년 22.7%로 지속적으로 증가하였다. 그리고 남성장애인 고용율은 2005년 43.5%에서 2008년 47.6%로 증가하였으나, 그 이후 하락하기 시작하여 2011년 44.8%로 하락하였다. 이에 따라 장애인 취업과 관련된 성평등지표 값도 2006년 46.4에서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2008년 49.9, 2010년 50.4, 2011년 50.7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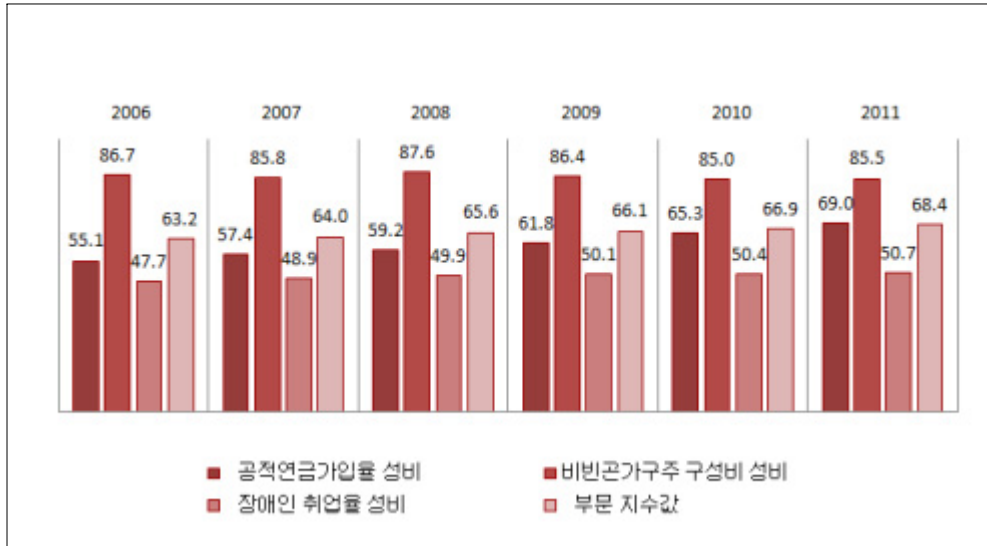
마지막으로 남녀가구주 가구의 빈곤율을 보면, 여성가구주 빈곤율은 2005년도 19.1%에서 2006년 20.0%로 증가하였다가 2007년도 18.8%로 일시적으로 하락하였다. 2007년 이후 빈곤율은 다시 높아져서 2008년 19.8%, 2009년도에는 21.3%이었으나, 2010년에는 다시 20.1%로 소폭 하락하였다.²⁷⁾ 이에 비해 남성가구주

26) 국민연금공단(2012), '국민연금 임의가입: 여성 등 취약계층 중심으로 증가', 보도자료, 2012년 4월 5일.

27) 복지영역의 빈곤가구주 성비 산정 기초가 되는 빈곤통계의 경우, 통계청이 2011년에 연간화한 자료를 새롭게 산정, 발표하였다. 이 과정에서 통계청은 새로운 방식으로 산정된 통계로 기존 월간자료로 분석했던 빈곤통계를 대체, 보정함에 따라, 새로운 통계로 최근 5년간 즉, 2007~2011년 빈곤가구주 성비 지표 값을 새롭게 산정하였다.

빈곤율은 2005년도 6.7%에서 2007년도 7.3%로 증가하였다가, 2008년 7.1%, 2009년 7.5%를 나타낸 이후 2010년에는 다시 6.5%로 하락하였다.

(단위: 완전 성평등=100.0)



[그림 IV-8] 복지부문 성평등지표 값 변화 추이

2011년 남녀 가구주 가구의 변화를 보면 전년대비 여성가구주 가구는 크게 증가한데 비해서 빈곤 여성가구주 가구는 소폭 감소하였다. 이에 비해 남성가구주 가구는 거의 변화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빈곤 남성가구주 가구는 크게 감소하였다. 그러나 가구주 가구 중에서 빈곤계층이 아닌 가구주 가구 변화를 성별로 보면 여성은 2011년 전년대비 6.6% 증가한데 비해서, 남성은 1.8% 증가하였다. 그 결과 2011년에 남녀 가구주 가구의 소득불평등은 소폭 개선되었다.²⁸⁾

이에 따라 소득이 빈곤선 이상에 있는 가구주 구성비의 성비의 지표 값을 보면, 2006년에서 2007년까지 악화되었다. 그리고 2008년 지표 값이 일시적으로 개선되었으나, 2008년 이후 다시 하락하는 추이를 보였다. 그러나 2011년에는 지표

28) 남녀가구주 가구는 2010년 전년대비 각각 5.0%, 0.7% 증가하였고, 빈곤계층에 속하는 남녀가구주 가구는 각각 -0.9%, -12.0%가 하락하였다. 그러나 전체 가구주 가구 중에서 빈곤계층이 차지하는 비율이 상당히 낮음에 따라, 빈곤계층이 아닌 여성 가구주 가구 증가율이 남성보다 더 높았다.

값이 다시 상승하였다. 즉, 2008년 이후 성평등지표 값이 2009년 86.4, 2010년 85.0으로 지속적으로 하락하였으나, 2011년 85.5로 증가하여 성평등수준이 소폭 개선되었다.²⁹⁾

다. 보건부문

보건부문은 성평등수준은 가장 높은 부문이며, 성평등 지표 값이 2006년, 2007년 동안 지속적으로 상승하였으나, 2008년 89.1로 하락하였다. 그러나 2009~2010년에 상승하였으며, 2011년에도 미미하게 상승하여 91.2였다.

개별 성평등지표 값의 변화를 보면, 먼저 건강관련 삶의 질을 나타내는 지표인 EQ-5D에서 19세 이상 여성의 건강관련 삶의 질 지표 값은 2005년 0.926, 2007년 0.909로 하락하였다. 그러나 2009년에는 0.931로 증가하였고, 2010년에는 동일하게 0.931을 유지하였다.³⁰⁾ 남성의 경우 2005년 0.953에서 2007년 0.952로 소폭 하락하였으나, 이후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2009년 0.964, 2010년 0.966이었다.

건강관련 삶의 질 지표는 남녀 모두 연령이 높을수록 지표 값이 하락 즉, 건강관련 삶의 질이 하락하였다. 연령별 남녀 EQ-5D 격차를 보면, 19~29세의 경우 남녀 각각 0.989, 0.975로 차이가 0.014이었다. 40대 남녀는 각각 0.978, 0.966로 차이가 0.012, 60대 남녀 각각 0.941, 0.875로서 0.066, 그리고 70세 이상은 각각 0.867, 0.776로서 0.091이었다. 즉, 여성의 건강관련 삶의 질이 남성보다 낮으며, 연령이 높을수록 건강관련 삶의 질에서 남녀간의 격차가 확대되었다. 그리고 남녀 건강관련 삶의 질 개선 정도를 연령별로 보면 40대와 50대는 여성의 개선 정도가 남성보다 좋은 반면에, 나머지 연령에서는 남성이 더 많이 개선되었다. 즉, 2010년의 경우 중장년층은 여성의 건강관련 삶의 질이 남성보다 많이 개선되었으나, 나머지 연령층은 모두 남성이 더 많이 개선되었다. 그 결과 건강관련 삶의 질 측면에서의 성평등수준은 2005~2008년까지는 악화되었다가 2009~2010년 개선되었으나, 2011년에는 다시 악화되었다.³¹⁾

29) 성평등지표 값 산정은 기준 연도보다 한 해 이전의 통계를 사용함.

30) EQ-5D는 건강관련 삶의 질을 나타내는 5가지 차원 즉, 운동능력(Mobility), 자기관리(Self-care), 일상활동(Usual activity), 통증/불편감(Pain/Disability), 그리고 불안과 우울(Anxiety and Depression)의 기술체계를 종합한 지표임. 5가지 차원을 나타내는 항목에 대한 현상을 3개 수준 중 하나로 응답한 결과에 가중치를 부여하여 산정함.

보건부문의 또 다른 성평등지표인 성별 병원 요양급여청구건수를 보면, 2005년 여성의 급여청구건수는 3,159천 건으로 남성 2,763천 건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많았다. 병원 요양급여청구건수는 2005년 이후 남녀 모두 점진적으로 증가하는 추이를 보여, 2009년 남녀 각각 4,222천 건, 5,100천 건, 2010년 4,720천 건 5,732천 건 그리고 2011년에는 4,949천 건, 6,113천 건이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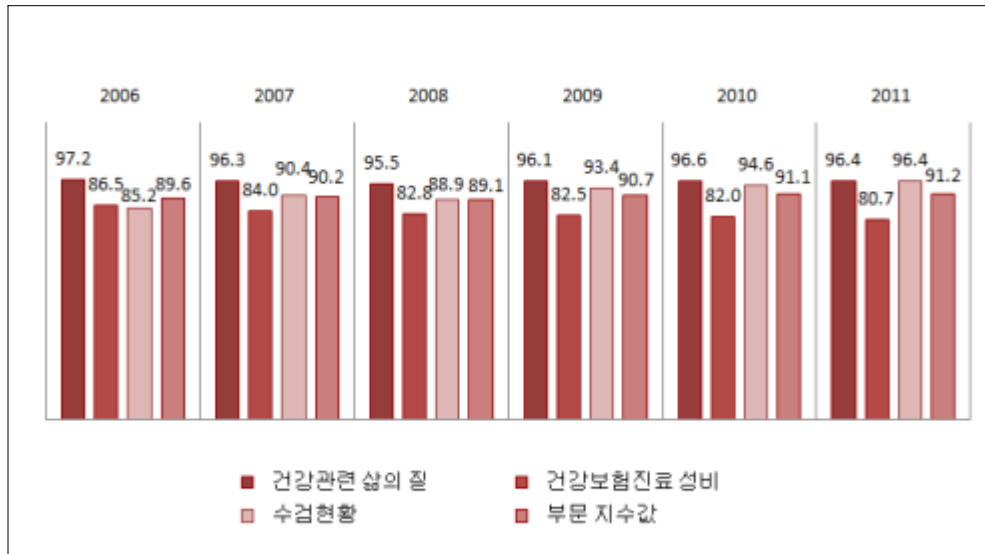
2011년 의료기관 남녀 요양급여청구건수를 연령계층별로 보면 만 0~19세, 55~69세까지는 남성이 여성보다 많았으나, 그 이후 20~50대 초반까지는 여성이 더 많았다. 특히 임신 및 출산연령대인 25~29세, 30~34세 연령층에서 여성의 입원 요양급여청구건수가 남성의 각각 1.9배, 2.2배나 되었다. 또한 85세 이상 고령층의 경우 여성 청구건수는 남성의 3.2배, 80대 초반에는 2.4배나 되었다. 즉, 여성은 출산 및 육아, 70세 이상 고령기에는 남성보다 입원 요양급여청구건수가 훨씬 많은 특징을 보였다.

또한 요양급여지급건수 증가율을 보면 2005년에는 남성 청구건수 증가율(3.6%)이 여성(3.4%)보다 높았으나, 이후 지속적으로 여성 지급건수 증가율이 남성보다 더 높았다. 즉, 2010년 남성 지급건수 증가율은 11.8%인데 비해 여성은 12.4%이고, 2011년은 남녀 각각 4.9%, 6.6%이었다. 이와 같이 여성의 요양급여 지급건수 증가율이 남성보다 더 높아서, 병원입원진료를 기준으로 한 보건부문의 성평등수준은 악화되었다.³²⁾ 즉, 입원급여지급건수로 나타난 성평등지표 값은 2006년 86.5에서 지속적으로 하락하여 2008년 82.8, 2010년 82.0 그리고 2011년에는 80.7이 되었다.

31) 2011년 건강관련 삶의 질 성비 지표 값은 가장 최근에 입수가 가능한 통계인 2010년 자료를 기준으로 산정함.

32) 여성은 남성에 비해서 요양급여 지급(청구)건수뿐만 아니라, 내원일수(남성 증가율 11.0%, 여성 12.4%), 진료일수(남녀 각각 11.6%, 12.7%), 요양급여비용(남녀 16.7%, 17.0%)도 여성이 남성보다 높았음.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심사평가연구소(2011), 『2011년 건강보험 주요통계』.

(단위: 완전 성평등=100.0)



[그림 IV-9] 보건부문 성평등지표 값 변화 추이

건강검진 수검률 증가현황을 보면 2006년 여성증가율(9.7%)이 남성(3.4%)보다 더 높았으며, 그 이후 증가율은 다소 낮아졌지만 2010년에도 여성 수검률의 증가 폭(5.7%)이 남성(3.7%)보다 더 높았다. 성별 수검률 현황을 보면 2006년 남성 56.2%, 여성 50.8%로 남성이 높았으며, 남녀 모두 수검률이 증가하여 2009년 남녀 각각 64.9%, 61.4%이었다. 그리고 2010년에는 남성 수검률이 67.3%, 여성은 64.9%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건강검진 수검률의 성평등수준은 2006년 85.2에서 2007년 90.4로 증가한 이후 일시적으로 2008년에 88.9로 하락하였다. 그러나 2009년 이후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2010년 94.6, 2011년 96.4로 증가하였다. 이에 따라 보건부문 성평등수준은 2008년 이후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이를 보였다.

라. 경제활동부문

경제활동부문의 성평등수준은 금융위기의 영향이 있었던 2009년을 제외하고, 2006년 66.1에서 이후 지속적으로 개선되어 2011년 69.4가 되었다. 경제활동부문의 개별 성평등지표를 보면, 먼저 남성 경제활동참가율은 2006년 74.1%에서 2010년 73.0%로 지속적으로 하락하였다가, 2011년에 73.1%로 소폭 상승하였다.

경제활동참가율은 생산가능인구와 경제활동인구로 구성된다. 이에 따라 2006년 이후 남성 생산가능인구와 경제활동참가인구 변화를 보면 2006년 이후 남성 취업자와 경제활동인구가 지속적으로 증가함에도 불구하고 경제활동참가율이 하락하였다. 이와 같은 현상은 남성 생산가능인구 증가율보다 경제활동인구 증가율이 낮은데 기인하였다. 2011년에는 남성 경제활동인구와 취업자가 각각 전년 대비 1.3%, 1.7%로 생산가능인구 1.1%보다 큼에 따라, 경제활동참가율은 증가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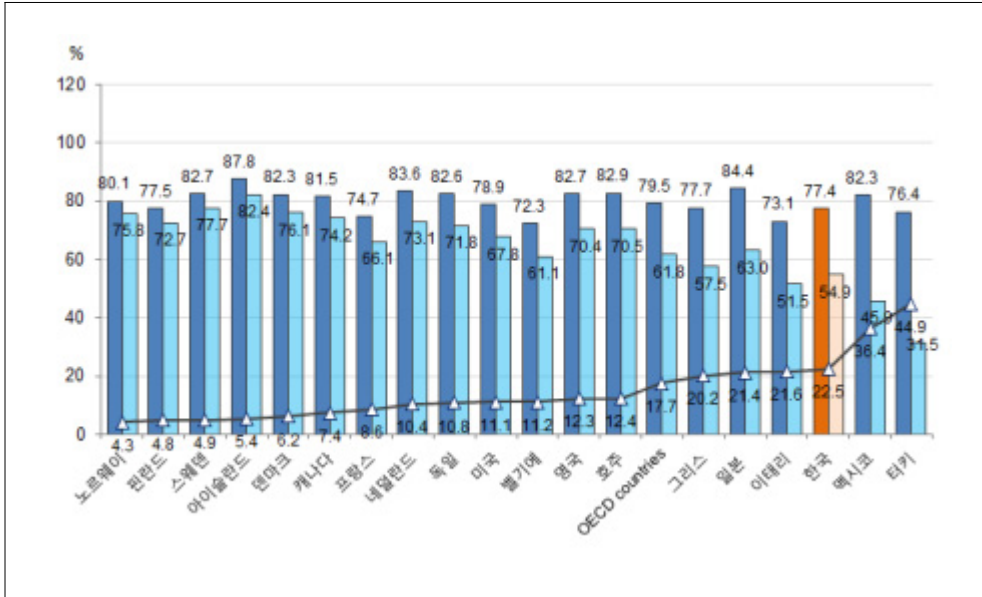
여성 경제활동참가율은 2006년 50.3%에서 2009년 49.2%로 지속적으로 하락하였으나, 그 이후 2010년 49.4%, 2011년 49.7%로 증가하였다. 또한 여성 생산가능인구와 경제활동인구 변화를 보면 여성 생산가능인구는 2006년 이후 지속적으로 증가하였다. 여성 경제활동인구도 2009년 0.6% 감소한 것을 제외하면 지속적으로 증가하였다. 그러나 여성 경제활동인구 증가율은 2009년까지 생산가능인구 증가율보다 낮았다. 다만 2010년, 2011년에는 생산가능인구 증가율이 각각 1.2%, 1.1%인데 비해서 경제활동인구 증가율이 1.8%, 1.6%로 더 높아져서, 경제활동참가율이 증가하였다.

이와 같은 남성과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 변화 추이를 보면 2008년까지는 여성 경제활동참가율 증가율이 남성 증가율보다 높거나 혹은 감소율이 낮아서, 남녀경제활동참가율은 2006년 각각 74.1%, 50.3%에서 2008년 73.5%, 50.0%로 감소되었다. 2009년에는 남성 경제활동참가율은 전년대비 0.5% 하락한데 비해서 여성은 0.9% 하락하여, 여성 경제활동참가율이 남성보다 더 크게 하락하였다. 2010년, 2011년에는 남성 경제활동참가율은 각각 0.1% 감소, 0.1% 증가한데 비해서 여성은 각각 0.2%, 0.3% 증가하여, 2011년 남녀 경제활동참가율이 각각 73.1%, 49.7%가 되었다.

우리나라는 다른 나라와 마찬가지로 장기적으로 남성 경제활동참가율 하락, 여성 경제활동참가율 증가 추이를 보여 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의 남녀 경제활동참가율 차이는 주요 선진국에 비해서 여전히 큰 것으로 나타났다. 즉, OECD 회원국의 남녀 경제활동참가율과 참가율 남녀차이를 나타내는 [그림 IV-10]을 보면 우리나라의 (15~64세 기준) 남녀 경제활동참가율 격차가 22.5%로서 터키, 멕시코 다음으로 큰 것으로 나타났다.³³⁾ 이와 같은 현상은 우리나라 여성 경제활동참가율이 여전히 다른 OECD 회원국보다 낮은데 기인한다. 즉, 우

리나라 여성 경제활동참가율은 분석대상 OECD 회원국 중에서 터키, 멕시코, 이태리 다음으로 낮았다.

(단위: %, %p)



자료: OECD(2012), OECD Employment Outlook 2012.

[그림 IV-10] 주요국의 남녀 경제활동참가율과 남녀차이

이에 따라 경제활동참가율로 측정된 성평등지표 값을 보면 2006년 67.8에서 2008년 68.0으로 지속적으로 증가하였다가 2009년에 67.3으로 하락하였다. 그러나 2010년에 67.7로 소폭 상승한 것을 기점으로 2011년에는 67.9로 상승하였다. 즉, 금융위기 이후 경제활동에서의 성평등수준이 일시적으로 하락하였다가, 2010년을 기점으로 호전되는 추이가 계속 되었다.

경제활동부문의 또 다른 성평등지표인 남녀임금격차 지표를 보면 여성근로자 평균 월급여총액은 2006년 1,497천원에서 계속 증가하여 2010년 1,772천원, 2011년 1,862천원이었다. 남성 월총액급여도 동 기간에 2,249천원에서 2010년 2,648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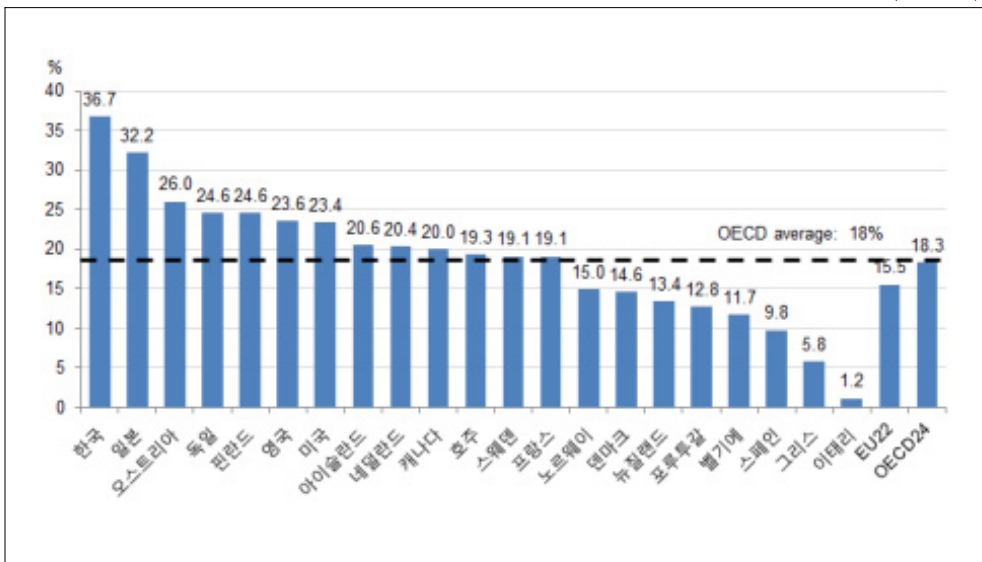
33) 남녀 경제활동참가율 차이에 대한 국제비교를 위해서 입수 가능한 자료인 15~64세 기준 경제활동참가율 자료를 이용하였음. 이에 따라 성평등지표인 15세 이상 경제활동참가율 성비 산정에 사용되는 통계와는 다소 차이가 있음.

원, 2011년 2,750천원으로 증가하였다. 임금증가율을 보면 2010년 여성 임금증가율은 4.7%로 남성의 4.0%보다 더 높았다. 그리고 2011년에도 여성 임금증가율은 5.1%, 남성은 3.8%로, 여성 임금증가율이 남성보다 훨씬 더 높았다.

임금내역별로 남녀임금증가율을 보면, 2011년 정액임금의 경우 여성(4.7%)이 남성(3.3%)보다 더 많이 증가하였다. 또한 연장근무, 휴일 및 야간근무 등으로 인한 초과임금 증가율을 보면 여성 초과임금 증가율은 전년대비 11.4%인데 비해서 남성은 10.6%이었다. 이에 따라 월평균급여총액의 남녀격차 추이를 보면 2005년 66.2%에서 점진적인 개선을 보여 2010년 66.9%로 증가하였고 그리고 2011년에는 67.7%로 상당히 개선되었다.

이와 같은 우리나라의 남녀임금격차를 주요 선진국과 비교하면 [그림 IV-11]과 같다. [그림 IV-11]에 의하면 우리나라의 남녀임금차이(Gender gap)는 36.7로 OECD 회원국 중에서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다.

(단위: %)



주: 풀타임근로자 평균임금(average earnings)의 남녀격차 기준.

자료: OECD Employment Database, March 2010.

[그림 IV-11] 주요국의 남녀 임금격차 (2008년)

남녀임금격차가 상대적으로 적은 국가를 보면 이태리, 그리스, 스페인, 포르투갈 등과 같은 남부유럽 국가와 함께, 벨기에, 뉴질랜드, 덴마크 등이었다. 이에 비해 우리나라를 비롯하여 일본, 독일 등은 상대적으로 임금격차가 컸다. OECD 회원국의 남녀임금격차를 비교한 결과에 의하면 우리나라의 여성근로자에 대한 처우 불평등이 다른 나라에 비해서 상당히 큰 것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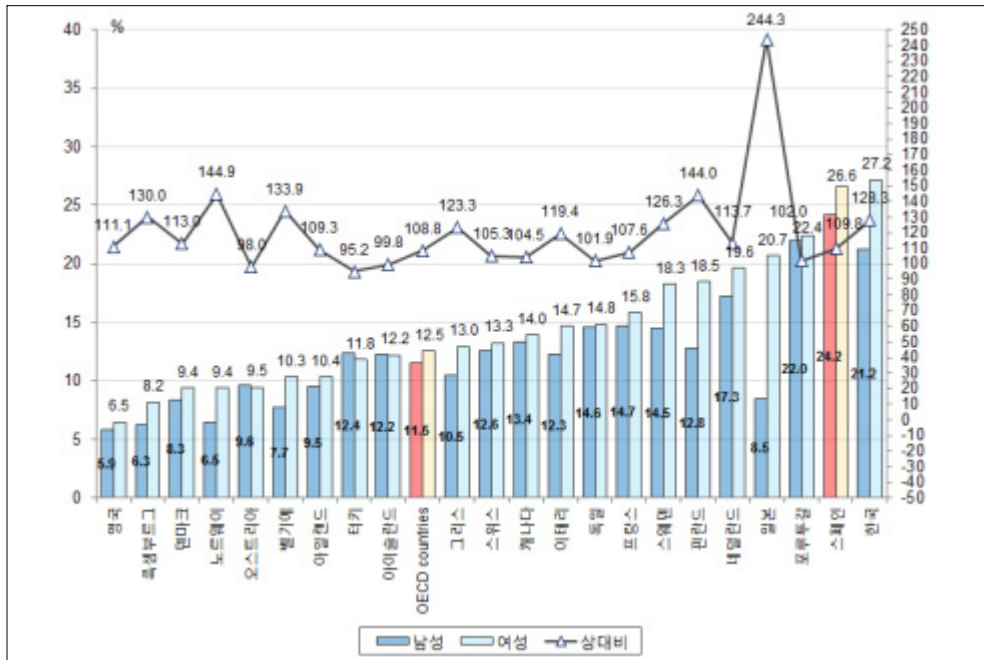
남녀근로자의 고용안정성을 나타내는 상용근로자 추이를 보면 남성 상용근로자는 2006년 5,588천명에서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2010년에 6,666천명, 2011년 6,922천명이었다. 즉, 2006년 이후 남성 상용근로자는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2006년에 전년대비 2.0%, 2008년 4.3%, 그리고 2010년과 2011년에 각각 5.2%, 3.8% 증가율을 보였다. 여성 상용근로자도 2006년 2,439천명에서 2010년 3,421천명, 2011년 3,739천명으로 증가하였다. 그리고 여성 상용근로자 증가율은 남성보다 훨씬 높아서 2006년 전년대비 7.3%, 2010년 12.1%, 2011년 9.3% 증가하였다.

이에 따라 남녀근로자 중에서 상용근로자가 차지하는 구성비도 크게 증가하여, 남성은 2006년 62.2%에서 2008년 64.8% 그리고 2010년과 2011년에는 68.4%, 69.4%를 나타내었다. 이에 비해 여성의 상용근로자 구성비는 2006년 39.8%에서 2008년 43.0%, 그리고 2010년과 2011년에 각각 47.3%, 50.3%로 증가하였다. 그 결과 남녀 상용근로자 구성비의 격차는 지속적으로 축소되었으나, 2011년 현재 여전히 여성 상용근로자 구성비는 남성보다 훨씬 낮은 특징을 보이고 있다.

우리나라와 OECD 회원국의 상용근로자 상대개념인 임시근로자의 구성비를 비교하면 [그림 IV-12]와 같았다.³⁴⁾ 남녀 취업자 중에서 임시직 구성비의 OECD 회원국 평균은 각각 11.5%, 12.5%로서, 여성 임시직이 남성보다 약간 더 높았다. 국가별로 여성 임시직 구성비를 보면 영국이 6.5%로 분석대상 국가 중에서 가장 낮았고, 그 다음은 룩셈부르크, 덴마크, 노르웨이, 오스트리아 등으로 10.0% 미만이었다. 이에 비해 우리나라의 여성 임시직 구성비는 27.2%로서 분석대상 국가 중에서 가장 높았다. 우리나라 다음은 스페인, 포르투갈, 일본, 네덜란드 등의 순이었다.

34) 주요 OECD 회원국의 임시직(temporary employment)은 고용계약기간이 정해진 근로자로서 기간제근로자, 파견근로자, 계절근로자, 호출근로자, 일용근로자 등을 포괄하고 있는 개념임. OECD 회원국의 상용근로자, 임시·일용근로자의 자료출처는 OECD Online Employment Database: www.oecd.org/employment/database, 용어정의는 www.oecd.org/dataoecd/13/57/43103377.pdf. 참조.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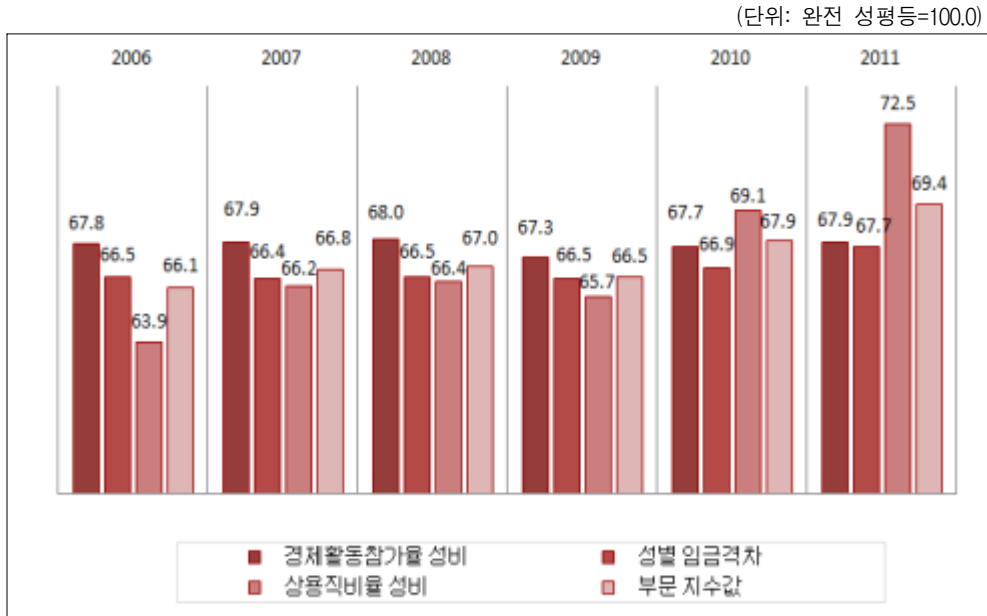
자료: Data extracted on 28 Aug 2012 01:04 UTC (GMT) from OECD.Stat.

[그림 IV-12] 주요국의 남녀 임시근로자 구성비 (2011년)

남녀 임시직 구성비의 차이를 보기 위해서 남성 임시직 구성비를 '100.0'으로 두고 남녀 임시직 구성비의 상대비(여성 임시직 구성비/남성 임시직 구성비 × 100)를 산정하였다. 산정된 결과를 보면 터키, 오스트리아, 아이슬란드는 상대비가 100.0미만으로 남성 임시직 비율이 여성보다 더 높았다. 이에 비해 여성 임시직비율이 남성보다 높은 국가로는 일본(244.3), 노르웨이(144.9), 핀란드(144.0) 등이 있었다. 우리나라는 성별 임시직 비율의 상대비가 128.3으로 OECD 회원국 평균 108.8보다 높아서, 상대적으로 남성보다 여성의 임시직비율이 높은 국가에 속했다. 즉, 다른 나라와 남녀근로자의 고용안정성을 비교한 결과에 의하면, 우리나라는 여성의 고용안정성이 남성보다 훨씬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이 최근 우리나라 상용직 남녀근로자의 변화 추이를 보면 상용근로자 성비의 지표 값은 2009년 글로벌 금융위기로 인해서 일시적으로 65.7로 하락한 이후, 2010년에는 69.1로 다시 상승하였고 2011년에는 72.5로 크게 상승하였다.

즉, 고용안정성 측면에서의 성평등이 최근 2년 동안 크게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다른 OECD 회원국과 비교하면 상대적으로 고용안정성에서의 성평등수준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IV-13] 경제활동부문 성평등지표 값 변화 추이

마. 의사결정부문

의사결정부문의 성평등수준은 2006~2009년 동안 지속적으로 개선되었으나, 2009년 19.8을 기점으로, 2010년 19.7, 2011년 19.3으로 악화되었다. 개별 성평등지표별로 보면, 먼저 국회의원의 성비는 2004년에 전체 국회의원 당선자 299명 중에서 여성이 39명이었다. 그러나 2008년에는 전체 299명 중에서 여성이 41명으로 여성비율이 13.7%로 소폭 개선되었다. 2008년 이후에는 보궐선거 혹은 전국구 의원승계 등으로 인해서 여성비율이 변화되어, 2009년 여성국회의원이 42명(여성비율이 14.0%), 2010년 44명(14.7%) 그리고 2011년 45명(15.1%)으로 증가하였다.

2011년 기준으로 우리나라 국회의원 중 여성비율은 15.1%이다. 이와 같은 수준은 [그림 IV-14]에서와 같이 전세계 국가 평균 19.5%, 유럽연합 24.2%, 아시아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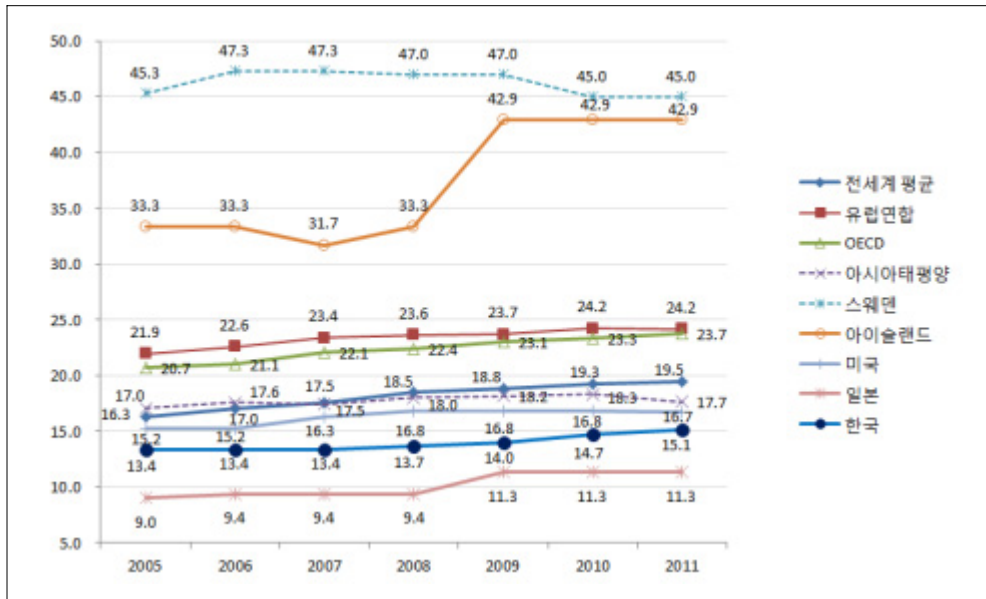
평양 국가 평균 17.7%보다 낮은 수준이다. 또한 우리나라의 여성 국회의원 비율을 34개 OECD 회원국과 비교하면, OECD 회원국 중에서 여성비율이 40% 이상인 국가로는 스웨덴(45.0%), 아이슬란드(42.9%), 핀란드(42.9%)이었다. 30%대는 노르웨이(39.6%), 네덜란드(39.3%), 벨기에(39.3%), 덴마크(38.0%), 스페인(36.6%), 뉴질랜드(33.6%), 독일(32.8%) 등이었다.

이 외에도 20%대인 국가가 스위스(29.0%), 오스트리아(27.9%) 등을 비롯하여 11개 국가이었고, 10%대가 우리나라를 포함해서 12개 국가이었다. 10% 미만인 국가는 헝가리로 9.1%이었다. 이와 같이 34개 국가 중에서 우리나라는 28위로 헝가리, 일본(11.3%), 터키(14.2%)보다는 높으나 아래에서 일곱 번째로 여성의원 비율이 낮은 국가이다. 즉, 의사결정직의 성평등수준이 다른 OECD 회원국에 비해서 상당히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국제의원연맹(IPU) 자료에 의하면 우리나라 국회의원 중 여성의원 비율(14.7%)의 국가순위는 187개 국가 중에서 100위로 상당히 낮았다. 2011년 국회의원 중 여성비율이 가장 높은 국가는 르완다로서 56.3%이고, 3위는 스웨덴(45.0%), 42위 베트남(24.4%), 51위 싱가포르(22.2%), 61위 중국(21.3%), 80위 방글라데시(18.6%), 95위 태국(15.8%) 등이었다.³⁵⁾ 이와 같이 국회의원의 여성비율은 2011년에 다소 증가됨에 따라 정치부문의 의사결정직 성비를 나타내는 지표 값도 다소 개선되었다. 즉, 2006년 14.6에서 2008년 15.5로 소폭 상승하였고, 2010년 17.1 그리고 2011년 17.3으로 지속적인 개선을 보였다.

35) IPU, PARLINE database.

(단위: %)



[그림 IV-14] 주요국의 국회의원 여성비율 변동 추이

정부부문의 의사결정직 지표인 5급 이상 공무원 현황을 보면 여성의 경우 2006년 2,487명에서 연도별로 등락을 보이면서 증가하였다.³⁶⁾ 즉, 2007년 2,920명으로 증가하였다가 2008년 일시적으로 2,724명으로 하락한 이후, 다시 증가하기 시작하여 2010년 3,348명, 2011년 3,720명이었다.³⁷⁾ 남성 5급 이상 공무원도 2006년 33,255명에서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2008년 35,624명이었다. 2009년에는 33,265명으로 감소하였으나, 2010년 33,727명, 2011년에는 33,983명으로 증가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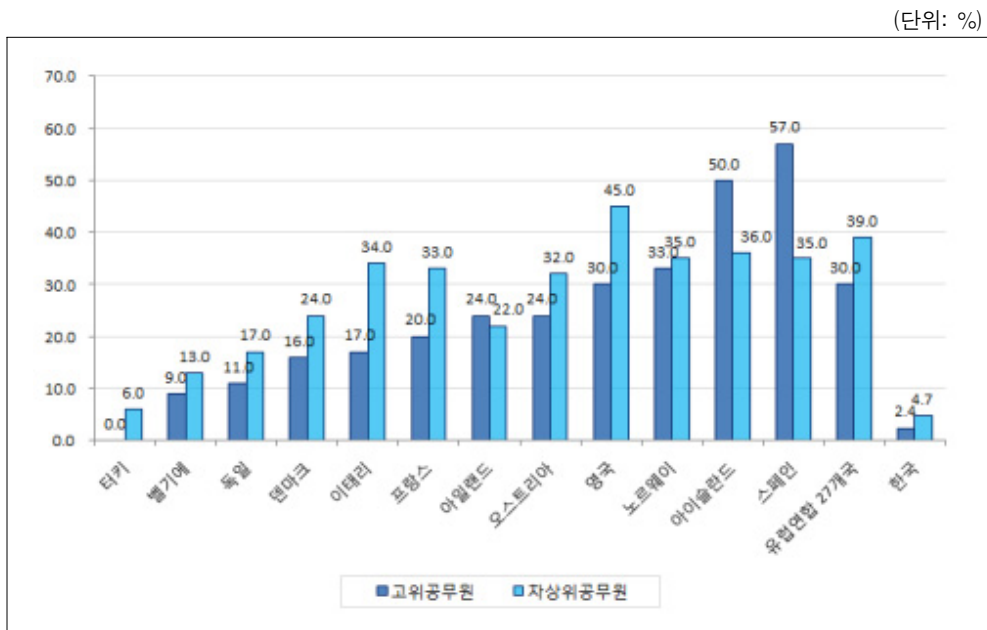
2005년 이후 남녀 5급 이상 공무원 증감률을 보면, 2008년에 여성은 -6.7%로 감소한 반면에 남성은 2.8% 증가하였다. 이에 따라 5급 이상 공무원의 여성비율은 2005년 6.3%, 2006년 7.0%, 2007년 7.8%으로 증가하다가, 2008년에 7.1%로 소폭 하락하였다. 2009년 이후에도 5급 이상 여성공무원 증가율은 11% 전후로 남성보다 훨씬 높았으며, 2011년에도 여성증가율은 11.1%인데 비해서 남성은 0.8%에 불과하였다. 이에 따라 5급 이상 공무원의 여성비율도 2009년 8.3%, 2010

36) 공무원은 전체 공무원 즉, 행정부, 입법부, 사법부, 헌법재판소를 포괄하는 국가공무원과 지방공무원을 포함하는 전체 공무원을 나타냄.

37) 행정안전부(2012), 『2011년도 행정부 국가공무원 인사통계』.

년 9.0%, 그리고 2011년 9.9%로 증가하였다.

우리나라와 유럽국가의 행정부처 공무원 중 여성비율을 비교해보면 [그림 IV-15]와 같다. 비교대상 직급은 각 부처 행정직 중에서 최상위직급(highest level of administrative (non-political) positions)과 그 다음 상위직급(second level) 공무원 중 여성비율이다. 우리나라 고위공무원과 3급 공무원 중 여성비율은 각각 2.4%, 4.7%이었다.³⁸⁾ 이에 비해 유럽연합 27개 평균을 보면 고위공무원 및 차상위공무원 여성비율이 각각 30.0%, 39.0%로 우리나라보다 훨씬 높았다.



자료: 유럽연합 통계DB, Data collected between 30/06/2011-18/10/2011.

[그림 IV-15] 의사결정직 공무원의 여성비율 국제비교

행정부처 의사결정직 여성비율이 우리나라와 비슷한 국가는 터키로서 고위공무원 및 차상위공무원 여성비율이 각각 0.0%, 6.0%이었고, 유럽국가 중에서 동비율이 낮은 국가인 벨기에도 각각 9.0%, 13.0%이며 독일도 11.0%, 17.0%이었다.³⁹⁾ 즉, 우리나라는 5급 이상 공무원 중 여성비율이 점진적으로 증가해왔으나,

38) 국가공무원 기준임. 국가와 지방을 모두 합하면 각각 2.2%, 4.6%임.

39) 차상위직급 여성비율이 높은 국가로는 슬로바키아 78.0%, 루마니아 61.0%, 포르투갈

주요 선진국에 비해서 행정부처 의사결정직에 있는 여성비율이 상당히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5급 이상 공무원 성평등지표 값은 2006년 이후 2008년 일시적으로 하락하였으나, 2009년, 2010년, 2011년에는 지속적으로 상승하였다. 그러나 주요 선진국과 비교한 결과에서 나타났듯이 행정부문의 성평등지표 값은 15.3으로 다른 부문에 비해서 상당히 낮은 수준을 나타내었다.

민간기업과 전체 공기업의 의사결정직 성평등을 나타내는 지표를 보면, 민간기업 부문의 과장급 이상 관리자는 2006년 166천명에서 2008년 254천명으로 지속적으로 증가하였다. 그러나 글로벌 금융위기 여파로 인해서 관리자 수가 2009년 230천명으로 일시적으로 하락한 뒤에 2010년 270천명, 2011년 287천명으로 다시 증가하였다.⁴⁰⁾ 이를 성별로 구분해서 살펴보면 남녀관리자 추이는 비슷하였다. 즉, 여성관리자는 2006년 15천명에서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2008년 36천명까지 증가하였다가, 2009년 29천명으로 감소, 2010년 35천명으로 증가, 그리고 2011년 33천명으로 다시 감소하였다. 남성 또한 2006년 이후 2008년까지 지속적으로 증가하다가, 2009년 일시적으로 201천명으로 하락한 이후 다시 증가하여 2010년 236천명, 2011년 254천명이었다.

남녀관리자의 증감률을 보면 2009년 여성관리자 감소율이 -18.0%인데 비해서 남성은 -8.3%로, 여성관리자의 감소율이 남성보다 훨씬 컸다. 2010년에는 남녀관리자가 모두 증가하였으나, 여성관리자 증가율이 17.7%로 남성의 17.5%보다 약간 더 높았다. 그 결과 2010년 관리자 중 여성비율은 12.8%로 2009년과 동일하였다. 그러나 2011년에는 여성관리자는 3.9% 감소하였는데 비해서 남성은 7.7%로 증가함에 따라 여성비율이 2010년 12.8%에서 11.6%로 하락하였다.⁴¹⁾ 민간기업의 관리자 지표 값은 관리자 성비를 남녀근로자 성비 역수로 조정하여 산정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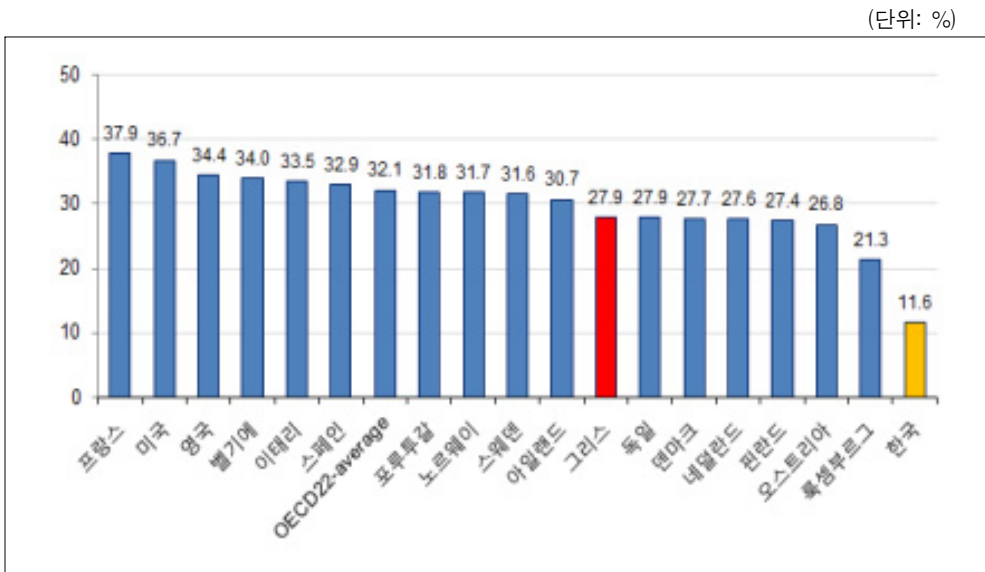
48.0%, 에스토이나 48.0% 등이 있음.

40) 2012년에 발표하는 적극적고용개선조치제도의 근로자 및 관리자 현황은 2011년 말 기준 남녀근로자 및 관리자 현황을 나타내기 때문에, 2011년 성평등지수 산정은 2012년도에 발표된 자료를 사용함.

41) 본 연구의 관리자 중 여성비율은 다른 지표의 산정방법과 동일하게 ‘전체 사업체 평균 관리자 수에 대한 평균 여성관리자 비율’임. 이에 비해 고용노동부 적극적고용개선제도의 여성관리자비율은 개별 사업체 여성관리자 비율을 평균하여 산정함. 적극적고용개선제도가 이와 같이 산정방법을 사용하는 것은 개별기업단위로 여성근로자 및 관리자 비율을 개선하는 제도 목적에 따른 것임.

면, 성평등지표 값은 2010년 28.3에서 2011년 25.4로 하락하였다.

우리나라 민간기업의 여성관리자 비율을 주요 OECD 회원국과 비교하면 [그림 IV-16]과 같다. OECD 회원국의 상당수는 여성 관리자비율이 30%를 넘어서 22개 OECD 회원국의 평균 여성관리자 비율은 32.1%이었다. 분석대상 국가 중에서 여성관리자 비율이 높은 국가로는 프랑스(37.9%), 미국(36.7%), 영국(34.4%) 등이었다. 그리고 상대적으로 낮은 국가로는 룩셈부르크(21.3%), 오스트리아(26.8%), 핀란드(27.4%) 등인데, 이들 국가도 여성관리자 비율이 20% 이상이었다. 이에 비해 우리나라는 11.6%로 주요 선진국에 비해서 민간부문 의사결정직에 여성참여가 상당히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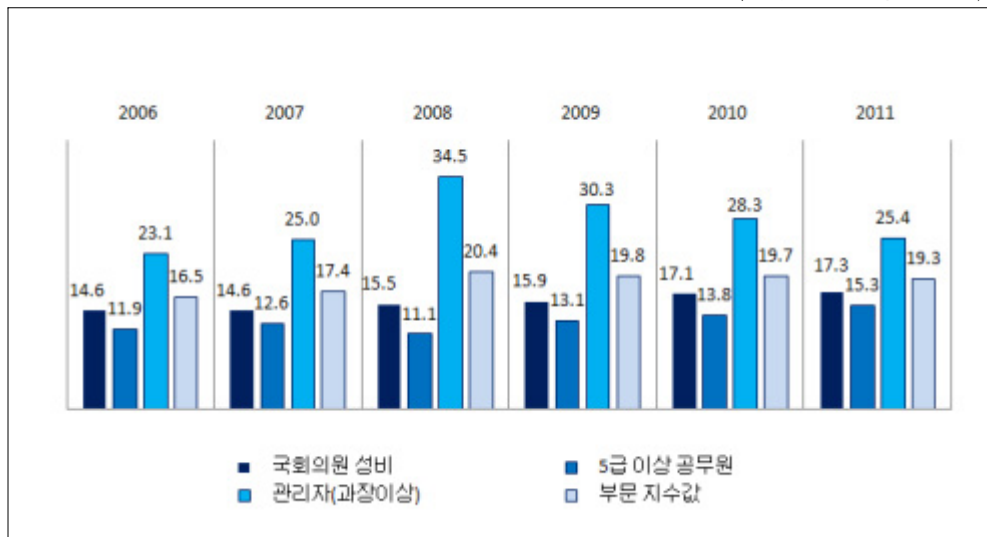
자료: 미국은 2009년(Current Population Survey), 나머지 OECD 회원국은 2007년(ELFS), 한국은 2011년 기준 자료임.

[그림 IV-16] 관리책임을 가진 관리자 중 여성비율

2011년 우리나라 민간기업 관리자 성비의 성평등지표 값은 25.4로 의사결정직 부문의 또 다른 성평등지표인 5급 공무원 중 여성비율의 15.3, 국회의원 여성비율의 17.3보다는 상대적으로 높았다. 그러나 민간부문 의사결정직부문 성평등수준을 다른 나라와 비교하면 상당히 불평등한 것으로 나타났다.

의사결정직의 전체 성평등지표 값은 2006년 16.5에서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2008년 20.4이었으나 2009년, 2010년에는 민간부문 관리직 성비 하락 등으로 인해서 연이어서 19.8, 19.7로 하락하였다. 그리고 2011년에도 19.3으로 하락하였다. 즉, 성평등지수를 구성하는 전체부문 중에서 의사결정직 부문의 성불평등이 가장 심했고, 최근에는 성평등수준이 오히려 악화되는 추이를 보여주고 있다.

(단위: 완전 성평등=100.0)



[그림 IV-17] 의사결정부문 성평등지표 값 변화 추이

바. 교육·직업훈련부문

교육·직업훈련부문 성평등수준은 2006년 이후 지속적으로 개선되었다. 2011년에도 성평등수준이 개선되어 지수 값이 2010년 76.7에서 78.1로 상승하였다. 교육부문의 성평등지표를 보면 여성의 평균교육연수는 2000년 9.8년, 2005년 10.5년 그리고 2010년에는 10.9년으로 증가하였다. 이에 비해 남성은 같은 기간에 각

각 11.5년, 12.0년 그리고 12.4년으로 증가하였다. 전체적으로 남성의 평균 교육 연수는 여성보다 길었다. 그러나 교육연수 증가율을 보면 2000~2005년 동안 남녀 각각 4.3%, 7.1%, 2005~2010년에는 각각 3.3%, 3.8%로 여성의 증가율이 더 높았다. 이에 따라 평균 교육연수의 성평등수준을 나타내는 지표 값은 2006년 87.5에서 2011년 87.9로 증가하는 등과 같이 성불평등이 개선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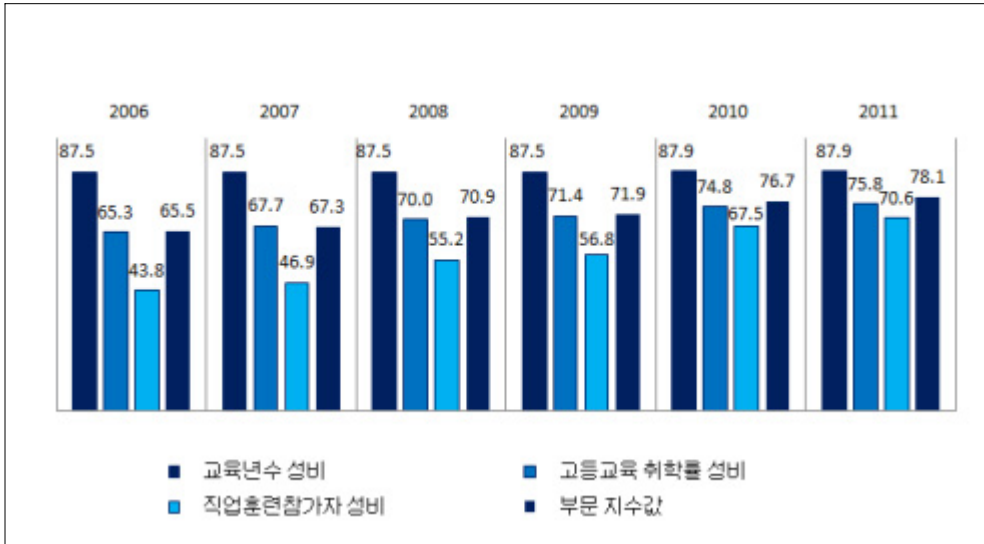
우리나라의 학교급별 취학률을 보면 2010년 초등학교 남성취학률은 106.0%, 여성 104.9%이고, 중등학교는 각각 97.6%, 96.5%로 초등학교와 중등학교 남녀 취학률은 큰 차이가 없다.⁴²⁾ 이에 따라 우리나라 교육부문 성평등수준을 파악하기 위한 지표로는 고등교육기관 취학률을 사용하였다. 고등교육기관 여성취학률(gross enrollment rate)은 2005년 72.8%이었는데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2008년 82.3%, 2010년 86.4% 그리고 2011년에는 89.6%이었다. 남성취학률도 2005년 114.8%에서 증가하여 2008년 117.7%, 2010년 115.5% 그리고 2011년에는 118.2%이었다.⁴³⁾ 고등교육기관 남녀 취학률이 2005년 이후 지속적으로 증가했지만, 취학률 증가율을 보면 전반적으로 여성 취학률 증가율이 남성보다 더 높았다. 즉, 2005~2008년 취학률 증가율은 남녀 각각 1.0~4.6%, 2.1~5.9%이고 2009년에는 각각 -1.9%, 0.1%이었고, 2011년에는 각각 2.4%, 3.8%이었다. 이에 따라 고등교육 취학률의 성평등지표 값은 2010년 74.8에서 2011년 75.8로 증가하였다.

재직자직업훈련 지표를 보면 재직자직업훈련에 참여한 여성근로자는 건수를 기준으로 2006년 699천 건에서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2009년 1,449천 건이었으나, 2010년부터 하락하기 시작하여 2010년 1,412천 건, 2011년 1,142천 건이었다. 재직자직업훈련에 참가한 남성근로자도 2006년 2,177천 건에서 2009년 3,481천 건으로 증가하였다. 그러나 남성도 2010년부터 하락하여 2010년, 2011년 각각 2,818천 건, 2,172천 건이었다.

42) 취학률은 조취학률(Gross Enrollement Ratio)이고, World Bank DB 자료임. <http://databank.worldbank.org/ddp/home.do?Step=3&id=4>.

43) 고등교육기관 취학률은 총취학률(Gross Enrollement Ratio)이고, 「고등교육기관 재학생(휴학생 포함)/만 18~21세 인구」로서 산정함.

(단위: 완전 성평등=100.0)



[그림 IV-18] 교육·직업훈련부문 성평등지표 값 변화 추이

재직자직업훈련을 이수한 여성근로자는 남성에 비해서 훨씬 작으나, 훈련을 이수한 여성근로자 비율의 증가율이 남성보다 훨씬 높거나 혹은 2010년부터는 하락률이 낮아서 훈련참가자 성비는 지속적으로 증가하였다. 즉, 2011년에 재직자직업훈련에 참여한 남성근로자는 전년에 비해서 -22.9% 감소하였다. 이에 비해 여성근로자도 감소하였으나 감소율이 -19.1%로 남성보다는 낮았다. 그 결과 재직자직업훈련 지표 값이 2010년 67.5에서 2011년에는 70.6으로 상승하였다.

교육·직업훈련부문의 성평등지표 값은 2010년 76.7에서 2011년 78.1로 상승하였다. 이를 구성 지표별로 보면 전체적으로 지표 값이 상승하였으나, 재직자 직업능력개발의 성평등수준이 가장 많이 개선되었다. 그리고 고등교육기관 취학률의 성평등수준도 소폭 개선되었다.

사. 문화·정보부문

문화·정보부문 성평등수준은 2006년에 비해 2007년, 2008년 급격히 개선되었다. 그러나 2009년부터 다시 성평등수준이 악화, 2010년 74.1로 개선 그리고 2011년에는 73.6으로 다시 악화되는 추이를 보였다. 문화·정보부문 성평등지표인 문

화콘텐츠산업 종사자의 성비를 보면, 2005년 문화산업 남성종사자는 272천명, 여성 179천명으로 남성이 더 많았다.⁴⁴⁾ 문화산업 남성종사자 수는 2006년에 감소하였다가, 2007년부터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이를 보여 2009년 297천명, 2010년 304천명이었다. 이에 비해 여성종사자는 2005~2007년 동안에는 지속적으로 증가하였으나, 2008년 일시적으로 하락하였다. 그리고 2009년부터 다시 증가하는 추이를 보였다. 즉, 문화산업 여성 종사자는 2005년 179천명에서 2007년 220천명으로 증가한 이후, 2008년 203천명으로 하락하였다. 이후 2009년 216천명, 2010년 221천명으로 증가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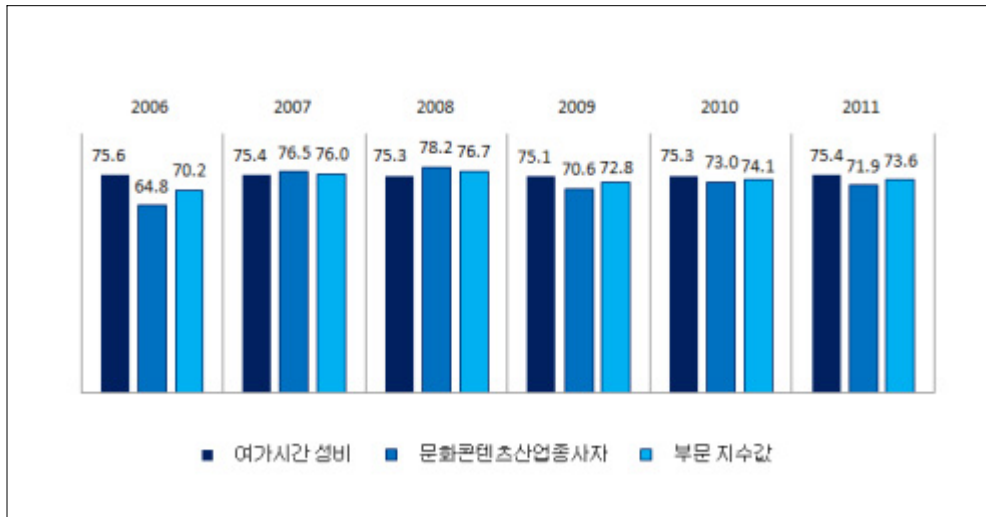
이와 같은 문화콘텐츠산업 종사자의 변동추이를 보면 2009년 남녀 증감율이 각각 4.2%, 6.2%로 여성이 높았으나, 2010년에는 2.6%, 2.2%으로 남성증가율이 여성보다 높았다. 그 결과 2010년 문화산업 남녀종사자 성평등지표 값이 상승하여 성평등수준이 개선되었으나, 2011년에는 지표 값이 하락하여 성평등수준이 악화되었다.

또 다른 문화·정보부문의 개별 성평등지표를 보면, 남성 취업자의 여가시간은 2004년 1일 평균 4시간 25분, 비취업자 8시간 42분이었다. 이에 비해 여성 취업자는 3시간 41분, 비취업자는 6시간 17분으로 취업여부에 관계없이 남성보다 여가시간이 짧았다. 2009년의 남성 여가시간을 보면, 취업자는 4시간 11분, 미취업자는 8시간 23분으로 2005년에 비해서 줄어들었다. 또한 여성도 취업자 3시간 23분, 미취업자도 6시간 3분으로 줄어들었다. 이러한 여가시간의 감소율을 보면 여성이 남성보다 더 커서, 여가시간의 성불평등은 더욱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2009년까지 남녀 여가시간 변화를 감안하면 2011년에 남성 여가시간은 소폭 감소하는데 비해, 여성은 거의 동일하며 지표 값은 약간 상승하였다.

그러나 문화·정보부문의 두 개의 성평등지표 값 변화를 보면, 2011년 문화산업 종사자 지표 값의 하락이 여가시간 지표 값 증가보다 더 커서 전체적으로 지표 값이 2010년 74.1에서 73.6으로 하락하였다.

44) 문화산업 종사자는 출판, 만화, 음악, 게임, 영화, 애니메이션, 방송, 광고, 캐릭터 종사자를 합산하여 산정함. 2007년부터 문화산업 종사자에 지식정보와 콘텐츠솔루션 종사자도 포함시키고 있으나, 통계의 시계열 유지를 위해서 이 두 부문에 종사하는 취업자는 제외시켰음.

(단위: 완전 성평등=100.0)



[그림 IV-19] 문화·정보부문 성평등지표 값 변화 추이

아. 안전부문

안전부문 성평등수준은 2006년 59.4에서 연도별로 등락을 보였으나, 2008년 61.3부터는 지속적으로 하락하여 2011년에는 53.0을 나타내었다. 개별 성평등지표인 범죄위험으로부터 사회 안전에 대한 인식도를 보면 여성 중에서 안전하다고 인식하는 여성비율은 32.2%이고, 남성은 41.5%이었다.⁴⁵⁾ 이와 같은 통계를 이용하여 안전관련 성평등지표 값을 산정하면, 2006년 65.3에서 2009년 73.5 그리고 2010년 77.9로 지속적으로 증가하였다. 즉, 범죄관련 안전도에 대한 성평등수준이 개선되고 있었다.⁴⁶⁾

45) 성평등지표와 관련된 통계생산은 2005년, 2008년 주관적인 범죄피해에 대한 두려움에 대한 조사항목으로 조사하였으나, 2010년 범죄와 관련된 우리 사회 안전 인식정도에 대한 항목으로 변경됨에 따라, 2011년부터 지표를 변경하였음. 이에 따라 2005~2009년까지는 전자의 지표를 산정하여 지표 값을 사용하고, 2010~2011년 분석에서는 후자의 지표를 사용함.

46) 우리 사회의 안전도를 비교하기 위해서 야간보행의 두려움을 느끼는 인구비율을 주요 선진국과 비교하면, 우리나라는 2008년 40.8%가 두려움을 느낀다고 함. 이에 비해 OECD 25개 회원국의 야간보행에 두려움을 느낀다는 평균 인구비율은 25.7%에 불과함. 아이슬란드는 6.0%, 노르웨이와 핀란드는 각각 14.0%, 일본 35.0%, 미국 19.0%, 영국 31.0%이었음. 그리고 그리스만 유일하게 42.0%로 우리나라보다 높았음. Van Dijk J,

안전부문의 또 다른 지표인 강력범죄(흉악) 피해자 수를 보면, 여성피해자 수가 2005년 14,847건이었으나, 이후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2008년 17,479건, 2009년 19,254건 그리고 2010년 20,930건으로 증가하였다. 이에 비해 남성피해자는 전반적으로 여성피해자보다 훨씬 적었으나, 여성피해자와 마찬가지로 2005년 3,736건에서 2008년 4,712건, 2009년 5,649건으로 증가하였다. 그러나 2010년에는 여성과는 달리 4,403건으로 감소하였다. 2005~2010년 동안 남녀 흉악범죄 피해자 증감률을 보면 2007년과 2009년을 제외하고 여성피해자 증가율이 남성보다 훨씬 높았다. 특히 2010년 여성 흉악범죄 피해자 증가율은 8.7%인데 비해서, 남성은 오히려 -22.1%로 감소하였다. 그 결과 강력범죄 피해자 성비는 2009년 34.9에서 2010년 28.2로 크게 악화되었다.⁴⁷⁾

우리나라 2010년 강력범죄(흉악)의 범죄유형별 남녀피해자는 보면 여성 피해자의 85.3%(17,858건)은 성폭행 피해자였고, 그 다음은 강도 9.4%(1,976건), 방화 3.0%(631건), 살인 2.2%(465건)이었다. 이에 비해 남성 피해자는 강도 45.3%(1,996건), 방화 22.8%(1,005건), 성폭행 15.9%(702건), 살인 15.9%(700건)이었다. 성폭행 피해자는 제외하면 남녀 피해자는 각각 3,701건, 3,072건으로 비슷하였다. 또한 강력범죄(흉악) 피해자 중에서 가장 많은 (강간)성폭력자 피해자 추이를 보면, 우리나라 성폭력 여성피해자는 2002년 5,693건에서 2010년 17,858건으로 3배나 증가하였는데, 남성피해자도 2002년 341건에서 증가하는 추이를 보여 2010년 702건으로 2배로 증가하였다.

우리나라와 일본의 (흉악)강력범죄 여성 피해자 추이를 비교하면, 먼저 우리나라 형법범 여성피해자 수는 2002년 137천 건에서 2010년 260천 건으로 두 배 이상 증가하였다. 이에 비해 일본은 동 기간에 835천 건에서 426천 건으로 반으로 줄어들었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 형법범 여성피해자 수는 2002년 일본의 1/4 수준이었으나, 2010년에는 오히려 일본의 2배 정도로 많아졌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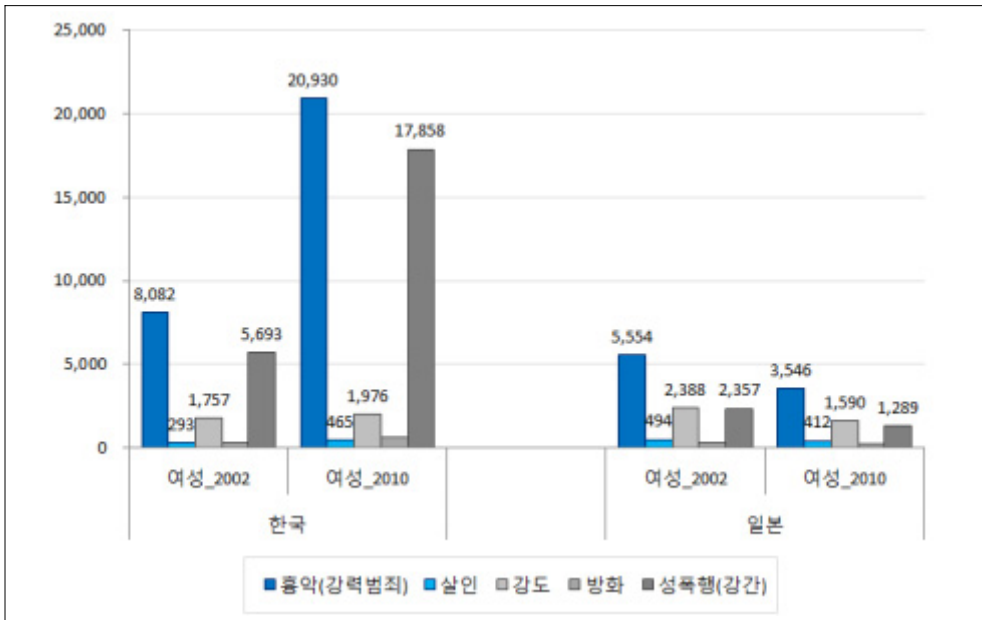
성평등지표의 통계인 흉악범 여성피해자를 보면 [그림 IV-20]에서 보는 바와

J. Van Kesteren and P. Smit Paul(2008).

47) 그리고 강력범죄의 유형을 보면 2009년 여성피해자 19,254명 77.7%인 14,954명이 강간 피해자로 가장 많음. 그러나 여성피해자 증가율이 가장 높은 범죄는 강도로 2008년에 비해 33.3%(2009년 여성피해자 3,041명)가 증가하였고, 그 다음은 살인피해자로 27.5%(570명)임. 여성피해자 증가규모도 강간이 860명 증가한데 비해서 강도 760명, 살인이 123명으로 상대적으로 많이 증가함.

같이 2002년 우리나라 여성피해자는 2002년 8천 건에서 2010년 21천 건으로 증가한 반면에, 일본은 같은 기간에 5.5천 건에서 3.5천 건으로 감소하였다. 이에 따라 2010년 우리나라 흉악범 여성피해자 수는 일본의 6배 정도로 많아졌다. 우리나라는 흉악범 죄종(罪種)에 관계없이 전반적으로 여성피해자 수가 크게 증가하였으나, 일본은 전체적으로 감소하였다. 특히 (강간)성폭행 피해자 수를 보면 우리나라는 2002년 5,693건에서 2010년 17,858건으로 크게 증가한 반면에, 일본은 2002년 우리나라의 반 정도인 2,357건에서 2010년에는 크게 감소하여 1,289건이었다. 그 결과 2010년 기준 우리나라 (강간)성폭행 피해자 수는 일본의 약 14배가 되었다.

(단위: 건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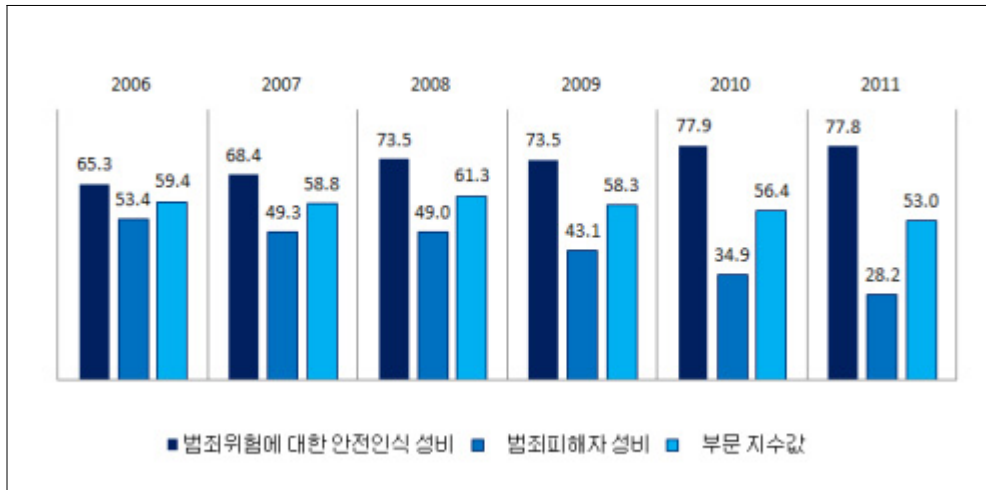
자료: 한국: 대검찰청(2003, 2011), 『범죄분석』, 일본: 警察廳(2002, 2012), 『平成 14年の 犯罪』, 『平成 22年の 犯罪』 자료 참조하여 작성함.

[그림 IV-20] 한국과 일본의 흉악범 여성피해자 비교

강력범죄(흉악) 피해자를 기준으로 산정하는 강력 범죄로부터 안전도에 대한 지표는 앞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다른 지표 값의 산정방식과는 달리 단순히 성격차(Gender gap)로 산정하지 않고, 성격차와 함께 지표 수준이 반영되도록 하

였다. 이에 따라 강력 범죄로부터 안전도에 대한 지표 값은 강력범죄 피해자의 성격차가 개선되거나 혹은 강력범죄 피해자가 감소되면 증가하게 된다. 그 결과 2010년 (홍악법)강력범죄 피해자의 성평등지표 값은 여성피해자 증가율이 남성 증가율보다 낮으나, 강력범죄 피해자가 크게 증가함에 따라 성평등지표 값이 전년에 비해서 하락하였다. 동 지표 값은 2011년에도 여성피해자 증가율은 전년보다는 낮으나 8.7% 증가한데 비해서, 남성은 오히려 22.1% 감소함에 따라 하락하였다. 그 결과 2010년에 이어서 2011년에도 강력 범죄로부터 안전도와 관련된 성평등수준은 악화되었다.⁴⁸⁾

(단위: 완전 성평등=100.0)



[그림 IV-21] 안전부문 성평등지표 값 변화 추이

이에 따라 안전부문 성평등수준은 2005년 이후 범죄피해에 대한 두려움을 느끼는 인구비율을 보면 지표 값이 소폭 하락하였고, 강력범죄 여성 피해자가 급격히 증가하고 2005년 이후 여성피해자 증가율이 남성보다 훨씬 높은 기간이 많음에 따라, 강력 범죄로부터 안전도에 대한 지표 값은 지속적으로 하락하였다. 그 결과 안전부문의 성평등수준은 전년에 비해서 상당히 악화되었다.

48) 강력범죄로 부터의 안전과 관련된 성평등지표 값 산정은 기준 연도보다 한 해 이전의 통계를 사용함.



국제성평등지수와 한국의 성평등 위치

1. 국제성평등지수의 비교 분석	105
2. 국제사회에서 한국의 성평등 위치	136
3. 국제성평등지수의 한국 순위 제고방안	151

1. 국제성평등지수의 비교 분석

국제성평등지수의 첫 등장은 제4차 세계여성대회가 개최되기 직전인 1995년이다. 이 해 유엔개발기구(UNDP)는 성평등을 인간개발에 대한 접근의 평등과 경제적, 사회적, 정치적 의사결정 등 참여 기회의 평등, 보상의 평등 차원에서 접근하여, 남녀평등지수(Gender-related Development Index, GDI)와 여성권한척도(Gender Empowerment Measure, GEM)를 발표한다. GDI와 GEM은 국가간 성평등 점수와 더불어 순위를 제시하였고, 이로 인해 각국은 국제사회에서 자국의 성평등 순위에 관심이 고조되기 시작하였다.

2004년은 Social Watch에서 성평등을 남녀차이의 공정성이란 개념으로 측정하는 성형평성지수(Gender Equity Index, 이하 GEI)를 발표한다.⁴⁹⁾ 이 지수는 성평등 수준을 성 격차로만 측정함으로써, UNDP의 성평등지수가 가진 국가발전 수준의 의존성 문제를 개선한다.

2006년에는 세계경제포럼(World Economic Forum)에서 국가경쟁력의 요인으로 설정한 경제 참여와 기회, 교육 성취, 정치 권한부여, 건강과 생존 영역에서의 성격차를 지수화 하여 성격차지수(Gender Gap Index)를 발표한다. GGI는 GEI와 동일하게 격차로만 측정되지만, 여성 권한만으로 측정되는 지표를 모두 제외하고 오로지 격차로 산정된 성평등 정도에 따라 국가의 순위를 매긴 것이 특징이다.

한편 2009년에는 OECD에서 기존 성평등 수준 측정방법과 전혀 다른 관점의 지수를 제시한다. 이 지수는 사회제도와 젠더지수(Social Institutions and Gender Index, 이하 SIGI)로, 성평등의 측정을 성과지표가 아니라 성 불평등을 초래하는 전통, 사회적 규범, 문화적 관습 등의 투입지표를 활용하였다. 기초 자료는 OECD의 GID 데이터베이스(Gender, Institutions and Development Database)를 활용하여 작성되며, 비교대상 국가는 비OECD, 비EU국가 혹은 1백만 이하 인구국가 중 차별적 사회제도에 대한 자료를 활용할 수 있는 국가에 대해 평가한다.

2010년은 두 개의 성평등지수가 새로 발표된다. UNDP는 기존 GDI와 GEM에

49) 홈페이지(<http://www.socialwatch.org/>)에 현재 공개되어 있는 GEI보고서는 2007년 보고서 공개되어 있고 2004년~2006년 GEI는 2007년 보고서에서 값의 추이만을 제시함.

대한 문제점⁵⁰⁾들이 끊임없이 제기됨에 따라 이를 개선한 성불평등지수(Gender Inequality Index, 이하 GII)를 발표한다. GII은 생식보건, 권한, 노동시장에서 여성의 불이익을 파악하도록 디자인하여, 여성과 남성의 성취 불평등으로 나타나는 인간개발의 손실을 보여주도록 설계되었다. 이 해 발표된 또 다른 지수는 영국 시사주간지 이코노미스트(The Economist) 산하 연구기관인 EIU(Economist Intelligence Unit)에서 발표한 여성경제기회지수(Women's Economic Opportunity Index, 이하 WEOD)이다. 이 지수는 객관적 지표와 주관적 지표를 모두 활용하여 여성 근로자와 고용주의 경제적 환경을 측정한다.

이들 국제성평등지수는 성평등 수준을 측정하는 지표구성이 다를 뿐 아니라 산정방법과 기준 또한 약간 차이가 있다. 이에 지수별로 나타나는 국가별 순위도 서로 다른 문제를 가지고 있다. 이에 본 장에서는 국제성평등지수의 특징을 검토하고 국제성평등지수로 본 한국의 순위를 비교 검토하며, 성평등제고 방안을 제안하고자 한다.

가. UNDP의 GII

1) GII 개발 목적과 특징

GIIn은 발표된 이후 지속적으로 제기된 GDI와 GEM의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개발된 지수이다. GII는 세 개의 영역 즉, 생식건강, 권한, 노동시장 영역의 성불평등 정도를 측정하고 이로 인해 나타나는 인간개발에서의 손실을 보여줄 목적으로 개발되었다.

GIIn은 기존 GDI와 GEM의 한계와 비판을 수용하여 개발되었기에 지표의 선정

50) 첫째, 척도가 절대적인 성취와 상대적인 성취를 모두 포함하고 있음. 따라서 한 국가가 완전한 성평등 수준에 있더라도, 절대적인 소득수준이 낮으면 그 국가의 지수 값이 낮은 문제가 있음. 둘째, GDI는 종종 직접 해석할 수 있는 성평등측도로 오해되고 있음. GDI는 기본적인 인간개발에서 성불평등의 인간개발비용을 보여주는 것이지, 사회에서 남성 대비 여성의 위치를 측정하는 척도가 아님. 셋째, 지표가 측정하고자 하는 개념과 일치하지 않은 문제가 있음. 예를 들어 '법률가, 고위관리직'은 정치적 참여와 의사결정 대신에 경제적 참여와 의사결정을 측정하는데 사용되고 있음. 넷째, GEM의 거의 모든 지표들은 도시 엘리트 중심의 강한 편향(Bias)을 반영하고 있으므로, 후진국에게 보다 적절한 몇 가지 지표들의 사용이 필요하다는 비판이 있음. 다섯째, 지수산정에 있어 각국의 결측 자료를 채우고자 광범위한 대체(Imputation)를 함.

과 지수산정 방법에 있어 차별화 하였다. 지표 선정은 기본적으로 개념적 연관성⁵¹⁾(Conceptual relevance), 해석의 명확성⁵²⁾(Non-ambiguity), 통계의 신뢰성⁵³⁾(Reliability), 가치부가⁵⁴⁾(Value added)를 판단기준으로 하여, 국가의 발전 수준에 의존하지 않는 지표로 이루어졌다. GII의 특징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GII는 기존 지수 추정에서 광범위하게 활용되었던 자료 대체(Imputation)에 의존하지 않는 지표로 구성되어 있다. GDI와 GEM의 지표 중 소득은 절대적 수준을 평가하는 지표로 점수와 순위에 차지하는 비중이 매우 높았음에도 불구하고 대상국가의 3/4 이상은 소득을 추정하여 대체하여 지수를 산정하였다. 특히 소득은 GDI에 있어 HDI와 격차를 가져오는 주된 요인이기 때문에, 이러한 대체는 주요 문제점 중의 하나였다. 이에 GII는 소득수준이 성격차를 평가하는 주요한 지표임에도 지표구성에서 이를 제외하고 있다.

둘째, GII는 국가수준에서 성불평등 수준만을 고려하여 지수 값을 산정하도록 하여, 국가의 발전정도에 영향을 받지 않도록 설계하였다. GII는 핵심영역에서 남녀 불평등으로 인해 발생하는 성취의 손실을 파악한다. 따라서 지수 값은 인간 개발에서 불평등이 전혀 없는 경우 '0'에서, 완전불평등한 경우 '1'까지의 범위를 갖는다.

셋째, GII 산정은 영역간의 불이익이 서로 연관되어 있음을 고려하여 설계되었다. 즉, 영역들이 서로 보완적(Complementarities)임을 고려하여 영역간의 남녀 불평등이 서로 높은 상관관계를 가질 때, 지수 값이 더 커지도록 설계하였다. 예를 들면, 교육부분의 불평등은 취업기회와 밀접한 연관을 가지게 되고, 이는 여성 빈곤으로 이어져 모성사망비 증가 등으로 복합적인 불이익으로 이어지게 된다. 이와 같은 측정방법은 GII의 주요한 특징 중 하나로, 특정 영역의 낮은 성취는 다른 영역의 높은 성취에 의해서 완전하게 보상될 수 없음을 의미한다.⁵⁵⁾

51) 인간개발 정의와 이론과 강력한 관련성. 즉, 지표는 측정하고자하는 개념을 정확히 측정해야함.

52) 해석이 단순해야 한다는 것으로, 각각의 영역에서 지표 값이 높을수록(혹은 낮을수록) 더 좋은 결과를 보여 주어야 함.

53) 정의, 통계의 질, 생산과정 등에서 신뢰성을 가져야 함.

54) 각 지표는 명확히 새로운 정보를 주어야 함.

55) GII는 영역간의 상관관계가 정(+)의 방향으로 연관되어 있다고 가정하고 구축한 지수임. 기존의 국제성평등지수의 경우 성불평등 해소 정책을 어떤 영역이나 지표를 대상으로 추진하여도, 성불평등 개선 정도가 동일하게 나타나는 반면, GII의 경우 어떤 영

2) 지표구성과 자료원

GII는 생식보건, 권한, 노동시장 등 3개의 영역에 5개의 지표로 구성되어 있다. 각 영역별 지표구성을 보면 첫째, 생식건강 영역은 모성 사망률과 청소년 출산율로 구성되어 있다. 다른 영역의 지표들이 남녀를 비교하는데 비해서, 이 영역의 지표는 여성특화 지표로 구성되어 있다. 두 지표의 선정 근거는 산모안전이 여성의 재생산역할과 관련하여 중요한 사회적 문제이며, 출산기의 여성복지가 본질적으로 중요할 뿐 아니라 여성의 사회적 지위를 나타내는 신호이기 때문이다. 출산과 관련한 산모의 사망 위험은 기초교육, 적절한 영양, 피임에 대한 접근성, 의료서비스, 숙련된 출산조력자를 통해서 감소될 수 있다. 이러한 서비스들이 대부분 큰 비용을 수반하지 않음에도, 상당수의 여성들은 이러한 서비스를 받지 못해 사망에 이르고 있다. 특히 청소년 출산율로 측정되는 조기출산은 산모와 아기 건강에 대한 높은 위험과 관련이 있고, 출산여성의 교육중단과 그로 인한 저숙련 일자리 취업으로 이어지는 경향이 있다. 즉, 이 지표는 여성의 건강 악화와 미래의 기회 제한을 측정하기 위해 선정되었다.

〈표 V-1〉 GII의 영역과 지표

영역(차원)	지표	비고
생식건강	모성 사망률	여성의 임신, 분만 및 관련 합병증으로 인하여 출생 10만 명당 사망하는 여성의 수
	청소년 출산율	청소년 출산율은 15~19세 여성인구 1000명 당 출산 수
권한	여성의원비율	국회의원 중 여성비율
	중등학교 이상 교육받은 인구 비율	25세 이상 인구 중에서 중등학교 이상의 교육을 받은 성별 인구 비율
노동시장	경제활동참가율	성별 경제활동참가율

둘째, 권한영역은 여성의원비율과 중등학교 이상의 교육을 받은 인구비율인 두 개의 지표로 구성되어 있다. 여성의원비율은 대부분의 성평등지수에서 선택

역 혹은 지표에 집중하느냐에 따라 정책효과가 다르게 나타남. 이에 따라 정책의 우선순위를 결정하는데 도움이 되는 장점이 있음.

하고 있는 지표이며, 전통적으로 여성의 불이익이 큰 영역이기도 하다. 중등학교 이상의 교육을 받은 인구 비율은 권한영역에서 교육부분의 성불평등을 파악하기 위해 선택된 지표이다. 교육수준은 경제와 정치 등 향후 여성의 지위와 연관되어 있는 지표로서, GII지수는 중등 및 고등교육 성취도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마지막으로 노동시장 영역은 경제활동참가율로 측정하고 있다. GII는 대부분 GDI, GEM, GGI, GEI 등의 지수에서 사용하고 있는 소득변수는 지표에서 제외하고 있다. 이는 소득 통계가 국가별로 충분하지 않고 대부분 추정하여 사용하고 있어 지표 선정에서 제외하였다.

지수산정에 활용된 자료원은 UNICEF(2011), UNDESA(2011), IPU(2011), Barro and Lee(2010), UNESCO(2011), ILO(2011)이다. 지표별로 보면, 모성사망비는 WHO, UNICEF, UNFPA, World Bank (2010)자료를 활용하며, 청소년 출산율은 UN의 UNDESA(2011)에서 자료를 수집한다. 여성의원비율은 IPU의 데이터베이스를 근거로 하며, 중등학교 이상 교육받은 인구 비율은 Barro and Lee(2010)의 자료를 활용하고 있다. Barro and Lee의 자료는 UNESCO 교육통계를 기반으로 추정한 통계이다. 마지막으로 경제활동참가율은 세계은행의 세계개발지표(World Development Indicators)와 ILO의 데이터베이스인 LABORSTA, 그리고 ILO의 노동시장의 주요지표(Key Indicators of the Labour Market) 등에서 수집하고 있다.

〈표 V-2〉 GII의 지표별 자료원

지표	자료원
모성 사망률	세계보건기구(WHO), 유니세프(UNICEF), 국제연합인구기금(UNFPA), 세계은행 (2010)
청소년 출산율	유엔경제사회분과(UNDESA, 2011)
여성의원비율	국제의원연맹 Database(IPU) [www.ipu.org] (2011)
중등학교 이상 교육받은 인구 비율	Barro and Lee (2010b) 추정을 갱신한 HDRO : UNESCO 교육 통계 (2011)와 Barro와 Lee(2010a) 방법론을 기반으로 추정
경제활동참가율	세계개발지수(세계은행) 국제노동기구LABORSTA 데이터베이스(ILO) [http://laborsta.ilo.org], 노동시장주요지표(Key Indicators of the Labour Market, ILO) ; www.ilo.org/kilm/ (2011)

3) 지수산정방법

GII는 여성과 남성간의 불평등을 파악함과 동시에 지표 간 연관에서 변화에 민감하도록 설계하였다. 지수산정은 Atkinson 불평등지수 산정방식을 원용하고 있다. 지수는 성별차이를 균등배분(Equally distributed equivalent)지수⁵⁶⁾로 만드는 과정을 통해 표준화하여 측정하게 된다. 구체적인 지수측정 방법은 다음과 같다.

단계 1은 기하평균을 통해 여성(G_F)과 남성(G_M) 각각에 대해 차원 간 통합을 한다. 이 단계에서 가장 큰 문제점은 '0'과 극단적인 값의 처리이다. 왜냐하면 기하평균은 '0'의 값을 가질 수 없다. 이에 최솟값은 구성 지표 값이 '0'일 경우 0.1%로 값을 설정하였다. 반면 모성사망비는 최솟값 10, 최댓값 1,000을 기준으로 절단하였다. 최대값 1,000의 경우 모성사망비가 1,000을 초과하는 국가는 모성보건과 관련된 환경을 조성하고 지원할 수 있는 능력에서 차이가 없다는 규범적인 가정에 기초한다. 이와 유사하게 출산아 10만 명당 1~10명 사망하는 국가는 동일한 보건상태를 가지고 있다고 가정한다.

$$G_F = \sqrt[3]{\left(\frac{10}{MMR} \cdot \frac{1}{AFR}\right)^{\frac{1}{2}} \cdot (PR_F \cdot SE_F)^{\frac{1}{2}} \cdot LFPR_F}$$

$$G_M = \sqrt[3]{1 \cdot (PR_M \cdot SE_M)^{\frac{1}{2}} \cdot LFPR_M}$$

여기서 MMR=모성 사망률, AFR=청소년 출산율, PR_F =여성의원비율, PR_M =남성의원비율, SE=중등학교 이상의 교육을 받은 여성인구비율, LFPR=경제활동 참가율 이다.

단계 2는 조화평균을 이용하여 여성과 남성 지표를 계산한다.

기하평균의 조화평균은 여성과 남성의 불평등을 측정하고 영역간 연관성을 수정하기 위해 실시한다.

56) 개별지표를 균등배분지수로 만들기 위해서는 불평등에 대한 혐오수준을 정해야함. 불평등혐오수준(ϵ)은 만약에 불평등에 대한 혐오가 없으면 $\epsilon=0$ 으로 설정하며, 혐오가 높을수록 ϵ 값을 높임. GII는 불평등 혐오수준(ϵ)을 GDI 산정 등에서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epsilon=2$ 를 설정하여 계산하고 있음.

$$HARM(G_F, G_M) = \left[\frac{(G_F)^{-1} + (G_M)^{-1}}{2} \right]$$

단계 3은 생식건강, 권한, 노동시장 영역에 대한 산술평균에 대해 기하평균을 계산한다. 동일한 가중치를 사용하여(즉, 남녀를 동일하게 처우함) 남녀 지수 값을 합산함으로써, 불평등정도를 계산함에 있어서 참고수준(Reference standard)을 얻게 되고 그 다음에 영역별로 지수 값을 합산한다. 여기서 참고수준은 영역 내 지표의 산출평균한 후 영역간 동일가중치를 사용하여 기하평균으로 구한다.

$$G_{F, \bar{M}} = \sqrt[3]{\overline{Health} \cdot \overline{Employment} \cdot \overline{Labourmarket}}$$

여기서

$$\overline{Health} = (\sqrt{(10/MMR) \cdot (1/AFR)} + 1)/2,$$

$$\overline{Employment} = \frac{(\sqrt{(PR_F) \cdot (SE_F)} + \sqrt{(PR_M) \cdot (SE_M)})}{2},$$

$$\overline{Labourmarket} = (LPFR_F + LPFR_M)/2 .$$

마지막 단계 4는 $HARM(G_F, G_M)$ 을 $G_{F, \bar{M}}$ 으로 나눈 후 다음의 식으로 성불평등 정도를 산출한다. 이는 Atkinson 지수 산정 방법과 같다.

$$GII = 1 - \frac{HARM(G_F, G_M)}{G_{F, \bar{M}}}$$

4) 지수의 특성 요약

UNDP의 GII 지수 특성을 요약하면 <표 V-3>과 같다.

〈표 V-3〉 GII의 특성 요약

구분		내용	비고
생산기관		UNDP	
생산년도 및 주기		2010년 이후 매년 발표	GDI와 GEM의 대체 지수
지수 측정 관심		- 성취수준의 성불평등 정도	- 생식건강, 권한, 노동시장
지표구성		- 3개 영역에 5개 지표로 구성	
측정 방법	측정기준	- 성별 평균성취(average achievement)	
	가중치	- 지표 : 없음 -영역 : 없음	
	지수산정	- 성별 기하평균의 조화평균 - 참고수준 : 성별 산술평균의 기하평균	Atkinson 지수 산정 방법
지수 유형		- 불평등 및 연관성 민감형 지수	
지수 특징		- 영역과 영역내 지표들간 연관 민감성 반영	
지수 한계		- 제한된 지표 사용으로 정책지표로 한계 - 여성특화지표 포함 문제	

나. WEF의 GGI

1) GGI 개발 목적과 특징

WEF는 사회발전이 없는 경제적 발전은 지속가능하지 않으며, 경제적 발전이 없는 사회발전은 가능하지 않다는 입장에서 성평등에 대한 관심을 갖고 접근하였다. 이런 관점에서 GGI의 성평등은 개인의 권리, 의무, 그리고 기회가 생물학적 성에 의해서 결정되어지지 않는 사회발전단계, 즉 남녀가 그들의 잠재능력을 완전하게 활용할 수 있는 단계로 정의한다.⁵⁷⁾ GGI는 다음의 세 가지 기준에 관심을 두고 측정된다.⁵⁸⁾

첫째, '수준'보다 '격차'를 측정하고 있다. 즉 한 국가의 실제수준에서 활용 가능한 자원과 기회의 수준이 아니라, 자원과 기회에 대해 접근하는 성별 격차를 측정한다. 강대국들은 교육과 보건의 기회에 있어 사회전체 구성원이 더 많은 접근 기회를 갖게 되며, 이러한 수준에서의 측정은 잘 알려진 바와 같으며 그것들

57) WEF(2005), Women's Empowerment: Measuring the Global Gender Gap.

58) WEF(2008), The Global gender gap report. pp.3~4.

은 각 나라들이 직면하고 있는 젠더와 관련된 이슈에 대해 상당히 독립적이다. 따라서 GGI 지수는 자원들에 대한 접근에 대해 더 작은 차이를 보이는 국가들에 대해 더 많은 점수를 부과한다. 예를 들어 교육 성취도의 경우 성별 교육 수준이 아닌 남성 대비 여성의 비(ratio)를 기초로 산정되는 것이다.

둘째, 성과지표의 차이를 측정한다. GGI는 성과 지표에 관련된 기본적인 권리 즉 건강, 교육, 경제참여, 정치 권한부여에서 여성과 남성이 조화를 이루고 있는가를 보는데 목적을 둔다. 단, 국가의 특정 정책, 문화 또는 관습 등 투입 지표는 지수 산정에 활용하지 않지만, 국가의 프로필 작성을 위한 보조지표로 제시하고 있다.

셋째, 여성 권한보다 성평등 정도로 측정한다. GGI는 여성의 권한부여 수준이 아닌 성 평등에 대한 여성들의 접근성을 기준으로 순위를 산정한다. GGI 목적은 선택된 지표에서 여성과 남성의 격차가 감소해 왔는지를 확인하는데 있다. 그리고 GGI는 여성에 대한 성과와 남성에 대한 성과를 평등하게 한 국가들에게 좋은 점수를 제공한다. 그러나 여성이 남성을 능가하는 경우에는 지표에 대한 페널티를 따로 적용하지는 않는다. GGI는 선택된 지표에서 여성과 남성의 격차가 감소할 경우 평등한 국가로 본다.

2) 지표구성과 자료원

GGI는 경제 참여와 기회, 교육 성취, 정치 권한부여, 건강과 생존의 네 가지 영역에 총 14개의 지표들로 구성되어 있다. 먼저 경제참여와 기회 영역은 남녀 간 빈곤의 불균형한 격차를 낮출 뿐 아니라, 가계 수입을 증가시키는 중요한 수단이며 여성의 경제적 개입의 결과 관련된 문제이기 때문에 선정된 영역이다. 구성 지표는 경제활동 참여율, 유사 업무의 남녀임금형평성, 추정소득, 행정·관리직 비율이다. 두 번째로 교육성취도는 사회의 모든 면에서 여성의 권한을 증진하는 가장 기본적인 조건이 되는 영역으로, 구성지표는 문해률과 초·중·고등학교 취학률로 구성되어 있다. 세 번째로 건강과 생존은 건강기대수명과 출생성비를 활용한다. 이 영역은 기본적으로 남녀가 접근하는 방법이 다르면서도 근본적인 개인의 안전과 관련 있는 주제이다. 마지막으로 정치권한 부여는 의사결정 구조에 있어 여성 대표성을 파악하는 영역으로, 국회의원과 장관 여성비율과 여성의 국가 혹은 정부 수반 재임기간으로 지표가 구성되어 있다.⁵⁹⁾

〈표 V-4〉 GGI의 지표구성과 자료원

하위지수	지표	자료원
경제참여와 기회	남성 대비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 비	국제노동기구(ILO), 주요노동시장지표(KILM), 2009년
	유사업무의 남녀임금형평성(남성 대비 여성 비)	세계경제포럼(WEF), 기업임원의견조사(Executive Opinion Survey), 2012
	남성 대비 여성의 추정소득 비	UNDP 방법론에 따라 WEF에서 산정
	남성 대비 여성 행정관리직 비	ILO, LABORSTA DB, 2008 혹은 최근 입수가능한 자료, UNDP 인간개발보고서(HDR) 2007년 기준 최근 입수가능한 자료
	남성 전문·기술직 대비 여성의 전문·기술직 비	ILO, LABORSTA DB, 2008 혹은 최근 입수가능한 자료, UNDP 인간개발보고서(HDR) 2009년 기준 최근 입수 가능한 자료
교육 성취도	남성 대비 여성 문해율	UNESCO 2011년 교육통계지표 혹은 최근 입수 가능한 자료, 세계은행 세계개발지표 (World Development Indicators) 혹은 Global Development Finance online Database, 2010. UNDP 인간개발보고서(HDR) 2009년
	남성 대비 여성 초등교육 취학률	UNESCO 2011년 교육통계지표 혹은 최근 입수 가능한 자료, 세계은행 세계개발지표 (World Development Indicators) 혹은 Global Development Finance online Database, 2011.
	남성 대비 여성 중등교육 취학률	상동
	남성 대비 여성 고등교육 취학률	상동
건강과 생존	출생성비(여아 대비 남아 출생비율)	중앙정보국(Central Intelligence Agency), CIA World Factbook, data updated weekly, 2012
	남성 대비 여성의 건강 기대 수명	세계보건기구, Global Health Observatory database, 2007년 이후 통계
정치권한 부여	남성 대비 여성 국회의원 비율	IPU, 2012년 정치영역의 여성(Women in Politics: 2012), 2012년 1월 선거결과까지 반영
	남성 대비 여성 장·차관 (ministerial level) 비율	상동
	(최근 50년 이내) 남성 대비 여성의 국가 혹은 정부 수반의 재임 기간	WEF에서 산정(2012년 6월 30일)

자료: WEF(2012), 『The Global Gender Gap Report 2012 - Insight Report』, p. 5.

59) GGI의 경우 보조지표는 국가 순위의 분석에는 사용되지 않았으나, 각 국가의 상황을 설명할 때 보조 자료로 사용하였다. 이 때 사용된 지표는 임신 및 출산과 관련된 지표, 교육 및 양성 부문, 고용 및 소득 부문, 사회제도 부문 등 4개 부문으로 구성되어 있다.

한편 성격차지수의 자료원은 경제참여와 기회 영역의 경우 ILO와 UNDP 자료를, 교육성취도는 UNESCO에서 자료를 활용하고 있다. 그리고 건강과 생존 영역의 지표들은 CIA의 world Factbook과 WHO자료를, 정치권한부여는 IPU와 WEF에서 수집한 자료를 활용하고 있다.

3) 지수산정방법

GGI는 수준보다는 격차, 정책보다는 성과, 여성권한보다는 성평등 수준을 측정하는 지수이다. 이 지수는 절대적인 기준에 비해서 성과를 수량화하는 지수⁶⁰⁾로, 성평등과 관련된 주요 영역과 지표를 담고 있다. 초기 GGI 지수는 정량적인 지표와 함께 104개 국가의 9,000명의 기업총수를 조사대상으로 하고 있는 세계 경제포럼의 기업임원 의견조사(Executive Opinion Survey)를 통한 질적인 척도를 함께 사용하기도 했으나, 최근 산정에 활용되는 지표는 자료입수의 한계와 조사의 주관적인 요소 때문에, 정량적인 지표만을 사용하고 있다. GGI 지수는 네 단계의 과정을 통하여 산정된다.

첫째, 모든 자료는 남성 대비 여성 비로 변환 된다. 예를 들어 한 국가의 장·차관직 여성참여 비율이 20%(남성 80%)이면, $20/80=0.25$ 가 된다. 이것은 본 지표가 여성의 지위참여 수준이 아닌 여성과 남성의 지위 참여의 격차를 확인하는 것을 나타내기 위해 사용하는 것이다.

둘째, 위의 계산된 비율들은 “평등 기준점”에서 데이터가 절삭된다. 두 개의 건강관련 변수(출생성비의 경우, 평등 표준점의 기준을 0.944로 설정하며, 기대수명의 경우 1.06으로 두고 있다)를 제외하고 대부분의 지표의 평등 지점은 ‘1’로 두는데, 이는 완전평등지점으로 여성과 남성의 수가 동일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한편 각 변수들을 평등 표준점을 기준으로 자료를 절삭하는 이유는 여성과 남성의 균형을 맞추거나 혹은 여성이 남성을 넘어서는 나라들에 같은 점수를 주기 위해서이다.

셋째, 지수의 계산으로, 변수들의 가중치 평균을 계산하는 것이다. 지표들의 평균 계산은 표준편차를 비교하여 가중치를 부여하는 방식을 사용한다. 가중치

60) F. Grieg, R. Hausmann, L. D. Tyson, S. Zahidi(2006). 'The Gender Gap Index 2006:A New Framework for Measuring Equality' in The Global Gender Gap Report 2006.

는 차원별 점수를 산정할 때 지표에 대해 부여된다. 차원별 가중치 부여 방식은 1%p의 변화에 표준편차 변동으로 구한다. 즉, 0.01을 지표의 표준편차의 값으로 나누면 된다. 이렇게 구한 1%p 변화 값은 각 차원별로 합한 뒤 각 지표의 비중을 계산하면 이것이 차원별 가중치가 된다. 이와 같이 가중치를 부여할 경우 표준편차나 작은 편차가 있는 지표, 예를 들어 초등학교 취학률과 같이 대부분의 국가에서 남녀 성 격차가 거의 없는 지표는 교육 차원 안에서는 큰 편차가 있는 변수보다 더 큰 가중치를 갖게 된다. 이는 초등교육에 있어서 성 격차가 크게 나는 국가의 경우 많은 페널티를 받게 된다는 의미이다.

〈표 V-5〉 GGI 지수 산출을 위한 가중치

영역	지표	단위	가중치	
			하위영역	전체
경제 참여와 기회	남성 대비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 비율	비율 (ratio)	0.199	$(0.199 + 0.310 + 0.221 + 0.149 + 0.121) \times (1/4)$
	유사직종 종사 중인 남성과 여성의 임금 격차 (남성 대비 여성 비율)		0.310	
	남성 대비 여성의 소득 추정 비율		0.221	
	남성 대비 여성 관리자 및 고위임직원 비율		0.149	
	남성 전문·기술직 대비 여성의 전문·기술직 비율		0.121	
교육 성취도	남성 대비 여성 문자 해독률 비율	0.191	$(0.191 + 0.459 + 0.230 + 0.121) \times (1/4)$	
	남성 대비 여성 초등교육 취학률	0.459		
	남성 대비 여성 중등교육 취학률	0.230		
	남성 대비 여성 고등교육 취학률	0.121		
정치 권한 부여	남성 대비 여성의 국회의원 비율	0.310	$(0.310 + 0.247 + 0.443) \times (1/4)$	
	남성 대비 여성 장·차관 (ministerial level) 비율	0.247		
	(최근 50년 이내) 남성 대비 여성의 국가 혹은 정부 수반의 재직 기간	0.443		
건강과 생존	남성 대비 여성의 건강 기대 수명	0.307	$(0.307 + 0.693) \times (1/4)$	
	출생성비(여아 대비 남아 출생비율)	0.693		

주: 하위영역가중치는 지표값 표준편차의 역수.

넷째, 최종 점수 계산이다. 모든 차원에서 가장 높은 점수는 1(완전 평등)이고 가장 낮은 점수는 0(완전 불평등)이다. 모든 점수들은 평등과 불평등, 0과 1사이에 분포되어 있다. 앞에서 언급했듯이 가중치는 GGI 점수 산정에 활용되지 않으며, 각 차원점수 산정에만 활용된다. 또한 GGI 점수는 비율 값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계산된 점수를 해석하는데 있어서 엄격한 해석은 바람직하지 않다. 점수는 단지 한 나라의 성 격차가 얼마나 증감했는지에 대한 지표로 의미를 두어야 한다.

4) 지수의 특성 요약

WEF의 GGI 지수 특성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표 V-6〉 GGI의 특성 요약

구분		내용	비고
생산기관		WEF	
생산년도 및 주기		2006년 이후 매년 발표	
지수 측정 관심		-성취수준의 성별격차	
지표구성		-4개 영역에 14개 지표로 구성	
측정 방법	측정기준	-성비(Sex ratio)	
	가중치	-지표 : 1%p 변화에 대한 표준편차의 변화 -영역 : 없음	
	지수산정	-단순평균	
지수 유형		-단순가법형 지수	
지수 특징		-GDI와 GEM의 구성지표를 복합적으로 활용 -국가의 발전수준과 관계없이 성평등을 남성 대비 여성의 상대적 성취 수준 측정	
지수 한계		-남성 대비 여성의 상대적 성취 수준 측정	

다. SW의 GEI

1) GEI 개발 목적과 특징

GEI는 미국에 본부를 둔 민간 운동단체인 Social Watch에서 발표하는 지수로써, 경제적 수준보다 할당제 같은 여성정책이 성평등에 더 큰 영향을 미치고 있

음을 밝혀내거나, 지역별 특징 등을 분석하는 등 정책입안과 사회운동에 활용하기 위해 개발되었다. 이 지수에서 성평등이란 권리, 혜택, 의무, 기회에서 성별 형평성을 고려하여 치우하는 것을 의미한다. 대부분의 사회에서 불평등은 이러한 형평성을 고려하지 못하고 남녀가 참여하고 있는 활동, 자원에 대한 통제와 접근, 그리고 의사결정과정에서 남녀에게 서로 다른 책임, 권리, 혜택, 기회를 부과함으로써 나타난다고 본다. 이에 따라 성평등 측정도구는 평가 목적뿐만 아니라 적극적인 성평등 정책을 설계하고, 일반적인 공공정책이 남녀평등에 어떻게 영향을 주고 있는지를 모니터링 할 수 있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GEI는 GDI와 GEM의 성평등지표들을 복합적으로 활용하고 있는 성평등지수이다.⁶¹⁾ 하지만 GEI의 주요한 특징 중의 하나는 성별격차를 활용하는 것으로, 특정한 남녀의 지표 수준이 낮아도 남녀간의 격차만 없으면 지수의 점수가 높다. 더불어 특정한 남녀 지표값이 둘 다 높더라도, 남녀간의 격차가 크면 지수의 점수가 낮다. 즉, 남성과 여성 경제활동참가율이 각각 40%, 30%로 상당히 낮고 남녀격차가 0.75(=40/30)로 상대적으로 적은 국가의 경우, 남녀 경제활동참가율이 85%, 55%로 높으나 남녀격차가 0.65(=55/85)인 국가보다 지수 값이 더 높다.

GEI는 2009년까지 UNDP의 Human Development Report의 가공 지표들을 재인용하기 때문에, GDI와 GEM의 지표 구성에서 큰 차별은 없었으나, 지수 산정을 수준이 아니라 성별격차(성비)를 활용함으로써 차별화했고, 2010년 두 지수가 GII로 대체되어 발표되지 않고, 2012년 경제참여 영역에 비취약 고용(Non-vulnerable employment)을 추가하면서 GEI만의 차별성을 강화시켰다.

2) 지표구성과 자료원

GEI는 3개 차원에 11개의 지표를 가지고 산정한다. 영역별로 보면, 경제활동 격차가 3개, 권한부여격차가 4개, 그리고 교육격차가 4개로, 모든 지수는 비율(%)을 기준 단위로 수집한다. 지표영역 중에서 경제활동참가 분야는 노동현장에서 남녀 간 불평등을 파악하기 위한 것이다. 일반적으로 여성은 노동시장에 대한 접근과 비취약 고용에 취업한 비율이 낮고 취업하고 있는 여성들의 임금수준

61) Social Watch(2005), No Country Treats its Women the same as its Men: the Gender Equity Index - a New Perspective, in Social Watch Roars and Whispers: Gender and Poverty: Promises Versus Action, Montevideo: Social Watch.

이 낮다. 이에 경제활동 영역은 경제활동참가율 격차, 비취약 고용, 남녀소득격차로서 불평등을 측정한다. 여성권한 영역은 정치적, 경제 사회적 의사결정 과정에의 여성의 접근과 실행이 어떤 분야보다 남녀 불평등이 분명하게 나타난다. 이 영역 지표는 4개로, 전문직, 입법·고위관리직, 의회의원, 여성 장관으로 구성되어 있다. 마지막으로 교육영역은 읽고 쓰는 능력의 격차를 보여주기 위한 지표로 측정되고, 초등, 중등 그리고 고등교육의 취학률을 비교한다. 교육영역은 남녀 격차가 많이 줄어든 영역이긴 하지만 여전히 많은 국가에서 그 격차가 크게 나타나며, 인적자료의 개발에서의 성별 격차가 중요하기 때문에 선정된 영역이다. 지표는 4개로 문자해독율과 초등, 중등, 고등 교육의 취학률로 구성되어 있다.

자료원은 대부분 UNESCO 웹사이트 데이터베이스를 활용한다. 단, 의원여성 의원비율은 IPU의 데이터베이스를 활용하여 지수를 산정한다.

〈표 V-7〉 GEI의 지표구성과 자료원

영역	지표	자료원
경제활동	경제활동 참여율	unesco 웹사이트 DB (www.uis.unesco.org)
	비취약 고용 격차	-
	추정소득 격차	unesco 웹사이트 DB (www.uis.unesco.org)
여성권한	전문직 비율	unesco 웹사이트 DB (www.uis.unesco.org)
	입법, 고위관리직 비율	unesco 웹사이트 DB (www.uis.unesco.org)
	의회의원 비율	세계의원연맹(IPU) DB (www.ipu.org)
	장·차관 비율	unesco 웹사이트 DB (www.uis.unesco.org)
교육	문자해독율	unesco 웹사이트 DB (www.uis.unesco.org)
	초등학교 취학률	unesco 웹사이트 DB (www.uis.unesco.org)
	중등교육기관 취학률	unesco 웹사이트 DB (www.uis.unesco.org)
	고등교육기관 취학률	unesco 웹사이트 DB (www.uis.unesco.org)

출처: Social Watch 홈페이지

3) 지수산정방법

지수산정은 영역별 하위지수 값들을 단순 평균하는 방법을 활용한다. 하위지수는 지표의 성별격차에 인구 가중치를 부여하여 산정한다. 구체적인 지표산정

방법은 다음과 같다. 먼저 1단계는 남성 대비 여성의 성비를 구한다. 2단계는 1 단계에서 구한 성비에 연령별 인구 가중치를 부여한다. 가중치는 남성인구의 대한 여성인구비율 즉 (여성인구비율)/(남성인구비율)의 역수로 부여한다. 대부분의 국가에서 남성인구보다 여성인구가 많기 때문에 가중치 부여는 성격차를 과소(under-represent)대표하지 않기 위한 중요한 절차이다. 모든 지표는 최소 격차(성비) '0'에서 최대 격차(성비) '1'로 척도를 표준화 한다. 따라서 최대 격차가 1이상일 경우 1로 재부호화 하게 된다. 3단계는 영역별 표준화된 지표를 단순평균하여 영역별 지수를 계산한다. 이때 지수계산은 영역별 구성 지표가 최소 2개 이상의 활용 가능한 자료가 있을 때만 산정된다. 따라서 지표가 2개 미만인 영역이 있는 국가는 GEI가 생성되지 않는다. 마지막인 4단계에서는 GEI 값을 산정한다. 지수는 3가지 영역에서 구한 값의 단순평균으로 계산된다.

〈표 V-8〉 GEI 산출을 위한 가중치

영역	지표	단위	가중치	
			하위영역	전체
경제활동	경제활동 참여율	지표의 성별격차 X 인구가중치	1/3	$(1/3+1/3+1/3) \times (1/3)$
	비취약 고용 격차		1/3	
	추정소득 격차		1/3	
여성권한	전문직	※ 지표의 성별격차 : 「여성비율/남성비율」	1/4	$(1/4+1/4+1/4+1/4) \times (1/3)$
	입법·고위관리직 여성비율		1/4	
	의회의원 비율		1/4	
	장·차관 비율		1/4	
교육	문자해독율	※ 인구가중치 : 「남성인구/여성인구」	1/4	$(1/4+1/4+1/4+1/4) \times (1/3)$
	초등교육 취학률		1/4	
	중등교육 취학률		1/4	
	고등교육 취학률		1/4	

구체적으로 GEI를 산정하는 방법을, 예를 들어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권한영역에서 특정 국가의 전문직의 여성비율과 남성비율이 각각 40%, 60%이고, 입법·고위관리직의 여성 및 남성비율이 9%, 91%, 국회의원 여성 및 남성비율 14%, 86% 그리고 장·차관직의 여성 및 남성비율이 각각 5%, 95%라고 하자. 그

러면 전문기술직의 지표값은 $0.67=40/60$, 행정관리자는 $0.10=9/91$, 국회의원은 $0.16=14/86$, 정부(장관)비율은 $0.05=5/95$ 가 된다. 일정 연령이상의 남성이 1,856만 명, 여성이 1,905만명이면, 여성/남성인구비율의 역수는 0.974가 된다. 이에 따라 여성/남성비율의 역수로 지표 값들을 표준화하면, 아래와 같다.

전문직 : $0.653=0.974 \times 0.67$, 입법·고위관리직: $0.156=0.974 \times 0.16$

국회의원 : $0.097=0.974 \times 0.10$, 장·차관 : $0.049=0.974 \times 0.05$

권한영역의 성평등지수 점수는 위의 4개의 지표점수를 단순평균 하여 구한다. 그리고 경제활동영역에서도 영역에 속하는 하위지표 즉, 경제활동참가율, 비취약 고용, 추정소득의 지표점수를 단순 평균하여 경제활동영역의 지수점수를 구한다. 마찬가지로 교육영역에서도 하위지표 문자 해독율, 초등학교 취학률, 중등학교 그리고 고등교육기관 취학률 지표점수를 단순 평균하여 산정한다. 마지막으로 GEI 점수는 위의 3영역의 지수점수를 단순 평균하여 산정한다.

4) 지수의 특성 요약

Social Watch의 GEI 특성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표 V-9〉 GEI의 특성 요약

구분	내용	비고
생산기관	Social Watch	
생산년도 및 주기	2007년 이후 부정기 발표(2007~2009, 2012)	2007년 발표 자료에 2004년~2007년 변화추이 자료 제공
지수 측정 관심	- 성취수준의 성별격차	
지표구성	- 3개 영역에 11개 지표로 구성	
측정 방법	측정기준	- 성비(Sex ratio)
	가중치	- 지표 : 성별인구 비율 - 영역 : 없음
	지수산정	- 단순평균
지수 유형	- 단순가법형 지수	
지수 특징	- 국가의 발전수준과 관계없이 성평등을 남성 대비 여성의 상대적 성취 수준으로 측정	
지수 한계	- 남성 대비 여성의 상대적 성취 수준 측정	

라. OECD의 SIGI

1) SIGI 개발 목적과 특징

SIGI는 경제개발기구(OECD)에서 2009년부터 발표하고 있는 성평등 관련 지수이다.⁶²⁾ 이 지수는 2006년도에 발표한 경제개발기구의 GID(Gender, Institutions and Development) DB에 기반하고 있다. GID DB의 개발은 기존의 성 평등 지수와 다른 시각에서 진행되었다. 첫째, 성평등은 경제 성장을 촉진하는, 아직 개발되지 않은 자원이라는 관점에서 새롭게 재해석되어야 한다는 점이다. 예를 들어 발표자들은 지금까지 일반적으로 알려진 바와 같이 여성의 출산율과 경제활동참가율은 서로 반비례하는 관계가 아니며, 오히려 선진국가의 경우 출산율과 경제활동참가율이 모두 높은 경향을 보이고 있다는 사실에 주목한다. 둘째, 기존의 여성의 지위상승과 사회참여를 촉진하는 원인으로서 해당 국가의 주요 변수로서 거론되었으나, 이와 함께 여성에게 불리한 사회적 제도가 여성의 지위를 저해하는 중요한 원인이 된다는 점을 강조한다. GID는 이러한 배경 하에 각국의 여성의 지위상승을 저해하는 사회적 제도를 지표에 포함하여 이 지표와 여성의 지위와의 관계를 보여주고 있다.

SIGI 역시 GID DB의 개발 입장과 유사하다. 즉, 기존의 성평등지수가 결과로서의 성평등 현상에 대한 분석에 초점을 두고 있기 때문에 성 불평등을 초래하는 전통, 사회적 규범, 문화적 관습을 간과하는 경향이 있다는 점에 착안하여 개발된 지수이다. SIGI는 앞에서 언급한 GID의 특징을 그대로 갖는다. 더불어 이 지수는 다음과 같은 특징을 갖고 있다. 첫째, SIGI는 성 불평등의 원인이 되는 사회제도에 초점을 맞춘 지수이다. 둘째, SIGI는 다른 성평등지수와 보완관계가 있다. 대부분의 성평등지수는 결과로써의 성불평등을 측정하고 있다. 반면 SIGI는 대부분 법·제도적 제약, 여성인권보호 등과 같은 투입지표로 구성되어, 성 불평등의 원인에 대한 추가적 관점을 제공한다. 셋째, 대상 국가는 OECD 비회원국 또는 유럽연합 비회원국 중 100만 명이상 인구를 가진 국가로 제한한다. 모든 국가에서 제도적 차별은 존재하지만 SIGI의 주된 관심은 개발도상국과 최근에 빠르게 발전 중인 국가이고 OECD 개발센터의 주요역할이 이들 국가에 대해 분석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100만 명이상 인구를 가진 국가로 제한한 것은

62) <http://genderindex.org/> 참조.

데이터의 이용 가능성 때문이다.

2) 지표구성과 자료원

SIGI의 지표구성은 5가지의 개념 틀에서 선정되고 있다. 첫째, 개념적 관련성 (conceptual relevance)으로, 지표는 차별적 사회제도의 개념적 틀과 강력하게 연관되어 있어야 하고 그 지표는 알기 원하는 것을 측정해야 한다는 것이다. 둘째, 근본적 성 불평등 요인을 파악할 수 있어야 한다. 즉, 여성과 남성에게 대한 불공평한 결과를 일으키는 근본적인 요소로 수집해야한다. 셋째, 데이터의 질, 활용 가능성과 적용 범위가 보증된 자료를 수집할 수 있는가 이다. 지표는 자료의 신뢰성, 국가간 자료의 표준화와 SIGI 국가간 적용범위의 확장일 가능한 자료이어야 한다는 의미이다. 넷째로는 차별성(distinct)으로, 각 지표는 차별적 제도를 측정하고 다른 변수에 의해 측정되지 않는 새로운 정보를 추가해야 한다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지표선택의 기준은 통계적 연관성(statistical association)이다. 하나의 하위지수내에 있는 지표는 독립적이지만, 유사한 현상의 파악에서 통계적 연관성을 가져야 한다는 것이다.

이와 같은 기준으로 SIGI는 5개의 하위지수(영역)에 14개의 측정 변수를 가지고 산정된다. 지표 구성은 2009년과 비교하여 2012년과 비교하면, 일부다처제 철폐, 복장의 자유 지표는 삭제된 반면, 출생선, 법적 혼인연령, 공공 공간 접근, 정치적 발언권 등은 새로 추가되었다. 이에 2012년 SIGI의 하위지수와 지표는 <표 V-10>과 같다. 한편 자료원은 UN, WHO, IPU 등의 자료를 활용하고 있지만, 많은 지표는 각 국가의 특별한 자료원을 통해 수집하고 있다.

〈표 V-10〉 “사회제도와 성 지수” 지표 구성 및 자료원

하위지수	지표	자료원
차별적 가족법규	조혼	UN 세계혼인자료(2008)와 기타 자료원: 인구통계학적 건강조사(Demographic Health Survey data)와 다중군집지표조사(Multiple Cluster Indicator Survey) 자료 포함
	부모 권한	국가별 특별 자료원으로부터 수집한 자료(Data from country specific sources)
	유산 상속	국가별 특별 자료원으로부터 수집한 자료
	법적혼인연령	국가별 특별 자료원으로부터 수집한 자료
신체적 안전 제약	여성에 대한 폭력	- 법 : 국가별 특별 자료원으로부터 수집한 자료 - 가정폭력에 대한 태도: 인구통계적 건강조사(Demographic Health Surveys) 혹은 다중군집지표조사(Multiple Cluster Indicator Surveys). - 가정폭력 경험 : 세계여성발전을 위한 UN여성폭력모음집과 국가별 특별 자료원으로부터 수집(UN WOMEN compilation of violence against women prevalence for Progress of the World's Women, 2011)
	여성 할례	- 세계보건기구 - 다중군집지표조사, 인구통계학적 건강조사
	임신 자율성	인구통계학적 건강조사, 다중군집지표조사, 세계보건기구 자료와 기타 출생건강조사(reproductive health surveys)
아들 선호	실종 여성	UN 인구국과 중앙정보기관의 성비자료(Sex-ratio data from UN Population Division and Central Intelligence Authority, 2011)
	출생선호	인구통계학적건강조사, 다중군집조사와 가구조사의 자료(Data from Demographic Health Surveys, Multiple Indicator Cluster Surveys and selected household surveys)
시민 자유권 제약	공공 공간 접근	국가별 특별 자료원으로부터 수집한 자료
	정치적 발언	의회의원 :세계의원연맹 자료(2012년 2월) 할당제 :국제IDEA와 Stockholm 대학의 할당추계 자료(Data from The Quota Project (International IDEA and Stockholm University) 혹은 세계 여성의 UN 여성 진보 보고서 2011(UN Women Progress of the World's Women 2011 report)
소유권 제약	여성의 토지 접근권	국가별 특별 자료원으로부터 수집한 자료
	여성의 토지 외 재산 접근권	국가별 특별 자료원으로부터 수집한 자료
	여성의 신용 접근권	국가별 특별 자료원으로부터 수집한 자료

출처: OECD Development Centre, 2012 SIGI Social Institutions and Gender Index : UNDERSTANDING THE DRIVERS OF GENDER INEQUALITY.

3) 지수산정방법

SIGI는 하위지수(영역)의 비선형함수(non-linear function)의 단순평균으로 산정한다. 하위지수를 단순 평균하는 이유는 지수의 중요성이 동일하다고 보기 때문이다. 비선형의 의미는 높은 불평등은 모든 영역에 영향을 주지만 성평등 격차의 해소는 전체보상(total compensation) 방식이 아니라 부분보상(partial compensation) 방식으로 나타난다는 것이다. 여기서 부분보상이란 특정 영역의 높은 불평등은 다른 영역의 낮은 불평등을 부분적으로 보상 혹은 상쇄시킨다는 것을 의미한다.⁶³⁾ SIGI 지수값을 나타내는 산정식의 의미를 일반적인 함수형태로 설명하면 식 (1)과 같다. 특정한 하위 지표값 x_i 에 대해서 '0'의 값을 모든 하위영역에서 달성되어야 하는 평등목표로서 해석한다. 만일 $x_i > 0$ 이면 $f(x_i, 0) > 0$ 이고, $x_i = 0$ 이면 $f(x_i, 0) = 0$ 인, 함수 $f(x_i, 0)$ 를 불평등함수(deprivation function)라고 정의하자.⁶⁴⁾ 높은 x_i 값은 0부터 x_i 까지 거리를 증가시켜서 I(X)에 페널티를 가져온다. 식 (1)에서 제곱 즉, $a=2$ 을 선택한 것은 제곱함수로 되게 만들어 해석을 쉽게 하는 이점 때문이었다. 그리고 a 는 성평등에 대한 혐오감(aversion)을 나타내는 모수이다. 따라서 a 값이 커질수록 국민들이 성평등에 대해서 보다 민감해지게 된다.

$$\begin{aligned} \text{SIGI} &= I(X) = 1/n \sum_{i=1}^v \phi(x_i, 0)^\alpha & (1) \\ I(X) &= 1/n \sum_{i=1}^v (x_i - 0)^2 = 1/n \sum_{i=1}^v (x_i)^2, \alpha=2 \end{aligned}$$

SIGI 지수의 각 영역별 지표와 지표 및 지수산정에 사용되는 가중치는 <표 V-11>과 같다.

63) 전체보상은 지수산정에서 특정영역의 높은 불평등이 다른 영역의 낮은 불평등과 완전 보상, 즉 1-1 상쇄가 되는 것을 말함.

64) 식 (1)의 함수는 Foster-Greer-Thorbecke (FGT) 빈곤측도 함수와 같은 유형임. 일반적인 FGT 함수식은 $FGT(Y, a, z) = \frac{1}{n} \sum_{i=1}^n \left(\frac{z - y_i}{z}\right)^a$ 임. 여기서 Y는 모든 소득을 포함하는 벡터, $i=1, \dots, n$ is 은 개인 i의 소득, z는 빈곤선, 그리고 $a > 0$ 는 페널티 모수 (penalization parameter)로, SIGI는 $a=2$ 를 줌. Foster, J. E., J. Greer, and E. Thorbecke (1984). A class of decomposable poverty measures. *Econometrica* 52, pp. 761 - 66.

〈표 V-11〉 SIGI 산출을 위한 가중치

영역	지표	단위 및 점수부여(x_i)		가중치	
				하위영역	전체
가족 법규	조혼	비율(%)	x_{11}	x_{11}^2	$(x_{11}^2 + x_{12}^2 + x_{13}^2 + x_{14}^2) \times (1/5)$
	부모권한	비율(%) / 정도(0, 0.5, 1)	x_{12}	x_{12}^2	
	유산상속	비율(%) / 정도(0, 0.5, 1)	x_{13}	x_{13}^2	
	법적 혼인 연령	비율(%) / 정도(0, 0.5, 1)	x_{14}	x_{14}^2	
신체 안전	여성에 대한 폭력	비율(%) / 정도(0, 0.25, 0.5, 0.75, 1)	x_{21}	x_{21}^2	$(x_{21}^2 + x_{22}^2 + x_{23}^2) \times (1/5)$
	여성 할례	비율(%) / 정도	x_{22}	x_{22}^2	
	임신 자율성	비율(%) / 정도	x_{23}	x_{23}^2	
아들 선호	실종 여성	비율(%) / 정도(0, 0.25, 0.5, 0.75, 1)	x_{31}	x_{31}^2	$(x_{31}^2 + x_{32}^2) \times (1/5)$
	출생 선호	비율(%) / 정도	x_{32}	x_{32}^2	
시민 자유권	공공 공간 접근	비율(%) / 정도(0, 0.5, 1)	x_{41}	x_{41}^2	$(x_{41}^2 + x_{42}^2) \times (1/5)$
	정치 발언	비율(%) / 정도	x_{42}	x_{42}^2	
소유권	토지 접근권	비율(%) / 정도(0, 0.5, 1)	x_{51}	x_{51}^2	$(x_{51}^2 + x_{52}^2 + x_{53}^2) \times (1/5)$
	토지 외 재산 접근권	비율(%) / 정도(0, 0.5, 1)	x_{52}	x_{52}^2	
	신용 접근권	비율(%) / 정도(0, 0.5, 1)	x_{53}	x_{53}^2	

이와 같이 SIGI에 의하면 특정한 영역의 남녀불평등이 특별히 심하면 다른 모든 영역이 상대적으로 덜 불평등하여도, 성평등지수가 높게(불평등이 심한 것으로) 나타난다. 그리고 정책적인 측면을 보면 특별히 불평등이 심한 영역에 집중해서 성평등정책을 실시하여 개선시키면, 국가순위가 높아지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또한 성과지표를 사용하고 있는 다른 지수와는 달리 SIGI는 투입지표를 측정 기준으로 하고 있다. 즉, SIGI는 남녀간의 불평등을 가져오는 사회규범, 전통, 가족법규 등을 측정한다. 이에 따라 성불평등의 근본원인이 되는 사회제도를 파악

하고, 이와 같은 제도를 개선하기 위한 정책을 수립, 실시하는데 도움이 된다. 예컨대, 중앙아시아와 같이 사회제도가 가정 밖에서 여성들이 활동하는 것을 제한하고 있으면, 여성의 취학을 증가는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에 큰 영향을 미치지 못할 것이다.

4) 지수의 특성 요약

OECD의 SIGI 특성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표 V-12〉 SIGI의 특성 요약

구분		내용	비고
생산기관		OECD	
생산년도 및 주기		2010년 이후 매년 발표	
지수 측정 관심		- 제도상 성 평등수준	
지표구성		- 5개 영역에 15개 지표로 구성	
측정 방법	측정기준	- 제도유무와 여성성취 수준	
	가중치	- 없음, 단, 지표값을 제공하여 계산	부분보상 개념 도입
	지수산정	- 영역을 단순평균	
지수 유형		- 불평등 민감형 가법형 지수	
지수 특징		- 성과지표가 아니라 투입지표를 활용 - OECD와 EU 비회원국 대상	
지수 한계		- 제도의 평등이 성과의 평등과 불일치하는 경우 많음	

마. EIU의 WEOI

1) WEOI 개발 목적과 특징

WEOI는 2010년 EIU(Economist Intelligence Unit)에서 발표한 지수이다. WEOI는 여성의 경제적 기회가 법, 제도, 집행, 관습과 태도 등에서 자영업자 혹은 임금근로자로서, 여성이 남성과 거의 동등한 조건으로 참여가 허용되고 있는지를 정의한다.

WEOI의 특징을 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WEOI는 여성의 경제활동에 초점을

맞춘 지수라는 것이다. 이 지수는 여성의 경제활동을 노동 정책과 집행, 금융에 대한 접근, 교육과 훈련, 여성의 법적·사회적 지위, 그리고 이와 관련된 일반적 사업 환경으로 세분화하여 총 26개의 지표로 측정된다.

둘째, WEOI는 SIGI처럼 성불평등을 초래하는 원인에 초점을 두고 측정된 지수라는 특징을 갖는다. WEOI에서 사용되는 지표는 대부분 질적 변수로서, 경제적 기회에 접근하는 데 있어 제도가 여성평등에 영향을 미치는 정도를 파악할 수 있게 구성되어 있다.

2) WEOI의 영역과 지표

WEOI는 5개 영역에 총 26개의 지표로 구성되어 있다. 영역은 노동 정책과 집행, 금융에 대한 접근, 교육과 훈련, 여성의 법적 및 사회적 지위, 일반적 사회 환경 등으로 구분하였다. 노동 정책과 집행은 ILO 보수 및 차별 협약 등과 집행 정도를 파악하는 영역으로, 노동정책과 노동집행으로 세분화하였다. 세부적으로 노동정책은 5개 지표로 평가하며, 노동집행의 경우 4개의 지표를 활용하여 평가한다. 금융에 대한 접근은 신용도 구축, 금융프로그램 접근, 금융서비스 제공과 더불어 신용 위험과 낮은 금융 상태를 반영한 민간부문 신용 등의 4개의 지표로 구성하였다. 교육·훈련은 4개의 지표로, 여성의 초·중등교육기관 취학률과 고등교육기관 취학률, 성인 여성 문해률 등의 지표와 중소기업 지원/개발 훈련을 제공하는 정부 혹은 비정부 프로그램의 존재로 구성된다. 그리고 여성의 법적·사회적 지위는 여성에 대한 폭력, 이동자유권, 재산소유권 등의 법적 안전장치가 있는지와 청소년의 출산율과 CEDAW의 국가 승인으로 측정한다. 이외에는 WEOI는 여성의 불평등이 아니라 경제활동에 있어 일반적 사업 환경을 포함하고 있다.

〈표 V-13〉 WEIO의 영역과 지표

영역		지표
노동 정책과 집행	노동정책	동일노동 동일임금
		비차별
		출산휴가 및 육아 휴직 수당
		여성 직업에서의 법적 제한
		남성과 여성의 법적 퇴직(연금수급) 연령 차이
	노동집행	동일노동 동일임금
		비차별
		직장 내의 여성에 대한 사실상 차별대우 정도
보육서비스의 유용성, 이용 가능성 및 질적 우수성과 보육에서 확대가족의 역할		
금융에 대한 접근	신용도 구축(신용도를 구축할 수 있는 능력의 복합측도)	
	금융 프로그램에 대한 여성의 접근	
	금융 서비스 제공	
	민간부문 신용	
교육과 훈련	여성의 초·중등교육기관 취학률	
	여성의 고등교육기관 취학률	
	성인 여성 문해율	
	중소기업(SME) 지원/개발 훈련을 제공하는 정부나 비정부 프로그램의 존재	
여성의 법적·사회적 지위	여성에 대한 폭력(폭력으로부터 여성을 보호하는 법의 존재)	
	여성의 이동 자유권	
	재산소유권	
	청소년의 출산율(여성 1,000명 당 연령별 출산율, 15-19세)	
	여성에 대한 모든 형태의 차별철폐에 관한 협약(CEDAW)에 대한 국가 승인	
일반적 사업 환경	규제품질	
	사업 시작을 위한 최소 자본 비용, 절차, 기간(사업 시작에 대한 복합지표)	
	기반구조 위험	
	주민 100명당 휴대폰 사용자	

3) 지수의 산정방법

자료구축을 위해서는 양적 지표의 경우 각 국가와 국제기구를 통해 자료를 수집하며, 질적 지표의 경우 국제기구에 제출된 자료를 근거로 EIU 연구자와 전문

가 패널의 평가를 통해 구축한다. WEOI 산정에 활용된 통계는 ILO, OECD, UNESCO, UNDP, UN 경제사회국의 인구과, UN Secretary General의 여성에 대한 폭력데이터베이스, ITU, CGAP, 세계경제포럼(World Economic Forum), 세계거버넌스지표(Worldwise Governance Indicators), 프리덤하우스, Vision of Humanity 및 각국의 통계청 등을 통해 수집하고 있다.

양적자료 중 결측치는 EIU에서 추정하여 사용하였고 질적 자료의 경우 지표의 수량화 작업을 실시하였다. 질적 지표의 수량화 작업은 지표의 특성과 접근기회정도에 따라 최고 9단계로 분류한 후 점수를 부여하였다. 수량화 방법은 각 질적 지표를 관련 평가내용으로 세분화하여 준수 혹은 실시할 경우 1점(혹은 2점)을 부여하거나 최악의 상태에서 최선의 상태로 이동시키면서 점수를 부여하는 방식으로 수량화 하였다.

또한 WEOI의 지표는 단위가 통일되도록 표준화하였다. 기본적으로 표준화는 값이 클수록 더 긍정적으로 해석될 수 있도록 하였다. 이에 지표 값이 클수록 여성에게 긍정적 효과를 보여 주는지 또는 부정적 효과를 주는지에 따라 표준화 방법을 약간 달리하고 있다. 먼저 지표 값이 클수록 여성에게 긍정적인 효과를 주는 경제적 측면의 지표(즉, 출산 및 육아휴직, 문해율, 재산소유권, 금융프로그램에 대한 여성접근성) 등은 다음과 같이 표준화하였다.

$$x = [x - \text{Min}(x)] / (\text{Max}(x) - \text{Min}(x))$$

역으로 지표 값이 클수록 여성에게 부정적 효과를 주는 지표(즉, 여성직업의 법적제약, 여성의 이동자유권, 사업의 시작)등은 다음과 같이 표준화하였다.

$$x = [x - \text{Max}(x)] / (\text{Min}(x) - \text{Max}(x))$$

여기서 $\text{Max}(x)$ 는 113개 국가 중 가장 큰 x 값이고, $\text{Min}(x)$ 은 가장 작은 x 값이다. 표준화된 지표는 다른 지표들과 직접 비교 가능한 0~100 범위로 변화된다.

WEOI 지표 산정은 단순평균방식을 따른다. 범주 내 표준화된 지표들을 단순 평균하여 각 범주의 평균점수를 산출하며, WEOI 전체평균은 각 범주의 평균점수를 다시 단순 평균하여 계산하게 된다.

〈표 V-14〉 WEOI의 지표 수량화 방법

영역		지표	수량화 방법
노동 정책과 집행	노동 정책	동일노동 동일임금	협약 준수 시 분류당 1점씩 부가, 최고 8점
		비차별	준수 시 분류당 1점씩 부가, 최고 9점
		모성 및 부성휴직과 수당	해당점수부여, 최고 9점
		여성 직업에서의 법적 제한	준수 시 분류당 1점씩 부가, 최고 8점
		남성과 여성의 법적 연금(퇴직) 연령 차이	해당 점수 부여, 최고 7점
	노동 집행	동일노동 동일임금	준수 시 분류당 2점씩 부가, 최고 12점
		비차별	준수 시 분류당 2점씩 부가, 최고 10점
		직장 내의 여성에 대한 사실상 차별 대우 정도	준수 시 분류당 1점씩 부가, 최고 7점
		보육서비스의 유용성, 이용 가능성 및 질적 우수성과 보육에서 확대가족의 역할	준수 시 분류당 1점씩 부가, 최고 5점
금융에 대한 접근		신용도 구축	준수 시 분류당 1점씩 부가, 최고 6점
		GDP 대비 민간 신용	준수 시 분류당 1점씩 부가, 최고 5점
		금융 프로그램에 대한 여성의 접근	준수 시 분류당 1점씩 부가, 최고 5점
		금융 서비스 제공	준수 시 분류당 1점씩 부가, 최고 3점
교육과 훈련		여성의 초·중등교육기관 취학률	여성 초·중등학교 취학률
		여성의 고등교육기관 취학률	여성 고등학교 취학률
		평균 교육연수	평균 교육연수
		성인 여성 문해율	성인 여성 문해율
		중소기업(SME) 지원/개발 훈련을 제공하는 정부나 비정부 프로그램의 존재	해당점수부여, 최고 5점
여성의 법적·사회적 지위		여성에 대한 폭력(폭력으로부터 여성을 보호하는 법의 존재)	법률 있을 경우 분류당 1점씩 부가, 최고 3점
		시민권	해당점수부여(0, 0.5, 1), 최고 3점(최악일 때)
		재산소유권	해당점수부여, 최고 5점
		청소년의 출산율	여성 1,000명 당 연령별(15-19세) 출산율
		피임도구 사용	-
		여성에 대한 모든 형태의 차별철폐에 관한 협약(CEDAW)에 대한 국가 승인	해당점수부여, 최고 4점
		정치참여	장관여성비율, 의회의원여성비율
일반적 사업 환경		규제품질	-
		사업 시작을 위한 최소 자본 비용, 절차, 기간	-
		기반구조 위험	-
		기술과 에너지의 접근	주민 100명당 휴대폰 사용자, 인터넷 사용자, 식수, 위생, 전기에 대한 접근

4) WEOI 특성 요약

EIU의 WEOI 특성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표 V-15〉 WEOI의 특성 요약

구분		내용	비고
생산기관		EIU	
생산년도 및 주기		2010년 이후 격년 발표(2010년, 2012년)	
지수 측정 관심		- 여성근로자와 고용주의 경제적 환경 측정	
지표구성		- 5개 영역에 29개 지표로 구성	
측정 방법	측정기준	- 제도유무와 여성성취 수준	
	가중치	- 없음	
	지수산정	- 영역을 단순평균	
지수 유형		- 단순 가법형 지수	
지수 특징		- 투입지표와 성과지표를 함께 측정	
지수 한계		- 경제활동영역에서의 불평등만을 측정 - 지표마다 점수부여 방식이 다름 - 불평등과 관련 없는 지표 포함	

바. 국제성평등지수의 비교와 평가

1) UNDP의 GII

GDI와 GEM은 1995년 UNDP에서 발표된 이래 각 국가에서 자국의 성평등을 평가하고 감시하는 수단으로 활용되어 왔다. 특히 우리나라의 경우 GDI에 비해 GEM이 매우 낮았기 때문에, 여성의 정치와 경제 대표성 제고에 대한 요구 수단으로 자주 활용했던 지수이다.

하지만 GDI와 GEM은 절대적인 성취수준에 크게 의존함에도, 소득 자료와 같은 지표의 3/4 이상은 추정에 의존하는 문제가 있었다. 또한 GDI는 성평등 해석상 오해로 잘못 활용되는 경우가 많았고, GEM은 고위직에서의 여성결정권한에 집중하다보니, 일반적인 여성의 일상생활에서의 권한을 보여주지 못한다는 비판이 있었다.

이러한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 만든 지수가 GII이다. GII는 기존 지수 추정에서 광범위하게 활용되었던 자료 대체(Imputation)에 의존하지 않았으며, 성불평등 정도로 지수 값을 산정하기 때문에 국가의 발전정도에 영향을 받지 않는 지수로 개발되었다. 더욱이 GII는 영역간의 남녀불평등이 서로 높은 상관관계를 가질수록 지수 값은 커지도록 설계하여, 국가의 정책지원이 어떤 영역에 우선순위를 두고 결정해야 할지를 판단할 수 있게 하였다.

UNDP가 발표한 GII는 기존 성평등지수의 단점을 극복한 측면이 있지만, 한편으로 다음과 같은 한계점을 가지고 있다. 첫째, 경제활동영역의 경우 지표가 제한적임에 따라 성평등 수준을 충분히 나타내지 못한다는 단점이 있다. 경제활동 영역에 대표적인 경제활동참가율은 포함되어 있지만, 노동시장의 직종격리, 남녀 임금격차는 포함되어 있지 않아 충분히 경제활동영역을 측정하지 못하고 있다. GII가 이들 지표를 포함하지 않은 이유는 성별로 분리된 측정 자료를 직접 입수할 수 없기 때문이지만, 이들 지표를 제외함으로써 경제활동영역의 성평등 정도를 충분히 반영하는데 한계를 가질 수밖에 없게 되었다. 둘째, GII에 포함되지 않아서 측정되지 않은 영역과 지표가 존재한다. 국제비교를 위해서는 신뢰할 수 있거나 최근 자료를 충분히 확보해야 한다. 그러나 자료의 한계로 인해서, 성평등 지수에 포함되어야 할 시간사용, 재산접근, 가정폭력, 지역단위 권한과 같은 여성복지와 관련된 주요한 지수영역 혹은 지표들이 포함되어 있지 못하다. 셋째, GII는 국가 성평등 수준관련 정책지표로써 한계가 있다. 특정 국가의 성평등 수준은 다양한 영역에서 이루어져야 하지만, GII는 세계 모든 국가가 공통적으로 생산하는 통계에 기초한 5개의 지표로만 구성되어 있다. 따라서 국가 성평등 수준을 위한 정책 목표를 GII 기준으로 국제적 순위를 설정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GII 보다 상대적으로 지표영역과 지표수가 많은 WEF의 GGI를 국가순위로 설정하는 것이 더 바람직할 것이다. 넷째, 여성보건 영역 추가에 대한 문제이다. GII는 모성사망율, 청소년 출산율 등이 여성보건, 미래 기회 제약이라는 측면에서 인간개발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판단하여, 이를 지수 산정에 포함시키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지표는 여성특화지표이기 때문에 건강영역에서 남녀불평등을 측정하는 지표로 부적절하다는 견해가 있다. 더욱이 여성특화지표는 지수 값 산정의 기술적인 부분의 한계점도 문제이다. GII의 경우 지표 값이 0.000~1.000의 범주를 갖게 되는데, 특정 지표값이 아주 낮으면 영역 간 분포문제 및 불평등에 대

한 강한 페널티 등으로 인해서 전체 지표값에 상당한 영향을 준다. 특히 모성사망비와 청소년출산율의 역수를 취해서 지표값을 산정함에 따라, 모성사망비와 청소년출산율이 상당히 낮은 국가들은 사망률과 출산율의 차이가 GII에 상당히 큰 영향을 주는 결과를 가져오게 된다.

2) WEF의 GGI

WEF는 2006년 성평등을 개인의 권리, 의무, 그리고 기회가 생물학적 성에 의해서 결정되어지는 않는 사회발전단계, 즉 남녀가 그들의 잠재능력을 완전하게 활용할 수 있는 단계로 정의하였다. WEF의 GGI는 다음의 세 가지 기준에 관심을 두고 개발되었다. 첫째, '수준'보다 '격차'에 초점을 두고 있다. 즉, 성평등을 한 국가의 실제수준에서 활용 가능한 자원과 기회의 수준이 아니라, 자원과 기회에 대한 성별 접근 차이로 측정하고 있다. 이를테면, 선택된 지표에서 여성과 남성의 격차가 감소할 경우 평등정도가 높아지는 것으로 본다. 둘째, 성과지표의 성별차이를 측정한다. GGI는 성과 지표에 관련된 기본적인 권리인 '건강, 교육, 경제참여, 정치 권한부여'에서 여성과 남성이 조화를 이루고 있는가를 보는데 목적을 둔다. 단, 국가의 특정 정책, 문화 또는 관습 등 투입 지표는 지수 산정에 활용하지 않지만, 국가의 프로필 작성을 위한 보조지표로 제시하고 있다.

2006년 소개된 GGI는 성불평등을 4개의 영역으로 구분하였다. 영역을 경제참여와 기회, 교육성취도, 정치권한부여, 건강과 생존으로 구분한 후 14개의 지표를 사용하여 측정한다. 여기서 사용된 지표는 GDI와 GEM에서 사용된 지표와 동일하며, 출생성비를 추가하였다. 모든 지표는 성별 비중과 성취수준을 성비(남성/여성)로 변환한 후, 지표의 평등지점을 1인 완전평등지점으로 하여 이를 초과할 경우 모두 1로 절삭하여 계산한다.

이러한 GGI도 두 가지 측면에서 비판을 받게 된다. 하나는 GGI의 측정이 여성과 남성 간의 성취에 대한 비(Ratio)로만 설명하고 있다는 비판이고, 둘째는 앞에 언급된 것으로 각 국가의 소득을 추정(HDRO의 추정) 자료에 의존하고 있다는 점이다.

3) Social Watch의 GEI

Social Watch는 2004년 교육, 경제참여, 권한에서의 성형평성을 측정하는 GEI를 발표한다. 이 지수의 특징은 GDI와 GEM에서 각각 제시된 영역을 포함하고 있다는 점이다. 교육영역은 성인 문해률과 초등, 중등, 고등교육 취학률에 의해 측정되고, 경제참여영역은 비농업유급종사자 여성비율과 여성과 남성의 추정소득 격차(HDRO 추정)를 사용한다. 그리고 권한영역은 전문기술직 여성비율과 행정관리직 여성비율, 의회여성비율과 장·차관 여성비율로 추정한다.

GEI는 각 지표에 대해 성별격차를 활용한다. 각 지표를 남녀의 성비로 점수화한 후 여성인구대비 남성인구를 가중치(여성인구/남성인구)로 적용하여 측정한다. 각 영역의 가중치는 동일하게 주어지며, 영역 내 지표의 가중치 또한 동일 가중치를 적용한다. 이처럼 GEI는 단순하고 이해하기 쉽게 측정된다. 하지만 GEI 측정은 국가 수준에서 성별 불평등의 절대 수준을 반영하는 것이 아니라, 국가간의 성별격차로만 비교한다. 이로 인해 GEI는 국가 수준에서 시간에 따라 성평등의 변화를 추적하기 다소 유용하지 못하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4) OECD의 SIGI

SIGI는 불평등을 초래하는 전통, 사회적 규범, 문화적 관습 등 투입 지표에 초점을 두고 산정된 지수라는 점에서 기존 성평등지수와 구분된다.

SIGI은 2009년 개발당시 OECD 국가를 포함하여 산정한다. 하지만 지수의 지표구성이 선진국을 평가하기에 부적합하다는 평가를 받으면서, 2012년 대상국가에서 OECD 회원국과 유럽연합 비 회원국으로 변경하고 일부 지표를 재선정하여 발표하고 있다. 이러한 개선에도 SIGI는 여러 종류의 지표를 결합하다 보니 지수의 해석에 혼동이 있고, 소녀와 여성의 권리 제약에 초점을 맞추다 보니 소년과 남성의 위치와 비교하지 못하는 단점이 존재한다. 또한 사회제도와 같은 투입지표가 성평등하다고 해도, 그에 따른 결과인 성과지표가 반드시 성평등하게 나타나지 않는다는 점도 지수의 한계로 지적된다.

5) EIU의 WEOI

WEOI는 여성의 경제적 기회가 법, 제도, 집행, 관습과 태도 등에서, 여성이 남

성과 평등한 조건으로 참여가 허용되고 있는지를 파악하는 지수이다. WEOI는 다음과 같은 한계점이 있다. 첫 번째로, WEOI의 지수가 여성의 경제활동에 있어 불평등을 측정하는 지수라는 것이다. 이는 타 성평등지수가 다양한 영역을 종합한 지수와 차별화된 지수임을 보여주는 특징이나, 한편으로 성평등을 경제활동 영역에 제한했다는 단점이기도 하다.

두 번째로, 구성된 지표의 대부분이 질적 지표이며 각 지표마다 다른 척도의 평가기준을 적용한다는 것이다. <표 V-14>에서 보이듯이 대부분의 지표는 수량화방법을 통해 점수화한다. 지표마다 점수 부여 방식이 다르고 점수화하는 방식에 주관적 요소가 포함될 가능성이 있다.

세 번째로는 불평등과 관련 없는 영역과 지표가 포함되어 있다. WEOI의 4개 영역은 경제활동을 세분화하여 여성의 차별 정도를 파악할 수 있도록 지표를 구성하였다. 하지만 1개의 영역 즉, '일반적 사업 환경'은 성불평등을 측정하는 지표로 구성한 것이 아니라 경제활동과 관련된 일반적 환경을 지표로 하고 있다. 즉, 경제활동에 대한 기초 사업 환경을 포함함으로써, 성평등과 관련이 없는 부분이 지수 산정에 영향을 미치게 하는 것이다.

2. 국제사회에서 한국의 성평등 위치

1995년 GDI와 GEM이 발표된 이래 다양한 국제성평등지수가 발표된다. 하지만 2012년 현재 매년 발표되고 있는 대표적인 성평등지수는 WEF의 GGI와 UNDP의 GII로 요약될 수 있다.

두 지수는 지표의 구성과 측정방법이 달라서, 국제사회에서 한국의 성평등 수준을 매우 다르게 보여주고 있다. GGI에서 한국의 성평등 수준은 매우 낮다. 2011년 한국의 GGI 순위는 135개국 중 107위로 첫 발표 이래 최하위 수준을 유지한다. 반면 GII는 2010년 첫 발표에서 20위를 기록했고 2011년 11위로 상승하고, 순위에서 한국의 수준을 상위권에 포함시키고 있다. 이처럼 두 지수의 서로 상반된 결과는 지표구성과 측정방법의 차이에 나타난 것으로, 한국정부는 물론, 연구자와 여성 관련 NGO, 국내 언론인에게 한국의 성평등 수준에 대해 혼동을 주고 있다.

이에 본 절은 GGI와 GII에 대한 특징과 차이를 비교 분석⁶⁵⁾하고 두 지수의 한국 순위 제고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가. GGI와 GII의 특징 비교

1) 지표구성의 차이

GGI는 2006년 WEF에서 처음 발표한 이후 매년 발표하는 지수이다. 이 지수는 경제, 정치, 교육, 건강에 대해 성 격차를 통해 성평등 정도를 파악하며, 지표의 수준 혹은 달성 정도 보다는 남녀격차를 측정하는데 초점을 두고 있다. 이에 지수가 지향하는 성 평등은 여성의 권한 수준 향상보다 성별 격차 해소에 더 무게를 두고 있다.

GII는 앞 절에서 언급하였듯 GDI와 GEM의 주요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2010년 UNDP에서 새로 개발·공포된 지수이다. 이 지수는 여성과 남성의 성취 불평등으로 나타나는 인간개발의 손실을 측정하고 있다.

이처럼 측정 관점이 다른 두 국제성평등지수는 영역과 지표구성에서도 다르다. 영역구성에 있어 GGI는 경제, 교육, 정치권한, 보건 등 4개 영역으로 구축되어 있다. 경제 영역은 경제활동, 임금격차, 관리자 및 고위임직원 비율 성비 등 5개 지표로, 교육 영역은 문자 해독율, 학교급별 취학률 성비 등 4개 지표로 구성되어 있다. 그리고 보건 영역은 건강기대수명, 출생성비로 구성되고, 정치권한 영역은 국회위원, 국무위원, 정부수반의 재직기간의 성비로 구성된다. 각 영역은 최소 3개 이상의 지표로 측정되며, 활용되는 지표값은 성비이다. 반면 GII는 세계의 영역으로 구성되어 있다. 3개의 영역은 생식보건, 권한, 노동시장이다. 생식보건은 모성사망비와 청소년 출산율로 여성의 출산과 관련된 지표로 구성된다. 권한 부문은 여성의원비율과 중등학교 이상 교육받은 인구비율을 활용하여 정치적 권한과 인적개발 정도를 측정한다. 중등학교 이상 교육 받은 인구비율은 일반적으로 교육 영역으로 볼 수 있으나, GII는 교육 영역이 없기 때문에 이를 권한 영역에 포함하고 있다. 그리고 경제활동 영역은 경제활동참가율 지표로 구성되

65) 국제성평등지수에 대한 특징, 지표구성, 측정방법, 비판 등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제V 장 1절의 내용을 참고할 것.

어 있다. GII는 각 영역별로 1~2개의 지표로 구성되어, 불평등으로 나타나는 성과의 손실을 측정한다.

〈표 V-16〉 GGI와 GII의 구성지표 비교

영역	지표	GGI(성비)	GII(비율)
경제활동	경제활동참가율	○	○
	유사업무의 남녀임금형평성	○	-
	추정소득	○	-
	행정·관리직 비율	○	-
	전문·기술직 비율	○	-
교육	문해율	○	-
	초등교육 취학률	○	-
	중등교육 취학률	○	
	고등교육 취학률	○	
보건	건강 기대 수명	○	-
	출생성비	○	-
	모성사망비	-	○
	청소년출산율	-	○
정치권한	국회의원 비율	○	○
	장·차관 비율	○	-
	(최근 50년 이내) 국가 혹은 정부 수반의 재임 기간	○	-
	25세 이상 인구 중 중등이상 교육 받은 비율	-	○

지표구성에서 알 수 있듯, GGI는 GII에 비해 더 많은 지표로 지수를 산정한다. 지표수는 GGI가 16개, GII가 5개로 구성되어 있다. 두 지수의 지표구성에서 동일하게 측정되는 지표는 2개이고 1개는 유사지표이다. 동일 지표 2개는 경제활동참가율과 국회의원 비율로, 지표 명뿐 아니라 산정에 활용되는 통계의 자료원 또한 동일하다. 유사지표 1개는 교육관련 지표이다. GGI은 교육영역에서 문해율과 더불어 취학률을 초등, 중등, 고등교육으로 나누어 활용하는 반면, GII는 중등교육 이상 교육받은 비율을 정치권한 영역의 하나로 측정하고 있다. 세 개의 지표를 제외하고 GGI는 경제활동 영역에서 임금, 추정소득, 행정·관리직 비율, 전문·기술직 비율 등 4개의 지표와, 교육 영역에서 문해율 지표를 추가로 활용하고 있

다. 반면 보건 영역의 경우 GGI가 건강 기대수명 성비와 남녀출생 성비를 활용하여 출생과 건강한 삶에 대한 질을 측정하지만, GII가 모성사망비와 청소년출산율과 같은 여성특화지표를 활용하여 성평등 수준을 측정하고 있다. 또한 정치적 권한의 경우 GGI가 장·차관 비율과 최근 50년 이내 국가 혹은 정부 수반의 재임 기간을 GII에 비해 추가로 활용하지만, GII는 25세 이상 인구 중 중등 이상 교육 받은 비율을 국회의원 비율과 함께 측정 지표로 활용하고 있다.

2) 측정방법의 차이

GGI와 GII는 측정방법에 있어서도 서로 다른 특징을 보인다. 두 지수의 측정방법의 차이는 다음과 같다.

첫째, 측정관심의 차이이다. GGI의 관심은 수준보다 격차에 더 관심이 있다. 즉, GGI는 수준을 측정하는 것이 아니라 격차를 측정하고 있다. 따라서 GGI의 순위는 각국의 수준 순위가 아니라 격차의 순위를 보여주는 것이다. 반면, GII는 성불평등이 성취수준에 미치는 영향에 관심이 있다. 즉, GII는 성취수준에 관심을 갖고, 성불평등으로 인한 성취하락 정도를 측정하는 지수이다.

둘째, 측정기준의 차이이다. GGI는 격차⁶⁶⁾를 측정하기 위해 남녀의 성비(Ratio)를 사용한다. 성비는 남성의 성취수준을 기준으로 여성의 성취수준을 측정하고 있다. 격차로 측정하는 방법은 자원과 기회에 대한 수준과 접근을 오로지 차이로만 보기 때문에 국가의 발달수준과 관계없다. 하지만 수준으로 느끼는 체감적 평등과 거리가 있다는 문제를 가지고 있다. GII는 성별 평균성취 수준을 기초로 측정된다. 수준을 기반으로 하는 방법은 자원과 기회에 대한 남녀의 접근 수준을 쉽고 직감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반면 국가의 발달 수준에 크게 영향을 미친다는 단점이 있다.

셋째, 가중치 적용의 차이이다. GGI는 영역에 대한 가중치는 고려하지 않지만, 지표에 대한 가중치를 고려하고 있다. 지표의 가중치는 1%p 변화를 지표별 표준편차로 나눈 값($= \frac{0.01}{\text{지표별표준편차}}$)을 활용⁶⁷⁾하고 있다. 이에 비해 GII는 영역의

66) 격차(gap)는 빈부, 임금, 기술 수준 따위가 서로 떨어져 다른 정도를 의미하는 것으로 보통 차이(difference)와 비(ratio)를 활용하여 측정함.

67) 가중치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본 보고서 제V장 1절을 참조할 것.

경우 산정방법의 특성상 필요 없고 지표는 가중치를 적용하지 않는다.

넷째, 산정방법에 차이가 있다. 먼저 GGI는 성비를 가중치로 보정한 후 영역별 지수를 산술평균하여 산정하고, 최종 종합지수는 영역별 점수를 산술평균 방식으로 계산된다. 지수산정방법으로 보면 GGI는 단순가법형 지수⁶⁸⁾ 유형으로 구분된다. 단순가법형 지수는 영역간 지표들의 1:1완전대체(perfect substitution)⁶⁹⁾가 가능하고 표준화 방법에 민감한 특징을 갖는다. 반면 GII는 Atkinson 불평등지수 산정방식을 활용하고 있다. 산정방법은 기하평균을 통해 영역별, 지표별 점수연관성을 고려하고 성별로 수준을 파악하고 조화평균과 불평등 혐오가 없는 상태(산술평균)와 비교하여 불평등에 대한 손실을 구한다. 이와 같은 산정 방법으로 인해 GII는 지표간 혹은 영역간 연관성을 고려하면서 성별 불평등을 측정하는 불평등 및 연관성 민감형 지수 유형으로 구분한다. 연관성 민감형 지수 유형의 특징은 영역간 1:1 대체가 불가능하고 한 영역의 수준이 독립적으로 영향을 주는 것이 아니라 다른 영역과 연관되어 상호 영향을 주는 것이다. 이로 인해 상대적으로 영역 간 격차가 낮은 국가는 격차가 큰 국가에 비해 동일한 수준일지라도 더 평등한 것으로 측정된다.⁷⁰⁾

〈표 V-17〉 GGI와 GII의 측정방법 비교

구분	GGI	GI
측정관심	성별격차	성취수준에 있어 성불평등정도
측정기준	성비(sex ratio)	성별 평균성취
가중치	지표 가중치 적용 : 1%p 변화에 대한 표준편차 변화 단, 영역가중치는 적용하지 않음.	없음
산정유형	단순 가법형 지수 - 산술평균 - 영역간 지표 값의 1-1 대체가 가능	불평등 및 연관성 민감형 지수 - Atkinson 불평등지수 산정방식 활용 - 기하평균과 조화평균 활용

68) 지수 유형은 김태홍 외(2011), 「지역성평등지수 표준안 연구」 p6. 참조.

69) 이와 같은 특징으로 인해 가법형 성평등 지수는 어떠한 영역의 값을 개선해도 개선정도가 동일하면 동일한 성평등 개선효과를 보임.

70) 이는 산술평균은 항상 기하평균보다 크거나 같다는 수학적 이론과 동일.

나. GGI와 GII로 본 한국의 성평등 위치

1) GGI와 한국의 성평등 수준

GGI는 앞에서 언급했듯 성 평등을 남녀의 수준이 아니라 격차를 통해 측정한다. 국제기구에서 발표되는 각종지표를 보면 한국의 수준은 점차 상승하고 있지만 남녀의 격차는 여전히 큰 국가임을 보여준다. 이에 국제성평등지수 중 GGI로 본 한국의 성평등 수준은 매우 낮다. 2006년 GGI가 첫 발표 시 한국은 115개국 중 92위로 나타난다. 하지만 이후 순위가 더 낮아져 2009년에는 134개국 중 115위로 평가대상국가 중 최하위 수준으로 하락한다. 2010년은 134개 국가 중 104위로 상승하지만, 2011년 107위, 2012년 108위로 다시 하락하고 있다. 이로 인해 한국의 GGI 수준은 2006년 이래 OECD 34개 회원국에서 터키 다음으로 낮은 성평등 국가로 나타난다.

〈표 V-18〉 한국 GGI의 순위변화

(단위: 개, 순위, 점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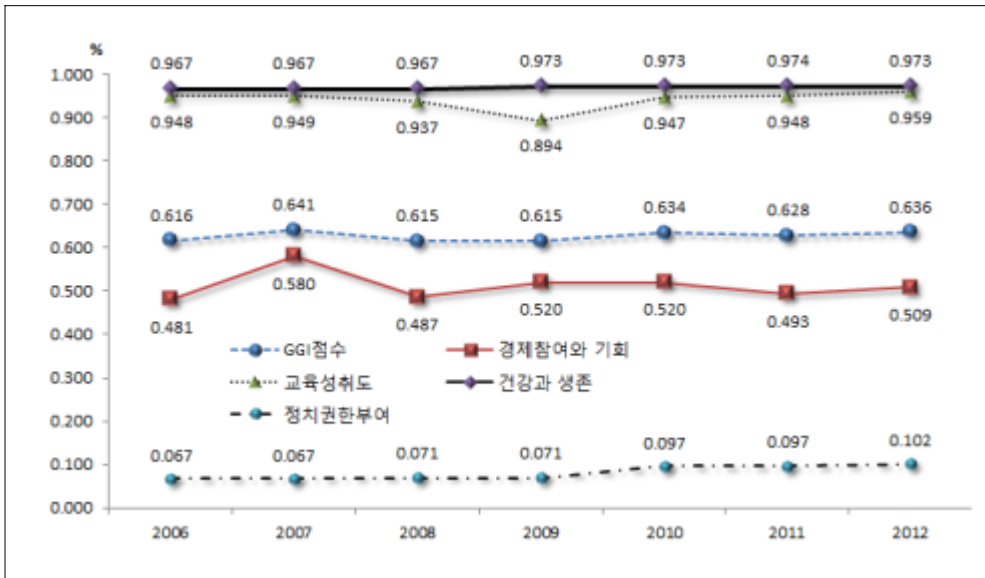
구분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대상국가	115	128	130	134	134	135	135
한국순위	92(33)	97(33)	108(33)	115(33)	104(33)	107(33)	108(33)
한국점수	0.6157	0.6409	0.6154	0.6146	0.6342	0.6281	0.6356

주 : ()는 OECD 34개국 중 한국의 순위임.

출처: WEF(각 연도), The Global Gender Gap Report.

한국의 GGI 점수가 낮은 원인을 찾기 위해 4개의 하위영역을 살펴보았다. [그림 V-1]에서 보듯이 4개의 하위 영역 중 건강과 생존 영역과 교육성취도 영역은 다른 영역에 비해 높게 나타난다. 건강과 생존 영역은 2006년~2008년까지 0.967을 유지하다가, 2009년 0.973으로 상승한 후 커다란 변화 없이 유지되고 있다. 건강과 생존 영역은 2개의 지표로 구성되어 있다. 하나는 건강기대수명 성비이고 다른 하나는 출생성비이다. 건강기대수명은 여성이 2006년 발표 이래 여성이 남성보다 훨씬 높아 최고점 1.06을 2012년까지 유지한다. 반면 출생성비(남아 대비 여아 출생자 수) 2011년 0.94로 나타나지만 그 외 연도에서는 0.93을 보여 주고 있다. 한국의 출생성비가 크게 개선되었지만, 아직 셋째 아 출생에서 높기 때문이다.⁷¹⁾

(단위: 점수)



[그림 V-1] 한국 GGI의 하위지수 점수 변화

교육성취도 영역은 2006년 0.948에서 2007년 0.949로 소폭 상승하지만, 2008년에 이어 2009년에는 0.894로 크게 하락하게 된다. 다행히 이후 다시 상승하여 2012년 0.959로 나타난다. 교육성취도 영역은 4개의 지표로 구성되어 있다. 하나는 문자해독율 비율 성비와 나머지는 취학률 성비로 초등, 중등, 고등으로 나누어 측정한다. 문자해독율은 국제사회에 공식적으로 발표된 한국의 통계는 없다. 하지만 국제사회에서 한국의 문자해독율 성비를 2008년까지 0.97~0.98로 사용하다가 2009년 발표부터는 1.00으로, 남녀의 문자해독율이 동일한 것으로 보고 있다. 취학률의 경우 초등교육 성비는 대부분의 연도에서 0.98~1.00으로 나타난다. 단, 2009년의 초등교육 성비는 0.93으로 크게 낮아져서 2009년 교육성취도 점수와 더불어 한국의 GGI 종합점수를 낮추는 원인이 된다. 중등교육 성비 또한 2006년 이래 0.96~1.00으로 나타나지만 2008년과 2009년 0.94로 낮은 값이 활용

71) 2011년 기준 셋째 아 출생성비는 여아 100명당 111명 출생하고 있다. 제 4차 여성정책 기본계획은 2017년까지 셋째 아 출생성비를 여아 100명당 105명까지 낮출 경우 한국의 출생성비는 자연출생률에 가깝게 되어 GGI의 출생성비(역비)는 0.93에서 0.95로 상승되어질 것임.

되어 초등교육 성비와 더불어 교육성취도를 낮추는 원인으로 작용하였다.⁷²⁾ 고등교육 취학률 성비는 2006년 0.63에서 점차 상승하여 2012년 0.72로 높아졌다. 한국의 고등교육 진학률이 2009년 이래 여학생이 남학생을 추월했음⁷³⁾에도 국제사회에서 한국의 고등교육 취학률이 높지 않은 것은 고등교육취학률 산정방식이 총 취학률의 성비로 계산되기 때문이다. 즉, 총재학생 중 대상인구(만 18~21세)로 나누어 구해짐에 따라, 우리나라와 같이 의무 병역제도를 가진 국가는 남학생 수가 여학생보다 훨씬 많게 되는 문제 때문이다. 이와 같은 이유로 한국의 교육수준은 남녀 모두 매우 높음에도 산정방식으로 인해 낮게 나타나고 있다.

한편 경제참여와 기회, 정치역량강화 점수는 다른 하위 영역들에 비해 낮은 점수를 보이고 있다. 경제참여와 기회 경우, 2006년 0.481에서 2007년 0.580으로 증가한다. 이후 2008년은 0.487로 감소하다 2009년에 0.520로 다시 상승, 그리고 2012년에 0.509로 다시 하락한다. 이와 같은 증감으로 인해 한국의 2012년 경제참여와 기회영역 점수는 2006년과 비교하여 0.028p 상승하지만, 2009년과 비교하여 0.011p 하락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경제참여와 기회 영역은 5개의 지표로 측정된다. 경제활동참가율 성비와 전문·기술직 성비 점수는 점차 상승하고 상승 정도가 낮아서, 이 영역의 순위를 높이는데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다. 추정소득의 성비는 2010년 0.52를 정점으로 하락하여 2012년 0.44로 떨어져 순위는 2006년 중위권 2012년 하위권으로 밀려난다. 그리고 유사직종의 성별 임금격차는 경영자의견조사 결과⁷⁴⁾로 실제 임금격차가 아니기 때문에 통계 변동이 다소 크다. 이 지표에 대해 2007년 최고 0.82(8위)로 나타나서 2007년 경제참여와 기회 영역의 점수와 순위를 크게 상승시켰지만, 2012년은 0.54(116위)에 불과하다. 한편 관리자 비율의 성비는 2006년 이래 상승추이를 보이지만, 경제참여와 기회에 가장

72) GGI의 취학률 통계는 UNESCO, World Bank 등 다양한 자료원으로 활용하고 있음. 한국의 통계는 주로 World Bank 자료를 활용하고 있음. 자료원이 발표연도에 따라 다소 다르지만 GGI는 한국의 초등교육 취학률 성비를 0.98-1.00, 중등교육 취학률은 0.96~1.00으로 나타남. 2009년은 두 지표 각각 0.93와 0.94로 발표함. 하지만 자료원을 통해 실제 계산해 본 결과 두 지표의 성비는 모두 0.99(2007년 통계)로 나타남. 참고로 고등교육의 취학률은 0.67로 동일했음.

73) 주재선 외(2011), 『한국의 성인지 통계』에 의하면 고등학교에서 대학교로 진학하는 비율은 2009년 여학생이 82.4%, 남학생이 81.6%이고, 2011년은 각각 75.0%, 70.2%로 여학생이 더 높게 나타남.

74) 이 조사의 한국 파트너는 KAIST임.

낮은 점수를 보인다. 2006년 0.06이고 2012년 0.11로 순위에서도 104위로 매우 낮다. 경제참여와 기회 영역은 2012년 135개국 중 116위로 매우 낮은 수준을 보이는 영역으로, 전반적으로 지표관리가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정치권부여 영역의 경우 4개의 영역 중 가장 점수가 낮고 순위 또한 최하위권에 속하는 영역이다. 이 영역은 3개의 지표 즉, 국회의원 비율 성비, 장·차관 성비, 최근 50년 이내 국가 혹은 정부 수반의 재직 성비로 구성되어 있다. 국회의원 성비는 점수와 순위 모두 첫 발표이후 정체상태에 있다. 2006년 0.15에서 2012년 0.19로 높아졌지만, 순위는 오히려 63위에서 81위로 하락한다. 장·차관 성비는 최근 점수가 개선되고, 순위 또한 상승한다. 하지만 여전히 중하위순위이며, GGI 개선을 위해 성비의 개선이 매우 필요한 지표 중 하나이다. 최근 50년 이내 국가 혹은 정부 수반의 재직 성비는 현재까지 여성이 총리로 재직한 1년이 전부로 2008년 이후 0.02점이다. 이 지표는 점수는 매우 낮지만 순위는 중상위권에 속한다. 하지만 2008년 이후 순위 또한 점차 하락하는 추이를 보이는 지표로, 개선의 여지가 매우 큰 지표이다.

〈표 V-19〉 한국 GGI의 영역 및 지표별 점수와 순위 변화

(단위: 점수, 순위)

영역	지표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경제 참여와 기회	경제참여와 기회 점수	0.481 (96)	0.580 (90)	0.487 (110)	0.520 (113)	0.520 (111)	0.493 (117)	0.509 (116)
	경제활동참가율 성비	0.68 (68)	0.70 (76)	0.70 (77)	0.71 (87)	0.73 (83)	0.73 (84)	0.73 (83)
	유사직종 종사자 임금격차 성비	0.49 (105)	0.82 (8)	0.53 (113)	0.55 (109)	0.52 (116)	0.51 (126)	0.54 (117)
	소득 추정 비율 성비	0.48 (69)	0.46 (84)	0.40 (104)	0.52 (83)	0.52 (88)	0.41 (113)	0.44 (109)
	관리자 및 고위임직원 비율 성비	0.06 (98)	0.08 (104)	0.09 (107)	0.10 (114)	0.11 (111)	0.11 (111)	0.11 (104)
	전문·기술직 비율 성비	0.64 (71)	0.61 (80)	0.67 (80)	0.66 (89)	0.69 (87)	0.69 (87)	0.69 (87)
교육 성취도	교육성취도 점수	0.948 (82)	0.949 (94)	0.937 (99)	0.894 (109)	0.947 (100)	0.948 (97)	0.959 (99)
	문자 해독율 성비	0.97 (61)	0.98 (65)	0.98 (70)	1.00 ()	1.00 (1)	1.00 (1)	1.00 (1)
	초등교육 취학을 성비	0.99 (63)	1.00 (64)	0.99 (91)	0.93 (120)	0.98 (99)	0.99 (96)	0.99 (9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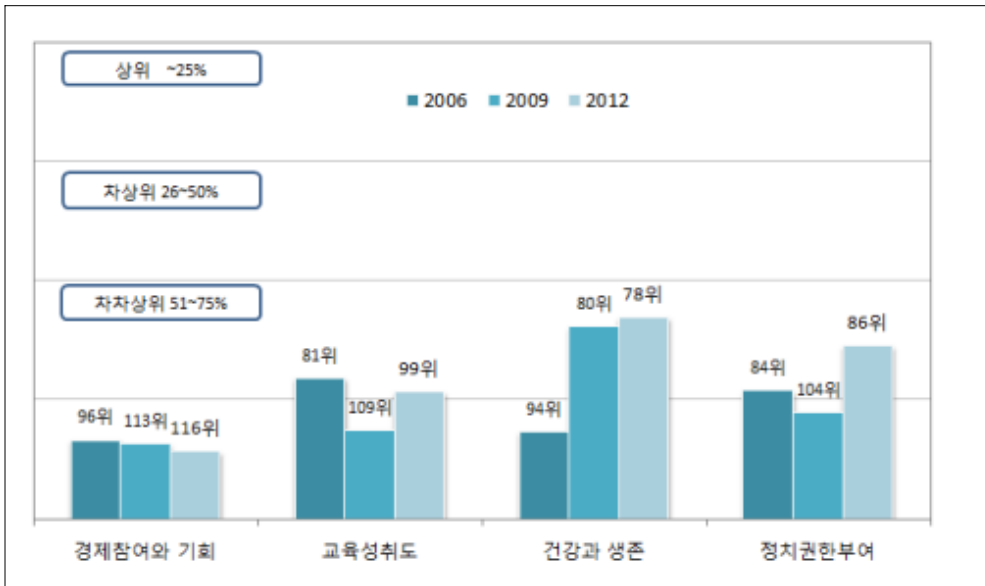
역영	지표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중등교육 취학률	1.00 (1)	1.00 (1)	0.94 (103)	0.94 (106)	0.96 (97)	0.96 (97)	0.99 (91)
	고등교육 취학률 성비	0.63 (89)	0.62 (98)	0.65 (104)	0.67 (106)	0.69 (109)	0.70 (110)	0.72 (112)
건강과 생존	건강과 생존 점수	0.967 (94)	0.967 (106)	0.967 (107)	0.973 (80)	0.973 (79)	0.974 (78)	0.973 (78)
	건강 기대 수명 성비	1.06 (1)	1.06 (1)	1.06 (1)	1.06 (1)	1.06 (1)	1.06 (1)	1.06 (1)
	출생성비(역비)	0.93 (110)	0.93 (120)	0.93 (122)	0.93 (116)	0.93 (124)	0.94 (124)	0.93 (121)
정치권한 부여	정치권한 부여 점수	0.067 (84)	0.067 (95)	0.071 (102)	0.071 (104)	0.097 (86)	0.097 (90)	0.101 (86)
	국회의원 비율 성비	0.15 (63)	0.15 (73)	0.16 (78)	0.16 (83)	0.17 (78)	0.17 (79)	0.19 (81)
	장·차관 비율 성비	0.06 (99)	0.06 (110)	0.05 (120)	0.05 (124)	0.14 (74)	0.14 (75)	0.14 (80)
	(최근50년 이내) 국가 혹은 정부 수반의 재직 기간 성비	0.01 (30)	0.01 (32)	0.02 (28)	0.02 (30)	0.02 (33)	0.02 (40)	0.02 (41)

한국의 GGI 하위영역의 순위 변화를 살펴보면, 경제참여와 기회 영역은 2006년 발표 이래 하위권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고, 순위 또한 점차 하락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점수에서도 2012년 현재 2006년과 비교하여 0.028p 상승했지만 2009년과 비교하여 0.011p 하락한 것으로 나타난다. 이는 구성 지표 대부분이 상승정도가 매우 낮고 점수 또한 낮기 때문이다. 특히 소득추정 성비의 경우 2009년은 물론 2006년과 비교해서도 2012년 점수가 더 낮아진 것으로 나타난다.

교육성취도 영역은 2009년 하위권으로 잠시 떨어지나, 2012년 중하위권을 보인다. 한국의 교육수준이 높고 실제 격차 또한 거의 없음에도 순위가 낮게 나타나는 이유는 고등교육취학률 산정 방법의 문제가 가장 크다⁷⁵⁾. 한국의 고등교육취학률 성비는 2006년 0.63에서 2012년 0.72로 상승하지만 순위는 89위에서 112위로 하락한다.

75) 산식과 관련하여 여성가족부는 2010년 WEF에 고등교육취학률 개선을 요청했으나, WEF는 교육관련 국제기구의 집계 방식이 바뀌지 않는 한 개선할 수 없다는 답변을 했음.

(단위: 순위)



주 : 그래프의 막대 높이는 순위를 대상국가 수로 조정한 위치임

[그림 V-2] 한국 GGI의 하위지수의 순위 변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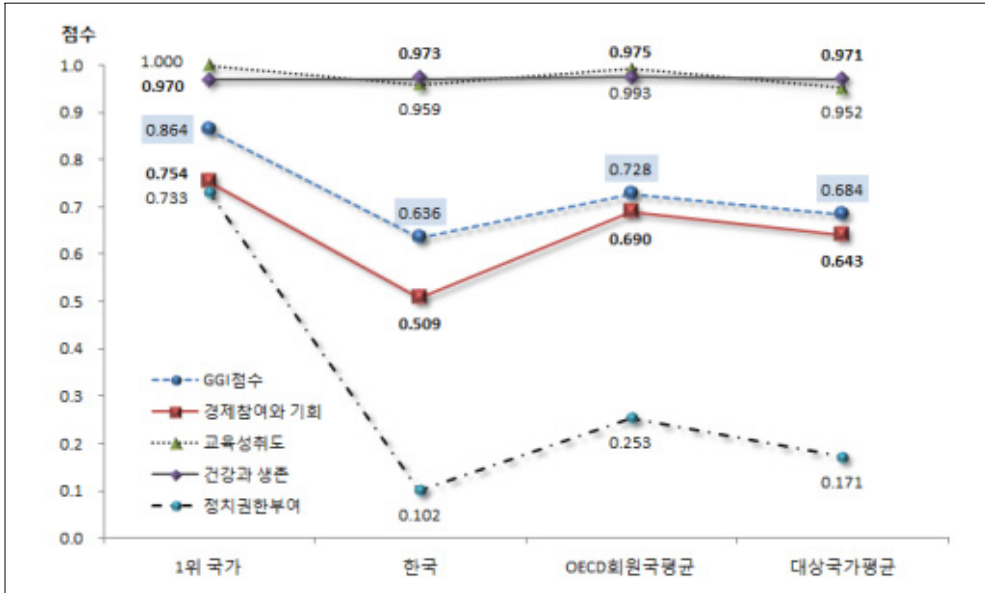
건강과 생존은 출생성비가 개선되면 순위가 많이 개선된 영역이다. 2006년 하위권에서 2012년 중하위권으로 상승하며, 향후 개선여지도 충분하다. 특히 출생성비(역비)가 2006년부터 2012년까지 대부분 0.93으로 나타나는데, 현재 한국의 출생성비가 자연출생성비에 수렴하고 있어 개선의 여지가 있다.

마지막으로 정치권한부여 영역은 매우 낮은 점수를 보임에도 순위는 중하위권으로 진입한 상태이다. 이 영역은 점수 측면에서 가장 상승할 여지가 많은 영역이며, 한국의 GGI 순위 제고가 가장 필요한 영역이기도 하다.

한편 2012년 한국의 GGI 점수는 1위 국가와 비교하여 0.228p 낮고, OECD 회원국 평균과 비교하여 0.125p 낮다. 심지어 대상국평균과 비교하여 0.048p 낮은 것으로 나타난다. 영역별로 보면 한국은 정치권한부여 영역에서 다른 국가와 가장 큰 차이를 보인다. 이 영역은 점수는 1위 국가와 비교하여 무려 0.631p나 낮으며, OECD 회원국 평균과 비교해서도 0.243p가 낮다. 다음으로 다른 국가와 큰 차이를 보이는 영역은 경제참여와 기회 영역이다. 이 영역은 1위 국가(0.245p↓)와 OECD 회원국 평균(0.235p↓)은 물론 대상국가평균에 비해 0.134p가 낮다. 이

와 같은 결과는 한국의 GGI 순위 제고를 위해 가장 중점으로 관리해야 할 부분이 정치권한부여와 경제참여와 기회 영역임을 말해준다.

(단위: 점수)



[그림 V-3] 한국 GGI의 하위지수 점수의 수준 비교(2012년)

이에 비해 건강과 생존 영역과 교육성취도에서의 차이는 크지 않다. 특히 건강과 생존 영역은 1위 국가에 비해 0.003p 높게 나타난다. OECD 회원국 평균과 비교해도 0.001p 낮은 것에 불과하여, 이 영역의 차이는 거의 없는 것으로 나타난다. 그럼에도 한국 순위가 매우 낮은 것은 많은 국가에서 이 영역의 성별격차가 거의 없는 '1'에 가까운 점수를 받기 때문이다. 교육성취도는 대상국가평균보다 0.007p 높고 1위 국가와 OECD 회원국 평균보다는 각각 0.041p와 0.023p 낮게 나타난다. 교육성취도는 대부분의 국가에서 성별 차이가 없지만 한국은 고등교육 취학률의 산정에서 비교적 큰 격차를 보임에 따라 중하위수준의 성평등을 보이고 있다.

〈표 V-20〉 지난 6년간 GGI 하위영역의 점수 변화

(단위 : 점수)

구 분		1위 국가 (A)	한국(B)	OECD 국가평균 (C)	대상국가 평균(D)	A-B	C-B	D-B
2006	GGI 점수	0.813	0.616	0.700	0.662	0.197	0.112	0.046
	경제참여와 기회	0.731	0.481	0.630	0.596	0.251	0.198	0.116
	교육성취도	0.999	0.948	0.988	0.940	0.051	0.039	-0.008
	건강과 생존	0.973	0.967	0.976	0.973	0.006	0.009	0.006
	정치 권한부여	0.550	0.067	0.207	0.138	0.483	0.203	0.071
2012	GGI 점수	0.864	0.636	0.728	0.684	0.228	0.125	0.048
	경제참여와 기회	0.754	0.509	0.690	0.643	0.245	0.235	0.134
	교육성취도	1.000	0.959	0.993	0.952	0.041	0.023	-0.007
	건강과 생존	0.970	0.973	0.975	0.971	-0.003	0.001	-0.002
	정치 권한부여	0.733	0.102	0.253	0.171	0.631	0.243	0.070
2006~2012 증감	GGI 점수	0.051	0.020	0.028	0.022	-	-	-
	경제참여와 기회	0.023	0.028	0.060	0.046	-	-	-
	교육성취도	0.001	0.011	0.004	0.013	-	-	-
	건강과 생존	-0.003	0.006	-0.001	-0.001	-	-	-
	정치 권한부여	0.182	0.034	0.046	0.033	-	-	-

출처: WEF(각년도), *The Global Gender Gap Report*.

2) GII와 한국의 성평등 수준

GGI의 한국 순위는 2010년 첫 발표 시 138개 국가 중 20위, 2011년은 145개 국가 중 11위를 차지했다. 이는 GGI에서 고전을 면치 못했던 것과 비교하면 매우 높은 순위이다. 기존 성평등지수 순위에 비해 GII에서 한국의 순위가 높은 주요 이유는 첫째로, 생식건강영역에서 청소년출산율이 매우 낮기 때문이다. 생식건강 영역은 두 개의 지표가 있다. 하나는 모성사망비로 출생아 10만명 당 모성사망수를 말하여, 한국은 모성사망비가 18명으로 OECD 회원국의 평균(약 12명)보다 많지만 대상국가평균 17명과 비교하면 매우 낮은 편에 속한다. 또 다른 지표인 청소년출산율은 해당 연령(15~19세) 여성 천명 당 출산하는 자녀수로, 한국은 2.3명이다. 이는 GII 대상국가 중 최하위로, OECD 회원국 평균(약 17.2명)과

비교해도 매우 작은 값이다. 두 번째로 한국의 GII 순위가 높은 이유는 높은 교육수준에 있다. 중등이상 교육 받은 비율에서 여성과 남성이 각각 79.4%와 91.7%로 OECD회원국 평균(각각 74.8%, 79.3%)에 비해 남녀모두 높다. 하지만 이외 두 개의 지표, 즉 여성의회의원비율과 여성경제활동참가율은 OECD 회원국 평균(각각 24.6%, 52.3%)은 물론 대상국가 평균(17.7%, 51.5%) 보다 낮은 것으로 나타난다.

이처럼 5개의 지표 중 2개의 지표가 대상국가 평균 이하임에도 높은 순위를 차지할 수 있었던 것은 지수의 산정방식 때문이기도 하다. GII는 불평등 및 연관성 민간형 지수로 영역간 연관성을 고려하여 산정한다. 즉, GII는 영역간 연관성을 가지고 측정하기 때문에, 특정 영역이 매우 낮은 값을 가질 경우, 전체 불평등 수준이 크게 낮아지는 특징⁷⁶⁾을 갖는다. 예를 들어 보면, 호주의 경우 한국에 비해 모성사망률이 낮고, 여성의회의원비율이 높으며, 경제활동참가율과 중등학교 이상의 교육을 받은 인구의 비율에서 한국보다 좋은 값을 보여준다. 하지만 청소년출산율이 한국보다 훨씬 높기 때문에, 한국보다 성불평등이 높은 국가로 나타난다. 이는 일본과 비교에서도 동일하다. 또한 GGI가 격차로만 성평등을 측정하는 것에 반해, GII는 남녀의 수준과 남녀의 성불평등으로 오는 성취수준의 감소로 측정하고 있다. 그리고 이것은 한국과 같이 교육수준은 높지만, 성격차가 높은 국가에게 다소 유리하게 작용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하지만 한국이 GII에서 안정적으로 상위그룹을 지속해 가기 위해서는 여성의회의원비율과 여성 경제활동참가율의 개선이 요구되며 국제사회에 전달되는 통계관리가 필요할 것이다.

76) 이와 같은 특징은 GII 산정과정에 기하평균을 활용하고 있기 때문임.

〈표 V-21〉 GII 순위와 점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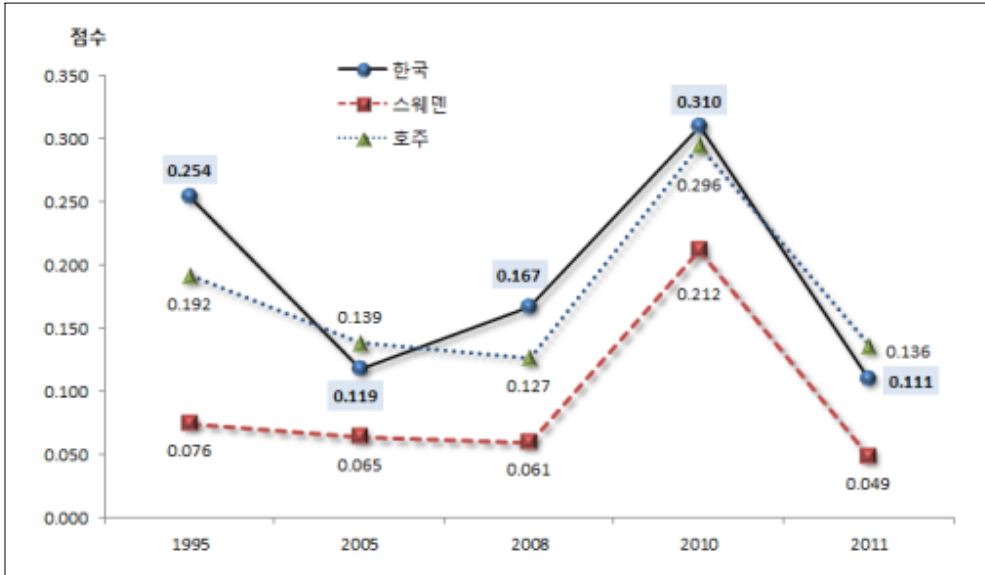
(단위: 10만명당, 1000명당, %)

국가	순위	점수	생식 건강		여성 권한			노동참여	
			모성 사망비	청소년 출산율	여성의회의원비율	중등이상 교육 받은 인구(25세 이상)		경제활동참가율	
						여성	남성	여성	남성
2010년 한국	20(18)	0.310	14	5.5	13.7	79.4	91.7	54.5	75.6
2011년 한국	11(10)	0.111	18	2.3	14.7	79.4	91.7	50.1	72.0
스웨덴	1	0.049	5	6.0	45.0	87.9	87.1	60.6	69.2
일본	14	0.123	6	5.0	13.6	80.0	82.3	47.9	71.8
호주	18	0.136	8	16.5	28.3	95.1	97.2	58.4	72.2
미국	47	0.299	24	41.2	16.8	95.3	94.5	58.4	71.9
OECD 회원국	-	0.163	12	17.2	24.6	74.8	79.3	52.3	69.0
대상국가평균	-	0.492	176	58.1	17.7	50.8	61.7	51.5	78.0

주 : 1) ()는 OECD 회원국내 순위. 2) GII 점수는 낮을수록 성평등한 것임.
 3) OECD 회원국은 회원국 점수를 단순평균 값임.

자료 : UNDP(각년도), Human Development Report.

(단위: 점수)



[그림 V-4] GII의 국가별 점수 비교

3. 국제성평등지수의 한국 순위 제고방안

본 절은 제4차 여성정책기본계획(안) 수립에서 제시된 주요 지표의 전망치가 달성될 시 개선되는 GGI와 GII 순위를 모의실험하고 더불어 두 지수의 개선 방안을 논하고자 한다.

가. 한국의 성평등 목표와 GGI 모의실험

제4차 여성정책기본계획(안)은 2013년에서 2017년까지 수행되며, 서로 존중하고 소통하는 성평등사회를 비전으로 OECD 평균 수준의 여성경제활동참가율 달성, 촘촘한 안전망의 구축과 삶의 질 제고, 성별 격차의 해소와 동등한 참여의 보장이란 세 가지 목표를 두고 추진된다. 그리고 정책과제는 여성의 경제적 역량강화 등 7개의 영역으로 두고 각 영역마다, 2017년까지 달성할 주요 목표치를 두고 있다. 이 중 GGI와 GII와 관련이 있는 지표는 <표 V-22>와 같다. 목표치는 OECD 회원국의 평균 수준을 목표로 결정하였다. 먼저 여성경제활동참가율은 2017년 60.0% 달성을 목표로 두었다. 2011년 현재 15~64세 경제활동참가율이 54.9%에서 5.1%p 높은 목표치이다. 성별 임금격차는 남성임금의 70.0%를 2017년까지 달성을 목표로 하고 있고, 여성 경제적 역량 강화를 위해 여성취업자 중 전문직 비율을 25%까지 끌어 올릴 계획을 가지고 있다. 평등의식과 문화의 확산을 위해 제시한 목표 지표는 3개이며, 이중 셋째 아 출생을 2017년까지 자연출생성비 수준인 105까지 낮춘다는 목표를 가지고 있다. 그리고 여성의 대표성 제고 및 참여 확대 정책은 2개의 지표를 제시하고 있으며, 이중 GGI와 GII와 관련된 여성국회의원 제고 정책 목표는 2016년 20대 국회의원선거에서 여성당선자 비율을 18%로 두고 있다.

<표 V-22> 제4차 여성정책기본계획(안)의 지표별 2017년 달성 목표치

(단위: 점수)

지표	2011	2017	2017-2011년 변화
여성 경제활동참가율	54.9	60.0	5.1
성별 임금격차	63.9	70.0	6.1
여성 취업자 중 전문직 비율	20.9	25.0	4.1
셋째아 출생성비	111.1	105.0	-6.1
여성 국회의원비율	15.7(2012년)	18.0(2016년)	2.3

이와 같은 정책목표를 가지고 정책을 추진할 경우 GGI와 GII에서 한국의 성평등 수준 변화를 알아보고자 모의실험을 실시하였다.

모의실험은 GGI와 GII를 나누어 실시하고 있다. 먼저 GGI의 모의실험은 다음의 기준으로 실시하였다. 첫째, 제4차 여성정책기본계획(안)에서 제시된 5개의 지표를 목표치로 적용하여 2015년과 2017년의 두 연도에 대해 실시하였다. 그리고 2015년 추정값은 2011년 실제 값과 2017년 목표 값의 차이를 이용하여 추계하였다. 셋째야 출생성비는 GGI 구성지표인 전체 출생성비와 약간 다르지만, 셋째야 출생성비가 2017년 자연출생성비 수준인 105이기 때문에, GGI의 출생성비에 적용하는 것이 문제가 되지 않을 것으로 본다.

두 번째로, 제4차 여성정책기본계획에서 목표치로 제시하지 않은 나머지 지표에 대해서는 GGI의 경우 2016년과 2012년 한국의 지표 값 변화량을 이용하였다. 즉, 추정소득, 고위 관리직 비율, 문해률, 초등교육취학률, 중등교육취학률, 고등교육취학률, 건강수명, 장·차관급, 최근 50년 이내 총리이상 재직기간이 여기에 속한다. 한편 경제활동참가율 또한 여성 경제활동참가율의 목표치는 있지만 남성 경제활동참가율이 없이 이와 같은 방법을 적용하였다.

셋째로, 관리자 비율, 장·차관 비율, 최근 50년 이내 총리이상 재직기간과 같이 그 비율이 매우 낮은 지표와 여성의 국회의원비율에 대해 목표치를 재조정하여 목표치를 상향조정하여 추계하고 있다(목표2). 이처럼 목표치를 상향조정한 이유는 제4차 여성정책기본계획(안)에서 나타난 목표치가 높지 않고, 목표치가 있는 5개 지표이외 다른 지표 모두가 지난 6년간 평균상승률 정도만 고려하여 전체 점수 상승이 높지 않았기 때문이다.

〈표 V-23〉 목표1과 목표2에 대한 모의실험 계획

<p>목표 1</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4차 여성정책기본계획에서 제시된 5개 지표의 2017년 목표치 적용 - 5개 이외 지표는 GGI 구성 지표의 2006년과 2012년간 연평균 증감 적용
<p>목표 2</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4차 여성정책기본계획에서 제시된 5개 지표의 2017년 목표치 적용 5개 지표로 포함되지 않은 지표 중 대표적 의사결정직 지표인 관리자 여성 비율(2017년 20%), 장·차관 여성비율(2017년 30%), 최근 50년 이내 총리이상 여성재직기간(2017년 6년)에 대해 특별 목표치를 설정하고, 여성 국회의원비율을 2017년 18%에서 25%로 조정 - 이외 지표는 GGI 구성지표의 2006년과 2012년간 연평균 증감 적용

넷째, 순위 산정을 위해 2012년 GGI 점수를 보정하였다. 보정방법은 2006년에서 2012년까지 GGI 연평균점수 변화를 2013년부터 2017년까지 적용하는 방식을 사용하였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모의실험의 계산 방법은 GGI에서 제공하는 엑셀 시트를 활용하였다.

이와 같은 방법으로 2015년 GGI의 한국 순위를 추정해 보면, 목표 1의 경우 순위 상승효과가 매우 미미한 것으로 나타난다. 목표1로 정책을 추진할 경우 2015년의 경우 한국의 GGI 예상 점수와 순위는 각각 0.659, 102위로 2012년과 비교하여 각각 0.023p와 6위 상승에 그친다. 그리고 2017년 정책목적을 달성할 경우도 점수는 0.678, 순위는 101위 수준에 머물 것으로 예상된다. 즉, 5개의 지표 이외 다른 지표에 대해 정책적 관리와 혁신적 추진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2017년도 5개 지표의 목표치가 모두 달성된다 할지라도 한국의 GGI는 큰 변화가 없을 것으로 나타난다.

〈표 V-24〉 한국의 GGI 영역 및 지표 점수와 순위 변화 추정(목표1)

(단위: 점수)

역영	지표	2012		2015 : 목표 1		2017 : 목표 1	
		여성	남성	여성	남성	여성	남성
경제 참여와 기회	경제참여와 기회 영역 점수	0.509		0.576		0.612	
	경제활동참가율	55	76	58.0	77.0	60.0	78.0
	유사직종 종사자 성별 임금격차	0.540		0.64		0.70	
	추정소득	16,931	32,668	19,548	36,919	22,164	41,169
	관리자 비율	10	90	12	88	14	86
	전문직 비율	41	59	43	57	45	55
교육 성취도	교육성취도 영역 점수	0.959		0.963		0.970	
	문자 해독율	99	99	100.0	99.0	100.0	100.0
	초등교육 취학률	98	99	97.5	98.5	97.0	98.0
	중등교육 취학률	95	96	97.0	100.0	99.0	100.0
	고등교육 취학률	86	119	94.5	124.0	103.0	129.0
건강과 생존	건강과 생존 영역 점수	0.973		0.978		0.985	
	출생성비(역수)	0.930		0.94		0.95	
	건강 기대 수명	74	68	75.6	69.6	77.2	71.2
정치권한 부여	정치권한부여 영역 점수	0.102		0.119		0.143	
	국회의원 비율	16	84	16.0	84.0	18.0	82.0
	장·차관비율	13	87	16.5	83.5	20.0	80.0
	최근 50년 이내 총리이상 재직 기간	1	49	1.2	48.8	1.5	48.5
GGI 추정	예상 점수	0.636		0.659		0.678	
	예상 순위	108위		102위		101위	

주 : 2012년은 실 측정 점수와 순위임.

이에 목표 1에서 4개의 지표에 대해 새로운 목표치를 추가로 설정하여 목표 2에 대해 모의실험을 실시하였다. 관리자 여성 비율(2017년 20%), 장·차관 여성 비율(2017년 30%), 최근 50년 이내 총리이상 여성재직기간(2017년 6년), 여성 국회의원비율(2017년 25%)에 대해 각각 특별 목표치를 설정하였고, 다른 지표에 대해서는 목표 1과 동일하게 설정하였다. 목표 2의 모의실험 결과를 보면, 2015년 목표 달성 시 한국의 GGI 점수는 0.674로 상승하고 순위는 98위로 2012년보다 10위 높아진다. 또한 2017년의 경우 한국 GGI 점수는 0.712, 순위는 70위로 상승할 것으로 예상된다. 단, 이와 같은 결과는 추가로 설정된 목표치가 달성되었을 때를 가정한다.

(표 V-25) 한국의 GGI 영역 및 지표 점수와 순위 변화 추정(목표2)

(단위: 점수)

역영	지표	2015 : 목표 2		2017 : 목표 2	
		여성	남성	여성	남성
경제 참여와 기회	경제참여와 기회 영역 점수	0.584		0.625	
	경제활동참가율	58.0	77.0	60.0	78.0
	유사직종 종사자 성별 임금격차	0.64		0.70	
	추정소득	19,548	36,919	22,164	41,169
	관리자 비율	16	84	20	80
	전문직 비율	43	57	45	55
교육 성취도	교육성취도 영역 점수	0.963		0.970	
	문자 해독율	100.0	99.0	100.0	100.0
	초등교육 취학률	97.5	98.5	97.0	98.0
	중등교육 취학률	97.0	100.0	99.0	100.0
	고등교육 취학률	94.5	124.0	103.0	129.0
건강과 생존	건강과 생존 영역 점수	0.978		0.985	
	출생성비(역수)	0.94		0.95	
	건강 기대 수명	75.60	69.60	77.2	71.2
정치권한 부여	정치권한부여 영역 점수	0.172		0.270	
	국회의원 비율	16.0	84.0	25.0	75.0
	장·차관비율	23.2	76.8	30.0	70.0
	최근 50년 이내 총리이상 재직 기간	4.0	46.0	6.0	44.0
GGI 추정	예상 점수	0.674		0.712	
	예상 순위	98위		70위	

GGI의 모의실험을 종합해 보면, 첫째 4차 여성정책기본계획(안)의 2017년 달성목표 완료시(목표 1), 한국의 GGI 점수는 0.678로 상승하며, 순위는 101위로 예상된다. 둘째, 목표 2에서 네 개의 지표 즉, 관리자 여성 비율, 장·차관 여성비율, 최근 50년 이내 총리이상 여성재직기간, 여성국회의원비율에 새로 설정한 특별목표치가 달성될 경우, 한국의 GGI 점수와 순위는 각각 0.712와 70위로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GGI는 남녀의 격차를 측정하여 성평등수준을 산정하는 지수이다. 따라서 GGI 지표 개선은 남녀격차를 좁히는 방향으로 추진되어야 한다.

첫째, GGI에서 개선을 위해서는 경제참여와 기회 영역의 개선이 시급하다.

GGI에서 경제참여와 기회영역은 2006년 96위에서 2012년 116위로 하락하고 있다. 지표별로는 남녀임금격차와 관리직 비율의 성비 개선이 우선되어야 한다. 유사직종 남녀임금격차는 2007년을 제외하고 2006년 이후 최하위권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2012년 현재 남녀임금격차 0.54, 117위, 2017년 제4차 여성정책기본계획(안)에서 제시된 70% 수준을 반드시 달성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정책과 관련 부처간 협의가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매우 낮은 여성 관리직 비율은 한국의 GGI를 하위권에 머물게 하는 주요원인이다. 2012년 관리직 여성비율은 11%로 2006년(6%)과 비교하여 5%p에 상승에 그친다. 공무원 중 관리직 여성비율 제고(2017년 4급 이상 관리직 공무원 15.0% 목표) 목표가 제4차 여성정책기본계획(안)에 포함되어 있지만, 민간 부문까지 포함된 관리직에서의 여성비중 상승 방안들이 필요하다. GGI 모의실험에서 다른 지표는 동일하게 두고 2017년 관리직 여성비율이 14%에서 20%로 상승하면 경제참여와 기회영역의 점수는 0.612에서 0.625로 0.013p 상승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둘째, 정치권한부여 영역에 대해 정치권의 설득과 의지가 필요하다.

정치권한부여 영역은 GGI 하위영역 중 최하위점수를 보이는 영역이다. 대부분의 국가에서 이 영역이 가장 낮지만 한국은 더욱 심각하다. 이 영역의 한국 점수는 2006년 0.067이며, 2012년 0.102로 나타난다. 사실상 정치권한부여 영역의 개선이 없으면 GGI의 큰 개선은 거의 불가능하다. 제4차 여성정책기본계획에서 제시한 2016년(20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18% 목표는 이를 달성할 경우에도 GGI 순위상승에 미치는 영향은 매우 낮다. GGI 순위를 중위권으로 올리기 위해서는 최소 25%를 목표로 계획이 추진되어야 할 것이다. 장·차관 여성비율은 점차 상

승하는 추이를 보이지만, 2017년은 30%까지 상승해야한다. 정치권에서 지역구 정당 공천의 여성할당제의 도입이 정착되도록 홍보와 논의가 활성화 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장·차관에 최소 20~40%의 여성이 임명되어야 중위권 진입이 가능해 질 것이다.

셋째, 고등교육 취학을 통계의 수정이 필요하다. 2008년 이래 한국의 고등교육 진학률은 여학생이 남학생보다 높다. 하지만 국제사회에서 산정하는 고등교육취학률은 2012년 GGI 기준으로 여성은 86% 남성은 119%이다. 이는 한국사회의 특수성 즉, 의무병역제도 때문으로 2010년 이를 개선하기 위해 WEF에 한국정부는 개선의견을 전달한바 있으나, WEF는 이를 수정하지 않고 있다. 하지만 이 문제는 장기적 관점에서 바라보고 관련부처와 협의되어야 하며, 향후 국제사회에 제공되는 고등교육통계의 경우 군입영자를 제외한 통계와 포함한 통계를 분리해 제공하는 방안들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나. 한국의 성평등 목표와 GII 모의실험

GGI에 이어 GII에 대해 모의실험을 실시하였다. 모의실험은 기본적으로 GGI의 설정과 동일하다. 먼저, 제4차 여성정책기본계획에 있는 목표치는 그대로 활용하고 있다. 즉, 국회의원비율, 경제활동참가율은 2017년 목표치를 그대로 채택하여 모의실험을 설계했다. 두 번째로 목표치에 없는 모성사망비와 청소년출산율, 중등이상 교육받은 인구는 GII 통계의 원 자료원에서 지난 10년 혹은 지난 8년간의 연평균 증감⁷⁷⁾을 고려하여 2015년과 2017년 통계를 추계하였다. 세 번째는 국회의원 비율에 대해 GGI에서와 동일하게 특별 목표치(2017년 여성비율 25%)를 설정하여 불평등 개선효과를 모의실험 하였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순위 산정을 위해 사용된 점수표는 2011년 GII 점수를 그대로 사용하고 있으며⁷⁸⁾, GII 계산을 위해 사용된 도구는 UNDP에서 제공하는 엑셀 계산 시트를 활용하였다.

77) 모성사망률의 연간변화는 -0.125(2000년 19명, 2008년 18명)이고 청소년출산율의 연간변화는 -0.07(2000년 3.0, 2010년 2.3), 그리고 중등이상 교육받은 인구의 연간변화는 여성의 경우 0.93(2000년 70.1%, 2010년 79.4%) 남성의 경우 0.64(2000년 85.3%, 2010년 91.7%)로 나타났다.

78) 2011년 GII 점수를 그대로 사용한 이유는 이 지수가 2010년 처음 나왔고 2011년과 2010년간 변화가 비교적 커서 이를 보정하기 어려웠음. 따라서 2011년 점수표를 순위 산정에 그대로 활용하게 되었음.

모의실험 결과는 <표 V-26>에 정리하고 있다. GII로 본 한국의 성평등수준은 매우 높은 편이다. 더욱이 2010년 20위에서 2011년 11위로 9위의 상승이 있었다. 모의실험은 향후 제4차 여성정책기본계획이 목표대로 진행될 경우 2015년 한국의 순위는 불평등점수가 2011년보다 더 낮아져서 9위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리고 제4차 여성정책기본계획에서 계획된 목표가 달성되면 2017년(목표1)에는 5위로 상승하게 된다. 더불어 국회의원비율을 25%로 초과달성하면, 2017년(목표2) GII 점수는 0.057로 낮아지고 순위는 3위까지 상승할 것으로 예상된다.

<표 V-26> GII 영역 및 지표별 점수와 순위 변화 추정

(단위: 점수, 순위, 10만명당, 여성 1,000명당, %)

국가	순위	점수	생식 건강		여성 권한				노동참여	
			모성 사망비	청소년 출산율	국회의원 비율		중등이상 교육 받은 인구 (25세 이상)		경제활동참가율	
					여성	남성	여성	남성	여성	남성
2011년	11위	0.111	18	2.3	14.7	85.3	79.4	91.7	50.1	72.0
2015년	9위	0.089	17.1	2.0	15.7	84.3	84.1	90.7	58.0	77.0
2017년 (목표1)	5위	0.075	16.9	1.8	18.0	82.0	85.9	94.9	60.0	78.0
2017년 (목표2)	3위	0.057	16.9	1.8	25.0	75.0	85.9	96.2	60.0	78.0

주 : GGI 점수는 낮을수록 성평등한 것임.

GIJ으로 본 한국의 성평등 수준은 상위권에 속한다. GIJ는 지표구성에서 산정 방법까지 한국에서 비교적 우호적인 지수이다. 먼저 지표구성은 모성사망비, 청소년출산율, 여성의회의원비율, 중등이상 교육받은 인구, 경제활동참가율이다. 이 지표 중 한국은 모성사망비와 청소년출산율이 매우 낮은 국가 중 하나이며, 특히 청소년출산율은 대상국가 중 제일 낮다. 중등이상 교육받은 인구도 OECD 회원국 평균보다 높은 수준으로 나타난다. 더욱이 산정방법론에 있어서도 GIJ는 영역간 연관성을 고려한 측정방법을 도입하여 생식건강에서 매우 낮은 한국에게 유리하게 작용한다. 이로 인해 한국의 GIJ 수준은 2010년 20위에서 청소년출산율이 급격히 하락한 2011년은 11위로 크게 상승한다.

하지만 향후 GII가 지속적으로 상위권에 위치하려면 지표의 지속적 관리가 필요하다. 먼저, 여성의회의원비율과 여성 경제활동참가율의 제고가 필요하다. 여성의회의원비율은 2016년 목표치 18%에서 GGI와 같이 25%로 상승시킬 필요가 있다. 그리고 여성경제활동참가율은 2017년 목표치 60%를 달성해야 한다. 모의 실험에 의하면 다른 지표의 상승은 자연적 상승에 맡기고 두 지표의 목표치만 달성한다면 2017년 3위정도(여성의회의원 비율을 18%로 할 경우 5위)의 순위에 위치할 것으로 보인다.

두 번째로, 생식건강 지표의 꾸준한 모니터링이 필요하다. 현재 GII의 높은 성평등 수준은 생식건강에 크게 의존하고 있다. 따라서 만약 생식건강 지표가 현재보다 약간이라도 상승한다면 다른 지표의 상승에도 순위는 하락할 가능성이 높다. 이에 모성사망비와 청소년출산율을 주기적으로 모니터링하고 국제사회에 제출되는 통계를 점검할 필요가 있다.

VI

국가 성평등수준 평가와 제고 전략

- | | |
|----------------------|-----|
| 1. 우리나라 성평등수준의 특징 | 161 |
| 2. 성평등지수와 성평등정책 연계방안 | 165 |
| 3. 성평등지수 활용 및 관리방안 | 176 |

1. 우리나라 성평등수준의 특징

2011년 우리나라 국가성평등지수(63.5점)는 전년에 비해서 상당히 증가하였다. 즉, 2005년 이후 추이를 보면 금융위기가 있었던 2009년을 제외하고 지속적인 증가를 보여, 전반적으로 성불평등이 개선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부문별 성평등 수준의 변화 추이에서 성평등지수의 영역별로 보면 2010년 성평등 수준이 향상되었던 가족, 복지, 보건, 경제활동, 교육·직업훈련부문의 성평등지표 값은 2011년에도 계속해서 증가하였다.

문화·정보부문은 2010년 소폭 개선되었으나 2011년 악화되었다. 이에 비해 2008년 이후 지표 값이 하락해온 의사결정부문, 안전부문의 2011년에도 성평등 수준이 악화되었다. 영역별 성평등지표 값 변화를 좀 더 자세히 살펴보면 아래와 같다.

① 먼저, 경제활동부문의 성평등수준은 금융위기의 영향이 있었던 2009년을 제외하고, 2006년 이후 지속적으로 개선되었다. 경제활동부문의 개별 성평등지표를 보면, 먼저 남성 경제활동참가율은 2006년 74.1%에서 2010년 73.0%로 지속적으로 하락하였다가, 2011년에 73.1%로 소폭 상승하였다. 여성 경제활동참가율은 2006년 50.3%에서 2009년 49.2%로 지속적으로 하락하였으나, 그 이후 2010년 49.4%, 2011년 49.7%로 증가하였다. 2011년 남성 경제활동참가율은 0.1% 증가한 데 비해서 여성은 0.3%로 증가하여, 불평등수준이 개선되었다.

이와 함께 남녀근로자의 노동에 대한 보상을 나타내는 남녀임금격차 지표를 보면 여성근로자 평균 월총액급여는 2006년 1,497천원에서 계속 증가하여 2010년 1,772천원, 2011년 1,862천원이었다. 남성 월총액급여도 동 기간에 2,249천원에서 2010년 2,648천원, 2011년 2,750천원으로 증가하였다. 2011년 임금증가율을 보면 여성 5.1%, 남성 3.8%이었다. 임금내역별로 남녀증가율을 보면, 2011년 정액임금의 경우 여성(4.7%)이 남성(3.3%)보다 높고, 초과임금 증가율도 여성 11.4%인데 비해서 남성 10.6%이었다. 이에 따라 남녀임금격차가 2010년 66.9%, 2011년 67.7%로 상당히 개선되었다.

고용안정성을 나타내는 남녀근로자 중에서 상용근로자 구성비를 보면, 남성은 2006년 62.2%에서 2010년과 2011년에는 68.4%, 69.4%를 나타내었다. 이에 비해 여성은 2006년 39.8%에서 2010년과 2011년에 각각 47.3%, 50.3%로 증가하였다.

그 결과 남녀 상용근로자 구성비의 격차는 지속적으로 축소되었으나, 2011년 현재 여전히 여성 상용근로자 구성비는 남성보다 훨씬 낮은 특징을 보이고 있다.

② 복지부문의 2006년 63.2에서 성평등수준이 지속적으로 소폭 향상되어 2011년 68.4이었다. 개별 지표별로 보면 먼저 여성의 공적연금(국민연금, 사학연금, 공무원연금) 가입률이 남성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높았다. 특히 이와 같은 현상은 최근 평균수명이 증가함에 따라 국민연금으로 노후를 준비하는 여성이 증가하였고, 그 증가율은 남녀 각각 2010년 2.0%, 7.6% 그리고 2011년 3.7%, 9.9% 증가하여, 여성가입자 증가율이 남성보다 훨씬 높았다. 이와 같은 여성 국민연금가입자의 증가는 전년과 마찬가지로 임의가입자의 증가세가 지속된데 기인한다. 사학연금가입자의 경우 여성이 2011년 4.0%(증가인원 4,989명), 남성 0.3%(429명) 증가하여 여성가입자 증가율이 높았으나, 상대적으로 증가규모는 적었다.

장애인 취업률 지표를 보면, 여성장애인 고용율은 2005년 20.2%, 2008년 23.7% 그리고 2011년 22.7%로 지속적으로 증가하였다. 그리고 남성장애인 고용율은 2005년 43.5%에서 2008년 47.6%로 증가하였으나, 그 이후 하락하기 시작하여 2011년 44.8%로 증가하였다. 이에 따라 장애인 취업과 관련된 성평등지표 값도 2010년 50.4에서 2011년 50.7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가구주 가구 중에서 빈곤계층이 아닌 가구주 가구 변화를 성별로 보면 여성은 2011년 전년대비 6.6% 증가한데 비해서, 남성은 1.8% 증가하였다. 그 결과 2011년에 남녀 가구주 가구의 소득불평등은 소폭 개선되었다.

③ 교육·직업훈련부문의 성평등수준은 2005년 이후 지속적으로 개선되었으며 2011년에도 78.1로 전년도보다 상승하였다. 개별지표를 보면 여성의 평균교육연수는 2000년 9.8년, 2010년에는 10.9년으로 증가하였다. 이에 비해 남성은 같은 기간에 각각 11.5년, 12.4년으로 증가하였다. 그러나 교육연수 증가율을 보면 2000~2005년 동안 남녀 각각 4.3%, 7.1%, 2005~2010년에는 각각 3.3%, 3.8%로 여성의 증가율이 더 높았다. 이에 따라 평균 교육연수의 성평등수준을 나타내는 지표 값은 2006년 87.5에서 2011년 87.9로 증가하여 성불평등이 개선되었다.

고등교육기관 여성취학률은 2005년 72.8%이었는데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2010년 86.4% 그리고 2011년에는 89.6%이었다. 남성취학률도 2005년 114.8%에서 증가하여 2010년 115.5% 그리고 2011년 118.2%이었다. 고등교육기관 취학률 증가율을 보면 2011년에 남녀 각각 2.4%, 3.8%이었다. 이에 따라 고등교육 취학률의

성평등지표 값은 개선되었다. 교육부문 마지막 지표인 재직자직업훈련건수를 보면 2010년부터 남녀 모두 훈련건수가 하락하여 참여 남녀 현황을 보면 여성훈련건수가 2010년, 2011년 각각 1,412천 건, 1,142천 건, 남성 2010년, 2011년 각각 2,818천 건, 2,172천 건이었다. 재직자직업훈련 참여자는 남녀 모두 하락하였으나, 감소율을 보면 남성 - 22.9%, 여성 - 19.1%로 여성이 남성보다 낮았다. 그 결과 재직자직업훈련 지표값이 2010년 67.5에서 2011년에는 70.6으로 상승하였다.

④ 가족부문의 성평등지수는 2006년 51.9에서 2010년 59.2으로 지속적으로 증가하였고, 2011년에도 60.4로 증가하였다. 개별 지표를 보면 출생성비는 자연출생성비와 거의 같아져서 2011년 105.7를 나타내었다. 이에 비해 가족부문 개별지표인 셋째 아 출생성비는 2000년 144.2에서 지속적으로 개선되어 2005년 128.5, 그리고 2010년 110.9, 2011년 109.5이었다. 이와 같이 셋째 아 이상의 출생성비가 지속적으로 개선되는 추이를 보이고 있으나, 아직도 자연출생성비보다 높아서 남아선호사상이 약간 남아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족부문의 또 다른 성평등지표인 가사노동시간의 2011년 성평등수준은 2010년 23.7과 거의 같은 24.4이었다.

⑤ 보건부문을 보면 성평등수준이 가장 높은 부문이고, 2005년 이후 성평등수준을 보면 2008년을 제외하고 전반적으로 개선하는 추이를 보였다. 이에 따라 2011년도에 성평등수준은 개선되었다. 특히 보건부문의 개별 지표를 보면 먼저 운동능력, 자기관리, 일상 활동, 통증 및 불편감, 그리고 불안과 우울을 종합하는 건강관련 삶의 질은 지속적으로 개선되는 추이를 보여 2011년 지표값도 개선되었다. 최근 중장년층을 중심으로 여성의 건강관련 삶의 질이 남성보다 훨씬 많이 개선되었으나, 나머지 연령층은 남성이 더 많이 개선되었다. 그 결과 2009~2010년 동안에 개선되었던 건강관련 삶의 질의 성평등수준은 2011년에 다시 악화되었다.

그러나 보건관련 또 다른 지표인 건강보험의 입원 요양급여지급건수를 보면 2010년 4,720천 건 5,732천 건 그리고 2011년에는 2010년 남성 지급건수 증가율은 11.8%인데 비해 여성은 12.4%이었고, 2011년도 남녀 각각 4.9%, 6.6%이었다. 이와 같이 여성의 요양급여지급건수 증가율이 남성보다 더 높아서, 병원입원진료를 기준으로 한 보건부문의 성평등수준은 악화되는 추이를 보였다.

건강검진 수검률 지표값을 보면 2008년 88.9에서 지속적으로 상승하여 2010년

94.6 그리고 2011년 96.4를 나타내었다. 성별 수검률 현황을 보면 2009년 남녀 수검률은 각각 64.9%, 61.4%이었고, 2010년 남녀 각각 67.3%, 64.9%이었다. 즉, 2010년에 여성 수검률의 증가폭(5.7%)이 남성(3.7%)보다 더 높았다. 그 결과 건강검진 수검률 성비는 2009년 93.4에서 2010년 94.6, 2011년 96.4로 증가하였다.

⑥ 의사결정부문의 성평등수준은 2005~2009년 동안 지속적으로 개선되었으나, 2009년을 기점으로 19.8, 2010년 19.7, 2011년 19.3으로 악화되었다. 개별 성평등지표별로 보면, 국회의원의 성비로 2004년에는 전체 국회의원 당선자 299명 중에서 여성이 39명이었다. 그러나 2009년 여성국회의원이 42명(여성비율이 14.0%), 2010년 44명(14.7%) 그리고 2011년 45명(15.1%)으로 증가하였다. 그 결과 2005년 14.6에서 2008년 15.5로 소폭 상승하였고, 2010년 17.1 그리고 2011년 17.3으로 지속적인 개선을 보였다.

정부부문 의사결정직 성평등을 나타내는 5급 이상 공무원 현황을 보면 5급 이상 여성공무원은 2009년 3.0천명에서 2010년 3.3천명으로 10.8% 증가한데 비해서, 남성은 2009년 33.2천명에서 2010년 33.7천명으로 1.4% 증가하였다. 그 결과 5급 이상 공무원 성평등지표 값은 2008년 일시적으로 하락하였으나, 2009년, 2010년에는 상승하였다. 그러나 행정부문의 성평등수준은 여전히 다른 부문에 비해서 상당히 낮은 수준을 나타내었다.

의사결정직의 또 다른 성평등지표인 민간기업과 공기업에 종사하는 과장급 이상 관리자 현황을 보면, 여성관리자는 2009년 29천명에서 2010년 35천명으로 17.7% 증가하였다. 이에 비해 남성은 같은 기간에 각각 201천명에서 236천명으로 17.5%로 증가하여, 여성보다 증가율이 약간 낮았다. 그러나 2011년에는 여성관리자는 33.2천명으로 전년대비 3.9% 감소하였는데 비해서 남성은 2011년 254천명으로 7.7% 증가함에 따라 성평등지표 값은 2010년 28.3에서 2011년 25.4로 하락하였다. 의사결정직의 전체 성평등지표 값은 2006년 16.5에서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2008년 20.4이었으나 2009년, 2010년에는 민간부문 관리직 성비 하락 등으로 인해서 연이어서 19.8, 19.7로 하락하였다.

⑦ 안전부문 성평등수준은 2006년 59.4에서 2008년 61.3으로 개선되었으나, 그 이후 지속적으로 악화되어 2011년에는 53.0을 나타내었다. 개별 성평등지표인 범죄피해에 대한 두려움을 느끼는 인구비율을 보면, 2005년 이후 여성의 주관적인 범죄피해 두려움 정도가 남성보다 더 많이 감소하여, 상대적으로 불평등정도가

완화되었다.

안전부문 또 다른 지표인 강력범죄(흉악) 피해자 수를 보면, 여성피해자 수가 2009년 19,254건에서 2010년 20,930건으로 증가하였다. 남성피해자는 2008년 4,712건, 2009년 5,649건으로 증가하였으나, 2010년에는 여성과는 달리 4,403건으로 감소하였다. 이에 따라 여성 피해자 증가율은 2010년 8.7%인데 비해서, 남성은 오히려 -22.1%로 감소하였다. 그 결과 안전부문 성평등수준은 2006년 59.4에서 2008년 61.3으로 개선되었으나, 그 이후 지속적으로 악화되어 2011년에는 53.0을 나타내었다.

⑧ 문화·정보부문 성평등수준은 2006년에 비해 2007년, 2008년 급격히 개선되었다. 그러나 2009년부터 다시 성평등수준이 악화, 2010년 개선 그리고 2011년에 다시 악화되는 추이를 보였다. 문화·정보부문 성평등지표인 문화콘텐츠산업 종사자 성비를 보면, 문화콘텐츠산업 종사자 증감율은 2009년 남녀 각각 4.2%, 6.2%로 여성증가율이 더 높았으나, 2010년에는 2.6%, 2.2%으로 남성증가율이 여성보다 높았다. 그 결과 문화콘텐츠산업 종사자 성비의 지표 값은 2010년 73.0으로 전년보다 높았으나, 2011년에는 71.9로 하락하였다. 또한 여가시간 성비 지표 값은 여성 여가시간은 변동이 없는데 남성은 소폭 감소하여 미미하게 증가하였다. 이에 따라 2011년에도 여가시간 성평등지표 값은 2010년 75.3보다 약간 상승한 75.4이었다. 그리고 2011년 전체 문화·정보부문의 성평등수준은 2010년 74.1보다 약간 악화되어 73.6이었다.

2. 성평등지수와 성평등정책 연계방안

국가 성평등지수와 영역별 지표 값의 수준과 변화 추이는 우리나라 성평등수준을 나타냄과 동시에, 우리 사회의 관행과 의식 그리고 성평등정책의 효과를 나타낸다. 이와 같은 측면에서 국가 성평등지수의 산정결과를 평가하고, 해당 지수와 연계된 정책을 점검하기 위한 연계표를 구축하였다. 본 연구의 성평등지수와 성평등정책의 연계표에 포함된 정책은, 여성가족부(2012) 「2013~2017 제4차 여성정책기본계획(안)」, 대한민국정부(2011) 「2011~2015 제2차 저출산 고령사회 기본계획」, 고용노동부(2012), 「제4차 남녀고용평등과 일 가정 양립 기본계획

(2013-2017년)』, 농림수산식품부(2011) 『제3차(2011~2015년) 여성농어업인 육성 기본계획』, 행정안전부 양성평등채용목표제 등 여성공무원관련 정책 등이다. 그리고 정책연번은 여성가족부, 『제4차 여성정책기본계획(안)』의 연번이며, 연번 '9-9-9'는 다른 행정부처의 여성관련 기본계획 및 정책을 나타낸다.

① 먼저, 가족부문은 가사노동시간의 남녀격차가 지속적으로 축소되고, 셋째 아 이상의 출생성비도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다. 관리지표를 보면 남녀 육아휴직자가 2005년 각각 10,492명, 208명에서 2010년에는 40,914명, 819명으로 지속적으로 증가하였으나, 육아휴직자 중 남성비율은 2005년 1.9%에서 거의 변화가 없어서 2010년 1.9%수준을 나타내었다. 이와 같은 가족영역 지표 추이에 의하면 전반적으로 가족영역에서 성평등 수준은 개선되고 있으나, 경제활동 등과 연계된 지표에서는 성평등수준이 개선되지 않거나 정체상태를 보였다.

따라서 <표 VI-1>의 성평등지수와 성평등정책 연계표에 있는 일 가정 양립을 위한 기반구축을 통해서 장시간 근로관행 개선 등 근로시간제도와 관련된 정책과 남성의 가사 및 육아참여를 제고시키는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 이 외에도 돌봄의 사회적 분담 강화와 함께 다양한 가족지원 확대, 공무원의 출산 및 양육지원, 육아휴직 및 대체인력활용제도를 활성화시키는 것이 필요하다. 이외에도 노인 등 가족간호휴가제 도입과 남성의 가족간호휴가 참여를 촉진시킬 수 있는 문화와 제도를 도입하는 것이 필요하다.

② 복지부문의 경우 여성가구주 가구의 빈곤율은 2008년 이후 지속적으로 증가하였으나, 2011년도에는 약간 하락하였다. 그리고 노후소득을 보장해주는 사회안전망인 공적 연금과 함께 고용보험의 여성 가입자 수 증가가 남성보다 높다. 그리고 여성 장애인 고용율도 남성보다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이와 같은 성평등 지표 추이를 보면 사회보험과 장애인 경제활동참여와 관련해서 성평등수준이 개선되었다. 상대적으로 빈곤선 이하에 있는 여성가구주 가구가 계속 증가하다가 2011년 약간 감소하였으나 여전히 상당히 많았다.

〈표 Ⅵ-1〉 성평등지수와 여성정책 연계표-가족, 복지부문

지표연번	지표명	정책연번	정책과제	세부사업
1-1	성별 가사노동 평균시간 격차			정시간 근로관행 개선 및 근로시간 단축
1-2	셋째아 이상 출생 성비(GGI)	2-2	일과 가족의 양립 기반 강화	육아휴직 활성화 및 남성의 육아참여 지원 강화 평등하고 가족친화적인 사회환경 조성
	성별 육아휴직자 수			국공립 시설 확충 및 보육서비스 수준 제고
	경제활동상태별 남녀 노인부양 평균시간	2-1	돌봄의 사회적 분담 강화	부모 선택을 보장하는 자녀양육 지원 확대 가족돌봄자에 대한 지원
	가구유형별 남녀가구주비율			돌봄서비스 전달체계 개선
	성별 생계책임 의식			한부모가족 지원 내실화 및 비양육부모 책임 강화
		4-2	다양한 가족지원 확대	다문화가족 정착지원 확대
				가족변화에 대응한 선제적 정책 개발
		9-9-9	공무원 출신, 양육지원	셋째 자녀 육아휴직기간 증진소요연수에 반영 확대
		9-9-9	육아휴직 및 대체인력활용제도 활성화	남성근로자의 육아 참여 활성화
2-1	성별 빈곤가구주 비율	4-1	여성친화적 복지서비스 확대	각종 사회보장 제도의 여성친화성 제고
2-2	성별 공적연금 가입자			대상별 맞춤형 복지지원 강화
2-3	장애인 성별 취업자 비율	9-9-9	여성의 국민연금 사각지대 해소	전업주부 기여수준을 고려한 장애, 유족연금 확대
	성별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비율			무소득배우자 등에게 국민연금 가입자격 인정
	성별 장애인 교육수준	9-9-9	여성 농어업인의 국민연금 가입 추진	여성농어업인 국민연금가입관련 보험료지원

기초생활수급자 중에서 여성비율은 소폭 감소하는 추세이나 여성 수급자가 2011년 785천명으로 남성의 595천명으로 훨씬 많다. 이와 같이 복지영역의 지수를 보면 빈곤계층의 성불평등을 지속적으로 개선하는 것이 필요하고, 사회보험 영역의 여성 가입률 제고, 여성 장애인 등 취약계층의 여성의 경제적 자립을 지원하는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표 VI-1>의 성평등지수와 성평등정책 연계표에서 여성친화적인 복지서비스를 확대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와 함께 여성의 국민연금사각지대 해소, 여성 농어업인의 국민연금가입 추진 등을 통해서 노후소득을 보장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외에도 고용보험, 산재보험 등 각종 사회보험의 사각지대에 있는 여성을 위한 정책 추진, 사회보험제도의 각종 급여 등에서의 성불평등을 해소하기 위한 정책 예컨대, 전업주부 기여 수준을 고려한 장애 및 유족연금 확대 등의 과제를 추진하는 것이 필요하다.

③ 보건부문을 보면 여성은 남성보다 고령인구 구성비가 높아서 건강관련 삶의 질이 남성보다 낮으나, 지속적으로 개선되어 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11년에는 성평등수준이 다소 악화되었다. 또한 여성은 의료기관 요양급여지급건수가 남성보다 많고 내원일수, 진료일수도 많았는데, 이들 계층은 주로 여성노인과 출산기 여성이었다. 5대 암 발생률을 보면 성별로 발생률이 높은 암 유형은 다르지만 계속 증가하는 추이를 보였다. 그러나 건강검진 수검률은 남녀 모두 증가추이를 보이나, 2010년 여성(64.9%)은 남성(67.3%)보다 낮았다. 우울증 경험율과 자살을 생각한 인구비율도 남녀 모두 소폭 감소하고 있으나, 여성이 남성보다 더 높았다.

이와 같이 보건부문 대표 및 관리지표를 보면 상대적으로 여성은 남성보다 고령인구가 많음에 따라 고령인구와 출산여성에 대한 보건정책을 강화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와 함께 여성 암 환자를 줄이기 위해서 여성의 건강검진 수검률을 제고시키고, 우울증에 시달리고 자살을 생각하는 여성집단에 대한 정책 수립 및 추진을 하는 것이 필요하다. <표 VI-2>의 성평등지수와 성평등정책 연계표와 관련해서는 여성의 건강지원을 강화하기 위해서 여성의 생애단계별 건강관리 강화, 모성건강 보장 및 여성의 건강권 보장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 외에도 일하는 여성 건강지원, 여성 건강검진 수검률 제고, 여성 정신건강과 관련된 정책과제를 개발하는 것이 필요하다.

〈표 VI-2〉 성평등지수와 여성정책 연계표-보건, 경제활동부문

지표연번	지표명	정책연번	정책과제	세부사업
3-1	건강관련 삶의 질, 성별격차	4-3	여성의 건강지원 강화	여성의 생애단계별 건강관리 강화
3-2	건강보험 진료급여 수급자 성비			모성건강 보장을 위한 지원 확대
	성별 스트레스 인지도			여성의 건강권 보장을 위한 기반 마련
	성별 5대 암 환자 발생률			
	성별 만성질환 유병률			
	성별 활동제한일수			
	성별 자살 생각률			
4-1	성별 임금 격차(GDI, GEM, GGI)	1-1	생애주기별 여성고용 활성화 지원	청년 여성의 취업지원 확대
4-2	성별 경제활동참가율(GDI, GEM, GGI)			재직여성의 역량 강화 및 경력단절 예방
4-3	성별 근로자의 상용근로자 비율			경력단절 여성 지원 강화
	전문직 여성비율		중·고령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 지원 확대	
	성별 30-34세 경제활동참가율		여성고용 지원 인프라 구축	
	성별 대졸자 실업률		여성 비정규직 고용안정 및 고용복지 강화	
	성별 평균 근무연수	1-2	일자리에서의 성차별 개선	고용상 성차별 등에 대한 모니터링 및 적극적 고용개선조치 강화
	기구조 성별 소득격차	1-4	다양한 분야의 여성 진출 및 일자리 확대	여성 협동조합 및 사회적 기업 지원
				공공분야 사회서비스 일자리 확대
				여성 창업 및 여성기업인 지원 확대
		9-9-9	일터 내에서의 임금차별 해소	기업의 자율적 임금차별 시정 지원 강화
				직무급 임금체계 확산

④ 경제활동부문의 성평등지표들은 장기적으로 증가하는 추이를 보이나, 단기적으로는 경기변동에 의해서 영향을 받고 있다. 주요 성평등지표 값을 보면 최근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과 상용근로자비율의 증가율이 상대적으로 높았다. 그리고 남녀임금격차도 개선되었다. 그러나 경제활동참가율 성별 격차와 남녀임금격차가 다른 OECD 회원국에 비해서 상당히 큼에도 불구하고, 개선속도가 상당히 느렸다. 또한 여성의 30~34세 경제활동참가율이 개선되고 있기는 하나, 다른 국가들에 비해서 상당히 낮다.

따라서 성평등지수와 성평등정책 연계표에 있는 생애주기별 여성 고용활성화를 위해서 청년여성, 초기경력단절여성, 여성 연소노인 등의 취업지원 정책을 추진하는 것이 필요하다. 일자리에서 성차별 개선을 위해서 여성 비정규직 고용안정 및 고용복지 강화, 고용상 성차별 등에 대한 모니터링을 지속적으로 하는 것이 필요하다. 여성의 다양한 분야 진출과 일자리 확대를 위해서는 협동조합 및 사회적 기업 지원, 여성 창업 및 여성기업인 지원확대가 필요하다. 이 외에 임금차별 해소를 위해서 기업의 자율적 임금차별 시정 지원, 임금체계 개선 등의 정책추진이 필요하다. 이 외에도 장애인 여성근로자, 무급가족종사자의 근로조건 개선 정책을 실시하는 것이 필요하다.

⑤ 의사결정직 부문은 성평등 수준이 가장 낮은 부문이다. 개별 지표를 보면 정치영역의 여성대표성과 관련된 국회의원 여성비율은 과거에 비해서 개선되었으나, 2011년 15.1%로 아직도 다른 나라에 비하면 낮다. 행정분야 대표성과 관련이 있는 5급 이상 공무원 여성비율의 경우 최근 급격히 증가하고 있으나, 직급이 높을수록 여성비율이 급감한다.

이에 따라 행정분야 여성 대표성 문제가 개선되는데 다소 시일이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민간기업분야 대표성을 나타내는 과장급 이상 여성관리자비율은 2008년까지 증가하다가 그 이후 정체상태를 보이고 있다. 우리나라 의사결정직의 성평등수준은 점진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나 상당한 기간이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표 VI-3>의 성평등지수와 성평등정책 연계표에 있는 공공부문 여성대표성 제고 및 참여 확대를 위한 정책과 여성공무원 공직진출 확대 및 육성을 위한 양성평등 채용목표제 지속 추진, 여성관리자 임용 확대 및 육성 정책이 필요하다. 이 외에도 적극적고용개선조치 실효성 확보, 승진, 교육기회 등 차별해소 정책을 추진하는 것이 필요하다.

〈표 Ⅵ-3〉 성평등지수와 여성정책 연계표-경제활동, 의사결정지 부문

지표 연번	지표명	정책 연번	정책과제	세부사업
5-1	국회의원 여성비율(GEM, GG)			여성의 정치적 대표성 제고를 위한 기반 마련
5-2	공무원 중 5급 이상 여성비율			여성 관리직 진출 확대
5-3	관리자(기업의 과장급 이상)의 여성비율	5-1	공공부문의 여성 대표성 제고	정부위원회 여성 대표성 제고
	관리직 여성비율			교육 분야 여성 대표성 제고
	(중앙정부) 위원회 여성위원 비율			군인·경찰 등 특수직에 여성진출 확대
	성별 초·중·고등학교 교장 비율	9-9-9	여성공무원 공직진출 확대 및 육성	양성평등채용 목표제 지속 추진
	성별 대학교수 비율			여성관리자 임용 확대 및 육성
	성별 공무원 수	9-9-9	적극적 고용개선조치 실효성 확보	여성관리자 비율 제고
	여성 장·차관 비율	9-9-9	승진, 교육기회 등 차별 해소	승진상 차별에 대한 지속적 지도 감독
	공공기관 여성임원비율			여성관리 네트워크 구축

⑥ 교육·직업훈련부문을 보면 여성의 평균교육연수와 고등교육 취학률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등 정규교육과정에서의 남녀불평등은 지속적으로 개선되고 있다. 그리고 재직자직업훈련의 남녀근로자 성평등수준도 점진적으로 향상되어 왔으나, 최근 남녀 모두 재직자 직업훈련참가자가 줄어들고 있다. 교육전문직 여성 비율을 보면 2011년 장학관 및 연구관 여성비율은 16.2%, 장학사 및 연구사 38.1%로 여전히 낮고, 전공별로도 편차가 여전히 컸다. 그리고 기술사 및 기능장 여성비율도 4% 미만으로 극히 낮았다. 교육·훈련부문의 성평등지표 동향을 보면 고등교육기관 진학률은 남녀가 거의 같은 수준이었고, 남녀 대학졸업생 취업률도 전공별로 다소 편차가 있지만 비슷하였다. 그러나 여성근로자의 재직자훈련, 여성의 평생교육에서는 여전히 여성비율이 낮고, 기술사 및 기능장의 여성비율도 상당히 낮았다.

이에 따라 <표 VI-4>의 성평등지수와 성평등정책 연계표에 있는 정책에서 대상별 특성에 맞는 역량강화 지원정책으로 농어촌 여성의 역량강화, 취약계층 여성의 사회경제적 자립지원이 필요하다. 이 외에도 초·중등 및 고등교육에서의 양성평등 강화, 여성 재직근로자 직업능력개발 강화를 위한 정책 추진과 함께 새로운 정책과제를 발굴하는 것이 필요하다.

⑦ 문화·정보부문의 경우 남녀 문화산업 종사자 지표는 경기변동에 의해서 다소 영향을 받았다. 2011년에는 경기회복과 함께 남녀종사자가 모두 증가하였으나 여성증가율이 남성보다 낮아서, 성평등지표 값이 다소 하락하였다. 남녀 여가 시간은 점진적으로 하락하였다. 관리지표를 보면 문화예술행사 관람률은 남녀 모두 증가하였다. 생활체육 참여율과 컴퓨터 및 인터넷 활용율과 이용시간은 남녀 모두 증가하였으나, 남성의 참여율과 활용률이 여성보다 더 높았다.

우리나라의 문화·정보부문 성평등정책을 보기 위해서 <표 VI-4>의 성평등지수와 성평등정책 연계표를 보면, 상대적으로 문화·정보부문 정책이 상당히 빈약함을 알 수 있다. 따라서 평등하고 여성친화적인 방송·문화예술 환경 조성을 위해서 성차별 없는 미디어, 문화예술 환경 조성, 여성의 정보화 역량 제고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 이와 함께 여성 농어민인의 문화 활동을 지원하고, 이들 이외에 미혼모, 여성장애인, 여성실업자 및 재직근로자, 결혼이민자 등 다양한 여성집단의 문화 및 여가활동을 지원하고, 남녀 정보격차를 줄일 수 있는 세부정책개발이 필요하다.

〈표 VI-4〉 성평등지수와 여성정책 연계표-교육·직업훈련, 문화부문

지표 연번	지표명	정책 연번	정책과제	세부사업
6-1	성별 평균교육연수	1-3	대상별 특성에 맞는 역량 강화 지원	농어촌 여성의 역량 강화
6-2	고등교육기관 취학률(GDI, GGI)			취약계층 여성의 사회경제적 지원 지원
6-3	제직자직업훈련 참여 근로자 중 여성비율			교육과정 운영에서의 양성평등적 관점 강화
	성별 고등교육기관 진학률	6-1	초·중등 및 고등교육에서의 양성평등 강화	교원의 양성평등의식 제고
	대학 전공별 여교수 비율			성평등한 학교운영 기반 구축
	성별 전공계열별 대졸 취업률			고등교육의 양성평등적 운영 강화
	남녀 학생 1인당 교육비	9-9-9	여성 제직근로자 직업능력개발 강화	사업주의 여성직업능력개발 강화
	교육진문자의 여성비율			여성근로자의 자발적 직업능력개발 강화
	성별 학업성취도 차이			비정규직 여성근로자의 핵심근로자화 지원
	성별 평생학습 참여자			
	성별 기술사, 기능장 수			
	노동부 지원 실업자 훈련참여율 중 여성비율			
7-1	여가시간 성별 차이(혹은 격차)	6-2	평등하고 여성친화적인 방송·문화예술 환경 조성	미디어에서의 성차별 개선
7-2	문화콘텐츠산업종사자 중 여성비율			문화예술·관광 및 체육 분야 여성역량 강화
	성별 문화예술행사관람률			여성의 정보화 역량 제고
	성별 생활체육 참여율			여성농어업인센터 활성화로 취미, 교양강좌 운영
	성별 컴퓨터 및 인터넷 이용시간(평소 1주일)			농어촌 지역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문화공연 지원
	성별 문화시설 이용률			
	성별 문화기반시설기관장			

⑧ 안전부문의 성평등지표를 보면 범죄피해에 대한 두려움을 느끼는 인구비율의 경우는 여성이 남성보다 훨씬 빠르게 감소하고 있다. 그러나 강력범죄 여성 피해자는 급격히 증가하고 2005년 이후 여성피해자 증가율이 남성보다 훨씬 높음에 따라, 강력범죄로부터 안전도에 대한 지표 값은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다.

또한 관리지표를 보면 우리나라는 두려움을 느낀다는 인구비율이 지속적으로 감소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인구비율을 OECD 25개 회원국과 비교하면 야간보행에 두려움을 느낀다는 평균 인구비율이 우리나라보다 훨씬 낮았다. 즉, 우리나라의 안전부문 성평등지수는 그 동안 지속적으로 개선되었으나 2008년부터 다시 악화되었다. 그리고 우리나라의 개선된 상황도 주요 선진국과 비교하면 상당히 안전하지 않음을 알 수 있다.

<표 VI-5>의 성평등지수와 성평등정책 연계표에 있는 안전부문 정책을 보면 폭력 피해 여성에 대한 보호·지원 내실화, 성폭력·가정폭력 및 성매매 방지 실효성 제고, 여성인권 보호 및 안전을 위한 사회환경 조성이 필요하다. 이 외에도 이주여성 인권보호 강화함과 동시에 안전부문 성평등제고를 위해서 관련 부처와 연계해서 실효성이 높은 정책을 개발, 추진하는 것이 필요하다.

〈표 Ⅵ-5〉 성평등지수와 여성정책 연계표-안전부문

지표 연번	지표명	정책 연번	정책과제	세부사업
7-1	범죄피해에 대한 두려움의 성별 격차	3-1	폭력피해 여성에 대한 지원 확대 및 내실화	성폭력·가정폭력 피해자 보호·지원 확대
7-2	10만 명당 범죄 피해자 성별 격차			성매매피해자에 대한 통합적 지원 강화
	인구 10만 명당 성폭력 발생 건수	3-4	성폭력·가정폭력 및 성매매 방지 실효성 제고	폭력피해 여성 지원기관의 역량 강화
	가정폭력 발생 시 여성의 피해율			성폭력·가정폭력 범죄 처벌의 실효성 확보 및 2차 피해 방지
	성매매 범죄자 기소율			가정폭력·성폭력 피해자 제범방지 강화
				성매매 알선, 구매 등에 대한 제재 강화
				피해자 보호·집행·예방의 통합적 정책 추진기반 마련
		3-2	이주여성 인권보호 강화	국제결혼 등 이주과정에서의 인권침해 예방
				이주여성의 권리보호 및 지원 강화
		3-3	여성인권 보호 및 안전을 위한 사회환경 조성	통합적 성인지 인권교육 운영 확대
				지역사회 안전망 강화 및 여성인권에 대한 인식 제고
				성희롱, 성매매 등 예방을 위한 교육·홍보 강화

자료: 여성가족부(2012), 제4차 여성정책기본계획(2013-2017년)(안), 대한민국정부(2011), 제2차 저출산 고령사회기본계획-2011년 중앙부처 시행계획, 고용노동부(2012), 제5차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기본계획(2013-2017년)(안), 농림수산업부(2011), 제3차[2011~2015년] 여성농어업인 육성 기본계획, 2011. 1월

3. 성평등지수 활용 및 관리방안

성평등지수를 이용하여 국가의 성평등수준을 다각적으로 파악하고 개선 정도를 모니터링 함과 동시에 국가 성평등전략을 지원하는 방향으로 지수를 활용하기 위해서는, 아래와 같은 방향으로 지수를 관리하는 것이 필요하다.

먼저 국가성평등지수(KGEDI)를 중장기 성평등정책 목표 설정과 정책과제를 개발하는데 활용한다. 즉, 매년 국가 성평등지수를 측정하여 성평등수준과 추이를 파악함과 동시에 성평등과 관련된 국민의 관심과 인식을 제고시키는데 활용한다. 이와 함께 국가성평등지수의 변동원인 분석과 함께 관련 정책을 평가하여, 향후 필요한 정책과제를 개발하는데 활용한다. 이를 위해서 연도별로 성평등수준이 낮은 영역부터 단계적으로 개별지표의 변동에 대한 심층적인 분석을 실시하고, 이를 기초로 해당 영역의 성평등수준을 제고하기 위한 구체적인 정책과제를 개발하는 것이 필요하다.

두 번째, 국가성평등지수의 대표지표와 관리지표의 경우 각 지표별 성평등 성취수준을 정례적으로 점검하여 불평등이 개선된 지표와 그렇지 않은 지표로 분류하고, 불평등이 심화된 지표에 대해서는 집중 관리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여성정책기본법에 의거하여 각 분야 여성의 참여 현황, 여성의 인권 및 복지 현황, 성평등 의식과 문화 현황, 그 밖의 성평등수준과 관련된 사항을 작성하여, 여성정책조정회의에서 점검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리고 성평등수준이 부진한 영역과 지표에 대해서는 책임 및 협조 행정부처로 하여금 정책에 대한 모니터링과 대책을 마련하여 제출하도록 한다.

세 번째, 성평등지수의 체계적 관리를 위해 국가성평등지수의 각 지표별 남녀 통계와 지표값, 지표의 특성 등을 담은 DB를 구축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와 함께 국가성평등지수와 그 변화를 시계열적으로 점검 및 관리하고, 각 지표의 변화 원인을 분석해야 할 것이다. 성평등지수 및 지표 DB는 정책입안자 뿐만 아니라 연구자, 교수, NGO 등 모든 국민이 언제든지 확인할 수 있도록 쉽게 구축되어야 하며, 다양한 기초정보도 함께 제공되어야 한다.

네 번째, 국가성평등지수와 관련하여 정책 모니터링 및 평가를 하는데 활용하기 위해서, 국가성평등지수와 정책연계표 즉, 앞에서 정리된 <표 VI-1>~<표 VI-5>를 관련 행정부처의 정책 도입 및 변경, 중장기 기본계획 수립에 따라 정기적으로 갱신하는 것이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국가성평등지수의 대표지표와 관리지표 중에서 생산주기가 길거나 혹은 부정기적으로 생산되는 통계, 그리고 생산되지 않고 있는 통계 등을 위한 생산방안을 마련하여 단계적으로 개선 혹은 생산하는 것이 필요하다. 뿐만 아니라 통계 개선 및 생산이 단기적으로 불가능한 경우에는 통계가 생산되지 않는 연도의 지표 값에 대한 대체(imputation)방법을 재점검하고, 해당 지표의 대체방법에 대한 모니터링을 주기적으로 하는 것이 필요하다.

참고문헌

- 김태홍·전기택·주재선(2011). 「2011년 국가성평등보고서」. 여성가족부.
- 김태홍·전기택·주재선(2010). 「지역 성평등지수 표준안 연구」. 여성부.
- 김태홍·전기택·주재선(2009). 「2009 성평등지표 개발과 측정방안 연구」. 여성부.
- 김태홍 외(2011). 「성별 고용평등지표 국제비교 및 개선방안」. 고용노동부.
- 김형준 외(2008). 「성평등지표 개발을 위한 기초연구」. 여성부.
- 문유경·이미정·장미혜·최선화(2005). 「국가균형발전모델의 성 주류화 전략개발(Ⅰ): 양성평등지표개발」. 한국여성개발원.
- 이갑숙 외(2004). 「대전양성평등지표 개발에 관한 연구」. 대전광역시 여성정책위원회.
- 장미혜·민현주·김혜영·염유식·조소영(2008). 「양성평등 문화지표 개발 연구」. 문화관광부.
- 조영미·장미혜·김유나·임현지(2008). 「서울시 성인지 지표(GSI) 평가 및 지표개발」. 서울여성가족재단.
- 김창연·성유진(2010). 「2010 서울시 성인지 지표(GSI) 측정 및 발전방안 연구」. 서울여성가족재단.
- 한국조세연구원(2006). 「IMD의 2006년 세계경쟁력 평가 결과 분석」. 재정포럼 2006년 5월호.
- Anker, R., Chernyshev, L, Egger, P., Mehran, F., and Ritter, J.(2003). 「Measuring decent work with statistical indicators」. International Labour Review 142 (2).
- Bardhan, K. and S. Klasen(1999). 「UNDP' Gender-Related Indices: A Critical Review」. World Development 27:98-1010.
- Bardhan, K.(2000). On UNDP's 「Revisions to the Gender-Related Development Index」. Journal of Human Development 1:191-195.
- Bescond, D., Chataignier, A., and Mehran, F.(2003). 'Seven Indicators to measure decent work : An international comparison'. International Labour Review 142 (2).
- Department of Justice(2007). Equality and Law Reform, National Women's Strategy : 2007-2016. Government of Ireland.
- Dubai School of Government(2008), Gender Equality in the United Arab Emirates: A Driver for Increased Competitiveness?, Policy Brief 5 , June 2008.
- Economist Intelligence Unit(2012). Women's Economic Opportunity 2012-A global index and ranking.

- E. B. Harvey, J. H. Blakely and L. Tepperman(1989). Toward an Index of Gender Equality, (Received 29 January, 1989), Centre for Industrial Relations, University of Toronto.
- Hippu Salk Kristle Nathan(2008). Gender-based Indicators in Human Development: Correcting for Missing Women, Working Papers id:1760, Social Sciences.
- R. Hausmann, L. D. Tyson, S. Zahidi(2006). The Gender Gap Index 2006: A New Framework for Measuring Equality. The Global Gender Gap Report 2006, World Economic Forum.
- Ireland(2008). Equality for Women Measure - 2008-2013.
- Dow Johns Sustainability World Indexes(DJSI)(2006). Dow Johns Sustainability World Indexes Guide. Version 8.0, August.
- S. Klasen(2004). Gender-Related Indicators of Well-Being, Ibero-America Institute for Economic Research, Universitat Gottingen.
- Leroy O. Stone, Ph.D., F.R.S.A. etc.(1998). Gender Equality Indicators: Public Concerns and Public Policies, Statistics Canada.
- Murthi. M, A. Guio, and J Drèze (1995), Mortality, Fertility, and Gender-Bias in India: A District-Level Analysis, Population and Development Review.
- NEDA(2010). Mainstreaming Gender through Gender Audit.
- OECD(2008). Gender and Sustainable Development: Maximising The Economic, Social, and Environmental Tole of Women.
- J. Plantenga, H. Figueiredo, C. Remery, M. Smith(2003). Towards an EU Gender Equality Index. UMIST, Utrecht School of Economics.
- Social Watch(2009). Making Finance Work : People First.
- Sorentino, Contanse(1995). International Unemployment Indicators, 1983-1993. Monthly Labor Review, vol. 118, no. 8(August 1995).
- Statistical Commission and Economic Commission for Europe(2002). Gender Statistics and Key Indicators of Women's Position in Britain. ECE Work Session on Gender Statistics.
- Statistics Sweden(2008). Women and Men in Sweden Facts and Figures.
- The Bureau of Women's Affairs(2010), National Policy for Gender Equality(NPGE), Jamaica.
- IMD(2011). World Competitiveness Yearbook (WCY).
- OECD(2011), Society at a Glance 2011.

- OECD(2012), OECD Employment Outlook 2012.
- Social Watch(2012), Social Watch Report 2012-The right to a future.
- UNDP(2007/2008). Human Development Report 2007/2008: Fighting Climate Change-Human Solidarity in a Divided World. United Nations Development Programme.
- UNDP(2011). Human Development Report 2011 : Sustainability and Equality - Better Future for All. United Nations Development Programme.
- WEF(2012) The Global Gender Gap Report 2012.
- WEF(2011), The Global Competitiveness Report 2011-2012.
- IPU, Women in National Parliaments(<http://www.ipu.org/wmn-e/world-arc.htm>).
- OECD Online Employment Database: www.oecd.org/employment/database.
- 警察廳(2002), 「平成 14年の 犯罪」.
- 警察廳(2012), 「平成 22年の 犯罪」.



부 록

<부록 1> 부문별 성평등지표의 통계표	185
<부록 2> 국가성평등지표의 통계적 정의와 자료원	209

<부록 1> 부문별 성평등지표의 통계표**가. 가족****<부표 1-1> 성별, 취업여부별 평균 가사시간**

(단위: 시:분)

성별	1999		2004		2009	
	비취업자	취업자	비취업자	취업자	비취업자	취업자
전체	3:57	1:26	3:44	1:22	3:38	1:24
여성	5:14	2:50	4:53	2:36	4:41	2:34
남성	0:54	0:27	0:55	0:31	1:04	0:36

주 : 20세 이상 인구의 가정관리와 가족보살피기 시간.

자료: 통계청, 「생활시간조사」.

<부표 1-2> 셋째 아 이상 출생성비

(단위: 명, 여아 백명 당)

성별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계	41,450	42,114	45,913	44,333	41,862	49,932	51,644
여아	18,144	18,977	21,283	20,462	19,532	23,676	24,656
남아	23,306	23,137	24,630	23,871	22,330	26,256	26,988
성비	128.5	121.9	115.7	116.7	114.3	110.9	109.5

자료: 통계청, 「인구동향조사」.

<부표 1-3> 성별 육아휴직자

(단위: 명)

성별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계	10,700	13,672	21,185	29,145	35,400	41,733	58,140
여성	10,492	13,442	20,875	28,790	34,898	40,914	56,738
남성	208	230	310	355	502	819	1,402

자료: 한국고용정보원, 「고용보험통계연보」.

〈부표 1-4〉 경제활동상태별 남녀 노인부양 평균시간

(단위: 시:분)

행동분류별		1999			2004			2009		
		전체	여성	남성	전체	여성	남성	전체	여성	남성
미취업자	계	0:02	0:04	0:02	0:04	0:04	0:03	0:04	0:05	0:03
	부모 및 조부모 보살피기	0:01	0:02	0:01	0:02	0:02	0:02	0:02	0:02	0:01
	부모 및 조부모 간호	-	-	-	0:01	0:01	0:00	0:01	0:02	0:01
	기타 부모 및 조부모 보살피기	0:01	0:02	0:01	0:01	0:01	0:01	0:01	0:01	0:01
취업자	계	0:02	0:02	0:00	0:02	0:03	0:02	0:02	0:02	0:01
	부모 및 조부모 보살피기	0:01	0:01	0:00	0:01	0:01	0:01	0:01	0:01	0:01
	부모 및 조부모 간호	-	-	-	0:00	0:01	0:00	0:00	0:00	0:00
	기타 부모 및 조부모 보살피기	0:01	0:01	0:00	0:01	0:01	0:01	0:01	0:01	0:00

주 : 20세 이상 남녀 인구의 요일평균 노인부양 시간을 의미함.

자료: 통계청, 「생활시간조사」.

〈부표 1-5〉 유배우 가구의 남녀 가구주비율

(단위: 가구, %)

가구주의 성별	2000	2005	2010
전체가구	10,739,411	11,120,410	11,546,820
여성가구주	439,662	624,815	1,079,082
남성가구주	10,299,749	10,495,595	10,467,738
여성가구주 비율	4.1	5.6	9.3%

자료: 통계청, 「인구주택총조사」.

나. 복지

〈부표 2-1〉 성별 빈곤 가구주

(단위: 비율)

구분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전체가구주 가구 - 시장소득	8.2	9.4	9.7	10.0	10.2	10.9	10.0
여성가구주 가구 - 시장소득	15.8	19.1	20.0	18.8	19.8	21.3	20.1
남성가구주 가구 - 시장소득	6.2	6.7	6.7	7.3	7.1	7.5	6.5

주 : 1) 빈곤가구주 가구는 전가구기준 여성가구주 가구의 빈곤률을 사용함. 여성가구주 가구 빈곤률은 정부발표 최저생계비 이하에 속하는 여성가구주 비율임.

2) 1인 가구와 농어가가구 제외.

3) 남성 가구는 추계한 것임.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빈곤통계연보」.

〈부표 2-2〉 성별 공적연금 가입자

(단위: 명)

구분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전체	계	13,713,055	14,058,652	14,432,362	14,597,002	14,881,086	15,448,980	16,317,211
	여성	4,640,590	4,885,751	5,144,778	5,305,735	5,556,287	5,967,040	6,497,813
	남성	9,072,465	9,172,901	9,287,584	9,291,267	9,324,799	9,481,940	9,819,398
국민연금	계	12,489,990	12,803,987	13,159,939	13,309,906	13,571,581	14,129,092	14,986,354
	여성	4,179,403	4,397,780	4,637,367	4,780,656	5,014,961	5,397,122	5,931,615
	남성	8,310,587	8,406,207	8,522,572	8,529,250	8,556,620	8,731,970	9,054,739
공무원연금	계	986,339	1,009,145	1,021,771	1,030,256	1,047,897	1,052,407	1,057,958
	여성	361,622	381,675	396,414	408,547	420,966	428,179	435,467
	남성	624,717	627,470	625,357	621,709	626,931	624,228	622,491
사학연금	계	236,726	245,520	250,652	256,840	261,608	267,481	272,899
	여성	99,565	106,296	110,997	116,532	120,360	125,742	130,731
	남성	137,161	139,224	139,655	140,308	141,248	141,739	142,168

주 : * 국민연금가입자내 지역가입자에서 납부예외자 제외.

자료: 국민연금관리공단, 「국민연금통계연보」.

공무원연금관리공단, 「공무원연금통계」.

사학연금관리공단, 「사학연금통계」.

〈부표 2-3〉 성별 장애인 취업자

(단위: 명, %)

구분		2005	2008	2009	2010	2011
취업자 수	계	694,955	780,054	820,538	861,021	901,505
	여성	166,447	204,474	217,534	230,593	243,653
	남성	528,508	575,580	603,004	630,428	657,852
고용율	계	34.1	37.7	36.8	36.1	35.5
	여성	20.2	23.7	23.3	23.0	22.7
	남성	43.5	47.6	46.5	45.6	44.8

주 : 1) 15세 이상 인구 기준, 2) 2010년 자료는 추계치임.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장애인실태조사」.

〈부표 2-4〉 성별 장애인 교육수준

(단위: %)

		무학	초졸	중졸	고졸	대졸이상
1995	여성	53.7	28.9	9.1	6.3	2.0
	남성	18.8	31.6	18.3	21.8	9.5
	전체	35.1	30.3	14.0	14.6	6.0
2000	여성	39.4	31.7	10.4	14.4	4.1
	남성	13.4	30.0	16.0	28.8	11.6
	전체	23.5	30.7	13.9	23.3	8.7
2005	여성	29.1	35.5	13.4	16.9	5.1
	남성	7.8	27.7	18.7	31.3	14.4
	전체	16.5	30.8	16.6	25.5	10.6
2008	여성	28.9	38.4	11.8	16.4	4.6
	남성	7.8	29.2	18.8	30.1	14.1
	전체	16.5	33.0	15.9	24.4	10.2
2011	여성	22.1	40.2	15.1	16.6	5.9
	남성	4.4	27.5	20.6	31.0	16.5
	전체	11.8	32.9	18.3	25.0	12.0

주 : 25세 이상 장애인.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장애인실태조사」.

〈부표 2-5〉 성별 장애인 등록자 수

(단위: 명)

성별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전체	1,610,994	1,789,443	1,967,326	2,104,889	2,246,965	2,429,547	2,517,312	2,519,241
여성	563,432	650,802	743,682	820,800	901,408	1,003,651	1,048,979	1,052,781
남성	1,047,562	1,138,641	1,223,644	1,284,089	1,345,557	1,425,896	1,468,333	1,466,460

자료: 보건복지부, 「보건복지통계연보」.

〈부표 2-6〉 성별 고용보험 가입자

(단위: 명)

성별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전체	7,965,597	8,436,408	8,941,639	9,271,701	9,653,678	10,131,058	10,675,437
여성	2,724,494	2,925,691	3,167,690	3,334,751	3,569,825	3,820,635	4,105,637
남성	5,241,103	5,510,717	5,773,949	5,936,950	6,083,853	6,310,423	6,569,800

자료: 한국고용정보원, 「고용보험통계연보」.

다. 보건

〈부표 3-1〉 성별 건강관련 삶의 질(EQ-5D)

(단위: %)

연도	전체	여자	남자	격차
2005	0.939	0.926	0.953	0.972
2007	0.931	0.909	0.952	0.953
2008	0.937	0.918	0.955	0.961
2009	0.948	0.931	0.964	0.975
2010	0.948	0.931	0.966	0.964

주: 19세 이상

자료: 보건복지부, 「국민건강통계」.

〈부표 3-2〉 성별 요양급여(청구)지급건수

(단위: 건)

성별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전체	5,922,751	6,609,448	7,533,891	8,506,065	9,322,539	10,452,402	11,062,559
여성	3,159,729	3,537,241	4,086,780	4,643,349	5,100,227	5,732,406	6,113,060
남성	2,763,022	3,072,207	3,447,111	3,862,721	4,222,312	4,719,996	4,949,499

자료: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통계연보」.

〈부표 3-3〉 성별 건강검진 수검률

(단위: %)

성별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전체	51.1	50.8	53.8	56.8	61.7	63.3	66.2
여성	45.6	46.3	50.8	53.1	59.3	61.4	64.9
남성	55.0	54.4	56.2	59.7	63.5	64.9	67.3

주 : 1) 수검률 = $\frac{\text{건강검진수검인원}}{\text{건강검진대상인원}} \times 100$

2) 건강검진대상인원 = 1차건강검진대상인원 + 2차건강검진대상인원,

자료: 국민보험공단, 「건강검진통계연보」

〈부표 3-4〉 성별 생활 스트레스 인지율

(단위: %)

구분		2001	2005	2007	2008	2009	2010
전체	19세 이상	34.6	35.1	27.1	28.9	31.0	29.8
	65세 이상	30.5	31.2	26.8	24.9	25.5	22.0
여성	19세 이상	34.6	35.2	30.3	31.0	33.3	31.4
	65세 이상	33.9	36.8	33.9	30.7	30.6	29.4
남성	19세 이상	34.6	35.0	23.7	26.8	28.6	25.1
	65세 이상	25.1	22.8	16.3	16.4	18.0	11.4

주 : 19세 이상 인구이며, 일상생활 중에 스트레스를 많이 느끼는 백분율을 말함.

자료: 보건복지부, 「국민건강통계」.

〈부표 3-5〉 성별 5대 암 환자 수

(단위: 명)

5대 암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여성	남성	여성	남성	여성	남성	여성	남성	여성	남성	여성	남성
위	7,854	15,397	8,785	17,024	8,620	17,633	8,578	17,337	9,180	18,898	9,774	19,953
대장	6,679	9,158	7,372	10,253	8,097	11,473	8,316	12,424	9,087	12,424	9,918	15,068
간	3,542	10,880	3,643	11,264	3,370	11,147	3,783	11,141	3,887	11,776	4,023	11,913
유방	8,900	47	9,842	56	10,753	52	11,606	33	12,584	75	13,399	-
자궁암 (자궁목, 자궁체)	5,155	-	4,883	-	3,999	-	3,616	-	3,888	-	3,733	-

자료: 국립암센터, 「암등록통계」.

〈부표 3-6〉 성별 만성질환 유병률(2009)

(단위: %)

성별	비만	당뇨병	이상지혈증	고혈압	폐쇄성폐질환	구강질환
전체	31.6	10.0	11.8	31.9	11.0	33.8
여성	27.2	9.2	12.7	28.9	5.8	30.6
남성	36.1	10.9	10.9	35.1	16.6	36.9
성별	B형간염	빈혈	안검하수	만성중이염	골다공증	골관절염
전체	4.0	9.7	11.9	3.7	23.1	24.2
여성	3.5	15.7	11.8	3.4	38.7	32.5
남성	4.6	3.6	11.9	4.1	8.1	14.7

주 : 만성질환이란 연간의사진단 유병률임.

자료: 보건복지부, 「국민건강통계」, 2009

〈부표 3-7〉 성별 활동제한일수

(단위: 일)

성별	1999	2003	2006	2008	2010
전체	0.9	0.8	0.8	0.7	0.6
여성	0.8	0.8	0.7	0.6	0.6
남성	1.0	0.9	0.8	0.8	0.6

주 : 0세 이상 인구, 평균와병일수.

자료: 통계청, 「사회조사」.

〈부표 3-8〉 성별 자살생각률

(단위: %)

연도	전체	여성	남성
2001	19.1	22.8	14.4
2005	18.5	22.6	13.9
2007	15.0	20.4	9.4
2008	17.4	22.9	11.8
2009	16.4	22.2	10.5
2010	15.0	20.3	9.5

주 : 1) 19세 이상.

2) 최근 1년 동안 죽고 싶다는 생각을 해 본 적이 있는 사람의 비율.

자료: 보건복지부, 「국민건강통계」.

라. 경제활동

〈부표 4-1〉 성별 경제활동참가율

(단위: %)

성별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전체	62.1	62.0	61.9	61.8	61.5	60.8	61.0	61.1
여성	49.9	50.1	50.3	50.2	50.0	49.2	49.4	49.7
남성	75.0	74.6	74.1	74.0	73.5	73.1	73.0	73.1

주 : 15세 이상 인구.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부표 4-2〉 성별 임금격차(성비)

(단위: 원, %)

성별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전체	1,750,421	1,887,507	2,014,265	2,127,430	2,258,684	2,270,303	2,360,466	2,454,269
여성	1,286,258	1,395,979	1,496,631	1,581,625	1,681,358	1,692,533	1,771,724	1,861,940
남성	1,957,976	2,108,732	2,249,024	2,380,637	2,527,490	2,546,113	2,648,052	2,749,950
임금격차	65.7	66.2	66.5	66.4	66.5	66.5	66.9	67.7

주 : 1) 월평균임금=월정액급여+초과급여.

2) 임금격차=여성근로자의 월평균임금/남성근로자의 월평균임금*100.

자료: 고용노동부, 「고용형태별근로실태조사」.

〈부표 4-3〉 성별 상용근로자

(단위: 천명, %)

구분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임금근로자 계	14,894	15,185	15,551	15,970	16,206	16,453	16,971	17,397
여성임금근로자	6,237	6,391	6,573	6,756	6,868	6,955	7,230	7,428
남성임금근로자	8,657	8,794	8,978	9,214	9,338	9,498	9,740	9,970
상용근로자 계	7,625	7,918	8,204	8,620	9,007	9,389	10,086	10,661
여성상용근로자	2,289	2,439	2,616	2,816	2,954	3,051	3,421	3,739
남성상용근로자	5,336	5,479	5,588	5,804	6,053	6,338	6,666	6,922
상용직 여성비율	30.0	30.8	31.9	32.7	32.8	32.5	33.9	35.1

자료: 통계청(연도별), 「경제활동인구조사」.

〈부표 4-4〉 전문·관리직 여성비율

(단위: 천명, %)

성별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전체	4,063	4,199	4,442	4,651	4,931	4,972	5,133	5,201
여성	1,537	1,622	1,769	1,841	1,953	2,016	2,083	2,156
남성	2,525	2,577	2,674	2,810	2,978	2,957	3,051	3,044
여성비율	37.9	38.6	39.8	39.6	39.6	40.5	40.6	41.5

주 : 15세 이상 인구.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부표 4-5〉 성별 30~34세 경제활동참가율

(단위: %)

성별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전체	72.5	72.3	73.4	73.4	73.3	72.5	73.7	73.9
여성	50.4	50.2	53.1	53.7	53.3	51.9	54.6	55.4
남성	94.0	93.5	93.5	92.2	92.5	92.0	91.9	91.6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부표 4-6〉 성별 대졸자 실업률

(단위: %)

성별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전체	2.9	2.7	2.9	2.6	2.7	3.1	3.1	2.8
여성	3.4	3.1	3.4	2.8	2.9	3.1	3.6	3.0
남성	2.7	2.6	2.7	2.6	2.5	3.1	2.9	2.6

주 : 4년제 이상 졸업자.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마. 의사결정

〈부표 5-1〉 성별 국회의원 당선자

(단위: 명, %)

성별	2004	2008	2009	2010	2011
전체	299	299	299	299	299
여성	39	41	42	44	45
남성	260	258	257	255	254
여성비율	13.0	13.7	14.0	14.7	15.1

주: 국회의원 선거가 없는 해는 지역구 보궐선거 및 전국구 의원 승계 결과 반영 자료임.

자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역대선거정보시스템」.

〈부표 5-2〉 성별 5급 이상 공무원

(단위: 명, %)

성별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전체	37,557	34,582	35,742	37,557	38,348	36,286	37,075	37,703
여성	2,920	2,186	2,487	2,920	2,724	3,021	3,348	3,720
남성	34,637	32,396	33,255	34,637	35,624	33,265	33,727	33,983
여성비율	7.8	6.3	7.0	7.8	7.1	8.3	9.0	9.9

자료: 행정안전부, 내부자료.

〈부표 5-3〉 성별 기업의 과장급 이상 관리자 수

(단위: 명, %)

구분	근로자 전체			관리직		
	전체	여성	남성	전체	여성	남성
2005년 12월 (1,000인 이상)	1,597,617	458,584	1,139,033	169,983	14,178	155,805
2006년 12월 (1,000인 이상)	1,748,552	536,445	1,212,107	166,009	15,373	150,636
2007년 12월 (500인 이상)	2,430,320	775,922	1,654,398	217,717	22,887	194,830
2008년 12월 (500인 이상)	2,566,715	825,850	1,740,865	254,598	35,836	218,762
2009년 12월 (500인 이상)	2,598,082	846,957	1,751,125	230,008	29,404	200,604
2010년 12월 (500인 이상)	2,731,934	933,286	1,789,648	270,234	34,616	235,618
2011년 12월 (500인 이상)	2,897,173	986,053	1,911,120	287,062	33,280	253,782

자료: 고용노동부, 내부자료(적극적 조치 고용대상 기업체)

〈부표 5-4〉 성별 입법·고위관리직

(단위: 천명, %)

성별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전체	599	602	602	601	549	546	562	515
여성	42	47	52	53	52	47	53	52
남성	557	555	550	548	497	499	509	463
여성비율	7.0	7.8	8.6	8.8	9.5	8.6	9.4	10.1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부표 5-5〉 (중앙정부) 위원회 여성위원 비율

(단위: 개, 명, %)

구분	2005	2006	2008	2009
위원회수	362	383	433	485
위촉 위원수	7,743	7,206	9,462	9,867
여성 위원수	2,163	2,132	2,558	2,428
여성위원비율	27.9	29.6	27.0	24.6

자료: 여성가족부, 내부자료.

〈부표 5-6〉 성별 초·중·고등학교 교장 비율

(단위: 명, %)

성별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초등학교	전체	5,505	5,614	5,695	5,710	5,761	5,791	5,818	5830
	여성	423	490	531	589	653	747	832	895
	남성	5,082	5,124	5,164	5,121	5,108	5,044	4,986	4935
	여성비율	7.7	8.7	9.3	10.3	11.3	12.9	14.3	15.4
중학교	전체	2,534	2,582	2,642	2,682	2,731	2,777	2,800	2837
	여성	249	255	294	343	394	463	493	522
	남성	2,285	2,327	2,348	2,339	2,337	2,314	2,307	2315
	여성비율	9.8	9.9	11.1	12.8	14.4	16.7	17.6	18.4
고등학교	전체	2,003	2,017	2,060	2,064	2,106	2,129	2,177	2,199
	여성	111	132	123	126	122	126	139	155
	남성	1,892	1,885	1,937	1,938	1,984	2,003	2,038	2044
	여성비율	5.5	6.5	6.0	6.1	5.8	5.9	6.4	7.0

자료: 교육과학기술부·한국교육개발원, 『교육통계연보』.

〈부표 5-7〉 성별 대학 교수

(단위: 명)

구분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전체	계*	62,334	64,847	66,846	68,062	69,975	75,469	77,697	82,190
	총(학)장	353	351	336	361	357	395	395	424
	교수	26,464	27,652	28,771	29,857	30,992	33,592	34,731	36,632
	부교수	15,342	15,509	15,615	15,526	16,158	17,607	18,093	19,165
	조교수	13,059	13,387	13,644	13,903	13,727	14,707	15,193	15,779
	전임강사	7,116	7,948	8,480	8,415	8,741	9,168	9,285	10,190
여성	계*	10,702	11,700	12,528	13,104	13,878	15,360	16,458	17,863
	총(학)장	42	42	36	38	40	45	47	54
	교수	3,488	3,677	3,915	4,061	4,231	4,584	4,844	5,096
	부교수	2,395	2,577	2,616	2,694	2,938	3,407	3,606	3,951
	조교수	2,660	2,809	3,020	3,274	3,425	3,872	4,291	4,643
	전임강사	2,117	2,595	2,941	3,037	3,244	3,452	3,670	4,119
남성	계*	51,632	53,147	54,318	54,958	56,097	60,109	61,239	64,327
	총(학)장	311	309	300	323	317	350	348	370
	교수	22,976	23,975	24,856	25,796	26,761	29,008	29,887	31,536
	부교수	12,947	12,932	12,999	12,832	13,220	14,200	14,487	15,214
	조교수	10,399	10,578	10,624	10,629	10,302	10,835	10,902	11,136
	전임강사	4,999	5,353	5,539	5,378	5,497	5,716	5,615	6,071

주 : 계는 전임강사 이상의 교수 합.

자료: 교육과학기술부·한국교육개발원, 「교육통계연보」.

〈부표 5-8〉 성별 공무원 수

(단위: 명, %)

연도	중앙정부			지방자치단체		
	전체	여성	여성비율	전체	여성	여성비율
2004	577,685	233,669	40.4	256,424	64,683	25.2
2005	566,086	245,196	43.3	266,176	70,568	26.5
2006	582,837	255,202	43.8	272,584	75,608	27.7
2007	603,131	272,636	45.2	275,231	80,666	29.3
2008	610,300	281,118	46.1	274,626	79,746	29.0
2009	615,490	284,022	46.1	278,303	82,178	29.5
2010	622,737	293,917	47.2	279,636	83,282	29.8
2011	621,313	292,038	47.0	280,958	84,238	30.0

자료: 행정자치부, 「행정안전부통계연보」.

바. 교육·직업훈련

〈부표 6-1〉 성별 평균교육연수

(단위: 년)

성별	1990	1995	2000	2005	2010
전체	9.5	10.3	10.6	11.2	11.6
여성	8.6	9.4	9.8	10.5	10.9
남성	10.6	11.2	11.5	12.0	12.4

자료: 통계청, 『한국의 사회지표』.

〈부표 6-2〉 성별 고등교육기관 취학률

(단위: 명, %)

연도	전체	여	남
2000	74.7	54.8	93.5
2001	77.6	57.7	96.3
2002	81.3	61.1	100.2
2003	85.2	64.4	104.6
2004	90.0	68.8	109.7
2005	94.6	72.8	114.8
2006	98.5	77.1	118.1
2007	100.9	80.7	119.3
2008	101.0	82.3	117.7
2009	99.9	82.4	115.4
2010	101.8	86.4	115.5
2011	104.8	89.6	118.2

주 : 1) 적령 인구수: 만 18~22세

2) 조취학률 = 재학생수(휴학생 포함) / 적령인구수.

자료: 한국교육개발원 통계DB, 통계청 KOSIS.

〈부표 6-3〉 성별 재직자직업훈련 참여 근로자

(단위: 건, %)

시점	전체(A+B)	여성(A)	남성(B)	외국인	분류불능	여성비율
2006	2,875,555	698,756	2,176,799	20,009	18,049	24.3
2007	3,559,432	910,332	2,649,100	14,579	2,364	25.6
2008	3,987,065	1,151,546	2,835,519	19,314	270	28.9
2009	4,930,492	1,448,972	3,481,520	17,841	1,087	29.4
2010	4,230,256	1,412,357	2,817,899	13,005	9	33.4
2011	3,314,411	1,141,987	2,172,424	26,707		34.5

주 : 1) 사업주능력개발(유급휴가훈련포함), 수간지원금, 근로자능력카드제, 중소기업핵심직무 능력 합계

2) 여성비율은 외국인과 분류불능을 제외한 계에 대한 비율

자료: 고용노동부, 내부자료

〈부표 6-4〉 성별 고등교육기관 진학률

(단위: %)

연도	초등학교→중학교			중학교→고등학교			고등학교→대학		
	계	여성	남성	계	여성	남성	계	여성	남성
2001	99.9	99.9	99.9	99.6	99.6	99.5	70.5	67.6	73.1
2002	99.9	99.9	99.9	99.5	99.5	99.6	74.2	72.4	75.8
2003	99.9	99.9	99.9	99.7	99.7	99.7	79.7	77.8	81.5
2004	99.9	99.9	99.9	99.7	99.7	99.7	81.3	79.7	82.8
2005	99.9	99.9	99.9	99.7	99.8	99.7	82.1	80.8	83.3
2006	99.9	99.9	99.9	99.7	99.8	99.7	82.1	81.1	82.9
2007	99.9	99.9	99.9	99.6	99.7	99.6	82.8	82.2	83.3
2008	99.9	99.9	99.9	99.7	99.7	99.6	83.8	83.5	84.0
2009	99.9	99.9	99.9	99.6	99.7	99.6	81.9	82.4	81.6
2010	99.9	99.9	99.9	99.7	99.7	99.7	79.0	80.5	77.6
2011	99.9	99.9	99.9	99.6	99.7	99.7	72.5	75.0	70.2

주 : 대학에는 4년제 일반대학교, 교육대학, 전문대학 포함.

자료: 교육과학기술부·한국교육개발원, 「교육통계연보」.

〈부표 6-5〉 대학 전공별 여교수 비율

(단위: %)

구분		전체	인문계	사회계	자연계	의약계	예체능계	사범계
2000	교수	12.6	16.4	4.7	8.2	16.7	29.3	19.3
	부교수	14.7	19.7	7.9	8.9	19.2	32.6	32.2
	조교수	16.5	22.1	8.8	9.5	21.6	32.4	34.4
2002	교수	12.9	17.2	4.9	8.3	16.1	29.8	23.1
	부교수	15.0	21.1	7.9	9.2	20.3	30.2	31.2
	조교수	18.4	22.5	10.6	9.7	27.2	33.8	37.4
2004	교수	13.1	18.0	5.5	8.3	16.8	30.4	23.8
	부교수	15.6	21.5	8.3	9.2	21.6	31.9	31.9
	조교수	20.7	25.1	13.6	10.9	29.9	32.9	39.9
2006	교수	13.5	20.1	5.7	8.4	17.0	31.3	26.1
	부교수	16.8	22.4	9.6	9.5	24.7	31.6	33.6
	조교수	22.4	27.7	15.4	13.0	29.7	32.5	42.9
2008	교수	13.6	20.6	6.6	8.7	17.2	31.6	27.8
	부교수	18.3	23.0	12.3	10.7	27.1	32.4	37.2
	조교수	25.0	31.1	19.5	15.5	31.9	32.5	47.1
2009	교수	13.6	20.7	6.8	8.4	17.6	31.8	26.9
	부교수	19.4	24.5	13.1	11.2	28.3	31.4	39.1
	조교수	26.3	33.2	21.6	15.8	31.7	34.6	46.2
2010	교수	13.9	20.5	7.2	8.5	18.3	31.8	28.9
	부교수	19.9	25.8	14.0	11.4	28.1	31.9	40.9
	조교수	28.2	34.0	24.9	16.3	34.1	36.6	48.2
2011	교수	13.9	20.3	7.6	8.2	18.8	31.8	30.1
	부교수	20.6	26.7	15.7	11.8	28.4	31.7	43.4
	조교수	29.4	35.8	26.0	17.1	35.9	36.9	49.8

자료: 교육과학기술부·한국교육개발원, 「교육통계연보」.

〈부표 6-6〉 성별 전공계열별 대졸 취업률

(단위: %)

연도	전체		인문계		사회계		교육계		공학계		자연계		의약계		예체계	
	계	여성	계	여성	계	여성	계	여성	계	여성	계	여성	계	여성	계	여성
2006	73.4	70.3	62.7	59.1	71.4	70.1	70.2	68.0	77.1	72.3	68.1	64.0	84.4	83.2	79.0	77.4
2008	73.4	70.1	63.3	59.3	72.2	70.6	65.7	64.2	77.7	73.3	69.3	64.5	85.4	84.4	79.3	77.8
2009	73.0	70.1	62.7	58.8	72.0	71.0	64.7	63.2	76.8	73.6	69.3	65.0	85.3	84.6	78.4	77.0
2010	55.0	51.9	44.3	43.6	54.8	55.2	52.9	55.4	64.7	59.8	52.5	49.4	72.2	71.4	36.1	33.3
2011	51.0	49.5	39.2	39.4	51.1	51.5	52.9	57.0	59.7	55.0	43.8	42.9	70.7	72.8	36.2	34.6

주 : 전문대 및 교육대를 포함한 총괄임. 2010년 취업률은 건강보험 DB연계 취업률임.

자료: 교육과학기술부·한국교육개발원, 「교육통계연보」, 「취업통계연보」

〈부표 6-7〉 남녀 학생 1인당 사교육비

(단위: 천원)

구분	교육비평균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일반고	
2007	계	222	227	234	197	240
	여성	221	228	227	202	243
	남성	223	226	239	192	237
2008	계	233	242	241	206	249
	여성	235	244	238	215	257
	남성	231	241	243	197	240
2009	계	242	245	260	217	269
	여성	243	243	252	234	282
	남성	241	248	267	204	257
2010	계	240	245	255	218	265
	여성	247	246	253	242	285
	남성	234	244	257	197	247
2011	계	240	241	262	218	259
	여성	247	246	253	242	281
	남성	234	236	269	197	240

자료: 통계청, 「사교육비조사」.

〈부표 6-8〉 교육전문직 여성비율

(단위: 명, %)

연도	합계			교육장			장학관. 연구관			장학사. 연구사		
	계	여성	비율	계	여성	비율	계	여성	비율	계	여성	비율
2005	3,881	850	21.9	182	18	9.9	727	71	9.8	2,972	761	25.6
2006	3,896	937	24.1	182	14	7.7	736	79	10.7	2,978	844	28.3
2007	3,945	1,012	25.7	180	14	7.8	752	88	11.7	3,013	910	30.2
2008	4,150	1,185	28.6	180	16	8.9	784	119	15.2	3,186	1,050	33.0
2009	4,173	1,278	30.6	181	17	9.4	788	119	15.1	3,204	1,142	35.6
2010	4,202	1,373	32.7	124	7	5.6	860	139	16.2	3,218	1,227	38.1

주 : 시도교육청, 지역교육청, 교육연구원, 과학교육원, 교원연수원, 학생교육원, 공공도서관 및 기타 포함.

자료: 교육과학기술부, 내부자료.

〈부표 6-9〉 성별 평생학습 참여비율

(단위: %)

성별	1996	2000	2004	2007
전체	29.0	17.2	21.6	29.8
여성	24.4	15.2	19.5	30.7
남성	33.8	19.4	23.8	28.9

주 : 1) 2007년 자료는 한국교육개발원, 「평생학습개인실태조사」

자료: 통계청, 「사회조사」,

〈부표 6-10〉 기술사, 기능장 여성비율

(단위: 명, %)

종목별	성별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모든 국가기술 자격증	전체	21,127,408	22,136,241	22,971,204	23,827,903	24,578,123	25,212,184
	남성	15,648,714	16,193,129	16,649,333	17,116,829	17,533,175	17,905,161
	여성	5,478,694	5,943,112	6,321,871	6,711,074	7,044,948	7,307,023
	여성비율	25.9	26.8	27.5	28.2	28.7	29.0
기술사	전체	31,901	33,707	35,612	37,708	39,637	41,305
	남성	31,402	33,144	34,973	36,976	38,802	40,378
	여성	499	563	639	732	835	927
	여성비율	1.6	1.7	1.8	1.9	2.1	2.2
기능장	전체	13,633	15,384	17,038	19,015	21,357	24,418
	남성	13,168	14,840	16,386	18,204	20,441	23,381
	여성	465	544	652	811	916	1,037
	여성비율	3.4	3.5	3.8	4.3	4.3	4.2

주 : 1975~2006년, 1975~2007년, 1975~2008년까지 등 각각 누적된 자격증 취득자수임.

자료: 한국산업인력관리공단, 「국가기술자격검정통계연보」, 2012

〈부표 6-11〉 여성가家主 직업훈련 참가자 수

(단위: 천명, %)

연도	성별	가家主 중 임금근로자	가家主 중 직업훈련 참여자	참여비율
2007.3	전체	8,995	6,184	31.3
	여성	1,772	1,401	20.9
	남성	7,223	4,784	33.8
2008.3	전체	9,205	6,815	26.0
	여성	1,840	1,477	19.7
	남성	7,365	5,338	27.5
2009.3	전체	9,230	3,031	32.8
	여성	1,777	437	24.6
	남성	7,453	2,594	34.8
2010.3	전체	9,262	3,208	34.6
	여성	1,773	471	26.6
	남성	7,489	2,737	36.5
2011.3	전체	9,458	3,511	37.1
	여성	1,828	507	27.7
	남성	7,630	3,004	39.4

자료: 통계청(각년도), 「경제활동인구조사(근로형태별부가조사)」.

사. 문화·정보

〈부표 7-1〉 성 및 취업상태별 여가시간

(단위: 시:분)

연도		1999	2004	2009
미취업자	요일평균	6:57	7:00	6:44
	여성	6:12	6:17	6:03
	남성	8:46	8:42	8:23
취업자	요일평균	3:53	4:06	3:52
	여성	3:20	3:41	3:23
	남성	4:15	4:25	4:11

주 : 20세 이상 인구.

자료: 통계청, 「생활시간조사」.

〈부표 7-2〉 성별 문화콘텐츠 산업종사자

(단위: 명, %)

성별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계	450,709	429,060	498,477	488,104	512,787	525,199
여성	178,964	187,520	220,456	203,483	216,200	220,938
남성	271,745	241,540	278,021	284,621	296,587	304,261
여성구성비	39.7	43.7	44.2	41.7	42.2	42.1

자료: 문화체육관광부, 「문화산업통계조사」.

〈부표 7-3〉 성별 문화예술행사 관람률

(단위: %)

구분	관람함	공연장 이용	음악· 연주회	연극· 마당극·뮤지컬	무용	영화	전시장 관람	박물관	미술관	스포츠 관람	
2000	계	39.9	32.6	9.7	7.3	0.9	26.6	11.7	8.5	6.3	9.5
	여성	39.3	34.4	11.4	9	1.2	27.6	12.6	8.9	7.4	5.2
	남성	40.4	30.8	7.9	5.5	0.6	25.6	10.7	8.2	5.2	14
2004	계	51.0	87.4	22.8	20.8	2.4	90.1	32.1	77.6	54.3	19.5
	여성	51.0	91.5	26.2	24.4	2.9	89.1	35.3	75.5	57.9	10.9
	남성	51.0	83.2	18.9	16.5	1.8	91.2	28.6	80.5	49.5	28.5
2007	계	54.3	86.8	26.6	26.0	2.5	85.0	36.6	75.4	56.8	18.4
	여성	55.0	90.2	29.0	29.6	3.1	84.4	39.1	73.0	59.8	10.8
	남성	53.6	83.2	23.8	21.9	1.8	85.8	33.9	78.4	53.0	26.6
2009	계	55.0	89.5	26.1	26.2	2.3	91	32.5	77.0	56.2	20.5
	여성	55.2	93.2	29.4	31.0	2.9	90.1	36.0	74.1	61.1	12.1
	남성	54.9	85.6	22.4	20.8	1.5	92.1	28.8	80.6	49.9	29.3
2011	계	58.6	-	25.2	25.0	2.6	81.8	-	26.4	20.7	24.3
	여성	59.2	-	28.7	30.2	3.3	85.5	-	28.4	24.4	14.9
	남성	58.0	-	21.4	19.6	1.9	77.8	-	24.3	16.8	34.2

주 : 2000년 이후 복수응답. 13세 이상 인구, 공연장이용과 전시장 관람 변수는 없음.

자료: 통계청, 「사회조사」.

〈부표 7-4〉 성별 생활체육 참여율(2010)

(단위: %)

성별	규칙적 생활체육 참여율	한달에 2~3번 이하	주 1번	주 2번	주 3번	주 4번	주 5번	주 6번	매일
전체	44.7	4.4	8.8	9.5	11.7	5.2	6.6	2.9	5.6
여성	48.2	2.9	4.8	8.3	12.7	4.9	6.8	2.9	4.9
남성	61.1	5.9	12.7	10.7	10.7	5.5	6.5	2.9	6.2

자료: 문화체육관광부, 「국민생활체육활동 참여실태조사」.

〈부표 7-5〉 성별 컴퓨터 및 인터넷 이용 시간(1개월)

(단위: %, 시간)

연도, 성		컴퓨터 활용 여부	인터넷 활용 여부	인터넷 주 평균 사용시간
2005	전체	78.9	72.8	13.3
	여성	73.3	67.2	12.1
	남성	84.6	78.5	14.3
2006	전체	79.9	74.8	13.7
	여성	75.3	68.9	12.2
	남성	83.4	80.7	15.1
2007	전체	75.9	75.5	13.7
	여성	70.6	70.3	12.2
	남성	81.1	80.8	14.9
2008	전체	77.2	76.5	13.7
	여성	72.3	71.5	12.7
	남성	82.1	81.6	14.7
2009	전체	77.7	77.7	13.9
	여성	72.6	72.6	12.8
	남성	82.7	82.7	14.9
2010	전체	78.4	77.8	14.7
	여성	73.1	72.4	13.5
	남성	83.7	83.2	15.8
2011	전체	78.5	78.0	15.4
	여성	73.2	72.5	14.1
	남성	83.8	83.4	16.6

주 : 만 6세 이상. 2010년 자료는 만 3세 이상.

자료: 한국인터넷진흥원, 「정보화실태조사」. 2008년도부터 「인터넷이용실태조사」.

아. 안 전

〈부표 8-1〉 성별 범죄피해에 대한 두려움

(단위: %)

성별	2001	2005	2008	2010
전체	56.6	57.9	40.0	36.7
여성	64.4	67.8	49.1	32.2
남성	48.2	47.4	30.5	41.5

주 : 15세 이상 인구, 2010년은 범죄 두려움에 대한 사회안전인식에 대한 비율임.

자료: 통계청, 「사회조사」.

〈부표 8-2〉 성별 강력범죄(흉악법) 피해자

(단위: 명, %)

성별	전체	여성	남성	여성비율
1995	7,947	2,377	5,570	29.9
2000	8,765	6,245	2,520	71.2
2001	9,074	6,479	2,595	71.4
2002	10,696	8,082	2,614	75.6
2003	13,157	9,856	3,301	74.9
2004	17,687	13,810	3,877	78.1
2005	18,583	14,847	3,736	79.9
2006	19,776	15,938	3,838	80.6
2007	20,361	16,006	4,355	78.6
2008	22,191	17,479	4,712	78.8
2009	24,903	19,254	5,649	77.3
2010	25,333	20,930	4,403	82.6

주 : 미상제외

자료: 대검찰청, 「범죄분석」.

〈부표 8-3〉 인구 10만명당 성폭력(강간) 발생건수

(단위: 건)

연도	발생건수	검거건수	인구 10만명당 성폭력 발생건수
2004	11,105	10,220	23.1
2005	11,757	10,365	24.4
2006	13,573	12,501	28.1
2007	13,634	12,361	28.1
2008	15,094	15,121	31.1
2009	16,156	14,902	32.5
2010	19,939	17,652	39.8

자료: 대검찰청, 「범죄분석」.

〈부표 8-4〉 가정폭력 발생건수와 기소건수

(단위: 건)

연도	발생건수	기소건수	인구 10만명당 가정폭력 발생건수
2004	17,373	2,429	36
2005	15,545	2,161	32
2006	13,579	1,972	28
2007	12,840	1,757	26
2008	13,370	1,841	28
2009	12,193	1,262	25

자료: 법무부, 「법무부 여성통계」.

<부록 2> 국가성평등지표의 통계적 정의와 자료원

부문	지표 유형	지표명	통계적 정의	자료원	생산 주기
① 가족 부문	대표 지표	가사노동시간의 성비	경제적 목적이 아닌 가사업무(음식준비, 청소 등)를 수행한 사람 또는 가족 보살피기(미취학 아이 보살피기, 부모 보살피기 등)를 한 사람의 1주일 평균 시간에 대한 성비	통계청, 「생활시간조사」	5년
	대표 지표	셋째 아 이상 출생 성비	출생순위별로 셋째 출생아에 대한 성비	통계청, 「인구동향조사」	1년
	관리 지표	성별 육아휴직자 수	만1세미만의 영아를 가진 남녀근로자가 그 영아를 양육하기 위해 실시하는 휴가를 실시한 남녀 수	한국고용정보원, 「고용보험통계」	1년
	대표2 관리4	경제활동상태별 남녀 노인부양 평균시간	취업·비취업 상태별 부모 및 조부모 등 노인을 간호하거나 보살피는 남녀의 시간	통계청, 「생활시간조사」	5년
	관리 지표	가구유형별 남녀가구주 비율	배우자가 있는 가구 중 호주 또는 세대주와는 관계없이 그 가구를 실질적으로 대표하고 사실상 생계를 책임지고 있는 사람의 남녀 비율	통계청, 「인구주택총조사」	5년
	관리 지표	성별 생계책임 의식	가계비의 책임에 대한 성별 의식	공식통계 없음	-
② 복지 부문	대표 지표	빈곤가구주의 성비	정부발표 최저생계비 이하에 속하는 가구의 성별 가구주 비율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빈곤통계연보」	1년
	대표 지표	공적연금 가입자의 성비	공무원연금, 사립·교직원연금, 국민연금 가입자의 성비	국민연금관리공단, 「국민연금통계연보」, 공무원연금관리공단, 「공무원연금통계」, 사학연금관리공단, 「사학연금통계」	1년
	대표 지표	장애인 고용률의 성비	만 15세 이상 장애인 인구 중 취업자가 차지하는 비율에 대한 성비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장애인실태조사」	3년
	대표3 관리4	성별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비율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라 급여를 받는 자의 성별 비율	보건복지부, 「보건복지가족통계연보」	1년
	관리 지표	장애인 성별 교육수준	장애인의 교육정도별 남녀 분포	보건복지부, 「장애인실태조사」	3년
	관리 지표	성별 장애인 등록자 수	전체 장애인중 등록장애인의 성별 수. 등록장애인은 장애인복지법에 모든 장애인은 등록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며, 등록장애인은 장애인복지법과 국가유공자 예우	보건복지부, 「보건복지가족통계연보」	1년

부문	지표 유형	지표명	통계적 정의	자료원	생산 주기	
			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여 등록된 장애인을 의미함.			
	관리 지표	성별 고용보험 가입자	고용보험에 가입한 성별 규모, 고용보험은 실직근로자에게 실업급여를 지급하는 실업보험사업 외에 적극적인 취업알선을 통한 재취업의 촉진과 근로자의 고용안정을 위한 고용안정사업, 근로자의 직업능력개발사업 등을 상호 연계하여 실시하는 사회보험제도.	한국고용정보원, 「고용보험통계연보」	1년	
③ 보건 부문	대표 지표	건강관련 삶의 질(EQ-5D)의 성별 격차	건강관련 5개 지표 즉, 자기관리(Self-care), 일상 활동(Usual activity), 통증/불편감(Pain/Disability), 그리고 불안과 우울(Anxiety and Depression)에 대한 주관적인 평가를 포괄하는 지표값에 대한 성비	보건복지부, 「국민건강영양조사」	1년	
	대표 지표	건강보험 진료급여 수급자의 성비	요양기관에서 건강보험환자 진료에 소요된 비용 중 보험자 부담금(공단부담금)을 지급 받은 사람들의 성비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통계연보」	1년	
	대표 지표	성별 건강검진 수검률	성별 건강검진 수검자를 성별 건강검진 대상자로 나눈 백분율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검진통계연보」	1년	
	관리 지표	성별 스트레스 인지율	평상시 스트레스를 ‘대단히 많이’ 또는 ‘많이’ 느끼는 편인 사람의 성별 비율	보건복지부, 「국민건강통계」	1년	
	대표3 관리5	관리 지표	성별 5대 암 환자 발생률	위암, 대장암, 간암, 유방암, 자궁암 환자의 성별 발생률	보건복지부, 「암등록통계」	1년
	관리 지표	성별 만성질환 유병률	과거 3개월 이상 앓았거나 앞으로 계속 앓을 것으로 예상되는 질환 혹은 질병을 앓고 있는 성별 환자 수	보건복지부, 「국민건강통계」	3년, 최근 비간행 (비주기)	
	관리 지표	성별 활동제한일수	신체적, 정신적, 감정적인 문제로 인하여 일상생활 혹은 사회활동에 제한을 받는 성별 일수	통계청, 「사회조사」	1년	
	관리 지표	성별 자살 생각률	최근 12개월 동안 심각하게 자살을 생각한 적이 있는 사람의 성별 비율	보건복지부, 「국민건강통계」	1년	
④ 경제 활동 부문	대표 지표	경제활동참가율 성비	만 15세 이상 인구 중 경제활동인구(취업자+실업자)가 차지하는 비율을 말함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1년	
	대표 지표	성별 임금 격차(성비)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임금, 봉급 그 밖에 어떠한 명칭으로든지 지급하는 일체의 금품에 대한 성비	고용노동부, 「고용형태별근로실태조사」	1년	
	대표3 관리5	대표 지표	상용근로자의 성비	근로계약기간이 1년 이상인 근로자이거나 정해진 계약 기간 없이 본인이 원하면 계속 일할 수 있는 근로자의 성비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1년

부문	지표 유형	지표명	통계적 정의	자료원	생산 주기
	관리 지표	전문직 여성비율	15세 이상 여성취업자 중 전문직 비율 ※ 2010년 직업분류(제6차개정)상 전문직 ※ 관리부처: 고용노동부, 여성가족부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1년
	관리 지표	성별 30~34세 경제활동참가율	만 30~34세 인구 중 경제활동인구(취업자+실업자)가 차지하는 비율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1년
	관리 지표	성별 대졸자 실업률	대졸 실업자가 대졸 경제활동인구(취업자+실업자)에서 차지하는 비율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1년
	관리 지표	성별 평균 근속연수	근로자가 현 사업체에 입사한 날로부터 조사대상 기준일까지 근속한 평균 기간.	고용노동부, 「고용형태별근로실태조사」	1년
	관리 지표	가구주 성별 소득격차	가구가 근로대가로 받는 일체의 보수, 임대료·배당금·이자 등 재산으로부터 얻은 수입, 사업소득, 이전소득 등 실질적인 현금 및 현물소득의 합계에 대한 성별 격차	통계청, 「가계동향조사」	1년
⑤ 의사 결정 부문 대표3 관리8	대표 지표	국회의원의 성비	전국구와 지역구를 포함하여 국회의원 선거에서 당선된 의원의 성비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통계 DB	4년
	대표 지표	5급 이상 공무원의 성비	공무원 중 5급 이상 공무원의 성비	행정안전부, 내부자료	1년
	대표 지표	관리자(기업의 과장급 이상)의 성비	적극적 고용개선조치(Affirmative Action) 사업 대상인 상시근로자 500인 이상 기업과 공공기관 등 사업장에서 과장급 이상 남녀근로자의 성비	고용노동부, 「적극적고용개선조치 DB」	1년
	관리 지표	관리직 여성비율	15세 이상 취업자 중 관리직 여성비율 ※ 2010년 직업분류(제6차개정)상 관리직 ※ 관리부처: 국회사무처, 행정안전부, 고용노동부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1년
	관리 지표	(중앙정부) 위원회 여성위원 비율	중앙정부 각종위원회에 참여하는 여성위원 비율	여성가족부, 내부자료	1년
	관리 지표	성별 초·중·고등학교 교장 비율	초등, 중등, 고등학교의 교장	교육과학기술부· 한국교육개발원, 「교육통계연보」	1년
	관리 지표	성별 대학교수 비율	초대졸 이상 고등교육기관의 전임이상 교수	교육과학기술부· 한국교육개발원, 「교육통계연보」	1년
	관리 지표	성별 공무원의 수	전체 공무원 중 여성비율	행정안전부 통계연보	1년
	관리 지표	여성장차관 비율	각년 7월 1일 현재 장관과 차관급 중 여성 비율	공식통계 없음(행정통계)	-

부문	지표 유형	지표명	통계적 정의	자료원	생산 주기
	관리 지표	사법 및 경찰 고위직 여성비율	검사고위직은 대검찰청 검사급 이상 검사와 총경급 이상 경찰 고위직 간부의 여성 비율	공식통계 없음	-
	관리 지표	공공기관 여성임원 비율	공공기관 상임·비상임 여성임원 비율	여성가족부 내부자료	1년
[6] 교육 직업 훈련 부문 대표3 관리9	대표 지표	남녀 평균교육연수 격차(성비)	6세 이상 인구 중에서 재학중인 학생수를 제외한 전국민에 대한 평균 교육연수의 성별 격차 ※ 각 학교급별 중퇴자의 경우는 초등중퇴 3년, 중학중퇴 7.5년, 고교중퇴 10.5년, 전문대중퇴 13년, 대학중퇴는 14년, 석사·박사중퇴는 17년으로 계산함. 국민의 교육수준을 나타내는 지표로 문맹률이 있으나 우리나라의 경우 문맹자가 거의 없으므로 국민 평균 교육수준만 지표로 채택하였음	통계청, 「한국의 사회지표」	1년
	대표 지표	고등교육기관 취학률 성비	초대졸 이상의 고등교육기관 취학률의 성비 취학률은 취학적령인구(추계연앙인구)대비 재적학생수의 비율 ※ 고등교육기관의 취학적령연령은 UNESCO에서 5년간의 인구를 사용하도록 정의 되어 있어, 18-22세의 인구를 활용임.	교육과학기술부·한국교육개발원, 「교육통계연보」 통계청, 「장래인구추계」	1년 5년
	대표 지표	재직자직업훈련 참여 근로자의 성비	사업체 근로자 중 고용보험의 지원금, 사업주능력개발(유급휴가훈련포함), 수감지원금, 근로자능력카드제, 중소기업핵심직무능력향상 지원사업 등의 고용노동부 지원을 통해 직업훈련에 참여한 근로자 성비	고용노동부, 내부자료	1년
	관리 지표	성별 고등교육기관 진학률	고등학교를 졸업자 중 전문대학 이상 고등교육기관에 진학한 학생 수	교육과학기술부·한국교육개발원, 「교육통계연보」	1년
	관리 지표	대학 전공계열별 여교수 비율	전문대이상 고등교육기관의 전공대분류별(인문계, 사회계, 자연계, 의약계, 예체능계, 사범계) 여교수 비율	교육과학기술부·한국교육개발원, 「교육통계연보」	1년
	관리 지표	성별 전공계열별 대졸 취업률	전문대이상 고등교육기관의 전공대분류별(인문계, 사회계, 자연계, 의약계, 예체능계, 사범계) 대졸자 중 취업자가 차지하는 비율로 [취업자 / {졸업자-(진학자+입대자+외국인유학생)}]*100으로 계산함.	교육과학기술부·한국교육개발원, 「교육통계연보」	1년
	관리 지표	남녀 학생 1인당 교육비	초등학생이상 학생이 있는 가구의 월별 학생 1인당 사교육비 지출액	통계청, 「사교육비조사」	부정기 (3~5년)

부문	지표 유형	지표명	통계적 정의	자료원	생산 주기
	관리 지표	교육전문직의 여성비율	교육장, 장학관/연구관, 장학사/연구사 등 교육전문직으로 근무하는 여성 비율	교육과학기술부, 내부자료	1년
	관리 지표	성별 학업성취도 차이	학업성취도에서의 성별차이 ※ 학업성취도는 우리나라 초·중·고등학교 해당학년 모든 학생의 학업성취 수준을 파악하기 위해 실시하는 조사로 초등학교 6학년, 중학교 3학년, 고등학교 2학년 대상으로 실시되고 있음.	교육과학기술부, 내부자료	-
	관리 지표	성별 평생학습 참여자	30세 이상 인구 중 직장연수, 학원수강, 교육강좌, 직업훈련, 각종 강좌, 기타 학습에 참여한 인구의 성별 비율	통계청, 「사회조사」	부정기 (3~5년)
	관리 지표	성별 기술사, 기능장 수	기술사 및 기능장의 성별 규모	한국산업인력공단, 「국가기술자격통계연보」	1년
	관리 지표	고용노동부 지원 실업자 훈련 참여자 중 여성비율	신규실업자훈련, 전직실업자훈련, 여성가장훈련, 우선선정직종훈련, 자활훈련, 고용촉진훈련 등의 직업훈련생에 대한 성별비율	고용노동부, 내부자료	1년
[7] 문화 정보 부문 대표2 관리5	대표 지표	여가시간의 성비	20세 이상 인구 중 교제활동, 미디어이용, 종교활동, 관람 및 문화적 행사참여, 스포츠 및 집밖의 레저활동, 취미 및 그 외 여가활동, 교제 및 여가활동 관련 물품구입, 일반인 학습 등과 관련된 교제와 여가활동 시간에 대한 성비 ※ 여가시간이란 생활시간 이외의 자유로운 시간이며, 생계를 위해 필요한 의무적 시간이 아닌 스스로 만족을 얻기 위한 자유로운 활동을 행하는 일	통계청, 「생활시간조사」	5년
	대표 지표	문화콘텐츠산업종사자의 성비	문화산업 10개 분야 사업체 (출판, 만화, 음악, 게임, 영화 및 비디오, 애니메이션, 광고, 방송, 캐릭터, 에듀테인먼트)에 종사하는 남녀 성비	문화체육관광부, 「문화산업통계조사」	1년
	관리 지표	성별 문화예술행사 관람률	공연장(공연장, 음악, 연극, 마당극, 뮤지컬, 영화, 무용)과 전시장(박물관, 미술관), 스포츠관람 등의 문화예술행사에 참여하는 비율	통계청, 「사회조사」	부정기 (3~5년)
	관리 지표	성별 생활체육 참여율	걷기, 헬스, 등산, 축구, 수영, 자전거, 싸이클 체조, 배드민턴, 농구, 줄넘기 육상, 요가, 태권도, 테니스, 골프 등에 한 주 동안 참여하는 회수	문화체육관광부, 「국민생활체육활동 참여실태조사」	3년

부문	지표 유형	지표명	통계적 정의	자료원	생산 주기
	관리 지표	성별 컴퓨터 및 인터넷 이용시간(평소 1주일)	평소 1주일 동안 컴퓨터와 인터넷을 이용하는 시간	한국인터넷진흥원, 「인터넷이용실태조사」	1년
	관리 지표	성별 문화시설 이용률	공공도서관, 박물관·미술관, 문예회관, 문화의 집 등의 문화 기반시설을 이용한 남녀 수	공식통계 없음 (문화체육관광부, 전국문화기반시설총람에서 구할 수 있음)	-
	관리 지표	성별 문화기반시설 기관장	공공도서관, 박물관·미술관, 문예회관, 문화의 집 중 정부 및 공공기관이 관장하는 시설 기관장의 성별 분포	공식통계 없음	-
⑧ 안전 부문 대표2 관리3	대표 지표	범죄위험에 대한 사회안전 인식 성비	현 사회에서 범죄위험으로부터 느끼는 안전도의 남녀 성비	통계청, 「사회조사」	부정기 (3~5년)
	대표 지표	강력범죄(흉악범) 피해자의 성비	살인, 강도, 방화, 강간 등 강력범죄피해자의 성비	대검찰청, 「범죄분석」	1년
	관리 지표	인구 10만 명당 성폭력 발생 건수	인구 10만 명당 성폭력 발생 건수	대검찰청, 「범죄분석」	1년
	관리 지표	가정폭력 발생 시 여성의 피해율	가정폭력 즉 가족구성원 사이의 신체적, 정신적 또는 재산적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로 인해 피해를 입은 여성비율 ※ 가정폭력이란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 제1호의 행위를 말함.	법무부, 「법무여성통계」	1년
	관리 지표	성매매 범죄자 기소율	성매매 범죄 사건에 대해 검사가 법원에 심판을 요구하는 비율	법무부, 「법무여성통계」	1년

Abstract

2012 Gender Equality Report in Korea

Tae-Hong Kim

Ki-Taek Jeon

Jae-Seon Joo

According to previous research, gender equality is both directly and indirectly related to national economic development and competitiveness. The World Bank has stated that rate of economic growth shows a significant positive correlation with gender equality. Also, countries with a higher level of gender inequality tend to demonstrate a higher level of poverty. Accordingly, countries have implemented a range of policies targeting gender equality.

Korea has been making ongoing efforts to promote gender equality. However, according to gender equality indices published by International Organizations, gender equality in Korea stands considerably lower than other OECD countries, which indicates that customs and systems in Korea still needs to be adjusted, in order to secure sustainable development and improved quality of life. To achieve this, it appears necessary to identify the level of gender inequality, its sources, and the level of improvement in each sector of the society and in the nation as a whole. Using the gender equality index and indicators which are developed by Korean Women's Development

Institute, the trends and changes in gender equality in South Korea were traced since 2005.

The value of the South Korean Gender Equality Index is designed to rise from '0.0' (perfectly unequal) to '100.0' (perfectly equal) as the level of gender equality improves. According to this measure, the nation's Gender Equality Index stood at 63.5 in 2011, a slight increase from the previous year. The index value continued to rise from 58.4 in 2005 to 62.3 in 2008. According to the trend of the Korean Gender Equality Index, gender equality of Korea has improved from 58.4 in 2005 to 63.5 in 2011, although there was a slight decrease in 2009.

In terms of sector, public health marked the highest level of gender equality(91.2) in 2011, followed by education and vocational training(78.1), culture and information(73.6), economic activity(69.4), welfare(68.4), and family(60.4). The decision-making(19.3) area showed the lowest level of gender equality, followed by safety(53.0). Compared to 2005, education/vocational training sector made the greatest progress, followed by family, welfare, economic activity, decision-making, culture and information. Meanwhile, the level of gender equality in the safety sector was aggravated.

According to the trend in the National Gender Equality Index, South Korea has made constant progress in gender equality. When compared with other countries, however, the international ranking is little changed. This could be attributable to the fact that although the levels related to the gender equality indicators have improved overall, the pace of progress in reducing the gender gap is slow. It is also due to severe inequality in certain areas, including decision-making sector, safety sector. As a result, South Korea's ranking is gradually progressing in the UNDP's GII. However, it remains within the low ranking group in the WEF's GGI of which only considers the gender gaps when estimating the level of gender equality.

Therefore, it appears necessary to focus on a continuous and structural

policy effort to reduce gender discrepancies in the areas of decision-making. And in terms of safety, the number of female victims of serious crimes is rapidly increasing despite the efforts to prevent cases of aggravated felony such as murder, armed robbery, and sexual assault. In order to enhance gender equality in the safety sector, it seems necessary to promote policies to structurally reduce the number of victims of serious crime.

연구보고 2012-45

2012년 한국의 성평등보고서

2012년 12월 10일 인쇄

2012년 12월 15일 발행

발행인 : 김 금 래

발행처 : 여성가족부 여성정책과

서울특별시 중구 청계천로8

프리미어 플레이스

전화 / 02-2075-4500 (代)

인쇄처 : 도서출판 한학문화

전화 / 02-313-7593 (代)

사전 승인없이 보고서 내용의 무단복제를 금함.

행정간행물등록번호 11-1383000-000146-10